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대비 건축 · 도시분야 대응방향 연구

A Study on Strategies for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Industry  
unde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손동필 Son, Dong Pil  
오성훈 Oh, Sunghoon

( a u r i

AURI-기본-2016-1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대비 건축·도시분야 대응방향 연구**

A Study on Strategies for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Industry  
unde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지은이: 손동필, 오성훈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569-3850000251002008000005호

인쇄: 2016년 12월 26일, 발행: 2016년 12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가격: 24,000원, ISBN: 979-11-5659-100-9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구진

---

Ⅰ 연구책임	손동필 연구위원
Ⅰ 연구진	오성훈 연구위원
Ⅰ 연구보조원	신도겸 박사 허경재 박사수료

---

Ⅰ 연구심의위원	(주심) 김상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부심) 조상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외부, 가나다순) 권영상 서울대학교 교수 방설아 KOICA 과장 성장환 LHI 선임연구위원
----------	---

---

Ⅰ 자문위원	김성희 안양대학교 교수 김수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용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김정섭 UNIST 교수 김중환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사무관 박내선 로쿠스 디자인포럼 실장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민철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박소영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훈태 매핑 및 모델링 연구소 소장 송영일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신유승 KOICA 과장 심한별 서울대학교 강사 왕광익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은엽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이훈 신한대학교 교수 임동근 서울대학교 교수 임재빈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임혜숙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연구원 정연우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조경훈 (주)OCA 소장 최중석 코람코자산신탁 이사 한상진 KOTI 연구위원
--------	--



## 연구요약

### 제1장 서론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가 2015년 만료됨에 UN은 2014년 7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담은 SDGs초안을 발표하였고, 이어 정무간 협상을 거쳐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할 범지구적 목표를 2015년 9월 UN 총회 특별정상회의에서 채택하였다.

SDGs는 단순히 SDGs 목표와 관련된 정책을 착실히 수행하거나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센티브나 제재를 가하는 정책이 아니다. SDGs의 진정한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국제사회와 개별 국가가 나아가야하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것이다. SDGs는 광범위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추진 기간은 15년으로 짧으므로 개별 국가는 자국의 실정에 맞추어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행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건축도시분야 역시 기존의 정책 방향에서 SDGs의 가치를 포함하는 정책으로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건축도시분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SDGs는 잘 계획된 도시를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잘 계획된 도시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SDGs로 인해 국내에서 산재한 불평등과 양극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가 재조명받게 될 것이다. SDGs 목표 11의 경우 지속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목표 11의 세부목표가 제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국내외 건축·도시분야의 정책 및 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건축도시 분야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SDGs체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제2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국내외 동향 파악

SDGs관련 협의의 진행 사항과 국내의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 정책의 수립 부처를 통해 살펴보면 국무총리실, 환경부, 외교부, 통계청이 타 부서에 비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총리실 녹색성장지원단 산하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국제협력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외교부 개발협력국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의 추진과 관련이 있다.

현재 SDGs이행과 관련해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곳은 외교부와 통계청이다. 외교부(다자협력인도지원과)는 UN 및 국제기구에서 이루어지는 SDGs관련 협의를 주관하고 있으며, KOICA와 더불어 국제개발협력에서 SDGs 달성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의 경우 SDGs 지표의 설정과 수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의 관련 지표의 정비를 담당할 것이다.

정부부처에 비해 시민사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SDGs 대응을 위한 방안마련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경우 지속적인 토론회의 개최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경우 선도적으로 움직여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초기 형태에 도달해 있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 SDGs네트워크가 고위급정치포럼(HLPF)에 제출한 국가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s)에 평가했듯이 우리정부의 대응이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의 제시 없이 기존에 존재하는 정책들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있고, 시민사회 참여도 불충분한 수준이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DGs는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정부의 모든 부처와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성공적인 국내이행을 위한 총괄체계 구축 등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협의 진행에 따라 발전전략수립, 적정 국내지표 작성 등의 추가적인 업무가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의 경우 SDGs의 이행을 위해 개별 국가는 거버넌스 구축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스위스, 멕시코, 터키, 콜롬비아, 중국, 베네수엘라, 조지아 등이 SDGs를 국가개발계획에 통합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총리실 산하에 지속가능발전조정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총리가 본부장을, 관방장관과 외무성장관이 부분부장을 맡고 내각의 모든 부처가

당연직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 추진본부’를 두고 범정부간 업무 조정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 SDSN과 UN-HABITAT가 SDGs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SDSN은 대학, 연구기관, 시민사회기구, 기타 지식센터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SDSN은 SDGs 작성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10개 목표로 구성된 초안과 관련 지표를 제시하였고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SDSN 네트워크의 주된 역할은 SDGs의 이행과 관련해서 정부-기업-시민 단체 등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SDGs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UN-HABITAT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대표적인 UN 산하 기관으로 SDGs의 목표 11이 탄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3년부터 SDSN, UCLG, Cities Alliance 등의 단체와 함께 도시지속가능발전목표 캠페인을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목표 11이 SDGs에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다. 특히 HABITAT는 SDGs 목표 11과 관련하여 결의안에 의무조항 삽입, 권한의 HABITAT 위임, 제재, 인디케이터, 사업에 대한 배분 등 사업을 주도하면서 위임받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제3장 SDGs 목표 11의 국내 현황 분석

SDGs 세부목표 사이에 상호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부 항목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SDGs 세부목표 1.5와 13.1의 경우 목표 11의 세부목표 11.5와 11.b와 서로간의 지표를 공유하였다. 그 외에도 다수의 세부목표가 타 세부목표와 일정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SDGs 지표는 아직 충분히 각 개별 국가가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정치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는 사용가능한 국내의 유사 지표를 중심으로 SDGs에 의한 건축도시분야의 변화에 대해서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SDGs 목표 11의 지표와 관련이 있는 국내지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세부목표 11.1(주택)

세부목표 11.1의 지표 11.1.1 ‘도시의 불량주거지나 적합하지 않는 주택에 사는 도시 인구 비율’은 재개발, 재생사업 사업 등과 저소득 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등과 연관되어 있는 지표이다.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지표 중에는 직접적으로 지표 11.1.1의 항목을 보여주는 것은 없다. 그러나 지표 11.1.1의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모를 측정할 수 있다. 2006년에는 268만(16.6%)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였으나, 점차 줄어 2014년 기준으로 97.8만 가구(5.3%)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 □ 세부목표 11.2(교통)

세부목표 11.2의 지표는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등 상대적 교통약자 계층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중교통 접근 행위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 대중교통접근시간이 있다. 전국 평균 대중교통접근시간을 살펴보면 10분 이내가 2014년 기준 55.7%로 절반이 넘어가긴 하지만, 아직 44%의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도보로 10분이상의 시간을 소모해야 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 □ 세부목표 11.3(도시개발)

세부목표 11.3의 지표 11.3.1은 인구성장에 맞춰 토지 소요 비율을 측정하여, 인구성장에 따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가를 판단하는 지표이다. 반면에 지표 11.3.2는 도시계획과 도시의 관리에 시민들이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가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국내에서 현재 지표 11.3.1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며, 향후 개발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그러나 도시화율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유추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2014년 기준 91.7%로 조사되었다. 반면 지표 11.3.2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도시 현황과 주민 참여의 정도에 대한 개별 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도시에서 도시군기본계획이 용역사를 중심으로 작성되는 것을 감안하면, 근본적으로 시민사회가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여야 한다.



#### □ 세부목표 11.4(문화와 자연유산)

세부목표 11.4는 각 지역에 산재한 문화 및 자연유산을 도시개발로 인한 파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적절한 예산을 투입할 것을 지표 11.4.1에서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는 문화재정 비율이 있다. 2014년 기준 GDP대비 문화재정은 약 0.3% 수준이고, 정부재정대비 문화재정은 약 1.24%이다.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 세부목표 11.5(자연재해)

세부목표 11.5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 등 재난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피해를 볼 확률이 높은 사람에 대한 파악 (지표 11.5.1)과 재난발생 시의 경제적 손해(지표 11.5.2)의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재난피해와 관련해서는 자연재난 발생현황, 인적재난 발생현황, 자연재해 피해액 등 다수의 통계자료가 존재한다. 그러나 접근 가능한 통계자료가 다수임에도 실질적으로 지표 11.5.1에서 요구하는 재난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대상자를 보여주는 지표는 없다.

#### □ 세부목표 11.6(도시환경)

세부목표 11.6은 도시의 환경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절한 대기질과 폐기물의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국내 유사 지표를 살펴보면 지표 11.6.1의 경우 고형폐기물의 비율을 별도의 통계로 잡고 있지 않지만, 일반폐기물의 재활용비율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일반폐기물중 84%가 재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 11.6.2의 미세먼지 수준의 경우 우리나라는 PM10자료만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에 한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PM10 연평균 농도는 2013년 기준으로 인천과 부산이  $49\mu\text{g}/\text{m}^3$ 가장 높고, 대전과 광주가  $42\mu\text{g}/\text{m}^3$ 으로 가장 낮았다.

#### □ 세부목표 11.7(공공공간과 녹지)

지표 11.7.1의 경우 공원 등 공공공간이 얼마나 제공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으며, 지표 11.7.2는 공공공간의 안전문제, 특히 성범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목표의 주 대상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다.

지표 11.7.1은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공공공간을 대표할 지표는 없다. 다만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1인당 도시공원 결정면적 등 다양한 공공을 위한 공간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공간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범위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있기 전에는 지표 11.7.1에 대한 자료를 얻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

지표 11.7.2를 위한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범죄발생 자료는 SDGs가 요구하는 수준만큼 세밀하게 분류하고 있지 않다. 다만 통계청을 통해 전체적인 범죄 유형별 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성범죄는 2011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다.

#### □ 세부목표 11.a(통합적 개발계획)

세부목표 11.a는 도시계획에 있어 도시와 주변부, 지방계획과 국가계획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지표 11.a.1의 의미를 분석하면 단순히 특정 도시 자체의 단독적인 도시계획보다는 주변 농촌 지역이나 관련 생활권을 모두 포함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의미하나 현실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에 사용 가능한 지표 중에 조건을 만족하는 지표는 없다.

#### □ 세부목표 11.b(자연재해)

세부목표 11.b는 재난에 대한 대비와 피해의 복구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부지표 11.b.1과 11.b.2는 재난감소와 대응을 위한 체계를 갖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지표는 대비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우리나라나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에 좀 더 중요한 지표이다.

#### □ 세부목표 11.c(건축물 ODA)

세부목표 11.c는 원칙적으로 그 적용 대상이 우리나라나 선진국이 아닌 최빈국이다. 우리나라의 역할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나 원조 시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재료의 사용하고, 적절한 기술을 통해 현지에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표 11.c.1은 현지 자재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고, 대상도 최빈개발도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본 목표와 지표는 우리나라 국내 문제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고 관련 지표 역시 불충분하다. 그러나 ODA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며, 적정기술 적용이 ODA 사업 수주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제4장 SDGs의 영향력 예측

### ① 설문조사 방법

SDGs의 영향력을 예측하기 위해 건축 및 도시 분야의 전문가 23인을 대상으로 2016년 8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41일간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추세연장법과 델파이 기법을 혼합하여 총 5차에 걸쳐 서면 조사로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에게 설문지를 전자 우편으로 발송하면 응답자는 5일 동안 작성한 후 전자 우편으로 다시 보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내용은 크게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의 영향력, 목표 11의 세부목표를 위한 국내 지표 선정, 선정된 국내지표의 미래 예측, 세부목표별 현 국내 정책의 적정성, 세부목표별 국내 정책 제안, 세부목표별 국내 정책의 효과, 세부목표별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의 7항목으로 구분된다. 7가지 조사 항목 중 선정된 국내지표의 미래 예측과 세부목표별 국내 정책의 효과는 반복 설문을 실시하는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마지막 5차 조사에서 실시한 반복 설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정성평가 기법을 도입하여 조사의 내용을 충실히 하였다.

미래 예측을 위해 설문응답자들이 선정한 지표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추세를 예측하였다. 예측에 사용된 국내 지표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추세연장에 사용된 국내 지표

관련 SDGs 세부목표와 지표	사용된 국내 지표
세부목표 11.1과 지표 11.1.1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비율
세부목표 11.2와 지표 11.2.1	대중교통 접근 시간
세부목표 11.3과 지표 11.3.1	인구대비 시가화 면적비율
세부목표 11.4와 지표 11.4.1	GDP 대비 문화재정 비율
세부목표 11.5와 지표 11.5.1	사망 실종자 수 및 이재민 수
세부목표 11.5와 지표 11.5.2	GDP 대비 자연재해 피해액 GDP에 비해 피해액의 비율
세부목표 11.6과 지표 11.6.1	일반폐기물 재활용 비율
세부목표 11.6과 지표 11.6.2	미세먼지(PM10)농도
세부목표 11.7과 지표 11.7.1	도시인구 1인당 공공공간의 면적
세부목표 11.7과 지표 11.7.2	공공공간에서의 발생한 성범죄 및 물리적 폭력 사건 비율
세부목표 11.a와 지표 11.a.1	도시 및 지역계획을 수립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

## ②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및 결과

### □ 예측 지표로 본 SDGs 세부목표의 중요도

전문가들은 국내 유사지표가 전반적으로 2030년까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국내 지표 값의 변화로 판단하면 SDGs 지표 11.1.1의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11.4.1의 자연 및 문화자원 관련 사업, 11.6.2의 미세먼지 농도 저감, 11.7.1의 공공공간의 확대, 11.7.2의 공공장소에서의 범죄 예방 분야에서 큰 변화가 기대되었다.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 중 건축도시분야와의 연관성 측면에서 세부목표 11.1의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분야와 세부목표 11.7의 공공공간의 확대와 공공장소에서의 범죄예방이 중요하며, 세부목표 11.5의 자연재해 예방의 경우 장기적으로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이룩해야 하는 과제이므로 지금 당장보다는 가까운 미래에 보다 중요한 분야로 조사되었다.

[표 2] 국내 SDGs관련 지표의 현재 및 미래 예측 비교

SDGs 지표	국내 지표		현재	2030년 예측값	변화정도*
11.1.1.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		97.8만 명 (2014년)	32.2만 명	▼
11.2.1	대중교통 접근시간 비율	5분 이내	14.0% (2015년)	13.0%	▼
		5~10분	44.0% (2015년)	49.4%	▲
		10~15분	29.9% (2015년)	27.9%	▼
		15~20분	6.8% (2015년)	5.3%	▼
		20분 이상	5.3% (2015년)	4.5%	▼
11.3.1	1인당 시가화 면적비율		17.2% (2015년)	17.9%	▲
11.4.1	GDP 대비 문화재정 비율		0.3% (2014년)	0.7%	▲
11.5.1	사망 및 실종자 수		2명 (2014년)	32명	▲
	이재민 수		7,691명 (2014년)	30,500명	▲
11.5.2	GDP 대비 자연재해 피해액 비율		0.012% (2014년)	0.020%	▲
11.6.1	일반폐기물 재활용 비율		84.0% (2013년)	86.3%	▲
11.6.2	미세먼지 농도		45.8 $\mu\text{g}/\text{m}^3$ (2013년)	28.8 $\mu\text{g}/\text{m}^3$	▼
11.7.1	1인당 공공공간의 면적		273.5 $\text{m}^2$ (2015년)	352.1 $\text{m}^2$	▲
11.7.2	공공장소 발생 성범죄 비율		0.4% (2014년)	0.3%	▼
	공공장소 발생 폭력사건 비율		5.5% (2014년)	4.2%	▼
11.a.1	도시계획 수립 지역에 사는 인구 비율		90.4% (2015년)	92.2%	▲

\* 변화정도 : 세모 한 개는 완만한 변화, 두 개는 급격한 변화, 녹색은 긍정적, 빨간색은 부정적 변화를 의미

#### □ 건축도시분야를 위한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 우선순위

건축도시분야가 집중해야 하는 4분야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분야는 자연재해 예방 분야이다([표 3]). 그러나 이 분야는 건축도시분야의 입장에서 지금 당장 큰 역할을 수행하기에 곤란하다.

반면에 공공장소 범죄예방과 불량주거지 개선의 경우 현재 이슈화되고 일정정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범죄예방의 경우 공공장소에 국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국적으로 CPTED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정정도 성과도 보이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은 사회적 형평성 문제와 함께 현재 큰 사회적 화두이다. 또한 불량 주거지 개선이 SDGs 목표 11의 1번 세부목표인 상징성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는 결국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이 주된 목표이다. CPTED 사업은 위치적 특성상 불량주거지 개선과 연관되어 있어 불량주거지 개선 사업과 CPTED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표 3]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와 지표의 국내 정책에 대한 영향력

변수	빈도	평균	표준 편차	SDGs 내용
목표11.6과 지표11.6.2 지표의 영향력	23	4.74	0.54	미세먼지
목표11.2과 지표11.2.1 지표의 영향력	23	4.17	0.65	편리한 대중교통
목표11.5과 지표11.5.1 지표의 영향력	23	4.09	1.13	자연재해 사망 및 실종자
목표11.3과 지표11.3.2 지표의 영향력	23	4.09	0.67	도시계획과 관리에 시민참여
목표11.7과 지표11.7.2 지표의 영향력	22	4.00	0.76	물리적 성적 희롱
목표11.1과 지표11.1.1 지표의 영향력	23	3.91	1.13	불량주거지 개선
목표11.b과 지표11.b.1 지표의 영향력	21	3.81	0.93	센다이 체제를 준수하는 지방 재난관리 전략
목표11.5과 지표11.5.2 지표의 영향력	21	3.81	1.33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목표11.7과 지표11.7.1 지표의 영향력	23	3.70	0.64	공공공간
목표11.b과 지표11.b.2 지표의 영향력	19	3.63	0.90	국가 및 지방 재난관리 계획
목표11.6과 지표11.6.1 지표의 영향력	23	3.52	1.20	고형 폐기물 처리
목표11.4과 지표11.4.1 지표의 영향력	23	3.52	0.90	문화와 자연유산 보호
목표11.c과 지표11.c.1 지표의 영향력	22	3.36	0.95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최빈국 지원
목표11.3과 지표11.3.1 지표의 영향력	23	3.09	1.16	인구성장과 토지 소요 비율
목표11.a과 지표11.a.1 지표의 영향력	22	2.82	1.40	지역개발계획

공공공간의 확대의 경우 단순히 공원 등의 공간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으며, SDGs에서 강조하는 취약계층의 접근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 어린이,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공공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긴 했지만, 세부목표 11.c의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속가능한 건축물 건설 지원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 건축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야하는 세부목표이다.

#### □ 건축도시분야를 위한 SDGs 목표 11 달성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도시계획 등 각 분야의 기본 계획의 수립보다는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세 집행정책을 우선순위에 두었으며, 효과도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다([표 4]).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경우 관련 분야를 위한 기본계획은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계획의 집행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기본계획 등의 계획 수립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후 순위에 두었고, 실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실행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표 4] SDGs 목표 11 중 건축도시분야의 중점 추진 분야의 우선 국내 정책 요약

SDGs 분야	우선 국내 정책	효과 순위
세부목표 11.1	1. 사회주거(social housing) 확대정책 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택정책 3. 저소득층 주택 개량사업/지자체 집수리 지원 사업	3 1 2
세부목표 11.5	1. 재난별 시나리오와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단계별 지역단위의 대응체계 구성 2. 방재의 관점에서 빈곤층과 취약층의 거주환경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 3. 주요시설 (댐, 제방 등)의 안전기준 강화 및 보강공사 실시	2 1 3
세부목표 11.7 (지표 11.7.1)	1. 근린 단위의 소규모 공원 및 녹지의 확보 정책 2. 공공공간의 적정 배치를 위한 설치가이드라인 강화 3. 보행자 중심도시 건설 지원	1 3 2
세부목표 11.7 (지표 11.7.2)	1. 야간에 도심 공원, 운동장 등에 대한 안전방범체계 구축 2. 장소, 범죄, 범죄 유형에 따른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사업의 다양화 3. 성폭력 범죄자 신상 공개 및 주민 알람 서비스/사후 관리 강화	1 2 3
세부목표 11.c	1. 적용 가능한 적정기술 및 현지에서의 기술 이전 2. 현지 자재 활용을 위한 원조자금의 건설 인프라 사업 비율 확대 3. 최빈국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공법 연구 지원	3 1 2

## 제5장 부문별 대응 정책

SDGs는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유기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에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SDGs 이행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의견 및 정책 조율을 위한 기관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최고위급 정부 관료가 주관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도 기본방향에 대한

범부처 조율과 모니터링, 평가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타워로서 SDGs 정책 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관 또는 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그 밑에 각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부처별 업무 조율과 정책을 수행할 것을 전제로 분야별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건축·도시분야의 측면에서 단기/중기/장기로 정책분야를 구분하였다([표 5]).

[표 5] SDGs 세부목표 중 중점 추진분야의 정책 또는 사업 제안

관련SDGs 세부목표	정책 또는 사업	개선 및 도출 내용	구분
11.1	불량 주택 및 비공식 주거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전국 단위 개선 사업 물량 산정 사업 대상 순위 선정	단기
	최저 주거품질 기준 제정	최저 주거품질 기준 제시 최저 주거품질 기준에 따른 주택 모델 제시	단기
	사회주거 확대	계층별 적정 주택 임대 가격 선정 적정한 가격의 주택 제공	중기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계량 사업 등 주거개선 사업의 시행	주거환경 개선	중기
11.5	기존 인프라 실태조사	시설 보강 및 사고 예방	단기
	재난 대응 매뉴얼	중앙정부 및 지자체 업무 분담 매뉴얼 수립 지자체별 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 재난 유형별, 취약계층별 대응 매뉴얼 수립	단기
	재난 대응 종합 계획	정부와 지자체의 업무 및 역할 규정 재난 대응체계 구성 지방정부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 증액	단기
	방재 및 안전을 위한 도시계획	재난 방재를 위한 도시계획 요소 연구 관련 시나리오 및 대응방법 연구 도시 방재 및 안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의무화	중기
11.7	공공시설 디자인 가이드	취약계층을 위한 유형별 시설 설계 연구 및 설치 가이드 매뉴얼 작성 보행 중심 도시계획과 취약계층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단기
	범죄예방사업 확대	유사 범죄예방사업 통폐합을 통한 사업 일원화 지역별, 범죄 유형별 사업 매뉴얼 작성 지역별, 범죄 유형별 예방 기법 연구 도시계획에서는 범죄예방 관련 컨설팅 의무화	단기
11.c	KOICA 조직 개편	SDGs체제 대응을 위한 조직 개편 지속가능한 건축물 ODA 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 보강	중기
	친환경 ODA 건축물 R&D	ODA사업을 위한 지역별 지속가능한 건축 방식 연구 수원국과의 연구 네트워크 형성 ODA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도입	장기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개편	지속가능한 ODA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예산 반영	중기



주요 분야의 정책을 살펴보면 SDGs 세부목표 11.1의 불량주거기 개선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주거여건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개선이 필요한 전체 사업물량을 산출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저주거품질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SDGs 세부목표 11.5의 자연재난 위험 감소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실태조사를 통한 위험 사전 예방과 취약계층을 고려한 매뉴얼 작성, 지방의 대응체계 향상 등이 필요하다. 중기적으로는 도식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SDGs 세부목표 11.7의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공간 확대와 접근성 향상, 안전 향상을 위해 취약 계층을 고려한 접근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이 필요하다. 안전의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CPTED 사업의 내실화를 추구해야 한다.

SDGs 세부목표 11.c의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속가능한 건축물 건축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관련 기관의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하면서 현지에 적합한 건축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관련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재원을 명시해야 한다.

이외에 나머지 세부목표에 대해서도 분야별로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 제6장 결 론

SDGs의 각 목표와 세부목표별 지표는 개별 국가가 자신들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거나 향후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한 가이드의 성격이 강하다. 개별 국가는 국내외 문제에 대해 SDGs의 목표와 지표를 적용하고 활용하는 문제에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 방향 설정하는가에 따라 목표와 세부목표별로 중요성이 결정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어떤 분야에 더 집중할 것이며, 어떻게 SDGs를 활용할 것인가는 온전히 우리나라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위해서는 국민, 시민사회, 정부, 학계, 재계 등 모든 관련 주체가 참여하여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토론과 의견 교환, 협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가능한 모든 보유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하루 빨리 대응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SDGs의 각 목표와 목표의 세부목표는 상호간의 연관성이 깊다. 본 연구

는 목표 11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으나, 타 목표의 세부목표 중 도시와 연관된 항목이 다수 존재한다. 향후 연관된 타 목표의 세부목표에 대한 영향력 분석 역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SDGs, Goal 11, 지속가능한 도시, 추세예측, 지속가능발전, 주거환경개선, 범죄 예방, 자연재해 예방,

## 차 례

<b>제1장 서론</b>	<b>1</b>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주요내용	7
3. 연구 추진방법 및 구성	8
1) 연구방법	8
2) 연구 흐름도	9
4.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10
<b>제2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외 동향</b>	<b>13</b>
1. 지속가능발전목표 개요	13
2. 국내외 동향 파악	15
1) 국내 SDGs 관련 정부 기관 동향 분석	15
2) 국외 정책현황	29
3) 기타 국제기구 및 민간기구	40
3. 소결	45
<b>제3장 SDGs 목표 11의 국내 현황 분석</b>	<b>47</b>
1. 개요	47
2. 목표 11의 세부목표 및 지표 분석	57
3. SDGs 목표 11과 다른 목표의 연관성 분석	86
4. 시사점	90

## 제4장 SDGs 목표 11의 영향력 예측 .....93

1. 조사 개요 .....93
2.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및 결과 .....97
  - 1)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와 지표의 영향력 .....97
  - 2) SDGs 목표 11의 세부지표별 예측 .....101
  - 3) 국내 유사 지표의 미래 변화 예측 .....112
  - 4)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를 위한 국내 정책 방향의 적정성 .....125
  - 5)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별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 .....131
  - 6)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별 국내 정책의 효과 .....142
3. 소결 .....153

## 제5장 부문별 대응정책 .....159

1. 정책 기본방향 설정 .....159
2. 부문별 정책 .....161
3. 소결 .....179

## 제6장 결론 .....183

1. 연구의 결과 요약 .....183
  - 1) 전문가들이 평가한 SDGs 세부목표의 중요성과 정책우선 순위 .....183
  - 2) SDGs 목표 11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안 .....184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 .....188

## 참고문헌 .....191

## SUMMARY .....195

## 부록 .....201

- 부록1. SDGs 목표 11 원문 .....201
- 부록2. 설문조사지 .....203

## 표차례

[표 1-1] 건설 및 건축 관련 서비스업 매출규모 .....	4
[표 2-1] MDGs와 SDGs 비교 .....	14
[표 2-2] SDGs목표와 국가계획의 연계 매트릭스 .....	16
[표 2-3] 제2차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책방향과 세부과제 .....	18
[표 2-4]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SDGs 목표 11관련 과제 .....	21
[표 2-5] 6대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	23
[표 2-6] 도시별 대중교통수단 선정 기준 .....	25
[표 2-7] EU SDS 4대 핵심 목표 .....	29
[표 2-8] SDSN의 전문가 그룹 및 연구 내용 .....	41
[표 2-9] CPI 구성분야와 지표 .....	42
[표 2-10] 중앙 및 지방정부의 SDGs 목표 11 모니터링 지원 도구로써 CPI 활용의 장점 .....	44
[표 3-1] 제2차 IAEG-SDGs회의 전후 글로벌 지표 현황 .....	53
[표 3-2] UN IAEG-SDGs 2016년 3월 회의 전후 목표 11의 지표 변화 .....	54
[표 3-3] 국가 통계 및 지표 현황 .....	57
[표 3-4] SDGs 세부목표와 국내 관련지표 연계: 목표 11 .....	58
[표 3-5] UN-HABITAT의 불량주거지의 조건 .....	59
[표 3-6]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변화 .....	60
[표 3-7] 주거환경 만족도 .....	61
[표 3-8] 소득 계층별 PIR 변화 (2006년~2014년) .....	61
[표 3-9] 공공임대 준공(2009~2016) .....	63
[표 3-10] 2016년 공공임대주택 준공계획 .....	64
[표 3-11] 대중교통접근 수단 .....	65
[표 3-12] 대중교통접근 시간별 비율 .....	66

[표 3-13] 도시화율 변화(2004~2014년) .....	68
[표 3-14]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도시현황(2014년) .....	69
[표 3-15] 문화재정 총액과 GDP대비 문화재정 비율(2006~2014년) (단위: 억 원) .....	71
[표 3-16] 자연재해 발생건수와 피해(2006~2014년) .....	73
[표 3-17] 시도별 풍수해에 의한 건물 피해(단위: 동) .....	74
[표 3-18] 일반폐기물 재활용 비율 .....	76
[표 3-19] 폐기물 재활용실적 및 업체현황 .....	76
[표 3-20] 미세먼지(PM10) 농도(2006~2013년) .....	77
[표 3-21] 미세먼지(PM10) 농도 세계 주요도시 비교(2009~2014년) .....	77
[표 3-22] 녹지형 공공공간 현황 (2009~2015년) .....	79
[표 3-23] 성범죄 및 폭력범죄 관련 현황 (2011~2014년) .....	80
[표 3-24]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와 타분야 세부목표 사이의 상관관계 .....	87
[표 3-25] SDGs 세부목표 11.5, 11.b, 1.5, 13.1의 지표 비교 .....	88
[표 3-26] SDGs 지표 11.6.2 미세먼지 농도 비교(2014년 기준) .....	90
[표 3-27] SDGs 세부지표 11.1.1과 11.5.1 비교 .....	91
[표 4-1] 설문 회차 별 설문 조사 내용 .....	94
[표 4-2]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와 지표의 국내 정책에 대한 영향력 .....	98
[표 4-3]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의 추세 예측의 적합성 평가 .....	112
[표 4-4]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전문가 예측값 .....	112
[표 4-5] 대중교통 접근 수단 비율 .....	113
[표 4-6] 대중교통 접근 시간 비율의 추세 예측의 적합성 평가 .....	114
[표 4-7] 대중교통 접근 시간 비율 대한 전문가 예측값 .....	114
[표 4-8] 1인당 시가화 면적 비율의 추세 예측의 적합성 평가 .....	115
[표 4-9] 1인당 시가화 면적 비율에 대한 전문가 예측값 .....	115
[표 4-10] GDP 대비 문화재정 비율의 추세 예측의 적합성 평가 .....	116
[표 4-11] GDP 대비 문화재정 비율에 대한 전문가 예측값 .....	116
[표 4-12]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 실종사 및 이재민 수에 대한 전문가 증감 예측 .....	117
[표 4-13]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 실종사 및 이재민 수에 대한 전문가 예측값 .....	118
[표 4-14] GDP 대비 자연재해 피해액 비율에 대한 전문가 증감 예측 .....	119

[표 4-15] GDP 대비 자연재해 피해액 비율에 대한 전문가 예측값 .....	119
[표 4-16] 일반폐기물 재활용 비율의 추세 예측의 적합성 평가 .....	120
[표 4-17] 일반폐기물 재활용 비율에 대한 전문가 예측값 .....	120
[표 4-18] 미세먼지농도의 추세 예측의 적합성 평가 .....	121
[표 4-19] 미세먼지농도에 대한 전문가 예측값 .....	121
[표 4-20] 1인당 공공공간의 면적의 추세 예측의 적합성 평가 .....	122
[표 4-21] 1인당 공공공간의 면적에 대한 전문가 예측값 .....	122
[표 4-22] 공공장소 성범죄 및 폭력사건 발생 비율의 증감에 대한 전문가 예측 .....	123
[표 4-23] 공공장소 성범죄 및 폭력사건 발생 비율에 대한 전문가 예측값 .....	123
[표 4-24]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사는 인구 비율의 추세 예측의 적합성 평가 .....	124
[표 4-25]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사는 인구 비율에 대한 전문가 예측값 .....	124
[표 4-26]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를 위한 국내 정책의 적절성 평가 .....	125
[표 4-27] SDGs 세부목표 11.1을 위한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 .....	132
[표 4-28] SDGs 세부목표 11.2를 위한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 .....	133
[표 4-29] SDGs 세부목표 11.3을 위한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 .....	134
[표 4-30] SDGs 세부목표 11.4를 위한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 .....	135
[표 4-31] SDGs 세부목표 11.5를 위한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 .....	136
[표 4-32] SDGs 세부목표 11.6을 위한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 .....	137
[표 4-33] SDGs 세부목표 11.7의 지표 11.7.1을 위한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 .....	138
[표 4-34] SDGs 세부목표 11.7의 지표 11.7.2를 위한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 .....	139
[표 4-35] SDGs 세부목표 11.a를 위한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 .....	140
[표 4-36] SDGs 세부목표 11.c를 위한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 .....	141
[표 4-37] SDGs 세부목표 11.1을 위한 국내 정책의 효과 평가 .....	142
[표 4-38] SDGs 세부목표 11.2를 위한 국내 정책의 효과 평가 .....	143
[표 4-39] SDGs 세부목표 11.3을 위한 국내 정책의 효과 평가 .....	144
[표 4-40] SDGs 세부목표 11.4를 위한 국내 정책의 효과 평가 .....	145
[표 4-41] SDGs 세부목표 11.5를 위한 국내 정책의 효과 평가 .....	146
[표 4-42] SDGs 세부목표 11.6을 위한 국내 정책의 효과 평가 .....	147
[표 4-43] SDGs 세부목표 11.7의 지표 11.7.1을 위한 국내 정책의 효과 평가 .....	148

[표 4-44] SDGs 세부목표 11.7의 지표 11.7.2를 위한 국내 정책의 효과 평가 .....	149
[표 4-45] SDGs 세부목표 11.a를 위한 국내 정책의 효과 평가 .....	150
[표 4-46] SDGs 세부목표 11.c를 위한 국내 정책의 효과 평가 .....	152
[표 4-47] 국내 SDGs관련 지표의 현재 및 미래 예측 비교 .....	154
[표 4-48]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와 지표의 국내 정책에 대한 영향력 .....	156
[표 4-49] SDGs 목표 11의 분야별 우선 국내 정책 요약 .....	158
[표 5-1] SDGs 세부목표 11.1을 위한 정책 또는 사업 제안 .....	163
[표 5-2] SDGs 세부목표 11.2를 위한 정책 또는 사업 제안 .....	165
[표 5-3] SDGs 세부목표 11.3을 위한 정책 또는 사업 제안 .....	167
[표 5-4] SDGs 세부목표 11.4를 위한 정책 또는 사업 제안 .....	169
[표 5-5] SDGs 세부목표 11.5를 위한 정책 또는 사업 제안 .....	171
[표 5-6] SDGs 세부목표 11.6을 위한 정책 또는 사업 제안 .....	173
[표 5-7] SDGs 세부목표 11.7을 위한 정책 또는 사업 제안 .....	175
[표 5-8] SDGs 세부목표 11.a를 위한 정책 또는 사업 제안 .....	176
[표 5-9] SDGs 세부목표 11.c를 위한 정책 또는 사업 제안 .....	178
[표 5-10] SDGs 세부목표별 내용과 제안 정책 일람 .....	180
[표 6-1] SDGs 세부목표 중 주요 추진분야의 정책 또는 사업 제안 .....	186



## 그림차례

[그림 1-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 및 국가별 재정자원으로 부터의 자금의 흐름	3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9
[그림 2-1] 제2차 녹색성장 계획 기본체계	17
[그림 2-2] 제3차 지속가능발전 비전체계도	20
[그림 2-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기본 틀	22
[그림 2-4]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목표	24
[그림 2-5] 정부의 SDGs관련 정부 기관과 역할	26
[그림 2-6] Goal 11 and the City Prosperity Initiative	43
[그림 3-1] OECD 국가들의 SDGs Index 값	48
[그림 3-2] 소득분위별 슈바베지수 (2015년 기준)	62
[그림 3-3] 연도별 슈바베지수 변화- 월평균소득 1,2,3분위(2003~2015)	62
[그림 3-4] 대중교통수송분담률(2003~2013년)	66
[그림 3-5] 개발협력플랫폼 개념	85
[그림 4-1] 설문 조사의 흐름도	95
[그림 4-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 예측	101
[그림 4-3] 대중교통 접근 시간 예측	102
[그림 4-4] 1인당 시가화 면적 비율 예측	103
[그림 4-5] GDP 대비 문화재정비율 예측	104
[그림 4-6]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 및 실종자 수 예측	105
[그림 4-7]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 및 실종자 수 예측	105
[그림 4-8] 과거 자연재해 피해액	106
[그림 4-9] 과거 GDP 대비 자연재해 피해액 비율	106

[그림 4-10] 일반폐기물 재활용 비율 예측 .....	107
[그림 4-11] 미세먼지 농도 예측 .....	108
[그림 4-12] 1인당 공공공간의 면적 예측 .....	109
[그림 4-13] 공공장소 발생 성범죄 비율 예측 .....	110
[그림 4-14] 공공장소 발생 폭력 사건 비율 예측 .....	110
[그림 4-15] 도시계획 수립 지역에 사는 인구 비율 예측 .....	111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내용
3. 연구 추진방법 및 구성
4.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의 의미와 건축도시분야 파급효과 예측 필요성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가 2015년 만료되면서, UN은 지난 몇 년간 새로운 개발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준비해왔다. 2014년 7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담은 SDGs 초안을 발표하였고, 이어 정부 간 협상을 거쳐 2030년까지 시행할 범지구적 목표를 2015년 9월 UN 총회 특별정상회의에서 채택하였다.

SDGs는 단순히 SDGs 목표와 관련된 정책을 착실히 수행하거나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센티브나 제재를 가하는 정책이 아니다. SDGs는 전 세계적으로 국제사회와 개별 국가가 나아가야하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패러다임이다. 즉 SDGs의 시행과 집행에 대한 전 지구적인 평가와 개별적인 국가에 대한 평가는 개별 국가에서 추진할 SDGs관련 정책이나 업무의 개발을 위한 하나의 시작점으로 기능한다. 개별 국가에게 자국의 정책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하는지, 부족한 분야는 어디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지속적인 평가는 각 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주요 사업과 예산의 우선순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 또한 점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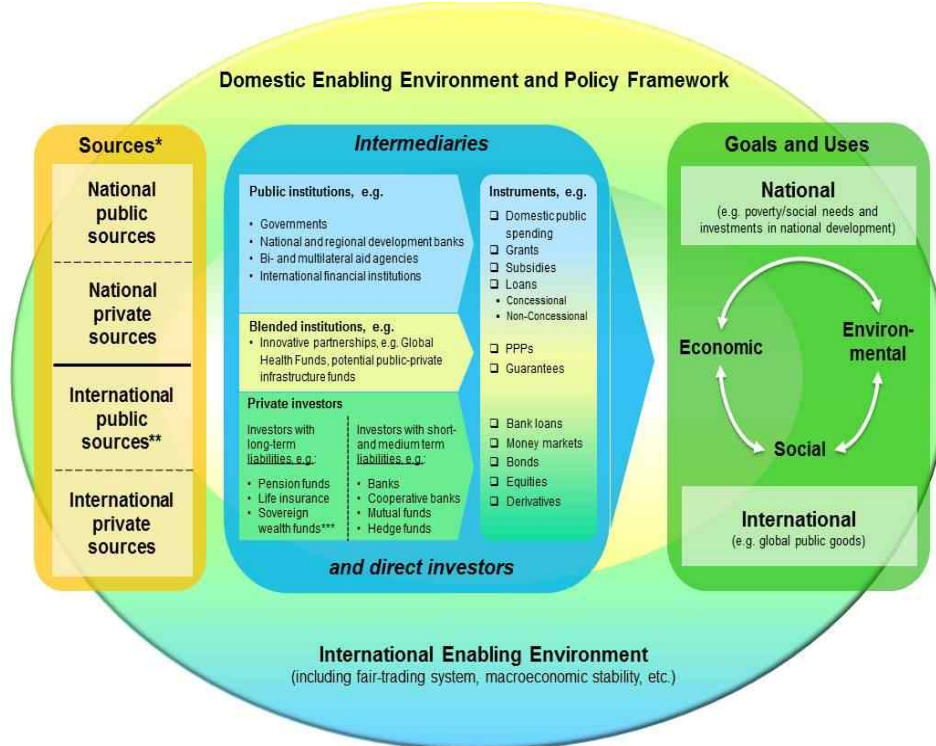
인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는 주변국의 압묵적 압력을 무시하기 힘들 것이다.

SDGs가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SDGs 체제는 출범하였으며, 세계 각국은 SDGs 체제하에서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우리나라의 이익과 발전에 부합하면서 SDGs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국내적으로 관련 법제의 정비를 필요로 한다. 특히 시민단체 등에서 모니터링할 때 SDGs가 주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므로 관련 분야의 세부적인 정비도 필요하다.

그러나 SDGs는 광범위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15년의 짧은 기간 동안 추진할 주요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진행될 것은 자명하다. 이는 건축도시분야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건축도시분야 역시 기존의 정책 방향에서 SDGs의 가치를 포함하는 정책으로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건축도시분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SDGs가 어떻게 영향을 발휘할지 어떤 분야에 더 큰 영향을 발휘할 지에 대한 의문에 답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MDGs에서부터 주목받던 빈곤, 보건, 거버넌스, 성평등 등의 일부 분야에 국한되어 활발한 토론과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SDGs는 도시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이해하고 관련 기반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전의 MDGs와 달리 SDGs체제에서는 도시와 관련된 사항을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전 MDGs체제에서는 건축도시분야가 교육, 보건 등 타 분야의 일부로서 고려되었다면, 이제는 직접적인 목표로 관련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따라서 SDGs가 건축도시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MDGs와는 비교하기 힘들며, 국제기구, 민간협력 또는 민간투자자들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자금이동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UN 국제원조 총괄기관인 UNDP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므로 해외 건축 및 도시 관련 사업 진출 시 중요한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 SDGs가 개발도상국에 한정하지 않고, 선진국의 소외계층 역시 그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가능한 사회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역시 주거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하는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그림 1-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 및 국가별 재정자원으로 부터의 자금의 흐름

\* 출처: UN(2014), *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 Synthesi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Post-2015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New York: The United Nations, p.27.

## □ 지속가능한 삶의 공간으로서 도시와 새로운 기회

SDGs체제하에서 도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틀로 이해될 수 있다. 현재 가장 많은 문제가 생기는 곳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며,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공간인 도시가 SDGs 달성을 위한 우선 지역이다. 따라서 도시를 지속가능한 삶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당면과제이다.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진행되는 도시화로 인해 2030년에 약 60%, 2050년까지 약 70%의 인류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UN, 2014)<sup>1)</sup>. 도시화는 단순히 공간이 농촌에서 도시로 바뀌거나, 인구가 모여드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도시화는 인류가 직면한 문제인 가난, 불평등, 환경파괴, 기후변화, 분쟁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다.

1) UN(2014), *Urbaniz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owards a New United Nations Urban Agenda*, CEB/2014/HLCP-28/CRP.5, New York: The United Nations.

도시는 정책을 시행하고 실현하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집중된 기반시설로 인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시화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탈바꿈시키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잘 계획된’ 이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잘 계획된 도시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하며, SDGs는 잘 계획된 도시를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 산재한 불평등과 양극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가 SDGs에 의해 재조명받게 될 것이며, SDGs 목표 11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국내 건축·도시분야의 정책 및 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건축도시분야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SDGs체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아래의 [표 1-1]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서비스업의 매출규모를 알 수 있다.

[표 1-1] 건설 및 건축 관련 서비스업 매출규모

(단위 : 십억 원)

연도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 관련서비스업	건축 및 관련 서비스업			
	매출액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률
2007	12,235	4,226	34.5%	3,706	12.3%
2008	16,539	4,988	30.2%	4,342	13.0%
2009	18,159	4,592	25.3%	4,265	7.1%
2011	19,247	4,922	25.6%	4,631	5.9%
2012	19,796	5,071	25.6%	4,743	6.5%
2013	19,687	4,956	25.2%	4,609	7.0%

\* 출처: 통계청(2015), “도소매서비스업”, 「국가통계포털」, <http://kostat.go.kr/>

\*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집계된 자료만 대상으로 함

\* 손동필 외(2015),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 연구」, AURI-기본-2015-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2.에서 재인용

국내 건축·도시분야의 산업은 갈수록 침체되어, 공공분야를 제외하면 최근 발주되는 시장도 없기 때문에 돌파구가 필요하다. 2013년 기준 국내 건설 산업의 매출규모는 216.9조 원이며,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 산업의 매출규모는 19.7조 원으로 건설 산업의 9.1%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 순수 건축서비스의 매출규모는 5.0조 원으로 전체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매출의 25.2%이다. 또한 2007년 이후 건축기술 및 관련분야의 성

장이 정체되고 있으며, 특히 건축서비스 분야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영업이익률 역시 감소하여 2013년 기준으로 7.0%에 불과하다.<sup>2)</sup>

그러나 SDGs는 소외 및 저소득 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적절한 도시계획을 적용하여 도시를 재설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SDSN에서 시험적으로 계산한 OECD 국가들의 SDGs 목표별 수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목표 11과 관련해서 아일랜드와 더불어 불량국가로 분류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거환경을 포함한 도시환경이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대단히 부족하다는 의미이며, SDGs체제하에서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향상될 가능성과 정부가 더욱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SDGs는 건축도시분야가 국내에서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진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15년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의 기반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2) 손동필 외(2015),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 연구」, AURI-기본-2015-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1-2

## 2) 연구의 목적

### □ 국내외 동향 파악 및 SDGs 목표 11 분석

새로운 체제인 SDGs의 등장으로 각 국가와 관련 기관은 아직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부처와 부처별 관련 정책이 얼마나 SDGs를 포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정부와 관련 국제기구의 SDGs 대응 동향을 살펴본다.

### □ SDGs가 국내 건축·도시분야에 미칠 영향력 예측 및 정책방향 설정

본 연구는 제한된 예산 내에서 SDGs 목표 11이 건축도시계획 분야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예산과 기간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고 실행한다.

SDGs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 각국의 소외 및 저소득 계층이 현재의 생활 여건을 지속가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 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SDGs 목표 11이 국내 건축·도시분야에 미칠 영향력과 필요한 정책과 정책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생활환경에 중점을 둔 건축·도시분야의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 2. 연구의 주요내용

### □ 국내외 동향 파악

SDGs의 등장에 따른 우리 정부의 현 시점에서의 대응 동향을 고찰하고, 해외 국가가 SDGs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까지 진행해 왔거나 진행 중인 정책을 살펴본다. 특히 건축·도시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표 11과의 관련된 대응 정책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 □ SDGs 목표 11의 각 지표 분석

목표 11의 세부목표와 제안된 지표의 의미를 파악하고, 국내에서 현재 제공하는 관련 지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한다. 또한 지표와 연계되는 국내 정책을 파악하고 향후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파악한다.

###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영향력 예측 및 정책방향 설정

다양한 연구방법 중 본 연구에 적합한 미래예측방법을 선정하고, 적용하여 SDGs 목표 11의 세부지표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한다.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SDGs 목표 11이 건축·도시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한다. 이후 검토된 영향력을 바탕으로 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정책을 제안한다.

### 3. 연구 추진방법 및 구성

#### 1) 연구방법

##### □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정부정책 현황 및 연구에 대한 문헌조사

- 분야별 정책동향 조사
- 관련분야 연구에 대한 문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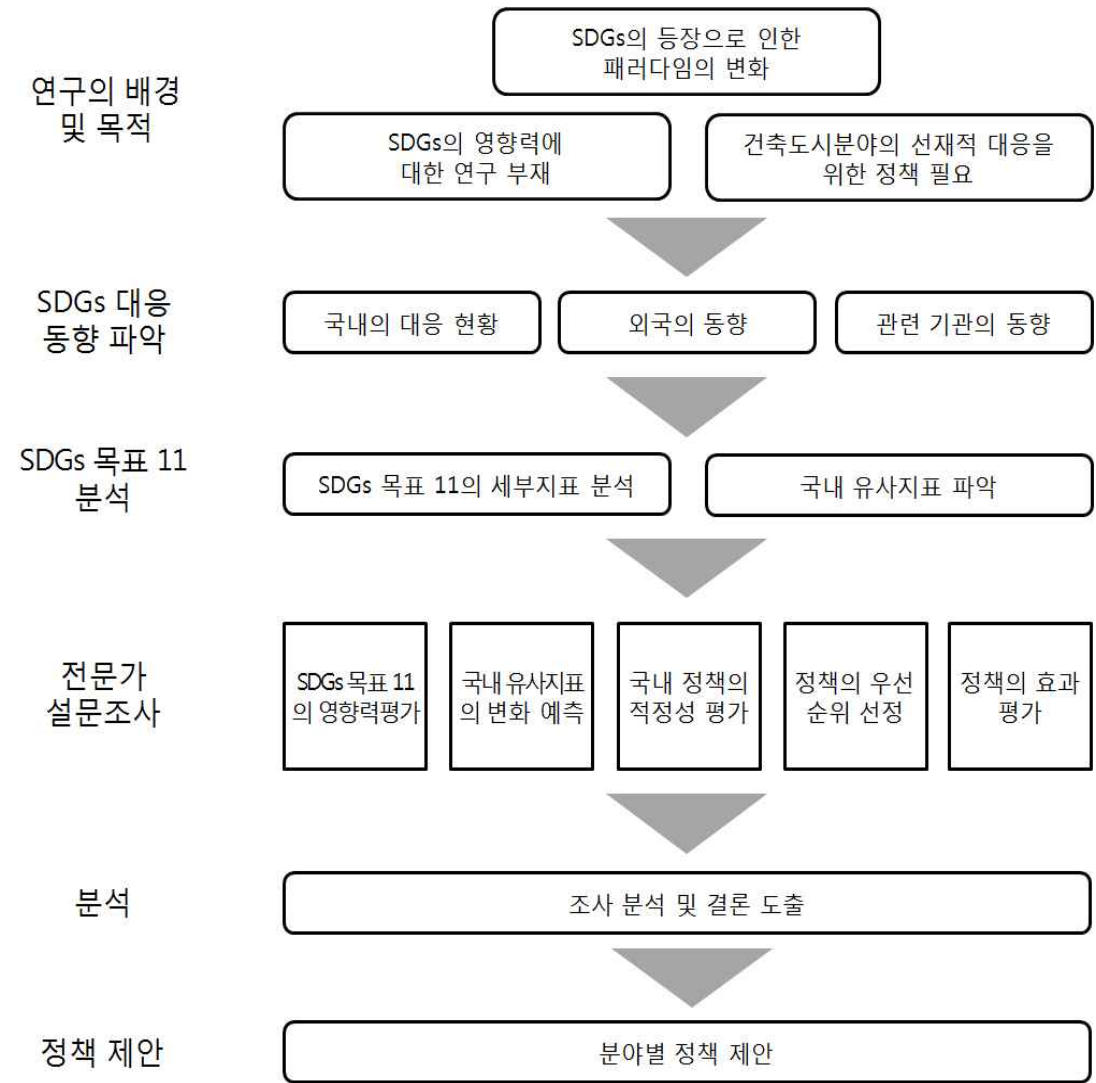
##### □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 및 협동연구 수행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KOICA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연구
-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들과 상시적인 자문회의

#####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및 설문조사

- 국제기구 종사자 및 관련 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 전문가 대상 심층 설문조사

## 2) 연구 흐름도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 4.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명: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 1, 2</li> <li>- 연구자(연도): KOICA 김지현 (2014, 2015)</li> <li>- 연구목적: SDGs 초안분석과 Post-2015의제에 관한 UN 사무총장 종합보고서 분석을 통한 향후 개발의제에 대한 시사점 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조사</li> <li>- UN 등 국제기구 관련 자료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DGs 초안 분석</li> <li>- Post-2015 개발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주체 및 내용분석</li> <li>- SDGs초안 이후 일정 및 전망</li> <li>• 종합보고서 분석</li> <li>- Post-2015 지속가능발전의제에 관한 UN사무총장 종합보고서 작성경위, 내용 및 의의 분석</li> <li>- 평가 및 향후 일정</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명: 새천년개발목표의 교훈과 2015년 이후 개발의제에의 함의</li> <li>- 연구자(연도): KDI 임원혁 (2012)</li> <li>- 연구목적: 새천년개발목표의 내용, 성과 및 한계 분석을 통한 Post-2015의제의 시사점 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조사</li> <li>- World Bank 등 국제기구 자료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천년개발목표의 내용 분석</li> <li>- 새천년개발목표의 성과 및 한계 분석</li> <li>- Post-2015의제의 개선방안</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명: 국토 대예측 연구 I, II, III</li> <li>- 연구자(연도): 국토연구원 이용우 외(2009~2011)</li> <li>- 연구목적: 메가트렌드 분석을 통한 국토분야 예측 및 정책방향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예측 방법론(메가트렌드 정리 및 국토에 미치는 영향 도출, 국토트렌드 및 국토이슈 설정 국토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도출 및 분석, 시나리오 작성, 미래예측, 미래상 설정, 정책대응)</li> <li>- 민-산-학-관 협동연구체계 구축</li> <li>- 분야별 학술용역, 원고 의뢰, 워크숍, 자문회의, 설문조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예측 방법론 정립</li> <li>- 국토분야 조작적 정의 (분야별: 주거, 산업입지, 교통, 토지이용 등 /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등)</li> <li>- 메가트렌드 정리 및 예측</li> <li>- 분야별, 지역별 국토미래상 및 정책과제 도출</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명: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추진에 따른 LH 사업 연계화 방안 연구</li> <li>- 연구자(연도): LH토지주택연구원 성장환 외(2015)</li> <li>- 연구목적: SDGs 도입시 도시, 주택, 산업인프라 분야의 이행전략과 대응방안 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국내외 보고서 및 최신 SDGs 관련 자료 검토</li> <li>- UN과 국내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결과 검토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9의 경우 기성산단과 신규산단, 목표 11의 경우 기성시가지와 신규개발지로 나누어서 현상태유지 및 기준정비로 대응방안 도출</li> </ul>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명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li> <li>- 연구자(연도): KOICA 내부 연구진(2015)</li> <li>- 연구목적: 개발협력의 시각에서 SDGs분석 및 대응방안 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OICA의 각 분야별 전문인력들이 SDGs 분석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개발협력의 시각에서 대응방안 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의 설정배경, 정의와 의미, 세부목표 및 연계구조 분석, 성과지표 분석 및 대응방안 도출 (각 목표별 다른 연구진이 목표별 대응방안 도출)</li> </ul>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명: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대비 건축·도시분야 대응방향 연구</li> <li>- 연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예측 방법론 정립</li> <li>• 지속가능발전목표 분석 및 국내외 동향 파악</li> <li>•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국내 건축·도시분야에 미칠 영향력 예측 및 정책방향 제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예측 방법론 정립</li> <li>- 연구분야(목표 11에 맞는 건축·도시분야의 세부분야) 정립, 분야별 문헌조사 및 현황분석</li> <li>-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설문조사를 통한 미래예측 및 정책방향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델파이, SWOT분석, 추세연장 기법, 전문가 패널 등 본 과제에 적합한 미래예측 방법론 정립</li> <li>-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목표 11을 분석</li> <li>- 국내 건축·도시분야의 영향력 분석 및 정책 방향 설정</li> </ul>

#### □ 선행연구 현황

기존의 SDGs 관련 연구는 동향 파악과 MDGs와 SDGs가 추구하는 목표의 차이점, SDGs의 의의를 중심으로 되어왔다. 또한 환경분야와 에너지 분야, 보건 분야 등에서 SDGs에 보이는 관심에 비해 건축·도시계획 분야에서의 SDGs 관련 연구는 최근 들어 KOICA와 LH토지주택연구원을 중심으로 지표관련 연구가 시작되는 단계이다. 더욱이, 건축도시계획분야에서는 SDGs가 향후 관련 분야의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미래 예측에 대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SDGs 목표11의 세부목표에 초점을 두고 향후 15년간 건축도시계획 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대비 건축·도시 분야 대응방안을 고찰하는 것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미래학에서 이용되는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SDGs 목표 11이 건축·도시 분야에 미칠 영향력을 예측한다는데 있어 차별성이 있으며, 특히 관련 전문가 및 국제기구 실무자들과의 인터뷰 및 자문회의를 통해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제2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외 동향

1. 지속가능발전목표 개요
2. 국내외 동향
3. 소결

### 1. 지속가능발전목표 개요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 모두를 위해 환경보호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발전을 의미한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1987년에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에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미래 세대의 필요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이는 당시 지구 자원의 한계를 인식하고, 현재의 생활방식과 발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서 시작되었다.

SDGs는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 UN에서 제시한 보편적 행동의제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SDGs는 근본적으로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달성해야 하는 공통의 목표이다. SDGs 이전의 전 지구적 달성 목표인 MDGs는 빈곤과 기아의 퇴치, 보건의 그 주목적이었으며, 당연히 대상도 개발도상국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MDGs는 목표 7이 지속가능한 환경보장이었지만,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에는 그 한계가 명확하였다. 반면에 SDGs는 지구전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그 대상이 세계 모든 국가이다. 선진국 역시 부의 불평등에 의해 발생한 빈곤층이 존재하며, 소외하지 말아야 하는 대상이다. 또한 선진국을 단순한 협조자 또는 참여자가 아닌, 선진국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표 2-1] MDGs와 SDGs 비교

목표의 이름	새천년개발목표 MDGs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범위	사회발전 중심	지속 가능한 발전(경제, 사회, 환경)
달성 주제	극심한 빈곤 중심	모든 형태 빈곤과 불평등 감소
달성 대상 국가	개발도상국이 달성해야 하는 문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공통의 문제
재원 마련	개발재원 : 공적개발원조 중심 (공여국 → 수원국)	국내공공재원(세금), 공적개발원조, 민간재원(무역, 투자) 등 다양
감시와 모니터링	자발적으로 이행을 유엔에 보고	유엔이 주도하여 각 국가의 보고를 권고함

\* 출처: 문도운(2015), 「알기 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SDGs의 다양한 목표 중에서 건축·도시분야는 목표 11에 집중되어 있다. 목표 11은 주거 문제, 교통, 재해,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등 다양한 의제를 담고 있다. 그러나 SDGs의 17개 모든 목표는 건축·도시분야와 별개가 아닌 일정한 연관이 있다. 예를 들어 목표 4의 세부목표 4.1 ‘2030년까지 모든 남아·여아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교육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유롭고 공평한 양질의 초등 및 중등교육 제공’은 개발도상국의 학교시설 건설을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 2. 국내외 동향 파악

### 1) 국내 SDGs 관련 정부 기관 동향 분석

#### ① 정부의 SDGs 관련 계획

우리정부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이미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바탕으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계획이 SDGs의 내용을 온전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SDGs가 도입되면서 기존 계획의 내용을 일정부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 중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포함한 10여개가 SDGs와 연관이 있다. 다수의 계획 중 SDGs의 관점에서 볼 때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타 계획 분야보다 연관성이 깊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의 방향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지속가능발전법」은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제정·공포되었으나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으로 기본법의 지위를 잃고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sup>3)</sup>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2008년 8월의 저탄소녹색성장 선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2010년 제정되었으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도입의 근간이 됨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 단위를 수립하고 있으며, 2016년 1월부터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16~2035)을 시행 중

[표 2-2]에서 보듯이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이 SDGs와 연관된 세부 계획이 가장 많다. 또한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과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제2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이 SDGs 목표11과 관련된 세부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계획들은 전체적으로는 환경과 에너지 관련 계획이 다수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사회, 경제, 환경의 SDGs 목표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다.

3) KEI(2015),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KEI 포커스」, 3(1), p.3.

[표 2-2] SDGs목표와 국가계획의 연계 매트릭스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14~'18)	○	○	○	○			○	○	○	○	○	○	○		○	○	○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16~'35)	○	○	○		○	○	○	○		○	○	○	○	○	○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11~'20)						○					○			○			○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14~'18)							○					○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14~'18)							○		○			○	○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11~'15)									○			○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14~'18)				○	○			○	○	○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1~'15)	○	○				○	○				○		○	○	○		○
환경보전종합계획('13~'17)	○	○	○			○				○	○	○			○	○	○
환경보건종합계획('11~'20)	○	○	○	○		○							○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14~'18)		○								○			○	○	○		○
창조경제 실행계획(안)				○				○		○							○
제2차 대중교통 기본계획('12~'16)			○								○						

\* 출처: 강상인(2005), “UN SDGs의 한국화 방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요 국가계획의 보완 방향과 통합운영 방안”, 컨퍼런스 :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 한국 국가경영을 위한 활용방안과 국제개발협력 2.0의 모색」, 2015년 8월 24일.

#### □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sup>4)</sup>

녹색성장 계획은 장기 전략(계획연도 2050년)인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현재 2018년을 계획 목표로 하는 2차 계획이 이행중이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녹색기술, 녹색산업 및 녹색경제체제의 구현, ②기후변화대응, 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 ③녹색생활, 녹색국토, 저탄소 교통체계, ④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 ⑤재원조달, 조세·금융, 인력양성, 교육·홍보의 5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3대전략, 5대 정책방향, 20대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 계획에 비해 다양한 목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4) 대한민국 정부관계부처 합동(2014),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그림 2-1] 제2차 녹색성장 계획 기본체계

\* 출처: 대한민국 정부관계부처 합동(2014),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p.28.

[표 2-3] 제2차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책방향과 세부과제

정책방향	중점과제	세부과제
1.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1.1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체계적 이행	1.1.1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1.1.2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1.1.3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1.1.4 공공·농림어업·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1.2 배출권거래제 정착 및 탄소시장 활성화	1.2.1 배출권거래제 시행 및 정착
		1.2.2 탄소시장 활성화
	1.3 장기 국가 감축목표 수립	1.3.1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1.3.2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기반 구축
2.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2.1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2.1.1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2.1.2 수요관리시장 활성화
	2.2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2.2.1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의 개선 및 확대
		2.2.2 지원제도 개편 및 투자 확대
	2.3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2.3.1 발전소 입지 분산 및 전력계통 안정화
3. 녹색창조산업 생태계 구성	3.1 첨단융합 녹색기술 개발	3.1.1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 개발·상용화
		3.1.2 혁신적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원천기술 개발
		3.1.3 국민체감형 녹색기술 개발·실용화
	3.2 녹색 창조산업의 육성	3.2.1 ICT·녹색기술 기반 신산업·신시장 창출
		3.2.2 녹색창조산업 발전기반 조성
	3.3 자원순환 경제구조 정착	3.3.1 자원순환체계 강화
		3.3.2 자원순환형 산업발전 기반 조성
	3.4 규제 합리화 및 녹색인재 양성	3.4.1 규제 합리화 및 인증제도 정비
		3.4.2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4. 지속가능 녹색사회 구현	4.1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4.1.1 기후변화 감시·예측·분석 인프라 확충
		4.1.2 부문별 적응 역량 제고
		4.1.3 기후변화 적응형 산업체제 구축
	4.2 친환경 생활기반 확대	4.2.1 생활밀착형 저탄소생활 확산
		4.2.2 녹색소비 활성화
	4.3 녹색 국토공간 조성	4.3.1 친환경적 국토관리체계 구축
		4.3.2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4.4 녹색 복지 및 거버넌스 기반 확충	4.4.1 녹색 복지 확충
		4.4.2 협력적 녹색 거버넌스 구축
5.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5.1 기후협상 효과적 대응	5.1.1 Post-2020 신기후체제 대응전략 마련
		5.1.2 기후재원 조성방안 마련 논의에 기여
	5.2 녹색성장 지역협력 확대 및 국제적 확산	5.2.1 동북아 환경공조체계 강화
		5.2.2 그린대타트를 통한 남북 환경공동체 건설
		5.2.3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5.3 개도국 협력 확대 및 내실 제고	5.3.1 개도국 대상 녹색성장협력 교류사업 활성화
	5.4 GGGI/GCF와의 협력 및 지원 강화	5.4.1 GCF의 역량강화 지원
		5.4.2 GCF-GTC-GGGI간 협력 확대

\* 출처: 대한민국 정부관계부처 합동(2014),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여러 관련 제도의 도입과, 녹색 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녹색성장의 글로벌 의제화와 국제적인 국가 위상 제고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수요관리 실패, 산업 생태계 조성의 미흡으로 인한 자발적 참여 부진, 이해 관계자 간의 의사소통 부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의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2차 계획은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주목표로 하고, 선택과 집중, 정책의 효과성 제고, 시장과 민간의 역할 증대,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를 추구하였다(강상인 외. 2015, pp.45-46).

본 계획은 환경, 에너지, 국토, 교통, 국제협력 등 전 분야에 걸쳐 SDGs와 연관이 있다. 온실가스 부문, 녹색국토 조성 등 다수가 SDGs 목표 11과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지만, 이 중 교통 인프라와 도시계획 관련, 안전관리분야 등 3개 세부계획과 5개 분야별 사업이 SDGs 목표 11과 관련해서는 더욱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 □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은 2006년 제1차 계획이 수립된 이래 현재는 2016년을 시작 연도로 하는 제3차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제3차 계획의 특징은 SDGs를 국내 여건에 맞게 반영하여 본 계획의 이행과제 범위의 확대 및 관련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지표의 중점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2-2] 제3차 지속가능발전 비전체계도

\* 출처: 대한민국 정부관계부처 합동(2016),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p.30.

총 4대 목표, 14개 부문별 전략, 50개 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행과제의 대부분이 SDGs와 연관이 있으나, SDGs 확정 이전에 계획되어 세부적인 사항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계획되어 전반적으로 SDGs의 방향에 충실하면서도 국내의 사업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계획되었다. 다수의 이행과제가 목표 11과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는 전략 1-1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와 전략 2-4 안전관리 기반 확충이 연관성이 크다.

[표 2-4]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SDGs 목표 11관련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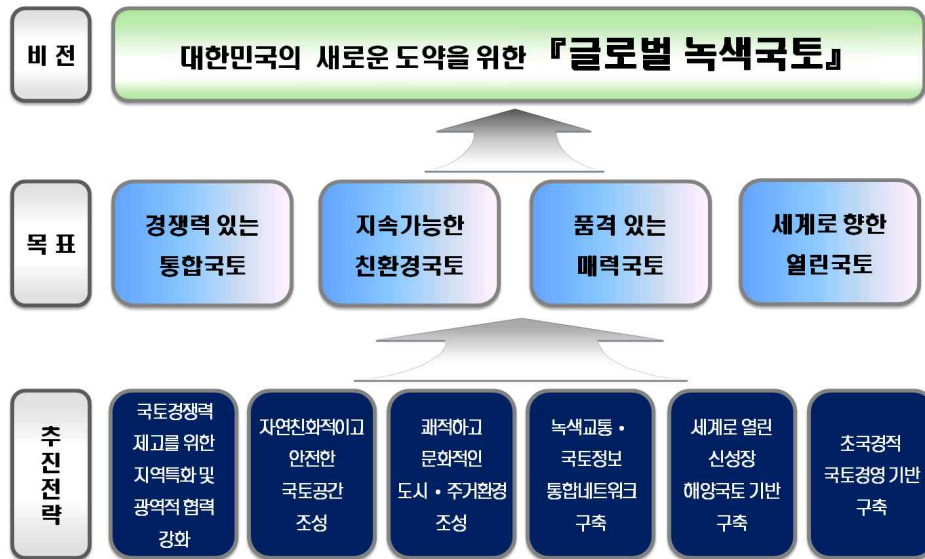
전략	이행과제	성과지표
1-1.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가. 깨끗한 대기질 확보	전기차 보급대수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나. 도시 생태공간 확충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 면적
		1인당 생활권도시림 면적
	다. 사전예방적 국토환경 관리	국토계획평가 실적
		산림지역비율
	라. 오염배출 관리 체계 선진화	통합환경관리 대상 업종 수
		폐기물 매립률
2-4. 안전관리기반 확충	가. 안전관리 시스템 선진화	재난 및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률
	나.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 확대	화학물질 유출사고 사상자수
		유통화학물질 안전정보 확보율
	다. 도시안전 인프라 확충	자동차 사고건수
		대중교통 분담률
		교통약자 배려시설 조성수
		지하공간정보 통합 구축률
	라. 자연재해의 효과적 예방체계 구축	산사태 인명피해
		건조일수 당 산불피해 면적
수해 피해액		

\* 출처: 대한민국 정부관계부처 합동(2016),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리

####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2020)은 기존 계획 수립 후 변화한 국내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토대마련,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국토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본 계획은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등 4대 목표와 6개 추진전략, 25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화 및 전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낙후 소외 지역의 생활기반 확충을 통한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홍수, 산불, 지진 및 해일 등의 자연재해 대비를 강화한 도시계획 수립을 천명하고, 저소득 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거주여건 개선과 임대 주택 공급 등의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기본 틀

\* 출처: 대한민국정부(20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p.23.

국가 단위의 종합계획이므로 SDGs 목표 11에서 제시하는 부분보다 상위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가 직간접적으로 목표 11과 연관되어 있다. 특히 SDGs 세부목표 11.1 도시주거환경 개선 및 11.2.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11.5 자연재해 대비와 더욱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본 계획 역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실현할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달성여부를 점검할 지표 역시 제시하지 않고 있다.



[표 2-5] 6대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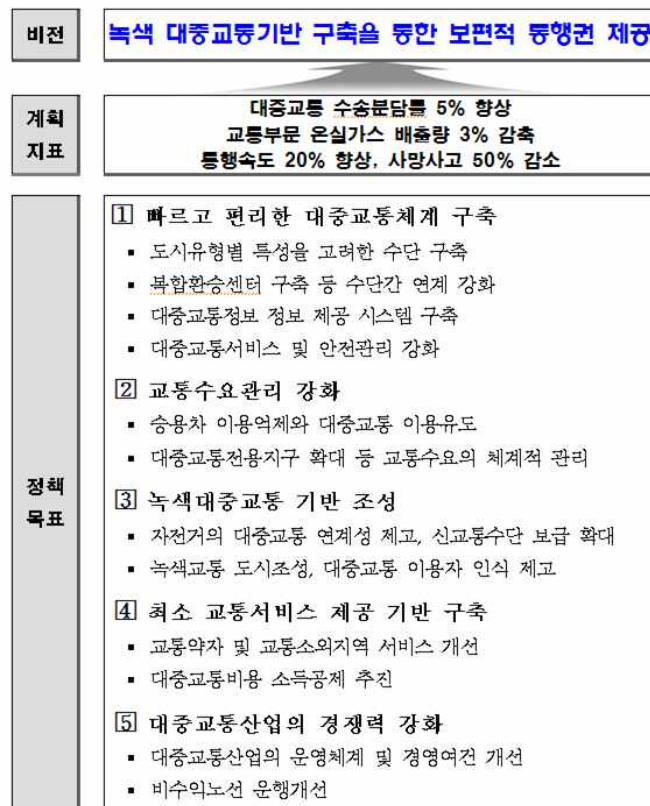
추진전략	세부과제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3차원 지역발전전략을 발전적으로 수용</li> <li>• 5+2 광역경제권 발전을 견인하는 도시권 육성</li> <li>•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신성장거점 육성</li> <li>•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산업입지 육성</li> <li>• 농·산·어촌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li> <li>• 문화국토 조성을 위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의 연계 활용</li> </ul>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 산, 바다를 연계한 국토 품격의 새로운 창출</li> <li>• 국민과 강이 어우러지는 친수국토 조성</li> <li>•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국토·생활공간 조성</li> </ul>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성장 시대에 부응하는 한국형 압축도시(Compact City)조성</li> <li>•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매력적 문화도시 창조</li> <li>• 인구감소 및 기존 도심 쇠퇴에 대응하는 도심재생 활성화로 도시경쟁력 제고</li> <li>•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용도지역체계의 탄력적 적용</li> <li>• 주거 수준의 선진화 및 주거안정망 확충</li> </ul>
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 중심의 저탄소 녹색 성장형 교통체계 구축</li> <li>•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도로망 정비를 통해 국토경쟁력 강화 지원</li> <li>• 교통수단간 기능적 역할분담을 통한 통합연계 교통체계 구축</li> <li>•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친환경 교통정책 추진</li> <li>• 고부가가치 창출 및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성장을 위한 글로벌 물류체계 구축</li> <li>• 첨단 국토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통한 국토관리 선진화</li> </ul>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 국토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활동영역 확장과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li> <li>• 생태계에 기반한 해양자원 및 공간의 통합적 관리</li> </ul>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에 대비한 기반 구축</li> <li>• 유라시아-태평양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국토역량 강화</li> <li>• G20 개발의제 실천을 통한 글로벌 연성국토 개척</li> </ul>

\* 출처: 강상인 외(2015), 「Post-2015 SDGs 대응 녹색경제 이행 전략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5-43-0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52.

## □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2~2016)

대중교통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이다. 국내외 여건의 변화, 신기술, 도시규모와 통행특성, 장래 교통수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대중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의 범위는 전국의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 도시별 기능과 특성에 따라 8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대중교통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도시내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 환승·연계시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구축, 교통수요관리강화, 녹색대중교통기반조성, 최소교통서비스기반구축, 대중교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5대 목표와 17개의 추진전략, 40개 세부추진과제를 단기('12~'16) 및 장기('16~'30), 지속과제('12~계속)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림 2-4]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목표

\* 출처: 국토교통부(2011),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 p.24.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은 대중교통 이용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인 만큼 SDGs 세부 목표 11.2와 연관성이 크다.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에서는 단순 인구 기준뿐만 아니라 도시유형별 적절한 대형 대중교통수단을 보다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간접적으로는 친환경 교통수단(자전거 등)의 이용 증진을 도모하므로 미세먼지 등의 저감(지표 11.6.2)과 탄소배출 억제와 관련이 있다.

[표 2-6] 도시별 대중교통수단 선정 기준

구 분	평가기준	BRT	노면전차	LRT	HRT (중전철)
도시특성	경제중심도시	○	—	○	○
	지방중심도시	○	○	○	—
	위성도시	○	○	—	—
	자족도시	○	—	○	○
	공업도시	○	—	○	—
	관광도시	—	○	○	—
	도농·농촌도시	—	—	—	—
인구규모	50만 미만	△	△	—	—
	100~50만	△	△	○	—
	100만 이상	△	△	△	○
시가화 인구밀도 (천명/km <sup>2</sup> )	15 미만	△	○	—	—
	15~30	△	△	○	—
	30 이상	△	△	△	○
도시 공간구조	단핵도시	○	○		
	다핵도시	○	○	○	○
도시유형	신시가지	○	○	—	—
	신도시	○	—	—	○
출퇴근 통행량 (천통행/일)	1,000미만	△	△	—	—
	1,000~3,000	△	△	○	—
	3,000이상	△	△	△	○
시계외유출 입통행량 (천통행/일)	5,000미만	○	△	—	—
	5,000~20,000	△	△	○	—
	20,000이상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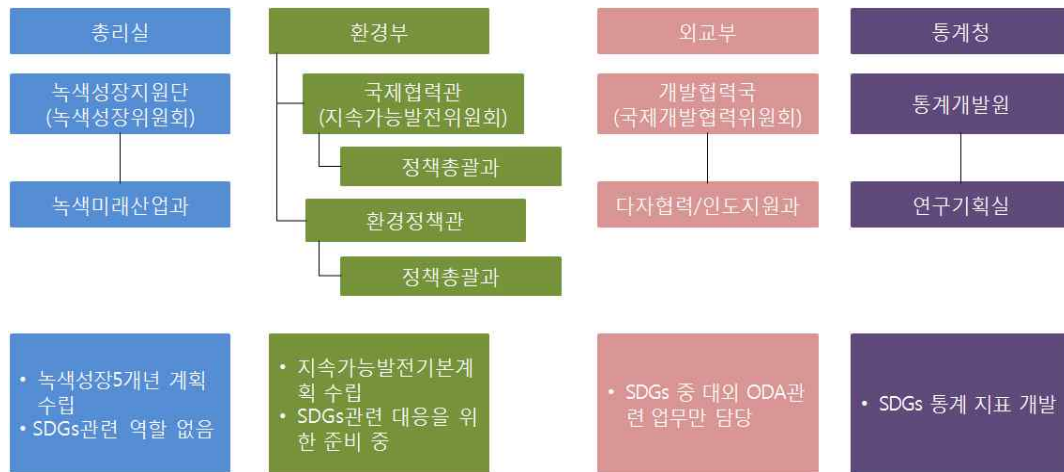
\* 출처: 국토교통부(2011),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 p.26.

## ② 국내 SDGs 이행과 관리 체계

우리정부는 국내의 SDGs 이행과 관리를 주관할 소관부처와 부처간 협의체 등의 정부 기관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아직은 국내보다는 ODA와 관련된 이슈로 한정해서 접근하고 있으며, 국내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전까지의 SDGs관련 협의의 진행 사항과 국내의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정책의 수립 부처를 통해 미루어 보면 국무총리실, 환경부, 외교부, 통계청이 타 부서에 비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총리실 녹색성장지원단 산하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국제협력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외교부 개발협력국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의 추진과 관련이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로 현재는 국내와 관련된 지속가능발전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언급한 2개 계획이 현재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가장 구체적인 계획이다.



[그림 2-5] 정부의 SDGs관련 정부 기관과 역할

\* 출처: 저자 작성

현재 SDGs이행과 관련해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곳은 외교부와 통계청이다.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는 UN 및 국제기구에서 이루어지는 SDGs관련 협의를 주관하고 있으며, KOICA와 더불어 국제개발협력에서 SDGs 달성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

로 예상된다. 외교부가 참여하는 유엔 고위급회담(High Level Political Forum, 이하 HLPF)은 4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는 것과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HLPF는 4년마다 SDGs의 관련된 주제를 정하여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의논한다. 또한 4년동안 대 주제를 바탕으로 매년 각기 다른 소주제(2017년 주제는 빈곤(Poverty), 2019년 주제는 평등(Equity))를 정하여 의논한다. 올해 7월에는 HLPF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22개국에 대해서 국별 평가가 있었으며, SDGs 이행을 위한 계획과 구조에 대한 사항이 논의 되었으며 외교부는 이미 관련 보고서를 6월 9일자로 제출하였다.

SDGs 이행과 달성의 기준이 되는 세부목표별 지표관리<sup>5)</sup>는 통계청의 업무인데, 통계청은 SDGs 글로벌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 IAEG-SDGs(Inter-Agency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 2015년 3월 발족, 이하 IAEG-SDGs)가 작성한 지표를 검토하고, 소관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IAEG-SDGs측에 제출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관련 지표가 실제 측정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작업을 현재 수행 중이며, 적정한 지표의 측정과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3월 30일에 3차 IAEG-SDGs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회원 간 합의에 의해 현재 241개의 지표(중복 제외 시 230개)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완전한 합의라기 보다는 향후 계속 수정 보완될 예정이다. 또한 IAEG-SDGs측에서는 방법론 및 데이터 가용 여부에 따라 지표 분류 작업을 7월말까지 계속 수행할 예정이며, 방법론과 데이터 모두 가용하지 않은 지표군을 중심으로 지표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sup>6)</sup>

SDGs는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1개 부처의 업무가 아닌 전 부처와 관련된 업무이며, 우리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성공적인 국내이행을 위한 총괄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협의 진행에 따라 발전전략수립, 적정 국내지표 작성 등의 추가적인 업무가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부처의 대응에 비해 시민사회의 대응은 조금 더 적극적이다. 한국시민사회 SDGs네트워크는 2016년 7월에 개최된 고위급정치포럼(HLPF)에 제출한 국가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s)에 대해 “SDGs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의 제시 없이 기존에 존재하는 정책들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시민사회 참여도 만족스럽

5) 통계청 분석결과 지표 중 37%는 신규개발이 필요하고, 현재 제공 가능한 지표는 42%이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 (출처: 박경애(2016), “지속가능발전목표 모니터링을 위한 글로벌 지표 마련”, 「국가통계연구 소식」, 제9호, pp.7-9.)

6) 2016년 5월 21일 통계정책연구원 전자 우편 인터뷰를 통해 자료 수집

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평가하였다.<sup>7)</sup>

시민사회의 경우 2015년부터 SDGs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꾸준히 토론회를 개최해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경우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와 더불어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5차에 걸쳐 경제발전, 평화안보, 환경, 사회발전 등 각 분야별로 SDGs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 외에도 각종 세미나와 간담회, 의견서제출, 신문칼럼 등을 통해 SDGs에 대한 홍보와 준비, 변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는 경실련 등이 토론회를 통해 모색하고 제안한 방안을 바탕으로 시민사회가 선도적으로 움직여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초기 형태에 와 있지만, 앞으로 더욱 할 일이 많을 것이다.

---

7) 출처: 윤봉현(2016), “SDGs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세미나 : 「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 2016년 11월 8일, p.51.

## 2) 국외 정책현황

SDGs의 이행을 위해 개별 국가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스위스, 멕시코, 터키, 콜롬비아, 중국, 베네수엘라, 조지아 등이 SDGs를 국가개발계획에 통합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총리실 산하에 ‘지속가능발전조정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총리가 본부장을, 관방장관과 외무성장관이 부분부장을 맡고 내각의 모든 부처가 당연직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 추진본부’를 두고 범정부간 업무 조정을 수행하고 있다.<sup>8)</sup>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진국의 사례가 있지만, EU, 독일, 프랑스, 일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① EU

#### □ 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EU 위원회는 2001년 EU 지속가능발전전략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이하 SDS)을 수립하고 2006년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된 SDS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과 경제 활성화, 환경보호, 사회 통합을 위한 생태학적·사회적 혁신을 주도할 지속가능 커뮤니티의 창조를 통해, EU 소속 국가들이 현재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SDS는 4대 핵심 목표와 10개 정책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표 2-7] EU SDS 4대 핵심 목표

목표	내용
1. 환경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생명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지구의 능력 보호를 위해, 제한된 천연자원의 양을 인식하고,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와 향상을 도모</li> <li>환경오염의 예방과 감소,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악화의 연결고리를 끊음</li> </ul>
2. 사회 평등 및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주적이고, 사회적으로 포괄적이며, 통합적이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li> <li>기본적인 권리와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을 통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종류의 차별 철폐</li> </ul>
3. 경제적 번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혁신적이며 환경 효율적이고, 경쟁적이며, 지식중심의 경제를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삶을 제공</li> </ul>
4. 국제적 책임에 대한 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화, 안보, 자유에 근거하여 국제적 민주 기관의 안정을 수립 및 보호</li> <li>국제적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고 EU의 국내외 정책을 통해 기여</li> </ul>

\* 출처: EU(2006), Review of the 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EU SDS)-Renewed Strategy, <http://register.consilium.europa.eu/doc/srv?l=EN&f=ST%2010917%202006%20INIT>

8) 출처: 김용태(2016), “SDGs의 이행을 위한 주요 과제와 국회의 역할”, 세미나 : 「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 2016년 11월 8일, p.23.

## EU SDS 10대 원칙<sup>9)</sup>

1. 기본적인 권리의 보호와 증진
  - 기본 권리의 증진과 모든 종류의 차별 철폐 및 가난과 사회적 배제를 줄이는 것을 EU 정책의 중심으로 함
2. 세대 간 또는 세대 내의 통합
  - 미래세대의 희생 없이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
3.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
  - 정보 접근과 법적 평등을 위한 시민의 권리 보장
  - 모든 단체와 기관에 대한 참여 방안 개발
4. 시민 참여
  - 시민의 의사결정 참여 증대
  -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교육 및 일반인의 인식 향상
  - 지속가능발전의 환경에 대한 영향력과 선택 가능한 수단 교육
5. 시민 참여
  - 사회적 논의, 민간과 공공의 협력, 사회적 책임을 위한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책임과 협력을 촉진
6. 시민 참여
  - EU 내 정책의 일관성 향상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 증대를 위한 지역별, 국가별, 전 지구적 일관성 향상
7. 시민 참여
  -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통합적 고려를 통해 보다 나은 규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일관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정책 추구
8. 시민 참여
  - 경제적으로 건전하고 비용효과적인 정책을 위해 활용 가능한 지식 중 최상의 지식에 근거하여 정책을 개발, 측정, 적용
9. 시민 참여
  - 과학적으로 불명확한 사안의 경우, 평가 작업을 수행하고, 자연과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 활동을 시행
10. 시민 참여
  - 소비와 생산에 대한 실질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비용을 고려하고, 오염제공자가 인간의 건강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부담

9) EU(2006), *Review of the 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EU SDS)-Renewed Strategy*, <http://register.consilium.europa.eu/doc/srv?!=EN&f=ST%2010917%202006%20INIT>



EU SDS는 목표와 가이드를 바탕으로 분야별 행동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행동계획은 7개 분야로 구성되며, 분야마다 목표와 성취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분야에 따라 목표 연도와 달성하고자 하는 숫자 등 지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인 내용을 언급한 경우에 그치는 부분도 있다.

#### EU SDS 분야별 행동계획 (일부)<sup>10)</sup>

##### 1.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목표 및 지표: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의 8% 감축 및 지구 온도 상승을 2°C 이내로 제한  
2015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의 15%를 재생에너지로 대체

##### 2. 지속가능한 교통

목표 및 지표: 2012년까지 신규자동차의 CO<sub>2</sub> 배출량을 120g/km로 제한  
지속가능한 교통 및 이동수단을 구축하기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

##### 3.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목표 및 지표: 환경문제로 인한 경제성장의 방해와 생태계의 수용 범위 내에서 사회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장려  
2010년까지 EU의 평균 그린조달제도(GPP) 수준을 EU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높임

##### 4. 자연자원의 보호와 관리

목표 및 지표: 재생 가능한 자연자원, 물, 어류자원, 대기, 토양 등 의 관리수준을 높이고, 남획 및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고, 2015년까지 해양 생태계를 회복  
재활용과 재생을 증진하고, 상품의 생애주기 개념을 적용하여 자연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고 폐기물 배출을 줄임

##### 5. 공공보건

목표 및 지표: 2020년까지 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자연에 위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생산 및 이용, 취급되도록 함  
정신병의 치료와 감소, 자살 감소를 위해 노력

##### 6. 사회적 포괄, 인구 및 이민

목표 및 지표: 2020년까지 이민자의 취업을 늘이고, 여성이나 노인 계층의 취업을 증가시킴  
젊은 층의 취업을 증가시키고, 학교를 조기에 떠나는 비율을 10%로 줄임

##### 7. 글로벌 빈곤 및 지속가능발전 과제

목표 및 지표: 2015년까지 ODA 비율을 GNI 대비 0.7%로 증가  
2005-2010년 동안 EU 회원국의 ODA 정책과 효과, 결합, 품질을 향상시킴

#### □ 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sup>11)</sup>

유럽 연합은 시민의 80%가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 중심의 사회이다. 따라서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해 기존 도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변화시키는 것과 도시설계에 지속가능발전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라 할 수 있다. EU의 지속가능발전전략과 관련하여 건축도시분야와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은 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 (EAP) 이다. EAP는 모든 유럽인들이 지구의 제한된 자원 하에서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도시환경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최종 정책 달성을 위한 목표연도를 205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2014년부터 시행중인 the 7<sup>th</sup> 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 (7 EAP)은 2020년을 달성 연도로 정하고 9가지의 우선과제를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중 8번 목표는 EU내 도시를 더욱 지속가능한 상태로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8번 목표는 대부분의 도시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인 대기오염, 소음, 쓰레기, 물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실증적인 경험의 공유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EU내 대부분의 도시가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과 설계를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SDGs의 11.3과 11.a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그러나 7 EAP는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EU내 개별 국가들의 자국 내 정책을 위한 가이드라 할 수 있다.

#### EU 7 EAP 우선과제<sup>7)</sup>

1. EU의 자연 자본(natural capital)의 보호 및 보전 향상
2. EU를 자원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며 경쟁력 있는 저탄소 경제로 변환
3. 건강과 웰빙에 대한 환경과 관련된 부담과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
4. EU의 환경관련 규제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규제로부터 야기되는 이익을 극대화
5. 환경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고,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확장
6. 환경과 기후 정책에 대한 투자와 다양한 사회활동의 환경비용에 대한 고려
7. 환경관련 고려사항의 타 분야 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융합과 새로운 정책 수립시 일관성 유지
8. EU내 도시를 보다 지속가능한 상태로 만들
9. EU가 국제적인 환경 및 기후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10) EU(2006), *Review of the 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EU SDS)-Renewed Strategy*, <http://register.consilium.europa.eu/doc/srv?!=EN&f=ST%2010917%202006%20INIT>

11) EU(2016), *EU Policy on the Urban Environment - Overview*, [http://ec.europa.eu/environment/urban/index\\_en.htm](http://ec.europa.eu/environment/urban/index_en.htm)

## ② 독일<sup>12)</sup>

독일의 경우 SDGs를 달성을 위해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National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NSDS)을 주요 프레임으로 만들 것을 UN에 제출한 국가평가보고서에서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또한 NSDS를 의제 2030에 맞춰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NSDS는 2002년부터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국가계획으로 4개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지속가능발전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타 국가에 비해 지속가능발전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한발 앞선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4개 중점분야를 평가하기 위한 21개 지표의 달성여부를 2008년부터 매 4년마다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다. NSDS의 핵심 원칙은 세대 간 형평성, 삶의 질, 사회통합,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이다.

NSDS의 특징은 부문별 지표의 달성 지수와 목표연도, 비교를 위한 기준연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표의 경우, 예를 들어 '21a. 개발도상국부터 수입 증대'와 같은 목표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기 보다는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지표 역시 처음에 선정된 지표를 계속 유지하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지표자체를 수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독일 NSDS 전략에서 도시나 건축 관련 지표는 목표 4, 지표 4a에 있는데, 도심 및 교통 인프라를 위한 토지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DGs 이행을 위한 독일 정부의 핵심 기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위원회(State Secretaries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회 자문 협의회(Parliamentary Advisory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 협의회(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로 구성되어 있다.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내각 구성원 전원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 정부위원회(State Secretaries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지속가능 발전전략의 적용을

---

12) Destatis(2016), *Sustainable Development in Germany - Indicator Report 2014*, [https://www.destatis.de/EN/Publications/Specialized/EnvironmentalEconomicAccounting/Indicators2014.pdf?\\_\\_blob=publicationFile](https://www.destatis.de/EN/Publications/Specialized/EnvironmentalEconomicAccounting/Indicators2014.pdf?__blob=publicationFile) 과

UN(2016), *Executive Summary of the Report of the German Government to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in July 2016*, The Federal Government of Germany,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0374GER\\_Report\\_to\\_HLPF\\_2016\\_Exec\\_Summary.pdf](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0374GER_Report_to_HLPF_2016_Exec_Summary.pdf) 의 내용을 정리

총괄하고 내용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감독한다. 위원회는 정부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한 최고위급 포럼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속가능발전 의회 자문협의회(Parliamentary Advisory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정부의 NSDS를 모니터하고, 의회에서 지속가능 의제를 지원한다. 또한 연방정부의 의무적인 지속가능성 영향평가(the obligatory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를 점검한다.

지속가능발전 협의회(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독립적인 자문기구로 2001년부터 정부를 지원해왔으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고 있다. 협의회는 전문성과 개인적 배경에 의해 선정된 국내외 지속가능발전의 경제, 환경, 사회 분야를 대표하는 15인의 저명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 독일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목표 및 지표<sup>13)</sup>

##### I. 세대 간 형평성

###### 1. 자원보전

- 1a. 에너지 생산성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배로 증대
- 1b. 1차 에너지 소비량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15% 절감 (2050년까지 53% 절감)
- 1c. 원료생산성을 2020년까지 1994년 대비 2배 증대

###### 2. 기후보호

- 2a.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0% 절감, 2050년까지 80~95% 절감

###### 3. 재생에너지

- 3a.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20년까지 18%, 2050년까지 60%로 증대
- 3b. 재생에너지 자원에서 생산된 전기량을 2025년까지 40~45%, 2035년까지 55~60%, 2050년까지 80%로 증대

###### 4. 토지이용

- 4a. 도심과 교통 인프라를 위한 미개발지의 이용을 2020년까지 평균적으로 하루 30ha로 제한

13) Destatis(2016), *Sustainable Development in Germany - Indicator Report 2014*, [https://www.destatis.de/EN/Publications/Specialized/EnvironmentalEconomicAccounting/Indicators2014.pdf?\\_\\_blob=publicationFile](https://www.destatis.de/EN/Publications/Specialized/EnvironmentalEconomicAccounting/Indicators2014.pdf?__blob=publicationFile)

## 독일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목표 및 지표 (계속)

### I. 세대 간 형평성

#### 5. 생물 다양성

5a. 생물종의 다양성과 경관의 품질 지수를 2015년까지 100으로 향상

#### 6. 정부 부채

6a. 정부재정적자를 GDP대비 연간 3%로 제한

6b. 구조적 재정적자를 연간 GDP의 0.5%로 제한

6c. 정부부채를 GDP대비 60%로 제한

#### 7. 경제적 안정 제공

7a. 총고정자본형성을 GDP대비 적정 비율로 유지

#### 8. 혁신

8a. 공공 및 민간의 R&D 투자를 2020년까지 GDP의 3%로 증가

#### 9. 교육과 훈련

9a. Post-16 education 또는 상응하는 학력<sup>14)</sup>을 가지지 못한 18~24세 청년의 비율을 2020년까지 10%로 줄임

9b.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30~34세 시민의 비율을 2020년까지 42%로 증가

9c. 학위과정을 시작하는 학생의 비율을 증가

### II. 삶의 질

#### 10. 경제적 결과물

10a. 일인당 GDP

#### 11. 이동성

11a. 물류운송 원단위(Intensity of goods transport)를 1999년 대비 5% 감축

11b. 여객운송 원단위를 1999년 대비 20% 감축

11c. 물류운송 중 철도이용 비율을 2015년까지 25%로 증가

11d. 물류운송 중 내륙 하천운송 이용 비율을 2015년까지 14%로 증가

#### 12. 농업 경영

12a. 2010년까지 질소 초과량을 농업용 토지 1ha 당 80kg로 줄임

12b. 유기농 농법을 이용한 농토의 비율을 20%로 증대

14)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졸업 수준

## 독일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목표 및 지표 (계속)

### II. 삶의 질

#### 13. 대기 오염

13a. 대기오염 물질 배출총량을 2010년까지 1990년 대비 30%로 줄임

#### 14. 건강과 영양

14a. 남성 조기 사망자(65세 이전) 비율을 2015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190명으로 감소

14b. 여성 조기 사망자(65세 이전) 비율을 2015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115명으로 감소

14c. 청소년 흡연율을 2015년까지 12%로 줄임

14d. 15세 이상 국민 흡연율을 2014년까지 22%로 줄임

14e. 비만인 성인 비율을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줄임

#### 15. 범죄

8a. 2020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 발생을 7,000 건 이하로 줄임

### III. 사회통합

#### 16. 고용

16a. 2020년까지 15~64세 취업률을 75%로 늘림

16b. 2020년까지 55~64세 노인 취업률을 60%로 늘림

#### 17. 전일 아동 돌봄 서비스

17a. 0~2세 아동의 전일 돌봄 서비스 비율을 2020년까지 35%로 확대

17b. 3~5세 아동의 전일 돌봄 서비스 비율을 2020년까지 60%로 확대

#### 18. 평등한 기회

18a. 남녀 평균 임금 격차를 2020년까지 10% 이내로 줄임

#### 19. 통합

19a.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를 졸업하는 외국국적 청소년의 비율을 독일 청소년의 비율만큼 높임

### IV. 국제적 책임

#### 20. 개발협력

20a. 2015년까지 GNI 대비 ODA비율을 0.7%로 늘림

#### 21. 시장개방

21a.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늘림

### ③ 프랑스<sup>15)</sup>

프랑스의 SDGs 이행을 위한 국가 체계 구축은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국무총리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위 관료 네트워크를 총괄하고 있다. 국무총리의 명령에 의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범부처 대표(Interministerial Representative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지속가능발전 일반위원(General Commission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 주도하여 SDGs 이행을 위한 첫 번째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또한 2016년 6월 6일에 지속가능발전을 담당하는 환경·에너지·해양부 장관과 개발 및 프랑스어권 장관이 최초의 SDGs 이행을 위한 협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프랑스는 시민단체 등 정부 외 민간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 정부가 시민단체와 민간영역, 일반인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SDGs 이행의 성공을 위한 주요 요인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생태학적 전환을 위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Ecological Transition), 개발과 국제 연대를 위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인권에 대한 국가 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Human Rights) 등과 SDGs 이행에 대한 UN에 제출하는 보고서 작성에 대해 협의하였다. 또한 국무총리는 또 다른 시민단체인 경제, 사회 환경위원회(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ouncil)에게 올해 가을에 개최한 범부처 위원회(Interministerial Committe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외에도 국가 실행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작성하고, 2016년 가을에 지역 협의 워크숍을 열어 지역관계자가 SDGs와 국가 실행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는 SDGs의 이행과 관련하여 3개 국내 분야와 1개 국제 분야에 현재 집중하고 있다. 국내 분야는 취업률 향상, 사회적 불평등 감소, 기본권 및 참여적 민주주의 향상이며, 국외 분야는 국제사회의 연대 노력 증진이다.

전반적으로 국내 문제의 경우 평등과 사회통합,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

15) UN(2016),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xecutive Summary*, The Government of France,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0620France%20SDG%20-%20Executive%20Summary.pdf>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국외적으로는 지속적인 ODA의 증대를 통한 역할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 프랑스 SDGs 이행 중점 분야<sup>16)</sup>

##### □ 국내 분야

###### 1. 취업률 향상

- 현 황: 2015년 기준 실업률 10.2%,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 25.9%
- 달성목표: 사회보장비용을 줄임으로써 일자리 창출 (2016년에 100만 명 고용)  
국가 재교육 시스템 개혁을 통한 100만 명 또는 구직자 20% 교육 달성  
세대 간 계약 (Intergenerational Contract) 제도를 통한 장년 노동자에 의한 청년 노동자 교육 및 자연스러운 기술 전수

###### 2. 사회적 불평등 감소

- 현 황: 일급 가정 중 한 가정이 빈곤 상태(한달 수입 €960 미만), 5명중 1명의 아동이 매우 취약한 환경에 노출,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23.5% 더 많은 임금을 받음
- 달성목표: 현재 78.3%의 Baccalauréat<sup>17)</sup> 시험 통과자를 80%로 향상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회 취약층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 감소 노력  
모든 사회구성원이 위험에 노출되는 환경을 줄이기 위해 공공정책 전환

###### 3. 기본권 및 참여적 민주주의 향상

- 현 황: 프랑스는 건강한 정치와 법률 시스템을 보유
- 달성목표: 정치의 투명성 향상,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시민 협의, 합의를 위한 컨퍼런스, 지방 국민투표 등의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민주주의 향상

##### □ 국외 분야

###### 1. 국제사회의 연대 노력 증진

- 현 황: 2013에서 2015년 동안 양자원조를 통해 2.6백만 명의 아동의 교육 지원, 3.8백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 공급, 15만개의 일자리 지원  
2015년 기준 ODA 원조액 GNI의 0.37% (€ 8.3백만), 22%가 최빈국 지원에 이용
- 달성목표: 2030년까지 ODA 원조 GNI 대비 0.7%로 증액  
2020년까지 개발펀드를 위해 연간 € 40억 추가 책정

16) UN(2016),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xecutive Summary*, The Government of France,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0620France%20SDG%20-%20Executive%20Summary.pdf>

17) 프랑스의 고등학교 졸업 시험. 통과자는 대학입학 자격을 부여.



#### ④ 일본<sup>18)</sup>

일본은 총리가 주재하고 내각의 모든 관료가 참석하는 SDGs 촉진본부(SDGs Promotion Headquarter)를 설치하고 2016년 5월 20일에 첫 회의를 총리실에서 개최하였다. SDGs 추진본부는 일본정부의 SDGs 이행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국가이행프레임워크(National Implementation Framework)로써 SDGs의 이행, 모니터링, 평가를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한다.

일본 정부는 SDGs 이행 원칙(Guiding Principles)을 정하기 위해 현재 논의 중인데, 이행 원칙은 비전, 우선순위, 실행 방법, 지표, 후속방안(Follow up mechanism)을 설정하여 각 부처별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이 일관되고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SDGs이행에 있어 NGOs,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 학계 등 정부 외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SDGs이전의 시민사회와의 정기 협의회 수준의 협력에서 SDGs 시민사회네트워크(SDGs Civil Society Network)를 설립하고, 모든 주체가 참여하고 환경부장관이 주재하는 국가차원의 미팅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TV, 신문, 백서, 정부 홈페이지, 워크숍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하여 SDGs를 국민에게 홍보하고 저변을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다.

일본은 인간의 안전보장(Human Security)라는 원칙을 설정하고 교육, 보건, 젠더, 재해위험감소, 농업, ICT, 식량안보 분야를 SDGs이행의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은 국제보건분야를 위해 약 11억 달러를 국제보건기구들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개발도상국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향후 3년간 5,000명의 여성이 관리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50,000명의 소녀들을 위한 학습 환경 향상을 위한 지원할 계획이다. 난민 등 심각한 인적 재난상태에 있는 중동지역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향후 3년 동안 60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난민 지원을 위해 JICA를 통해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다. 또한 아프리카와의 연대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sup>19)</sup>

18) G20(2016), *G20 Action Plan o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6.9.4.~2016.9.5., Hangzhou, <http://www.g20.org/English/Documents/Current/index.html>

19) 일본 수상관저 홈페이지(2016),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romotion Headquarters", *The Prime Minister in Action*, 2016.05.20., [http://japan.kantei.go.jp/97\\_abe/actions/201605/20article2.html](http://japan.kantei.go.jp/97_abe/actions/201605/20article2.html)

### 3) 기타 국제기구 및 민간기구

#### □ SDSN<sup>20)</sup>

SDSN(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이하 SDSN)은 SDGs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빈곤의 종말을 저술한 콜롬비아대학 Jeffrey Sachs 교수가 주도하고 총의장을 맡고 있다. 2012년 8월에 시작되었고, 대학, 연구기관, 시민사회기구, 기타 지식센터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주된 역할은 SDGs의 이행과 관련해서 정부-기업-시민 단체 등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SDGs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SDSN은 SDGs 작성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10개 목표로 구성된 초안과 관련 지표를 제시하였고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SDSN은 총회 외에 사무국(Secretariat), 리더십위원회(Leadership Council), 실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콜롬비아 대학교 각국 캠퍼스를 활용하여 SDSN의 실무를 담당하는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리더십 위원회는 각 국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2명의 공동의장과 96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SDSN 활동을 감독한다. 리더십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을 선출하여 예산과 멤버십을 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SDGs의 이행과 공론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 분야에 걸쳐 연구 및 정책개발을 수행하고 결과를 공유하고, 국가 혹은 지역 SDSN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SDGs이행을 위한 해법의 모색과 교육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2개 주제별 국제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

20) 성장환 외(2015),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추진에 따른 LH사업 연계화방안 연구」, 연구지원 2015-56, 토지주택연구원, pp.22~23.

[표 2-8] SDSN의 전문가 그룹 및 연구 내용

전문가 그룹	연구 내용
1. The World in 2050	모든 SDGs를 포괄하는 2050년까지의 세계 환경-경제-사회 통합 발전 모델 개발
2. Humanitarian-Development Linkages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인도주의 의제(SDG 16 등)와 개발의제를 병행 추진하는 방안의 연구
3. Gender, Human Rights, and Social Inclusion	SDG 5, 10 및 16을 중심으로 인권존중이 실현되도록 하는 방안의 연구
4. Early Childhood Development, Education, and Transition to work	SDG 4를 중심으로 유년기 아동의 발전에서 교육 및 직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전생애 내지 다세대에 걸쳐 지속가능발전에 최대한 기여하기 위한 삶의 과정을 관리하는 방안 연구
5. Health for All	보편적 건강보험 실현을 중심으로 SDG 3에 초점을 둔 글로벌 건강증진 방안의 연구
6. Deep Decarbonization Pathways	SDG 13에 부응해 지구온도 상승 2.0°C이하를 목표로 하는 16개 배출대국의 장기 저탄소발전 경로의 도출 및 분석
7. Sustainable Agriculture and Food Systems	SDG 2에 부응, 농업의 환경부하를 줄이며 증가일로인 세계 인구를 위한 식량을 생산하고 나아가 농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의 연구
8. Forests, Oceans,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어류에서 목재 및 탄소저장삼림에 이르기까지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고 생태계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적 해법의 모색 SDG 14와 15에 부응해 해양생태계와 삼림 생태계를 구분, 두 개의 네트워크를 분리 운영
9. Sustainable Cities	SDG 11을 중심으로 도시 및 인간정주공간의 모든 SDGs의 이행, 즉 지속가능한 발전 및 관리 대책의 연구
10. Good Governance of Extractive and Land Resources	SDG 12와 16에 부응해 채굴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관의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의 연구
11. Redefining the Role of Busines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계 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 등 기업인 단체들과의 저탄소기술파트너십사업(LCTPi) 등 SDG 13 및 여타 SDG 관련 협력 추진
12. Dat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DGs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통계자료의 수집, 분석 및 보급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데이터 갭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 2015년 9월 출범한 'Global Partnership for SD Data'와 협력

\* 출처: 양수길(2016),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한국SDSN)」, 발표자료.

## □ UN-HABITAT

UN-HABITAT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대표적인 UN 산하 기관으로 SDGs의 목표 11이 탄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3년부터 SDSN, UCLG, Cities Alliance 등의 단체와 함께 도시지속가능발전목표 캠페인을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목표 11이 SDGs에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다.

UN-HABITAT는 SDGs 목표 11의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구상(Framework)을 제시하고 있다. UN-HABITAT는 2012년에 도시수준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도시 번영지수(City Prosperity Index, 이하 CPI)를 제시하였으며, 이후 CPI는 2013년에 도시의 운영기관과 지역 관계자가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변형되었다. CPI는 도시의 번영 상태를 생산성, 인프라, 삶의 질, 평등과 사회 통합, 환경의 지속가능성, 거버넌스와 규제의 6개 부문의 17개 지표로 측정한다.

[표 2-9] CPI 구성분야와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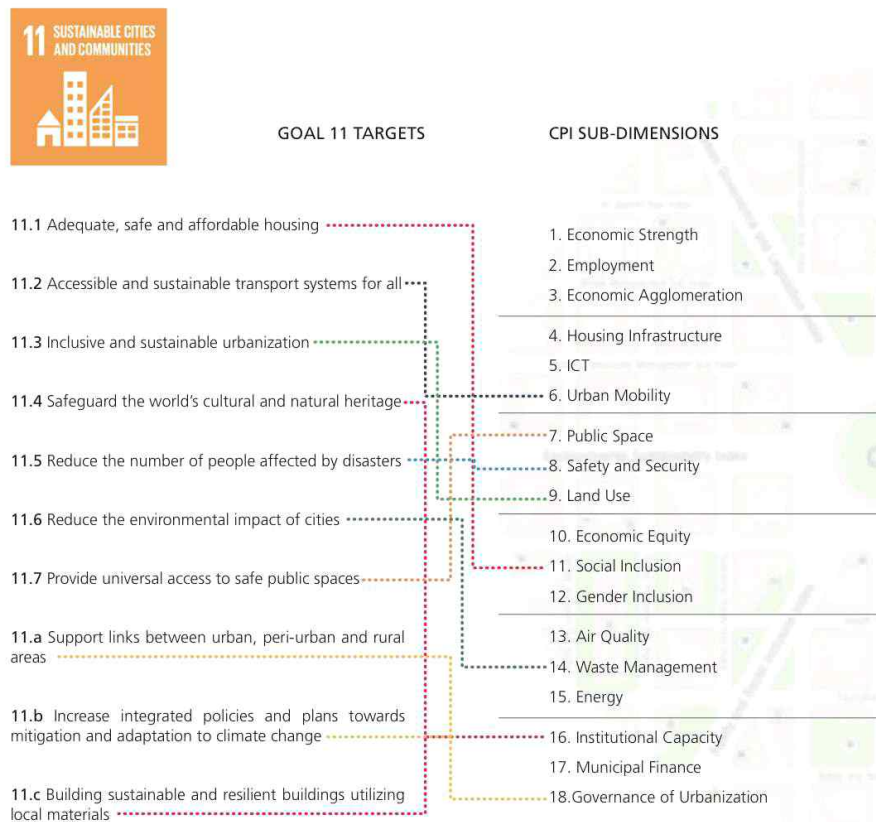
CPI 세부 분야	지표
생산성(Productivity)	1. 1인당 도시생산
	2. 실업률
기반시설(Infrastructure)	3. 향상된 거주지 및 향상된 식수에 대한 접근
	4. 의사 밀도
	5. 인터넷 사용
	6. 교통사고 사망자
삶의 질(Quality of life)	7. 출생 시 기대 수명 및 5살 이하 조기 사망비율
	8. 문맹률 및 평균 학교 교육을 받는 기간
	9. 자살률
평등과 사회통합 (Equity and Social Inclusion)	10. 지니계수 및 빈민비율
	11. 빈민 가정 및 청년 실업률
	12. 성평등에 입각한 중등교육 등록 인구
환경적 지속가능성 (Environmental Substantiality)	13. 미세먼지(PM2.5) 농도
	14. 폐수 처리 방법
	15. 재생 가능한 에너지 비율 및 CO2량
거버넌스와 규제 (Governance and Legislation)	16. 투표율
	17. 사업을 시작할 때 까지 걸리는 기간

\* 출처: UN HABITAT(2015), *The City Prosperity Initiative*, New York: The United Nations. 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UN-HABITAT는 CPI가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와 지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그림 2-6]). 이에 HABITAT는 CPI를 세계 각국의 SDGs 목표 11 이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체제(Framework)로 제시하고 있다. 중앙 및 지방 정부가 CPI를 활용하여 SDGs 목표 11의 진행과정에서의 목표 파악, 평가, 모니터링, 보고 등의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업무 추진에 CPI를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8가지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표 2-10]).

더불어 HABITAT는 SDGs 목표 11과 관련하여 결의안에 의무조항 삽입, 권한의 HABITAT 위임, 제재, 인디케이터, 사업에 대한 배분 등 사업을 주도하면서 위임받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 GOAL 11 and The City Prosperity Initiative



[그림 2-6] Goal 11 and the City Prosperity Initiative

\* 출처: UN HABITAT(2016), *SDG Goal 11 Monitoring Framework*, New York: The United Nations. p.12.

[표 2-10] 중앙 및 지방정부의 SDGs 목표 11 모니터링 지원 도구로써 CPI 활용의 장점

장점	내용
1. 도시에 대한 체계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안목을 제공</li> <li>SDGs에서 제시하시는 서로 다른 세부목표와 지표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함</li> </ul>
2. 도시의 상태를 보여주는 단일한 값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PI는 도시의 개발 상태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함</li> </ul>
3. 지역, 국가, 전지구적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PI의 방법론은 표준화된 기술과 서로 다른 지표간의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li> <li>각 국가의 정부가 필요에 따라 적절히 CPI를 변형할 수 있음</li> </ul>
4. 기초 자료와 정보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역별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생산</li> </ul>
5. 전지구적 비교를 위한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도상국의 도시와 선진국의 도시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함</li> </ul>
6. 지속가능한 도심 개발을 위한 우선순위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다양한 분야 간의 진행사태를 점검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li> </ul>
7. 신뢰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한 증거자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PI는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정책과 실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li> </ul>
8. 지역 및 국가수준의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PI는 지역과 중앙정부가 각각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li> </ul>

\* 출처: UN HABITAT(2016), *SDG Goal 11 Monitoring Framework*, New York: The United Nations.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3. 소결

#### □ 국내 SDGs 대응<sup>21)</sup>

현재 우리나라는 앞에서 소개했듯이 국무조정실이 녹색성장계획, 환경부가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외교부가 ODA 사업, 통계청이 관련 지표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해외부문이 아닌 국내에서의 SDGs 이행은 현재는 국무조정실과 환경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계획들이 모두 SDGs가 확정되기 이전에 수립된 계획이고, 가장 최근에 수립 공표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역시 SDGs에서 제시한 목표 전체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즉, 기존 계획들은 SDGs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를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으나, SDGs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나 체제를 전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기존의 지속가능발전법은 UN2030 의제 이전에 수립되어 SDGs의 기본 체제인 국가경영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 적합하지만, 현재는 녹색성장(「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보다 상위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다른 문제는 SDGs에서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은 환경부의 업무 범위를 초월하고 있다. SDGs 자체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문제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체제를 바꾸는 것이 주목적이다. 더욱이 SDGs의 목표들은 그 자체로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 따라서 환경부만이 아닌 정부의 모든 기관이 참여하여 적절한 이행 목표를 조율하고 세부 계획을 협의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환경부가 아닌 관련 부서를 모두 총괄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 등의 상위기관에서 총괄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sup>22)</sup>

시민사회의 경우 정부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SDGs의 이행을 위한 고민을 해왔고,

---

21) 2016년 6월 13일(월) 개최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가협치에 대한 의의와 대응과제’ 토론회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22) 2016년 6월 13일(월) 개최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가협치에 대한 의의와 대응과제’ 토론회에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현재는 국무조정실이 SDGs와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불참하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서 SDGs를 반영하려 하였으나, 미비한 점이 많다고 말씀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포럼, 지표 정리 등을 수행하겠으나, 시간이 걸리므로 양해를 구하였다. 또한 외교부 관계자는 본인들의 업무는 ODA 등 개발도상국 원조와 UN에서 고위급회담(HLPF)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수준이라고 표명하였다.

국내에 적합하게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SDGs가 시민단체를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데, SDGs가 추가하는 것이 다양한 주체의 참여임을 고려할 때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한발 더 나아가 시민단체와 정부의 협력을 모색하는 진정한 거버넌스로 나아가갈 필요가 있다.

#### □ 국외 SDGs 대응<sup>23)</sup>

외국 역시 SDGs에 대한 이행은 신속하지 못한 경향이 있지만, 서서히 각 국의 관련 계획에 SDGs를 반영하고 있으며, 관련 기구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에서는 SDGs 목표가 너무 많아 실질적으로 이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 역시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수상 데이비드 카메론은 2014년 9월에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 목표가 최대 12개 이내여야 하며, 17개는 아무도 시행하지 않고 버려 둘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하였다.<sup>24)</sup>

이외 일부는 SDGs를 실현하기 위한 자금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공적개발자금 등 해외지원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sup>25)</sup>

UN에서도 당장 모든 지표와 관련된 평가 결과보고서를 내기 보다는 현재 각종 지표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향후 몇 년 후 지표가 완성되고 지표 구득이 가능해지면 평가 결과보고서를 내고, 이를 통해 각 국에서 본격적인 활동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SDGs 이행의 첫 단계로서 2016년에 23개국이 국가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자국의 SDGs 이행 체계와 현황을 UN에 보고하였다. 각 국가는 자국의 현황에 따라 SDGs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제시하며, 정부차원에서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은 총리나 국무총리 등 정부부처의 최상위 기구가 중심이 되고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SDGs의 이행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었다.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의 대응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 있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SDGs이행을 위한 정부의 각 부처를 모두 아우르는 체계를 조속히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

23) 2016년 6월 13일(월) 개최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가협치에 대한 의의와 대응과제' 토론회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24) Ford, L.(2014), "UN secretary general says no plans to reduc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Guardian*, 2014.12.4., <https://www.theguardian.com/>

25) Larsson, N.(2016), "Seven ideas on how to finance the SDGs", *The Guardian*, 2016.1.26, <https://www.theguardian.com/>



## 제3장 SDGs 목표 11의 국내 현황 분석

1. 개요
2. 목표 11의 세부목표 및 지표 분석
3. SDGs 목표 11과 다른 목표의 연관성 분석
4. 시사점

### 1. 개요

국내와 각 국가별 사례에서 보듯이 아직 각국은 SDGs를 완전히 반영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각국은 점진적으로 SDGs를 반영한 계획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 SDGs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완전하지 못하며 차기 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UN-SDSN은 SDGs 이행을 점검하고 지속가능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수(Index)를 개발 중이다. 아래 그림은 현재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험적으로 각 국가의 지속가능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그림 3-1]). 각 목표별 지수 계산에 사용된 지표는 OECD,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 IMF 등 다양한 기관에서 수집 중인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있다.

SDGs 목표 11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도심의 연평균 PM2.5 농도와 인구 1인당 사용하는 방의 개수이다<sup>26)</sup>. 우리나라의 경우 불량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국내에서도 이슈가 되는 심각한 미세먼지 발생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6) 1인당 방의 개수: 1미만 불량, 1이상 1.5 이하 부족, 1.5초과 우량;  
PM2.5 연평균 농도: 20 초과 불량, 10이상 20이하 부족, 10미만 우량

Country	SDG1	SDG2	SDG3	SDG4	SDG5	SDG6	SDG7	SDG8	SDG9	SDG10	SDG11	SDG12	SDG13	SDG14*	SDG15	SDG16	SDG17
Australia																	
Austria														n/a			
Belgium																	
Canada																	
Chile																	
Czech Republic														n/a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n/a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Korea, Rep.																	
Luxembourg														n/a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n/a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n/a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주: ■ 불량, ■ 우량, ■ 부족

[그림 3-1] OECD 국가들의 SDG Index 값

\* 출처: Sachs et al(2016), *Preliminary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DG) Index and Dashboard, Draft version*, SDN working paper, p.17.

SDGs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SDGs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목표 별 지표가 현재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하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 중 SDGs 지표와 유사한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와 지표

SDGs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적절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립하고 도시 불량주거지 개선**

11.1.1 도시 불량주거지나 적합하지 않는 주택에 사는 도시 인구 비율

**11.2 2030년까지 도로안전개선과 대중교통 확대를 통해 모든 사람들, 특히 취약계층과 여성, 아동 그리고 장애인 및 노약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비용수준과 높은 접근성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제공**

11.2.1 성별, 나이 장애에 따라 구분한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 가능한 인구 비율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역량을 강화하고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간 정주계획과 관리 증진**

11.3.1 인구성장 비율에 대비 토지 소요 비율

11.3.2 정기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도시계획과 관리에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진 도시의 비율

**11.4 전 세계 문화와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 강화**

11.4.1 유산의 종류별(문화, 자연, 혼합, 세계 유산 센터 지정), 정부의 단계별(국가, 지방, 자치단체), 지출의 종류별(운영비용/ 투자), 민간 자금의 종류별(기부, 민간 비영리부문, 후원)로 구분된 모든 종류의 문화 및 자연 유산을 보호 및 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1인당 종합 비용 (공공 및 민간 포함)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물 관련 재난을 포함한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사망자 및 피해자 수를 현저히 줄이며 GDP 대비 경제적 손실 감소**

11.5.1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실종자, 재난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 수

11.5.2 핵심 인프라 시설과 기본적인 서비스 중단을 포함하는 GDP 대비 직접적인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11.6 2030년까지 대기질과 지자체 또는 다른 주체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인구 1명 당 도시에 미치는 환경의 부정적인 효과 감소**

11.6.1 정기적으로 수거되고 적절한 방법으로 최종 처리되는 도시에서 배출되는 고형폐기물 비율

11.6.2 연평균 대기 미세먼지 수준(PM 2.5와 PM 10, 인구 1인당 가중치)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 아동, 노인과 장애인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접근가능한 공공공간과 녹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하고 보편적인 접근권 제공**

11.7.1 성별, 나이, 장애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공의 이용을 위해 개방된 도시의 개발된 지역의 평균 비율

11.7.2 과거 1년 동안 성별, 나이, 장애 정도, 발생장소 등에 의해 구분된 물리적 성적 희롱의 피해자 비율

**11.a 국가개발계획 또는 지역개발계획 강화를 통해 도시와 도시주변부지역 및 지방과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연계성 강화 지원**

11.a.1 도시의 크기에 따라 구분한 인구증가 및 이에 대한 자원수요를 융합한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을 도입한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

**11.b 2020년까지 통합, 효율적인 자원 활용,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지향하는 통합 정책과 계획이 반영되고 적용된 도시 및 정주지의 수를 증가시키고 샌다이체제의 후속논의에 발맞추어 모든 관리 수준에서 통합 재난위험관리 체제를 개발하고 실행**

11.b.1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 중 샌다이체제를 준수하고 소외,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설계, 이행 및 점검단계에서 포함된 위험감소 및 복원력 전략을 이행 중인 도시의 비율

11.b.2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전략이 있는 국가의 수

**11.c 지역 자재를 활용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건축물을 구축함에 있어 재정적, 기술적 보조를 통한 최빈개발도상국 지원**

11.c.1 현지 자재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으며 자원 효율적인 건축물의 건설 및 개조에 할당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비율

\* 출처 : UN(2016), Final list of propos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New York, The United Nations,  
<http://unstats.un.org/sdgs/indicators/Official%20List%20of%20Proposed%20SDG%20Indicators.pdf>

#### □ SDGs 지표의 역할과 수집<sup>27)</sup>

SDGs는 세계적인 의제를 조직화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MDGs는 개발도상국의 개선과 선진국의 재정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었지만, SDGs는 선진국이 기존의 재정적 지원의 역할과 함께 기술적인 지원을 함께 수행하고, 더 나아가 선진국도 지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선진국의 상태에 대한 점검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전 지구적 평가결과와 개별국가의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각 국가는 자신들의 취약분야에 맞춰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필요 기술의 개발이나 자원의 투자 순위를 정하는데 활용 할 수 있다.

SDGs 지표는 각 국 통계청의 국제 통계 담당부서에서 제출하며, 일정한 가이드라인과 양식을 제공한다. 그러나 자료가 문제가 있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도 별도의 대안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자료의 신뢰도에 대한 검증은 불가능하며, 회원국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UN 통계국은 제공된 SDGs 지표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개별 국가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개별 국가의 SDGs 추진의 시작점으로 국가별 우선순위나 중요 사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이므로 강제성과 페널티, 인센티브 등은 없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이행에 대한 주변국의 압력은 존재할 수 있다.

현재 169개 세부목표의 지표를 확정하는 단계이다. 2016년 3월 IAEG-SDGs 3차 총회를 통해 12정도의 지표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내년에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적인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가 간 합의가 생각보다 어려워 쉽지 않은 상태이다. 결정권한은 190개 국 중 24개국만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까지 회원국이다. 우리나라는 회의 때 마다 참석해야 하며, 자료는 통계청에서 맡아 총괄 제출한다.

현재 SDGs 지표 중 미합의된 부분의 경우 지속적으로 합의를 위해 노력을 진행 중이다. SDGs지표의 수집은 개별국가가 제출하는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지만, UN의 각 분야별 통계를 담당하는 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중이다. 목표 11의 도시분야의 지표의 대부분은 UN-HABITAT에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일부 UNESCO가 책임지고 있다. 해당 기관은 지표의 수집을 전담하지만, 지표의 수준은 엄격히 유엔의 통계국에서 관리하고 있

---

27) UN 통계국 방문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다. 그러나 통계국은 기본적으로 통계자료의 수집을 담당하고 있어서 모니터링에 대한 노하우 부족의 문제가 있으며, 개별국가는 자료 수집 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별도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여 개별 국가의 여건에 따라 수집 가능한 범위가 다르다.

SDGs 지표를 위한 자료수집의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과 신뢰도의 문제이다. SDGs 지표 자료의 수집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국가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일례로 호주에서조차 SDGs지표 자료의 50% 정도만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후진국의 경우에는 자료의 수집 및 가공에 큰 문제가 있다.

UN의 자료는 개별국가의 제출 자료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유엔은 별도로 정보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하지 않는다. 또한 검토와 확인이외에 정보의 생산에 대해 별도의 관여를 하지도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료의 신뢰성은 특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의 자료생산능력이나 법적인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에서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치적인 의도로 정보를 조작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UN은 국가기관이 아닌 많은 기관에서 생산하는 자료나 비공식적인 자료를 자료의 보완차원에서 참고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자료관련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선진국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SDGs는 제공된 자료를 UN 통계국에서 리포트로 공개하며, 모든 관련 기관과 국가들이 볼 수 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으므로 각 국가는 자신들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거나 향후 나아갈 방향을 찾는 지점에서 SDGs의 쓰임새가 결정될 것이다. 물론 SDGs 내부의 지표나 UN-HABITAT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서 주요한 정책 및 사업의 해외진출 활로를 마련할 수도 있다. 선택은 향후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 SDGs 지표의 현재 활용 가능성

SDGs의 지표는 기술적, 정치적 양측 면에서 모두 불확실한 상태로 출범하였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로 인해 현재(2016.11)까지 SDGs지표는 완전히 취득한 상태가 아니며 계속적으로 획득 불가능한 지표를 위한 방법론의 개발과 수집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계속되고 있다.

SDGs 지표의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SDGs 지표는 두 가지 부류로 구분되어 왔다. 1차 IAEG-SDGs회의에서 채택된 지표를 바탕으로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지표의 존재 여부와 작성을 위한 방법론의 여부에 따라 분류하였다. Tier 1지표는 방법론이 존재하고, 현재 자료로 이용 가능한 지표, Tier 2는 방법론은 존재하지만, 자료가 없는 지표, Tier 3은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한 자료로 구분하였다. 전체 지표의 47.3%가 Tier 1, 37.9%가 Tier 2, 14.8%가 Tier 3로 분류 되었다(오정화 외, 2015).

반면에 지표 획득의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회원국 간의 채택에 대한 동의 역시 완전히 합의되지 못하였는데, 제2차 IAEG-SDGs 회의 (2015년 11월)는 지표가 관련 세부 목표를 위해 적절한지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라 녹색, 황색, 회색지표로 구분하였다. 녹색 지표는 IAEG-SDGs 회의 참여자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지표, 황색은 논쟁적 이슈 또는 대안적 지표가 존재하는 지표로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대안 지표를 선정할 것인지 집중 논의가 필요한 지표, 회색지표는 심층토의가 필요한 지표로 지표를 보완하여 다시 검토하여야 하는 지표로 정의하였다(오정화 외, 2015).

목표 11의 지표를 살펴보면, 제2차 IAEG-SDGs 회의 초기에 목표 11의 모든 지표 중 녹색지표는 단 1개도 없었으며, 황색지표가 9개, 회색지표가 2로 분류되었다([표 3-1]). 그러나 회의 종료 후 녹색지표 7개, 회색지표 5개로 합의 되었다. 즉 아직까지도 40%의 지표가 여전히 심층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회의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SDGs 체계가 시작되기 2달 전인 2015년 11월까지도 각각의 세부목표 달성의 진행과정을 측정하기 위해 제안된 지표가 채택 여부조차 명확하게 합의 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표 3-1] 제2차 IAEG-SDGs회의 전후 글로벌 지표 현황

목표	회의 시작			회의 종료		
	녹색	황색	회색	녹색	회색	합계
1. 빈곤퇴치	0	5	3	6	3	9
2. 기아	4	5	1	10	5	15
3. 보건 웰빙	13	6	1	21	3	24
4. 교육	8	1	1	10	1	11
5. 양성평등	12	2	0	14	0	14
6. 물 및 위생	5	4	1	7	3	10
7. 에너지	2	3	1	5	1	6
8. 경제성장 고용	8	5	2	12	3	15
9. 산업화 혁신추구	9	1	0	11	1	12
10. 불평등감소(국내, 국외)	4	8	0	9	3	12
11. 지속가능도시	0	9	2	7	5	12
12. 지속가능소비/생산	7	2	2	7	5	12
13. 기후변화대처	1	3	1	1	4	5
14. 해양생태계	1	5	4	5	5	10
15. 육상생태계	4	8	2	8	7	15
16. 평화제도	6	8	4	13	8	21
17. 글로벌 파트너십	9	6	5	15	6	21
합	204개			161	63	224

\* 출처: 오정화 외(2015),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 대한 국가통계 대응방안 수립」, 통계개발원, p.24.

기존 SDGs 지표의 다수가 사라지거나 변형되었다는 점에서 지표의 불확실성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최종적으로 UN-IAEG는 2016년 3월에 47차 회의에서 기존의 지표를 바탕으로 새롭게 241개 지표를 확정하였다.<sup>28)</sup> 214개 지표 중 일부는 개별 목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실질적으로는 230개 지표가 확정되었다. 지표의 변화에 대해서 목표 11의 각 지표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에서 보듯이 목표 11에 제안되었던 20개 지표 중 5개 지표가 폐지되었으며, 9개 지표는 새로운 지표로 변경, 5개 지표는 부분적으로 수정, 1개 지표만 원형을 유지하

28) UN(2016), *Final list of propos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New York: The United Nations, <http://unstats.un.org/sdgs/indicators/Official%20List%20of%20Proposed%20SDG%20Indicators.pdf>

였다.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SDGs 목표와 지표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후에도 완전히 확정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다듬어 가는 과정 중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SDGs를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채택하고 각 국가의 정책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높다.

[표 3-2] UN IAEG-SDGs 2016년 3월 회의 전후 목표 11의 지표 변화

세부목표	지표	기존 제안지표	2016년 3월 확정 지표	비고
11.1 (주택)	11.1.1 (불량주거지)	도시 불량주거지나 적합하지 않는 주택에 사는 도시 인구 비율	도시 불량주거지나 적합하지 않는 주택에 사는 도시 인구 비율	유지
	11.1.2 (주거비용)	소득의 30% 이상이 주거비용에 소요되는 인구의 비율	-	삭제
11.2 (교통)	11.2.1 (대중교통 확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최소한 20분 간격으로 배차 운영되는) 대중교통수단 접근 범위 0.5km 내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성별, 나이, 장애에 따라 구분한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 가능한 인구 비율	변경
	11.2.2 (대형대중교통수단)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인당 대형 대중교통수단(BRT, 경전철, 지하철) 노선거리	-	삭제
11.3 (도시개발)	11.3.1 (토지소요)	비슷한 규모에서 인구성장비에 대한 토지 소요 비율	인구성장 비에 대한 토지 소요 비율	수정
	11.3.2 (시민참여)	인구계획과 자원의 요구를 통합하여 도시와 지역개발 계획을 실행하는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정기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도시계획과 관리에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진 도시의 비율	변경
11.4 (문화와 자연유산)	11.4.1 (유산보호를 위한 비용)	문화와 자연유산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된 예산의 비율	유산의 종류별(문화, 자연, 혼합, 세계 유산 센터 지정), 정부의 단계별(국가, 지방, 자치단체), 지출의 종류별 (운영비용/ 투자), 민간 자금의 종류별 (기부, 민간 비영리부문, 후원)로 구분된 모든 종류의 문화 및 자연 유산을 보호 및 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1인당 종합 비용 (공공 및 민간 포함)	변경
	11.4.2 (법적 지위)	도시지역과 역사·문화지역에 부여된 보존적 지위의 비율	-	삭제
11.5 (자연재해)	11.5.1 (재난에 의한 인적피해)	재난으로부터 야기되는 사망자, 부상자, 난민, 대피자, 이주민, 기타 영향을 받는 이들의 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실종자, 재난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 수	수정
	11.5.2 (재난에 의한 물적피해)	손상되거나 파괴된 가옥의 수	핵심 인프라 시설과 기본적인 서비스 중단을 포함하는 GDP 대비 직접적인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변경



[표 3-2] 제2차 IAEG-SDGs회의 전후 글로벌지표 현황 (계속)

세부목표	지표	기존	2016.3월 지표	비고
11.6 (도시환경)	11.6.1 (고형폐기물 처리)	정기적으로 수거되고 재활용되는 도시의 고형폐기물 비율	정기적으로 수거되고 적절한 방법으로 최종 처리 되는 도시에서 배출되는 고형폐기물 비율	수정
	11.6.2 (미세먼지 수준)	대기 미세먼지 수준	연평균 대기 미세먼지 수준 (PM2.5 와 PM10 (인구에 의한 가중치))	수정
11.7 (공공공간과 녹지)	11.7.1 (공공공간)	전체 도시공간에 대한 공공공간의 비율	성별, 나이, 장애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공의 이용을 위해 개방된 도시의 개발된 지역의 평균 비율	수정
	11.7.2 (접근의 안전성)	녹지와 공공공간의 접근이 0.5km 이내에서 가능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의 비율	과거 1년 동안 성별, 나이, 장애 정도, 발생장소 등에 의해 구분된 물리적 성적 희종의 피해자 비율	변경
11.a (통합적 개발계획)	11.a.1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계획)	인구증가 및 이에 대한 자원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한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을 도입한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의 수	도시의 크기에 따라 구분한 인구증가 및 이에 대한 자원수요를 융합한 도시 및 지역 개발계획을 도입한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	변경
	11.a.2 (토지 이용률)	단위 인구증가율 대비 토지 이용률의 비율	-	삭제
11.b* (자연재해) (재난위험 관리체계)	11.b.1 (지방정부의 재난위험감소전략)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 중 국제적으로 합의된 체제를 준수하고 소외,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설계, 이행 및 점검단계에서 포함된 위험감소 및 복원력 전략을 이행 중인 도시의 비율	2015-2030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센다이 체제의 후속 논의에 발맞추어 지역 재난 위험 감소 전략을 수립하고 적용한 지방정부의 비율	변경
	11.b.2 (국가차원의 재난위험감소전략)	도시발자국 변화에 따라 측정된 인구의 밀도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전략이 있는 국가의 수	변경
11.c (건축물 ODA)	11.c.1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지원)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으며 자원 효율적인 건축물의 건설 및 개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할당률	현지 자재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으며 자원 효율적인 건축물의 건설 및 개조에 할당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비율	변경
	11.c.2 (재정 밸런스)	건물에 포함된 일반 정부의 수익과 지출의 비율에 대한 지방정부의 수입과 지출, 전체 도시 수익비율에 대한 건축 및 자기 수익 수집(자원수익)	-	삭제

\* 출처: 저자 작성

\* 11.b의 경우 재난위험 관리체계로 하는 것이 맞으나, 본 과제에서는 11.5와 같이 자연재해로 이름붙임

자료 수집의 기술적인 면에서 SDGs 목표 11의 경우 TIER 1지표의 경우 1개, TIER 2, 3 지표가 각각 7개씩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대다수의 지표가 자료 수집을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던지 새로운 지표 수집을 방법을 개발해야하는 상태이다.

지표의 큰 방향성은 2016년 3월의 UN-IAEGs회의를 통해 거의 확정되었으며, 현재는 세부적으로 개별 국가들이 어떻게 SDGs의 지표에 맞추어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조사 및 협의 중이다.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도 자국 여건에 따라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던지 기존 지표를 변형하여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선제적, 탐구적 연구로서 본 연구는 목표 11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국내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목표 11의 세부목표 및 지표 분석

SDGs의 목표는 핵심 목표에 숫자로 표기된 세부목표와 영어 소문자로 표기된 세부목표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 숫자로 표기된 세부목표는 목표별 세부 ‘target’인 반면, 영어 소문자로 표기된 세부목표는 이행수단과 관련된 세부목표이다. 목표 11의 경우 7개의 세부목표와 3개의 이행수단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MDGs의 경우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SDGs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행수단 세부목표를 포함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SDGs와 관련하여 검토 가능한 다수의 통계 및 지표 자료가 있으며, 이중 목표 11과 관련된 지표는 국가주요지표,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 사회지표, e-나라지표, 삶의 질 지표, 녹색성장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7가지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오정화 외, 2015).

[표 3-3] 국가 통계 및 지표 현황

분류	내용	기관
국가주요지표	경제, 사회, 환경 등 16개 영역 140여개 지표	통계정책과
e-나라지표	740여개 지표	통계정책과
국가승인통계	390개 기관 934종	통계조정과
행정통계	행정기관이 법령 제·개정시 필요한 통계지표	통계심사와
사회지표	11개 부문 266개 지표	사회통계기획과
삶의 질 지표	12개 영역 80여종	통계개발원
녹색성장지표	주 지표 22개, 보조지표 27개	통계개발원
지속가능지표	3개 분야 77개 지표	환경부
국제기구 제공 통계	26개 기관 작성 70여 종	국제협력과

\* 출처: 오정화 외(2015),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 대한 국가통계 대응방안 수립」, 통계개발원, p.26.

오정화 외(2015)는 국가통계의 SDGs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SDGs 목표의 세부목표별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유사 지표([표 3-3])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국내 지표는 기본적으로 SDGs 지표와 차이가 많아 현황파악을 위해 사용된 지표가 SDGs가 의도하는 것을

완전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지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본 과제는 이를 바탕으로 SDGs에서 제시한 세부목표의 지표와 국내 지표를 비교 분석하였다.

[표 3-4] SDGs 세부목표와 국내 관련지표 연계: 목표 11

세부	목표	관련 국내지표
1	주택수, 주택건설수, 주거환경만족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주택 보급률 및 인구 천명당 주택수, 건설기관별 주택건설실적, 주거 유형·소득 계층 및 지역별 주거만족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최소 주거기준 미달 가구수, 주택수	국 / 토 / 사 / 삶 / 지
2	소득계층별 주거편의시설 접근성/ 대중교통수송분담률	사/ 지
3	도시화율	지
4	문화재정비율	국
5	자연재난 발생현황, 인적재난 발생현황 / 자연재해피해액 / 자연재해 피해액, 인적재난발생현황 / 태풍, 호우 및 대설 발생빈도와 피해액, 황사, 폭염, 한파 발생일 수 / 자연재해 피(명)	E / 국 / 토 / 사 / 지
6	미세먼지 농도 / 대기오염도	삶/ 지
6	폐기물 발생량 / 폐기물 발생량 /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	국 / 사 / E / 녹 / 지
7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 1인당 생활권 도시림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삶 / 토 / E / 녹 / 지
a	-	-
b	-	-
c	-	-

\* 출처: 오정화 외(2015),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 대한 국가통계 대응방안 수립」, 통계개발원, pp.81-82.

\* 국=국가주요지표, 녹=녹색지표, 사=사회지표, 삶=삶의 질 지표, 지=지속가능지표, 토=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지표, E=E-나라지표, 공란의 경우 세부목표에 해당되는 지표가 없는 경우

□ 세부목표 11.1(주택)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적절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립하고 도시 불량주거지 개선**

11.1.1 도시 불량주거지나 적합하지 않는 주택에 사는 도시 인구 비율

세부목표 11.1은 식수 공급, 위생시설 확보, 적정 거주면적이 확보된 내구적인 주택을 공급하여 도시의 불량주거지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표 11.1.1 ‘도시의 불량주거지나 적합하지 않는 주택에 사는 도시 인구 비율’은 재개발, 재생사업 사업 등과 저소득 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등과 연관되어 있는 지표이다. 지표의 주 대상은 저소득층이며 이들 사회적 약자 대상의 주택계획과 도시재생사업 등의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다.

UN-HABITAT는 다음의 조건이 결핍된 경우 도시 불량주거지(Slum)로 정의한다.<sup>29)</sup>

[표 3-5] UN-HABITAT의 불량주거지의 조건

조건	내용
기본적 용수 취득의 접근성	가족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수량, 적절한 가격, 어렵지 않게 가족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함
기본적 위생환경의 접근성	정화 처리시설이 있고, 적당한 인원이 사용할 수 있고, 공동화장실 내 개별 부스가 설치되어야 함
토지 소유권의 보장	토지 소유 상태를 증명 할 수 있는 문서를 보유하거나, 퇴거로부터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함
주택의 내구성	위험하지 않은 지역에 영구적이고 적합한 구조로 건축되어야 함
충분한 거주 공간	같은 방을 2명 이상이 공유하지 않음

\* 출처: 방설아 외(2015), “Goal 11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김지현 외(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KOICA, p.225.

현재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지표 중에는 직접적으로 지표 11.1.1의 항목을 보여주는 것은 없다. 그러나 11.1.1의 경우 국민 삶의 질 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규모를 측정할 수 있다. 삶의 질 지표는 최저주거기준<sup>30)</sup> 미달가구의 비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현재

29) 방설아 외(2015), “Goal 11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김지현 외(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KOICA, p.225.

30)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2011)에서는 주거를 위한 필수 설비와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 최소주거면적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진행 또는 계획 중인 재개발 지역 역시 지표 11.1.1에서 말하는 대상이다.

최저주거기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6년에는 268만(16.6%)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점차 줄어 2014년 기준으로 97.8만 가구(5.3%)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들 97.8만 가구가 세부지표 11.1.1의 주 대상이다.

[표 3-6]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변화

연도	2006	2008	2010	2012	2014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268만	212만	184만	127.7만	97.8만
비율(%)	16.6	12.7	10.6	7.2	5.3

\* 출처: 국가지표체계(2016), “주거지표<sup>31)</sup>”, 「국민 삶의 질 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PotalMain.do>

최저주거기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최저주거기준이 단순히 지표이상의 의미로 정책에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최저주거기준이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표로서 유의미한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가구특성을 고려한 기준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최저주거기준을 보조할 국내지표에는 주거환경만족도 지표가 있다. 이 지표는 현재 거주하는 주거지에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족 하는지를 조사한 것이다([표3-7]). 2006년 이후 주거불만족 비율은 약 20%선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는 이 불만족을 표하는 2014년 기준 약 362.7 만 가구 역시 주거 환경 개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	실(방) 구성	총주거면적(m2)
1	1인 가구	1 K	14
2	부부	1 DK	26
3	부부+자녀1	2 DK	36
4	부부+자녀2	3 DK	43
5	부부+자녀3	3 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

\* 출처: 국토해양부(2011),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1-490호」, [http://www.molit.go.kr/USR/10204/m\\_45/dtl.jsp?idx=8285](http://www.molit.go.kr/USR/10204/m_45/dtl.jsp?idx=8285)

\* 실(방) 구성: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 숫자는 침실(거실 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 가능한 방

\* 기타: 부부는 동일 침실 사용, 만6세이상 자녀는 부부와 분리, 만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31)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년 주기(2006년 이후)

[표 3-7] 주거환경 만족도

연도	불만족 비율	사례수(만명)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2006	20.6%	41.6	284.0	1,114.8	145.2
2008	22.9%	42.0	369.6	1,211.8	55.2
2010	19.1%	39.3	291.2	1,268.8	134.4
2014	20.1%	30.3	332.4	1,297.0	140.2

\* 출처: 국가지표체계(2016), “주거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PotalMain.do>

취약계층의 주거상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데 활용 가능한 지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PIR)이나 통계청 가구동향 조사를 통해 슈바베지수를 계산함으로써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의 주거비 지출에 대해 추정할 수 있다. 슈바베지수<sup>32)</sup>는 주거비에 집세, 상·하수도비, 냉난방비, 주택유지수선비, 관리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PIR 전국 평균은 2014년 기준 4.7이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 2012년 기준 호주 5.6, 일본 5.3, 영국 5.1, 캐나다 3.6, 미국 3.1이다<sup>33)</sup>. UN-HABITAT의 경우 3.0~5.0 정도를 PIR의 적정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계층별로 살펴보면,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지표값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 비해 저소득층과의 값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다. 더욱이 2006년 이후 전 계층에서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저소득층에서 값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소득대비 더 큰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표 3-8] 소득 계층별 PIR 변화 (2006년~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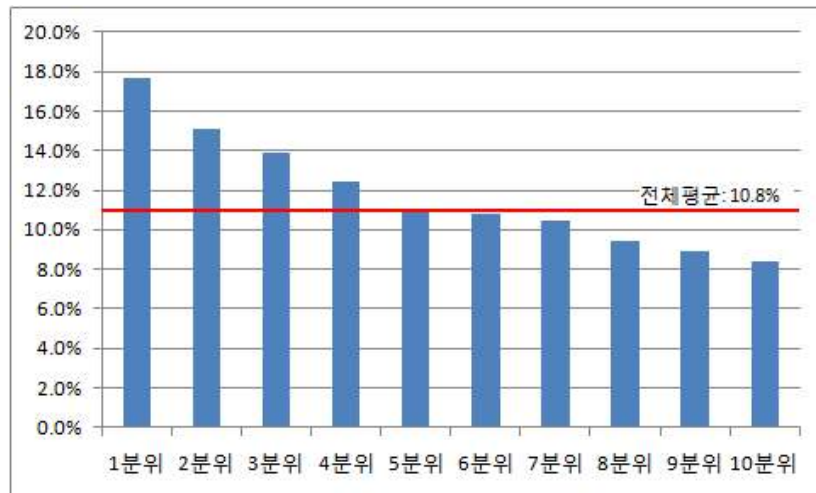
연도	2006	2008	2010	2012	2014
저소득층	6.3	6.4	6.1	7.5	8.3
중소득층	3.4	4.2	4.2	4.3	5.0
고소득층	3.6	4.2	4.0	4.4	4.7
전국평균	4.2	4.3	4.3	5.1	4.7

\* 출처: 국가지표체계(2016), “주거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PotalMain.do>

32) 슈바베지수 : 엔겔지수와 함께 가계지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주거비에 지불하는 비용은 높아지지만 전체 가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작아진다는 독일 경영학자의 이름을 딴 이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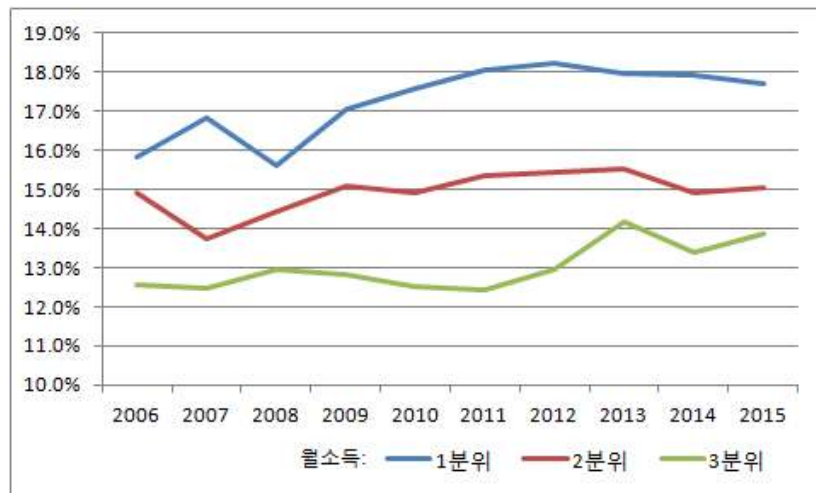
33)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3), “주요국 주택가격 비교와 시사점”, 「KB 경영정보리포트」, 2013-11호.

통계청 자료에 근거하여 전체 평균 주거비 비율(슈바베지수)은 10.8%이다([그림 3-2]). 일반적으로 슈바베지수는 저소득층이 높고, 고소득층이 낮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경우 평균이 17.7%와 15.1%이다. 1분위, 2분위, 3분위 모두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록 1분위 역시 20%이내의 통계 값을 보여주지만 실질적으로 30%가 넘어갈 가능성이 다분하다. 더 중요한 점은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매년 약 10% 정도 상승하고 있다.



[그림 3-2] 소득분위별 슈바베지수 (2015년 기준)

\* 출처: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그림 3-3] 연도별 슈바베지수 변화- 월평균소득 1,2,3분위(2003~2015)

\* 출처: 통계청자료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이 외에도 과도한 주거비 지출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소득 계층 간 소득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PIR과 같이 단순히 고, 중, 저소득 계층별 평균 임대료비율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거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국내의 동향을 살펴보면 정부는 매년 주거종합계획<sup>34)</sup>을 수립하여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 계획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을 12.5만호 준공할 예정이며, 이중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매입전세임대가 5.5만호이며, 신규건설이 8.9만호이다([표 3-9]). 신규건설의 경우 2016년 전체 주택 준공 물량 51.9만호의 17.1%가 공공주택으로 공급되는 것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외에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보조, 노후불량주택 개량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임대 주택의 연도별 준공량을 살펴보면 2010년의 10.8만 호에서 점차 줄어들다가 2013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5년, 2016년(계획) 모두 12.5만 호 정도를 공급하였다. 앞으로도 정부에서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을 현 상태를 유지하던지 늘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3-9] 공공임대 준공(2009~2016)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계획)
공공임대 준공 (만 가구)	10.5	10.8	9.0	5.6	8.0	10.2	12.4	12.5

\* 출처: 국토교통부(2016), 「 2016년 주거종합계획」.; 국토교통부(2015), 「 2015년 주택종합계획」.

2016년 준공되는 공공임대 주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규 주택 건설이 전체의 56%이며, 이 중 국민임대 주택이 24%로 가장 많다. 민간건설 공공임대 역시 17%로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기존 주택을 정부산하 기관이 임대하여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가 33%로 가장 많다 ([표 3-10]).

34) 2015년 12월 23일을 시점으로 주거기본법이 주택법으로부터 분리·제정됨에 따라 기존 주택종합계획을 주거종합계획으로 개편하고, 내용 역시 주택공급계획에서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계획 중심으로 변경

[표 3-10] 2016년 공공임대주택 준공계획

유형		준공량	비율(%)
건설	행복주택	0.3만호	2%
	영구임대	0.3만호	2%
	국민임대	3.0만호	24%
	기타 공공건설임대 (5·10년 장기전세 등)	1.3만호	11%
	민간건설공공임대	2.1만호	17%
매입임대		1.4만호	11%
전세임대		4.1만호	33%
소계		12.5만호	100%

\* 출처: 국토교통부(2016), 「2016년 주거종합계획」, p.5.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주거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커 장기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정부에서 공공임대 주택 공급 등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공급되는 물량이 충분한가의 문제와 공급되는 물량의 입주를 위한 비용을 저소득층이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저소득층이 새로이 공급되는 주택을 유지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여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세부목표 11은 단순히 새로운 주거지나 기존 주거지의 환경개선만이 아닌 취약계층의 재정적 문제의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이다.

□ 세부목표 11.2(교통)

**11.2 2030년까지 도로안전개선과 대중교통 확대를 통해 모든 사람들, 특히 취약계층과 여성, 아동 그리고 장애인 및 노약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비용수준과 높은 접근성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제공**

11.2.1 성별, 나이, 장애에 따라 구분한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 가능한 인구 비율

기존 지표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적용이 되었지만, 현재는 전체 인구에 적용가능한 지표로 변화되었다. 즉, 우리나라 인구 50만 이상 <sup>35)</sup>도시는 현재 총 21개이지만, 새로운 지표에서는 일반적인 대중교통지표,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상대적 교통약자 계층에 대한 고려를 중요시 하고 있다. 이들 약자계층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에 접근하기 위한 사전 행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대중교통 접근 행위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 대중교통접근시간이 있다. 현재 통계자료로 수집되는 대중교통접근시간은 수단별, 이용자 특성별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먼저 대중교통수단에 접근하는 수단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국 평균 대중교통접근 수단비율을 살펴보면 도보가 93%이상으로 절대적인 수단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하면 대중교통접근시간의 측정값은 도보통행 시간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표 3-11] 대중교통접근 수단

접근 수단	2012	2013	2014
도보	93.3%	95.3%	93.5%
승용차	3.0%	3.0%	4.1%
자전거	1.7%	1.4%	1.5%
택시	—	1.3%	0.8%
기타	2.0%	0.9%	0.1%

\* 출처: 통계청(2016), “대중교통현황조사”,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tat.go.kr/>

35)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시, 울산광역시,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청주시, 안산시, 남양주시, 전주시, 화성시, 천안시, 안양시, 김해시 이상 2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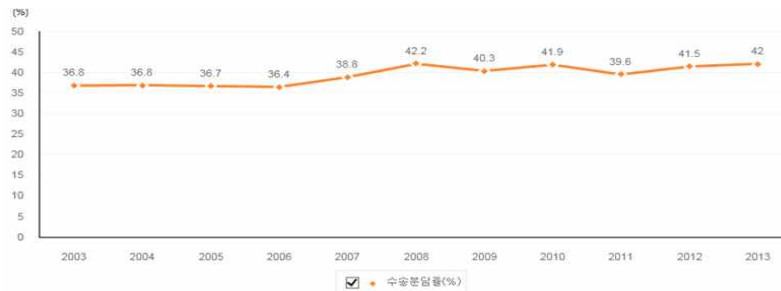
다음으로 전국 평균 대중교통접근 시간을 살펴보면 10분 이내가 2014년 기준 55.7%로 절반이 넘어가긴 하지만, 아직 44%의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도보로 10분이상의 거리에 거주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이용자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지만 취약계층, 노인, 어린이, 장애인들이 평균 기준으로 10분 이상의 도보 거리에 거주한다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라 해석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대중교통접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선의 재조정과 정류소 증설 등을 통해 보다 촘촘한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표 3-12] 대중교통접근 시간별 비율

접근 시간	2012	2013	2014
5분 미만	15.9%	14.8%	13.1%
5~10분	40.3%	43.7%	42.6%
10~15분	29.4%	29.7%	31.2%
15~20분	7.5%	6.7%	7.4%
20~25분	4.2%	3.0%	3.4%
25~30분	0.3%	0.2%	0.3%
30분 이상	2.2%	1.9%	2.1%

\* 출처: 통계청(2016), “대중교통현황조사”,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tat.go.kr/>

공식적으로는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을 통해 대중교통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은 2013년 기준 약 42%이다. 주요국 일본 36.8%(2009년 기준), 영국 14.1%(2013년 기준), 독일 14.3%(2013년 기준) 등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대중교통수송분담률만으로는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여건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3-4] 대중교통수송분담률(2003~2013년)

\* 출처: 국가지표체계(2016), “대중교통수송분담률”,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PotalMain.do>

□ 세부목표 11.3(도시개발)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역량을 강화하고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간 정주계획과 관리 증진**

11.3.1 인구성장 비율에 대비 토지 소요 비율

11.3.2 정기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도시계획과 관리에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진 도시의 비율

세부목표 11.3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표 11.3.1은 인구성장에 맞춰 토지 소요 비율을 측정하여, 인구성장에 따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가를 판단하는 지표이다. 반면에 지표 11.3.2는 도시계획과 도시의 관리에 시민들이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가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지표 11.3.2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시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도시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지표 11.3.1의 인구성장 비율 대비 토지 소요 비율이란, 예를 들어 고밀도로 개발된 도시 또는 시골지역에 저밀도로 개발된 지역 등에 따라 각각 인구와 토지소모량 등이 다르므로, 단순히 인구비교 혹은 면적비교만으로는 판단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본적으로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도시스프롤을 경계하기 위해서이다(성장환 외, 2015).

도시가 성장하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높아지면서 도심을 중심으로 다양한 토지 수요가 발생한다. 그러나 초기에 통합적인 도시계획이 실시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난개발로 인해 도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다. 즉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에서 현재 지표 11.3.1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며, 향후 개발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그러나 도시화율<sup>36)</sup>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유추할 수 있다.

36) 도시화율이란 전체인구 중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도시는 우리나라는 동+읍 단위 이상을 의미하지만, 국제기준으로는 동단위 이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약 81.8%(2010년 월드뱅크와 UN 기준)이다.

출처: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3), “주요국 주택가격 비교와 시사점”, 「KB 경영정보리포트」, 2013-11호, p.3.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을 살펴보면 2004년의 90.1%이후 큰 변화 없이 완만히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91.7%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으로도 도시화율에 큰 변화는 없이 현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3] 도시화율 변화(2004~2014년)

연도	총인구(천만명)	도시인구(천만명)	비도시인구(천만명)	도시화율(%)
2004	48,782	43,959	4,822	90.1
2005	48,991	44,233	4,758	90.3
2006	49,268	44,610	4,658	90.5
2007	49,540	44,835	4,704	90.5
2008	49,773	45,182	4,590	90.8
2009	50,515	45,933	4,582	90.9
2011	50,734	46,231	4,504	91.1
2012	50,948	46,381	4,566	91.0
2013	51,141	46,837	4,303	91.6
2014	51,328	47,048	4,280	91.7

\* 출처: 국토교통부(2015), 「2015 국토교통통계연보」, p.165.

반면 지표 11.3.2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도시 현황과 주민 참여의 정도에 대한 개별 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도시 비율을 살펴보면 광역시급이상은 모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북도, 제주도는 관내 해당 도시가 모두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충청남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의 일부지역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존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자체의 계획 수립 방향과 함께 수립하고 있지 않은 도시도 모두 수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계획수립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최근 서울, 인천 등에서는 참여예산제를 포함해서, 도시군기본계획에 시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도시에서 도시군기본계획이 용역사를 중심으로 작성되는 것을 감안하면, 근본적으로 시민사회에서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여야 한다.

[표 3-14]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도시현황(2014년)

지역 구분	수립지역		지역내 총 도시수	계획 수립비율
	시급	군급		
특별/광역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7개	—	7	100%
특별자치시	세종	—	1	100%
경기도	수원, 성남 등 28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3 개	31	100%
강원도	춘천, 원주 등 7개	홍천군, 횡성군 등 11개	18	100%
충청북도	청주, 충주, 제천 3개	보은군, 옥천군 등 8개	11	100%
충청남도	천안, 공주 등 8개	금산군, 부여군 등 4개	15	80%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등 6개	무주군, 고창군 2개	14	57%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등 5개	담양군, 화성군 등 7개	22	55%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등 10개	군위군, 청도군 등 7개	23	74%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등 8개	창녕군, 남해군 등 4개	18	67%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2개		2	100%

\* 출처: 국토교통부(2016), “도시계획현황”,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http://stat.molit.go.kr/portal/main/portalMain.do>

□ 세부목표 11.4(문화와 자연유산)

**11.4 전 세계 문화와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 강화**

11.4.1 유산의 종류별(문화, 자연, 혼합), 세계 유산 센터 지정, 정부의 단계별(국가, 지방, 자치 단체), 지출의 종류별 (운영비용/ 투자), 민간 자금의 종류별 (기부, 민간 비영리 부문, 후원)로 구분된 모든 종류의 문화 및 자연 유산을 보호 및 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1인당 종합 비용 (공공 및 민간 포함)

세부목표 11.4는 각 지역에 산재한 문화 및 자연유산을 도시개발로 인한 파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적절한 예산을 투입할 것을 지표 11.4.1에서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도시란 단순히 환경보호 측면에서의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내외의 환경을 문화와 유산이라는 관점에서 보호해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지표 11.4.1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범위는 다소 모호하다. 국가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문화재 관리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일 수도 있으며, 문화재만을 위한 특별관리 예산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전자는 문화재청과 산림청 등 관리기관의 예산을 포함 할 것이며, 후자는 국가 지정문화재 관리 예산과 자연공원 관리 예산만을 포함할 것이다 (성장환 외, 2015).

현재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는 문화재정 비율이 있다. 2014년 기준 GDP대비 문화재정은 약 0.3% 수준이고, 정부재정대비 문화재정은 약 1.24%이다.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큰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또한 문화재정은 다양한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세부목표 11.4가 의미하는 것이 문화재정에 포함된 항목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도 현재는 불분명하다.

GDP대비 문화재정 0.3%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문화재정의 상당 부문은 보전과 거리가 먼 사업화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따라서 SDGs가 강조하는 다양한 문화와 자연 자원의 보호의 측면에서는 부족하며, 문화와 자연 자원의 보호를 위한 예산 증가의 필요성으로 판단할 때 지속적인 증가가 요구된다.



[표 3-15] 문화재정 총액과 GDP대비 문화재정 비율(2006~2014년) (단위: 억 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문화재정	23,073	22,660	26,354	28,746	31,747	34,557	37,194	41,048	44,224
예산	12,948	12,681	15,136	16,665	18,167	19,604	20,933	22,201	23,208
기금	10,125	9,979	11,218	12,081	13,580	14,954	16,261	18,847	21,016
문화 예술부문	10,552	9,440	10,709	11,275	13,266	14,552	16,225	16,793	18,782
관광부문	6,381	6,649	7,766	8,944	8,901	9,257	9,829	10,964	12,316
체육부문	4,090	4,419	5,304	6,431	7,303	8,403	8,634	10,744	10,463
문화 및 관광일반부문	2,050	2,152	2,575	2,096	2,277	2,346	2,506	2,548	2,663
GDP대비 문화재정(%)	0.24	0.22	0.24	0.25	0.25	0.26	0.27	0.29	0.30
정부재정대비 문화재정(%)	0.98	0.97	1.00	0.95	1.08	1.12	1.14	1.19	1.24

\* 출처: 국가지표체계(2016), “사회부문”, 「국가주요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PotalMain.do>

□ 세부목표 11.5(자연재해)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물 관련 재난을 포함한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사망자 및 피해자 수를 현저히 줄이며 GDP 대비 경제적 손실 감소**

11.5.1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실종자, 재난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 수

11.5.2 핵심 인프라 시설과 기본적인 서비스 중단을 포함하는 GDP 대비 직접적인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세부목표 11.5는 재난 발생 시 도시기능의 회복능력 향상과 이를 통한 재난피해 감소를 추구하고 있다. 세부목표 11.5에서는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 등 재난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피해를 볼 확률이 높은 사람에 대한 파악 (지표 11.5.1)과 재난발생 시의 경제적 손해(지표 11.5.2)의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지표 11.5.1의 경우 재난 직후의 직접적 피해인 사망자와 부상자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난민, 이주민, 대피자 역시 고려하고 있다. 이 세 부류는 모두 주택의 손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이는 재난 후 지속되는 효과를 파악하고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지표 11.5.2는 국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저개발국 등에서는 취약계층의 주거지가 1차적인 문제일 것이다. 반면에 선진국의 경우에는 재해로 인한 기본 시설의 이용 차단과 이를 통한 2차적 경제손실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재난피해와 관련해서는 자연재난 발생현황, 인적재난 발생현황, 자연재해 피해액 등 다수의 통계자료가 존재한다. 그러나 접근 가능한 통계자료가 다수임에도 실질적으로 지표 11.5.1에서 요구하는 재난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대상자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없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재난과 회복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재난별 잠재적 시나리오와 피해범위와 피해대상에 대해 정확한 추측을 할 수가 없다.

[표 3-16]에서 보듯이 자연재해의 이재민수와 피해액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건물 피해의 경우도 2011년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표3-17]). 인명피해의 경우 사망자와 실종자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택의 피해 규모도 크다. 이는 아직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표 3-16] 자연재해 발생건수와 피해(2006~2014년)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발 생 (건)	태풍	2	2	1	0	3	1	3	1	3
	호우	7	7	3	6	7	6	11	18	15
	대설	2	1	5	3	5	5	4	5	4
사망 및 실종자수(인)		63	17	11	13	14	78	16	4	2
이재민수(인)		2,883	675	4,627	11,931	76,110	70,099	18,356	4,233	7,691
피해액 (억 원)		23,308	2,977	694	3,262	4,488	7,827	10,660	1,712	1,800

\* 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지진(지진해일 포함)과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자수와 피해액임.

\* 주: 자연재해피해액은 2014년 환산가격으로 나타낸 액수

\* 출처: 국가지표체계(2016), “사회부문”, 「국가주요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PotalMain.do>

지표를 토대로 판단하면 기존의 재난방재 노력이 직접적인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으며, 사망실종자의 수는 추가적인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아니다. 반면에 이재민 수나 주택 피해는 아직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재해관련 정책 역시 이재민 등의 비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3-17] 시도별 풍수해에 의한 건물 피해(단위: 동)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서울특별시	22	0	61	340	18,507	14,869	515
부산광역시	14	0	65	1,463	8	677	315
대구광역시	2	3	0	0	11	17	3
인천광역시	8	3	554	155	6,121	2,085	440
광주광역시	3	4	0	116	73		60
대전광역시	3	2	0	3	0	24	22
울산광역시	3	0	241	0	0	2	11
세종특별자치시	—	—	—	—	—	—	19
경기도	25	5	676	2,123	7,348	10,526	1,831
강원도	791	8	12	32	104	85	28
충청북도	52	9	47	25	15	16	35
충청남도	53	13	17	82	885	67	284
전라북도	27	8	18	134	250	1,057	1,491
전라남도	48	114	0	621	174	396	949
경상북도	73	44	197	57	51	149	1,074
경상남도	50	12	6	596	46	339	620
제주도	1	86	0	6	14	73	220
총합	1,175	311	1,894	5,753	33,607	30,382	9,427

\* 출처: 국토교통부, 「통계연보」, 각 연도(2007~2013).

□ 세부목표 11.6(도시환경)

**11.6 2030년까지 대기질과 지자체 또는 다른 주체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인구 1명 당 도시에 미치는 환경의 부정적인 효과 감소**

11.6.1 정기적으로 수거되고 적절한 방법으로 최종 처리되는 도시에서 배출되는 고품  
폐기물 비율

11.6.2 연평균 대기 미세먼지 수준(PM 2.5와 PM 10, 인구에 의한 가중치)

세부목표 11.6은 도시의 환경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정한 대기질과 폐기물의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표 11.6.1은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적절한 방법으로 최종 처리’란 재활용 후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말한다. 따라서 도시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여 자연자원의 소모를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도시 고체 폐기물은 e-폐기물과 비 e-폐기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e-폐기물(electronic waste)는 휴대폰, 컴퓨터, TV등 각종 전장 장비와 부품에서 나오는 쓰레기로 납, 수은 등 유해물질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

지표 11.6.2는 미세먼지 수준을 통해 적정한 대기상태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폐기물의 처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생활 폐기물을 수집한 후 소각하거나 거주민이 임의로 소각할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오염물질이다. 또한 미세먼지는 PM10과 PM2.5로 구분되는데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PM2.5는 PM10보다 더 미세하여 인체에 더 큰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에서는 PM10 미세먼지의 70% 정도가 자동차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화력발전소, 공장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미세먼지를 관리하려면 자연스럽게 자동차 이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반면에 PM2.5의 경우 대기 중의 특정 조건에서 반응하여 2차 생성되며, 입자가 작은 PM2.5는 코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에 직접 침투하여 폐관련 질환의 원인이 된다.

각 세부지표별 유사 국내 지표를 살펴보면 지표 11.6.1의 경우 고품폐기물의 비율을 별도의 통계로 잡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반폐기물의 재활용비율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표3-19]). 일반폐기물의 양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재활용비율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일반폐기물중 84%가 재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가적으로 재활용제품 판매도 꾸준하며 2013년 기준 3,019만 톤, 5,3조원에 달하고 있다.

[표 3-18] 일반폐기물 재활용 비율

구분	일반폐기물 발생량 (톤/일)	재활용량 (톤/일)	재활용 비율(%)
2007	337,158	273,561	81.1
2008	359,296	295,863	82.3
2009	357,861	292,557	81.8
2010	365,154	304,381	83.4
2011	373,312	312,521	83.7
2012	382,009	322,419	84.4
2013	382,081	320,951	84.0

\* 출처: 국가지표체계(2016), “환경”, 「국민 삶의 질 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PotalMain.do>

[표 3-19] 폐기물 재활용실적 및 업체현황

구분	업체현황 (개소)	재활용폐기물량 (만 톤)	재활용제품 판매량 (만 톤)	재활용제품 판매액 (조 원)
2007	4,128	3,415	4,418	3.2
2008	4,350	3,270	3,672	4.1
2009	4,375	3,058	3,309	3.8
2010	4,062	3,529	3,325	4.0
2011	3,916	3,357	3,459	4.2
2012	4,346	3,694	3,178	4.5
2013	5,180	4,030	3,019	5.3

\* 출처: 국가지표체계(2016), “환경”,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PotalMain.do>

지표 11.6.2의 미세먼지 수준의 경우 우리나라는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에 한해 PM10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와 같은 단위에서는 측정소가 부족하여 관할 지역을 전체에 대한 의미 있는 값을 얻는 것이 쉽지 않다. 더욱이 PM2.5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소는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PM10자료가 최선이다. [표 3-20]은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PM10 연평균 농도를 보여주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인천과 부산이  $49\mu\text{g}/\text{m}^3$ 가 가장 높고, 대전과 광주가  $42\mu\text{g}/\text{m}^3$ 으로 가장 낮았다.

[표 3-20] 미세먼지(PM10) 농도(2006~2013년)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구가중합산 미세먼지농도 <sup>37)</sup> (단위: $\mu\text{g}/\text{m}^3$ )	58.1	53.8	51.8	49.3	47.9	42.1	45.8
서울	61	55	54	49	47	41	45
부산	57	51	49	49	47	43	49
대구	53	57	48	51	47	42	45
인천	64	57	60	55	55	47	49
광주	52	50	46	45	43	38	42
대전	49	45	43	44	49	39	42
울산	53	54	49	48	49	46	47

\* 출처: 국가지표체계(2016), 「환경」, 「국민 삶의 질 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PotalMain.do>

외국 주요도시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게는 두 배 이상 PM10 농도가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미세먼지(PM10) 농도 세계 주요도시 비교(2009~2014년)

구분 (단위: $\mu\text{g}/\text{m}^3$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서울	54	49	47	41	45	46
미국 LA	32	27	29	30	29	30
일본 도쿄	31	21	21	20	21	—
프랑스 파리	28	27	27	26	26	22
영국 런던	19	18	23	19	18	20

\* 출처: 환경부(2015), 「대기환경연보 2014」, p. 225.

37) 주요도시의 미세먼지 농도에 인구수를 가중치하여 계산한 연평균농도

□ 세부목표 11.7(공공공간과 녹지)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 아동, 노인과 장애인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접근가능한 공공공간과 녹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하고 보편적인 접근권 제공**

11.7.1 성별, 나이, 장애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공의 이용을 위해 개방된 도시의 개발된 지역의 평균 비율

11.7.2 과거 1년 동안 성별, 나이, 장애 정도, 발생장소 등에 의해 구분된 물리적 성적 폭력의 피해자 비율

세부목표 11.7의 두 지표는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다. 지표 11.7.1의 경우 공원 등 공공공간이 얼마나 제공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면, 지표 11.7.2는 도시의 안전문제, 특히 성범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목표의 주 대상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며 이들의 공공공간 이용과 안전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지표 11.7.1은 도시공간에서 공공공간의 비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공공공간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 서울시의 경우 공공공간을 ‘공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옥외 및 준 옥외 영역에 조성되어 공중에게 개방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도로, 광장, 친수공간, 공원, 공공건축물의 외부 공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동 주택 등을 포함하고 있다(성장환 외, 2015<sup>38</sup>).

공공공간의 의미는 다양할 수 있지만 세부목표 11.7을 통해 유추해 보면 공공공간의 의미가 다소 친수 공간, 공원, 도시내 숲 등의 녹지와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접근권의 강조는 일반적으로 도보에 의한 접근을 의미가 크며, 따라서 도심의 녹지 조성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이 어렵지 않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공공공간을 대표할 지표는 없다. 다만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1인당 도시공원 결정면적 등 다양한 공공을 위한 공간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고 있다.

38) 성장환 외(2015),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추진에 따른 LH사업 연계화방안 연구」, 연구지원 2015-56, 토지주택연구원.



공공공간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범위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있기 전에는 지표 11.7.1에 대한 자료를 얻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

공공공간 중 대표적인 공간은 공원과 광장 등의 녹지 공간이다. 이런 녹지형 공공공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급격한 증가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외에도 공공공간의 범주에는 학교, 문화체육시설, 공항 등 다양한 시설물이 공공공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표 3-22] 녹지형 공공공간 현황 (2009~2015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광장	시설수 (개)	3,841	4,125	4,348	4,446	4,522	4,563	4,801
	면적 (km <sup>2</sup> )	105.6	115.4	127.8	130.3	133.8	134.6	146.1
공원	시설수 (개)	17,616	19,077	19,600	20,389	21,005	21,418	21,766
	면적 (km <sup>2</sup> )	1,111.6	1,089.0	1,008.4	1,020.0	1,004.8	989.4	934.2
녹지	시설수 (개)	13,665	16,002	17,541	17,844	18,211	18,871	20,387
	면적 (km <sup>2</sup> )	152.9	170.6	181.9	184.6	190.9	193.7	225.3
유원지	시설수 (개)	221	228	233	238	244	246	253
	면적 (km <sup>2</sup> )	159.8	158.4	160.0	163.7	165.0	167.7	167.7
공공공지	시설수 (개)	3,257	3,740	3,954	4,313	4,541	4,720	5,085
	면적 (km <sup>2</sup> )	8.8	10.0	10.7	11.1	11.6	11.6	12.9

\* 출처: 통계청(2016), “도시계획현황”,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tat.go.kr/>

지표 11.7.2는 범죄발생 자료를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그리고 공간적 특징을 반영해서 수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자료는 SDGs가 요구하는 수준만큼 세밀하게 분류하고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범죄 자료는 수집되고 있으므로 점차 SDGs의 요구에 맞추어 자료를 수집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통계청을 통해 범죄 유형별 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 성범죄의 경우 2013년부터 좀 더 항목을 세분화해서 분류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성범죄는 2011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2014년은 2013년 보다 발생건수가 적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줄어들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폭력범죄는

2013년부터 조금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 역시 향후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지속적으로 범죄를 줄이기 위한 노력, 특히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3] 성범죄 및 폭력범죄 관련 현황 (2011~2014년)

구분	2011	2012	2013	2014
강간·강제추행	19,498	19,670	—	—
강간	—	—	5,753	5,078
유사강간	—	—	132	375
강제추행	—	—	14,778	14,611
기타강간·강제추행 등	—	—	1,647	991
성범죄 소계	19,498	19,670	22,310	21,055
폭력범죄	311,945	312,579	294,188	290,079

\* 출처: 통계청(2016), “일반적 범죄분석”,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tat.go.kr/>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 자료의 공개가 필요하다. 현재 범죄 자료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며, 수사목적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범죄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범죄 자료도 공개가 필요하다.

□ 세부목표 11.a(통합적 개발계획)

**11.a 국가개발계획 또는 지역개발계획 강화를 통해 도시와 도시주변부지역 및 지방과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연계성 강화 지원**

11.a.1 도시의 크기에 따라 구분한 인구증가 및 이에 대한 자원수요를 융합한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을 도입한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

세부목표 11.a는 도시계획에 있어 도시와 주변부, 지방계획과 국가계획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지표 11.a.1의 의미를 분석하면 단순히 특정 도시 자체의 단독적인 도시계획이 주변 농촌 지역이나 관련 생활권을 모두 포함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의미할 수도 있다. 비록 현재는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지만 국가-지역-도시의 연계를 강조하는 SDGs의 기본 방향을 고려할 때 도시와 농촌이 연계된 도시계획과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성장환 외, 2015).

지표 11.a.1이 의미하는 바가 모호하고 국내에 사용 가능한 지표 중 조건을 만족하는 지표는 없다. 그러나 지표 11.3.1에서 국내 유사지표로 제시한 도시계획을 수립한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의 수나 도시화율을 통해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

□ 세부목표 11.b(자연재해)

11.b 2020년까지 통합, 효율적인 자원 활용,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지향하는 통합 정책과 계획이 반영되고 적용된 도시 및 정주지의 수를 증가시키고 센다이 체제(재난위험저감 계획 2015-2030)의 후속논의에 발맞추어 모든 관리 수준에서 통합 재난위험관리 체제를 개발하고 실행

11.b.1 2015-2030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센다이 체제의 후속 논의에 발맞추어 지역 재난 위험 감소 전략을 수립하고 적용한 지방정부의 비율

11.b.2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전략이 있는 국가의 수

세부목표 11.b는 세부목표 11.5와 연관성이 깊다. 11.5가 자연재해에 의한 손실과 피해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11.b는 재난에 대한 대비와 피해의 복구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부목표 11.b는 센다이 프레임워크를 계승하여 재난 및 위험 관리 체계를 갖추 것을 요구하고 있다. Post-2015와 그 맥을 같이하는 센다이 프레임워크는 2030년을 목표연도로 재난의 위험과 인적, 물적,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 피해를 경감하고자 한다. 다음의 7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성장환 외, 2015).

- 첫째, 재난에 의한 세계 사망자수를 줄임으로써 2020년~2030년 세계 10만 명당 평균 사망자수를 2005년~2015년보다 낮춤.
- 둘째, 첫째와 동일하며 재난피해 인구를 줄임.
- 셋째, 세계 GDP 대비하여 재난에 의한 직접적인 경제손실을 줄임.
- 넷째, 재난에 의한 인프라 피해를 줄이는 것으로, 핵심 인프라 뿐 아니라 보건, 교육시설 등 기본 서비스 인프라를 포함.
- 다섯째, 국가 및 지방 재난 위험 감소 전략을 수립한 나라의 수. 단,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함.
- 여섯째, 프레임 워크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 일곱째, 재난경고 및 정보제공 시스템 접근 및 활용성 증진.

세부지표 11.b.1과 11.b.2는 재난감소와 대응을 위한 체계를 갖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지표는 대비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우리나라나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에 좀 더 중요한 지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부처 중 국민안전처가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여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에 대한 대응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국민안전처가 중앙정부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5년 단위)을 작성하고 각 중앙부처는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각 시·도는 시·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산하 시·군·구 역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대부분의 도시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작성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이 SDGs에서 요구하는 센다이프레임워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이며, 특히 소외,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되었는가 여부도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

□ 세부목표 11.c(건축물 ODA)

**11.c 지역 자재를 활용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건축물을 구축함에 있어 재정적, 기술적 보조를 통한 최빈개발도상국 지원**

11.c.1 현지 자재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으며 지원 효율적인 건축물의 건설 및 개조에 할당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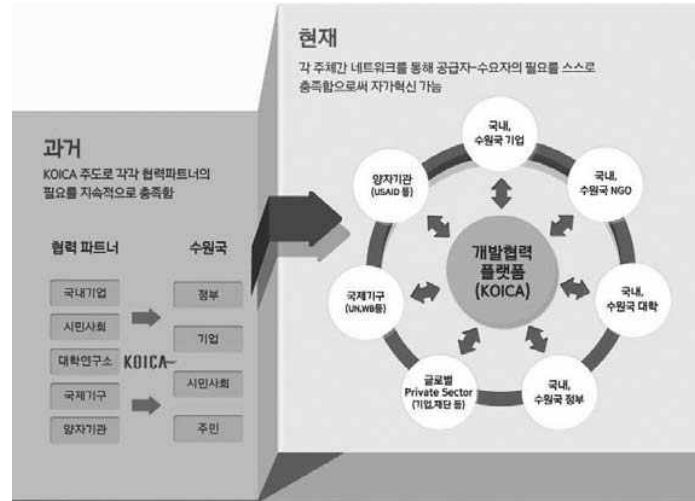
세부목표 11.c는 원칙적으로 그 적용 대상이 우리나라나 선진국이 아닌 최빈국이다. 우리나라의 역할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나 원조 시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재료의 사용을 강조하고 적절한 기술을 통해 현지에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건축물을 지원할 것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표 11.c.1은 현지 자재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고, 그 대상도 최빈개발도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부목표 11.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ODA 정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ODA정책에서는 적은 사용가능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전략협력국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세부목표 11.c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세부지표 11.c는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건물에 건설하는데 적절한 재정지원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외부의 원조에 의존하는 의존 경제를 지양하고 자립할 수 있는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인력, 재료, 공법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목표는 우리나라 국내 문제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고 관련 지표 역시 불충분하다. 그러나 ODA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며, 적정기술 적용이 ODA 사업 수주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상원조를 전담하고 있는 KOICA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독점적 문제 해결자에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와 협력을 강조하는 사업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기존의 일방향에서 각 주체간의 연결하는 체제이다. 특히 수원국 기업, NGO, 대학, 정부와의 네트워크와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지표 11.c가 강조하는 개발도상국 자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원과 부합한다.



[그림 3-5] 개발협력플랫폼 개념

\* 출처: 김인(2015), 「KOICA 중장기전략에서의 SDGs 주류화 방안」, KOICA, p.18.

세부목표 11.c는 재정적, 기술적 보조를 강조하고 있는데, 최빈국에 대한 지속가능한 도시 지원이 단지 건물을 짓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수원국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인재 양성, 교육의 분야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권영상, 2015)<sup>39)</sup>. 우리의 입장에서 ODA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SDGs를 이해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절실하다.

39) 권영상 외(2015), 「건축산업 고도화를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 정책방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외.

### 3. SDGs 목표 11과 다른 목표의 연관성 분석

SDGs의 각 목표와 목표의 세부목표 사이에는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다. 초기에 발표된 SDGs 목표와 세부목표, 관련 지표사이에는 다소 혼란스러운 정도의 복잡한 관련성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지표항목을 적절히 정리한 이후에는 서로간의 상관관계가 줄어들고 목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좀 더 명확하게 정리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다른 목표와 상관관계가 밀접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3월 정리된 지표를 바탕으로 SDGs 타분야 세부목표 및 관련 지표와 목표 11 및 관련 지표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표 3-24]).

연관성 정도를 상중하로 구분하였다. 상은 세부목표가 동일한 지표를 공유하는 경우이며, 사실상 같은 목표를 가지고 동일한 지표로 평가하는 항목이다. 이 경우 세부목표가 지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세부목표가 반드시 2개의 지표를 모두 공유하지는 않지만 최소 하나는 공유함으로써 두 세부목표가 추가하는 것이 동일한 경우이다.

중은 세부목표가 서로 관련이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이며, 지표는 공유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세부목표 A와 B가 폐기물의 처리와 감소, 재활용과 연관이 있지만 폐기물의 종류 등 범위가 달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힘든 경우이다.

하는 큰 범위에서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속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지원은 ODA와 큰 틀에서 연관성이 있다. 이런 세부목표를 연관성 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표 3-24]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와 타분야 세부목표 사이의 상관관계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	관련 타분야 세부목표	내용	관련정도
11.5, 11.b	1.5	자연 재해 예방	상
	13.1		
11.1	6.1	기본적인 상하수도 시설	중
	6.2		
	7.1	기본적인 에너지 시설	중
	7.2		
11.6	12.4	위험폐기물의 관리	중
	12.5	폐기물의 재활용	중
	14.1	폐기물 관리	중
11.7	4.a	안전한 교육시설(공공장소)	중
	5.2	취약계층의 폭력에 대한 노출	중
	16.1	폭력에 대한 노출	중
목표 11의 전반적인 내용	3.6	도시 내 교통사고	하
	9.1	회복 가능한 인프라시설	하
	9.4	인프라시설의 향상	하
	10.b	ODA 사업의 지원	하
	13.2	기후변화 대응	하
	17.16	SDGs 모니터링과 보고	하
	17.18	국가별 SDGs 지표에 따라 자료 수집	하

\* 출처: 저자 작성

자연재해와 관련된 세부목표 11.5와 11.b가 타 분야와 연관성 상에 해당하였다. 타 분야인 목표 1의 빈곤의 종결과 목표 13의 기후변화의 세부목표인 세부목표 1.5 (빈곤한 취약계층의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재난과 사회적, 환경적 충격을 완화)와 13.1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과 회복력 강화)이 모두 자연재해의 예방에 관한 내용이며, 지표 역시 공유하였다.

[표 3-25] SDGs 세부목표 11.5, 11.b, 1.5, 13.1의 지표 비교

목표 11의 지표	공유 지표	타분야 지표
11.5.1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실종자, 재난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 수	1.5.1, 13.1.2
11.5.2	핵심 인프라 시설과 기본적인 서비스 중단을 포함하는 GDP 대비 직접적인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1.5.2
11.b.1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 중 국제적으로 합의된 체제를 준수하고 소외,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설계, 이행 및 점검단계에서 포함된 위험감소 및 복원력 전략을 이행 중인 도시의 비율	-
11.b.2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전략이 있는 국가의 수	1.5.3, 13.1.1

\* 출처: 저자 작성

목표 11의 세부목표 중 11.1과 11.6, 11.7의 경우 타 분야 세부목표와 일정범위에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세부목표 11.1의 경우 세부목표 6.1, 6.2, 7.1, 7.2와 관련이 있었다. 세부목표 6.1과 6.2는 적절한 상수도 시설의 제공으로 통한 위생향상을 7.1과 7.2는 적절한 전기시설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세부목표는 세부목표 11.1의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이 있으며, 결국 최저주거환경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세부목표 4.a는 취약계층이 제약 없이 교육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의 짓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세부목표 11.7의 취약계층의 공공공간에 접근성 향상과 일정부분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

세부목표 5.2와 16.1은 취약계층 특히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폭력사고에 대한 예방과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어 세부목표 11.7의 지표 11.7.2의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확보와 관련이 있다.

세부목표 12.4, 12.5, 14.1은 각각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과 관련된 세부목표로 세부목표 11.6과 도시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의 측면에서 관련이 있는 항목이다. 그러나 세부목표 11.6이 도시의 고형폐기물에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타 분야의 목표는 위험폐기물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 외의 타분야 세부목표인 3.1, 9.1, 9.2, 10.b, 13.2가 목표 11의 세부목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세부목표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일정부분 관련성이 있

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세부목표 9.1과 9.2의 경우 인프라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회복 가능한 인프라시설의 건설 또는 회복 가능한 인프라시설로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프라시설의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목표 11과 일정정도 관련이 있다.

목표 17의 세부목표 17.16과 17.18은 목표 11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17.16은 SDGs의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과 보고체계 확립 정도를 지표로 하고 있으며, 17.18은 SDGs 지표 중 몇 %가 국가별로 수집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세부목표이다. 즉 SDGs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보다는 목표 11의 진행상태 점검과 관련이 있으므로 관련이 있는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SDGs 세부목표 사이에 상호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부 항목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또 일부 항목은 서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초기에 제안된 SDGs 세부목표와 지표들 사이의 관계보다는 덜 복잡하고 점차 정리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 4. 시사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취득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와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았다. 단순히 지표만으로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목표 11과 관련해서는 지표 11.6.2 미세먼지 농도와 지표 11.b.2의 재난위험 감소를 위한 국가 및 지방 정부 전략의 수립 외에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목표 11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 지표의 자료만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대다수의 저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들은 지표 11.1.1의 슬럼거주 인구 등 보다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선진 각국이 목표 11에 한해서는 저개발국보다 적은 수의 지표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선진국조차 목표 11을 위한 지표를 별도로 수집하고 있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다. 즉 SDGs로 인해 선진국 역시 SDGs 동참하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생김으로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주요 지표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가늠하기 힘들지만,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한 미세먼지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2배정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표 3-26] SDGs 지표 11.6.2 미세먼지 농도 비교(2014년 기준)

국가	미세먼지 농도(PM2.5)
미국	9 $\mu\text{g}/\text{m}^3$
영국	12 $\mu\text{g}/\text{m}^3$
프랑스	13 $\mu\text{g}/\text{m}^3$
독일	14 $\mu\text{g}/\text{m}^3$
일본	13 $\mu\text{g}/\text{m}^3$
한국	28 $\mu\text{g}/\text{m}^3$

\* 출처: UN(2016), "SDG Indicators – Global databas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반면에 저개발국가와 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우리나라의 자료와 개도국의 자료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차이를 알 수 있다. 개도국 역시 지표 값의 차이 커서 속단하기는 힘들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이 더 좋

았다. 슬럼거주인구의 경우 우리나라는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의 비율이 5.3%였으나 개도국의 경우 슬럼거주인구 비율의 최소값이 5.5.%였다. 지표 11.5.1의 자연 재해에 의한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및 실종자 수 역시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합쳐서 2명 이었으나, 개도국 평균은 사망자 90명, 실종자 21명 선이었다.

[표 3-27] SDGs 세부지표 11.1.1과 11.5.1 비교

지표		우리나라	개도국자료		
			최소	평균	최대
11.1.1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및 슬럼비율(%)	5.3	5.5	44.0	95.6
11.5.1	자연재해에 의한 10만 명 당 사망자(명)	2	1	90.5	565
	자연재해에 의한 10만 명 당 실종자(명)		1	20.8	71
	자연재해에 영향을 받는 사람(명)	7,691	2	60,196	1.04백만

\* 우리나라 자료의 슬럼거주인구 비율은 가구 비율, 사망과 실종자 수의 합

\* 출처: UN(2016), "SDG Indicators - Global databas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상의 비교를 바탕으로 대단히 제한적이지만, 우리나라의 위치는 개도국에 비해서는 양호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열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자료의 경우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범죄 자료의 경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수사 목적 외에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공개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SDGs 지표는 지속적인 회의의 결과 점차 정리되고 있다. 초기의 목표 11의 세부목표 및 지표와 타분야 세부목표와 지표 사이의 복잡한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SDGs 세부목표 사이에는 서로 연관성이 깊다. 목표 11의 경우 도시를 다루고 있는 성격의 특성상 상하수도과 같은 수자원 및 위생시설, 교육 시설, 의료 행위를 위한 건축물, 도시의 대기, 자연 환경, 자원 재활용과 에너지 등 표면적 관계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야가 다양하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향후에는 보다 넓은 범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제4장 SDGs 목표 11의 영향력 예측

1. 조사 개요
2. SDGs 목표 11의 세부지표별 예측
3.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및 결과
4. 소결

### 1. 조사 개요

#### □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건축·도시분야 전문가 23인
- 조사 방법 : 추세연장법과 델파이 기법 혼합, 정성 및 정량 평가 혼합
- 조사 기간 : 2016년 8월 18일 ~ 9월 27일
- 조사 내용 :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와 지표별 국내 관련 지표의 미래 예측, 관련 정책의 효과 및 정책 우선순위

SDGs의 영향력을 예측하기 위해 건축 및 도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은 건축 및 도시분야의 국책 연구기관(11명), 학계(8명), 관련 공무원 및 정부 산하 기관(2명), 관련 민간 기관(2명)으로 구성하였다. 2016년 8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41일간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방법은 추세연장법과 델파이 기법을 혼합하였으며, 총 5차에 걸쳐 서면 조사로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에게 설문지를 e-메일로 발송하면 응답자는 5일 동안 작성한 후 e-메일로 다시 보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내용은 크게 7개의 항목으로 구분된다([표 4-1]). 7 항목 중 4 항목(항목 1, 3, 6, 7)은 본 설문이 얻고자하는 필수 조사 항목이며, 나머지 3 항목(항목 2, 4, 5)은 필수 조사 항목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라 할 수 있다. 7가지 조사 항목 중 항목 3: 국

내 지표의 미래 예측 과 항목 6: 국내 정책의 효과 평가는 반복 설문을 실시하는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마지막 5차 조사에서 실시한 반복 설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정성평가 기법을 도입하여 조사의 내용을 충실히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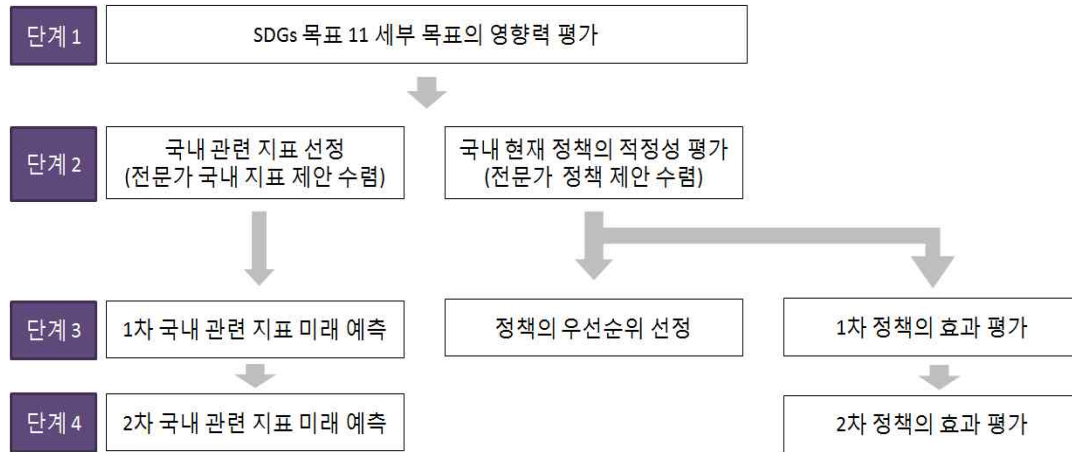
[표 4-1] 설문 회차별 설문 조사 내용

조사 항목	1차	2차	3차	4차	5차
1.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 및 지표의 영향력 평가	○				
2.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를 위한 국내 지표 선정	○	○	○		
3. 선정 지표의 미래 예측		○		○	◎
4.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 및 지표 별 국내 현 정책의 적정성 평가			○		
5.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 및 지표 별 국내 정책 제안 및 추가 조사			○		
6.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 및 지표 별 국내 정책의 효과 평가				○	◎
7.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 및 지표 별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 선정				○	

#### □ 조사 방법

설문조사지의 내용은 다소 혼합되어 있다. 예를 들어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와 관련된 국내 지표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다수의 관련 국내 지표 중 1개 지표를 선정해야했다. 적절한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다소 반복적 질문을 하고 선정되면 추가적으로 추세연장법을 통해 예측 한 후, 전문가 패널에게 예측이 적정한지를 묻고, 패널이 예측하는 지표 예측값을 물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과 많은 질문 내용으로 인해 5차에 걸쳐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질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과정을 정리하면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4-1] 설문 조사의 흐름도

- 단계 1: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와 지표가 국내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각 세부목표와 지표의 정책적 중요도를 예측한다.
- 단계 2: SDGs목표 11의 각 세부목표와 지표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유사 지표를 제시하고 전문가가 가장 타당한 지표를 선택하게 한다. 국내에 관련 유사 지표를 얻기 힘든 경우 전문가에게 직접 제안을 하도록 하여 지표를 선정한다.
  - 전문가가 제시한 지표는 통계자료의 취득 가능에 따라 통계자료 원형을 바로 사용하거나, 여러 자료를 취합하여 재구성하여 사용
 또한 국내에서 현재 시행중인 각 세부목표별 관련 정책을 전문가에게 제시하고 현재의 정책의 방향이 세부목표 달성에 적절한지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다. 이후 추가적으로 전문가가 제안하는 정책이나 사전 조사가 미흡했던 정책을 제안 받는다.
- 단계 3: 3단계에서 선정된 지표를 대상으로 추세연장법을 통해 장래 지표의 변화에 대해 예측하고, 전문가에게 제시하여 예측이 적절성과 전문가가 생각하는 예측 지표 값을 조사한다.
  - 지표의 장래 예측을 위한 추세는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한 함수는 각각의 지표의 과거 변화에 가장 적합한 함수를 사용
  - 사용된 함수는 선형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다항식 함수(2차방정

식)를 사용<sup>40)</sup>

- 변수를 별도의 로그값이나 지수값 등으로 변환 하지는 않음

전문가가 제안한 정책과 사전 조사된 정책을 모두 합쳐서 개별 정책의 우선순위와 효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 단계 4: 3단계서 조사된 예측 지표와 개별 정책의 효과를 반복 조사한다. 반복 조사는 1차 조사의 결과를 제시하여 전문가가 자신의 의견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세부목표 11.b는 별도의 국내 관련 지표가 존재하지 않으며, 세부목표의 의도 역시 관련 계획의 수립을 권장하는 것이므로 정책과 향후 과제가 명백하여 본 설문조사에 세부목표 11.b는 포함하지 않았다.

---

40) 각 함수의 기본모형은 다음과 같다.

선형함수는  $y = ax + b$ , 지수함수는  $y = ae^{bx}$ , 로그함수는  $y = a \ln(x) + b$ , 다항식함수는  $y = ax^2 + bx + c$

## 2.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및 결과

### 1)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와 지표의 영향력

SDGs가 국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 하다. 그러나 MDGs가 국내 ODA 정책의 기준이 된 것처럼 SDGs 역시 영향을 미칠 것을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명백하다. 그러나 SDGs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목표 11 역시 도시의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각 세부목표가 동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기는 힘들며 정부의 정책에서도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정책적 우선순위가 매겨질 것이다. 이에 각 세부목표별로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발휘할지 예측할 필요가 있다.

세부목표와 지표별로 전문가에게 국내 정책이 단기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차 정책적 관심이 증대할지, 줄어들지를 물었다.

영향력 평가 스케일

- 1: 단기, 장기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 2: 장기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 3: 정책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 4: 현재는 정책적 관심이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5. 단기 및 장기 모두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분석결과, 다수의 세부목표와 지표가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세부목표 11.6과 지표 11.6.2, 세부목표 11.2와 지표 11.2.1, 세부목표 11.5와 지표 11.5.1, 세부목표 11.3과 지표 11.3.2, 세부목표 11.7과 지표 11.7.2의 경우 단기, 장기 모두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 대다수의 세부목표와 지표는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발휘하겠으나, 현재는 영향을 미치기 힘든 세부목표와 지표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세부목표 11.a와 지표 11.a.1 ‘도시 및 지역계획의 수립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은 점진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기, 장기 모두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항목을 살펴보면 미세먼지와 대중교통, 재난, 성범죄, 시민참여의 문제 등 국내에서도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문제들이었다. 이런 항목은 기존의 국내의 높은 관심으로 인해 SDGs 목표가 정부에 대한 주요한 정책 제안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며, 따라서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정책적 고려를 해야 한다.

[표 4-2]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와 지표의 국내 정책에 대한 영향력

변수	빈도	평균	표준 편차	SDGs 내용
목표11.6과 지표11.6.2 지표의 영향력	23	4.74	0.54	미세먼지
목표11.2와 지표11.2.1 지표의 영향력	23	4.17	0.65	편리한 대중교통
목표11.5와 지표11.5.1 지표의 영향력	23	4.09	1.13	자연재해 사망 및 실종자
목표11.3과 지표11.3.2 지표의 영향력	23	4.09	0.67	도시계획과 관리에 시민참여
목표11.7과 지표11.7.2 지표의 영향력	22	4.00	0.76	물리적 성적 희롱
목표11.1과 지표11.1.1 지표의 영향력	23	3.91	1.13	불량주거지 개선
목표11.b와 지표11.b.1 지표의 영향력	21	3.81	0.93	센다이 체제를 준수하는 지방 재난관리 전략
목표11.5와 지표11.5.2 지표의 영향력	21	3.81	1.33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목표11.7과 지표11.7.1 지표의 영향력	23	3.70	0.64	공공공간
목표11.b와 지표11.b.2 지표의 영향력	19	3.63	0.90	국가 및 지방 재난관리 계획
목표11.6과 지표11.6.1 지표의 영향력	23	3.52	1.20	고형 폐기물 처리
목표11.4와 지표11.4.1 지표의 영향력	23	3.52	0.90	문화와 자연유산 보호
목표11.c와 지표11.c.1 지표의 영향력	22	3.36	0.95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최빈국 지원
목표11.3과 지표11.3.1 지표의 영향력	23	3.09	1.16	인구성장과 토지 소요 비율
목표11.a와 지표11.a.1 지표의 영향력	22	2.82	1.40	지역개발계획

반면에 도시 및 지역계획과 연관이 큰 세부목표 11.3과 11.a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충분한 제도를 갖추고 있어, 이러한 지표를 적용한다고 앞으로 달라질 확률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구 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대규모 토지개발 역시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제로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단위 주체는 지방정부 수준의 행위입니다. 현재도 국가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계획 수립 및 관리 행위를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부목표를 적용한다고 해서 특별한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문 응답자 ID 4, 지표 11.3.1).

“우리나라는 가까운 미래에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토지개발도 향후에는 그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임. 이에 장기적으로는 영향력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설문 응답자 ID 11, 지표 11.3.1)

“이미 국내에서는 법제화를 통한 도시계획, 지역개발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해당 목표와 지표의 영향력은 약하고,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설문 응답자 ID 20, 지표 11.a.1)

“과거와는 달리, 더 이상 우리나라의 폭발적인 인구증가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갑작스런 난민의 유입의 경우 제외) 난개발의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며 이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도 점차 덜할 것으로 사료됨.” (설문 응답자 ID 1, 지표 11.a.1)

비록 미래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영향력은 적으나 도시재생의 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불량주거지 개선 등의 항목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며 전문가들 역시 장기적으로는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장기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이유는 경제성장 둔화, 양극화 등의 이유로 인해 도시 내 적정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강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주거문제가 갈등의 핵심 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물리적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서민층 등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들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저소득층 및 정비사업 지구 등 불량 환경지역내 철거민 등에 대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의 정책들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설문 응답자 ID 12, 지표 11.1.1)

“해당 목표의 경우, SDGs와는 별개로도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문제로 생각됩니다. 최근 도시내에서의 빈부격차심화 등에 따라 저소득층의 거주와 관련된 갈등 상황이 많이 부각되어 있으므로(임대주택 거주민의 왕따, 비닐하우스촌 거주민들과의 갈등) 이러한 주거문제의 해결은 우리나라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한 집의 제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의 고려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문 응답자 ID 19, 지표 11.1.1)

반대의 의견으로는 도시화의 증가속도의 감소와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정책적 관심이 멀어질 수 있다는 의견과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으나 한국적 상황에서는 소수의 갈등 정도로 국한 시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비율은 오래전부터 작성되고 있으나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회자되거나 정책적 초점이 되고 있지 못함. 슬럼, 비계획적 정착지 등의 의제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소수의 ‘갈등’ 상황 (예를 들어, 구룡마을의 사태)으로 그 사회적 의미가 특정한 지역의 문제로서 한정되어 해석되어 왔음.” (설문 응답자 ID 4, 지표 11.1.1)

이상의 분석결과로 판단해 볼 때 SDGs 목표 11에 도시 전반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미칠 것은 분명하였다. 그러나 건축과 도시분야로 국한 시켜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이미 성숙 단계에 진입한 상황에서 도시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며,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불량주거지 개선의 문제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 갈등 해소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2) SDGs 목표 11의 세부지표별 예측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와 지표에 부합하는 국내 지표를 선정하여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였다. 다수의 국내 유사 지표 중에서 1개를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와 부합하는 국내 지표가 국내 주요 통계지표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제안을 받고, 제안 받은 지표를 다시 전문가의 투표에 의해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지표 선정은 1차, 2차 3차 설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 □ 세부목표 11.1(주택)과 지표 11.1.1의 국내 유사 지표

세부목표 11.1과 지표 11.1.1의 경우 전문가 23인 모두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비율’을 가장 적절한 지표로 선정하였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추세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격년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였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30년에는 약 15만 가구만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림 4-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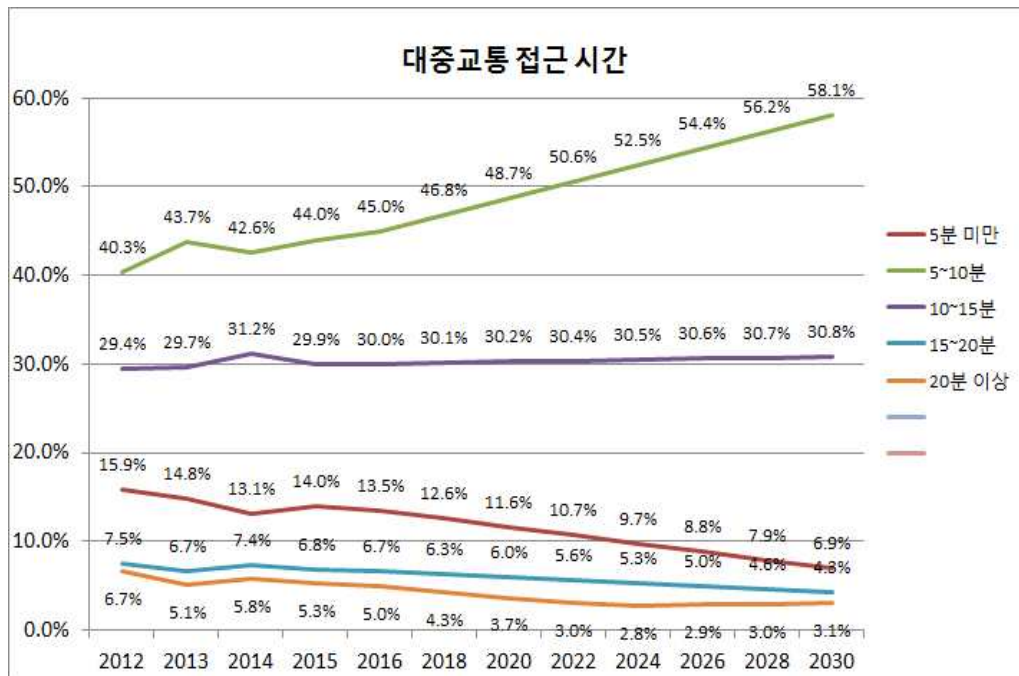
\* 출처: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주거지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 세부목표 11.2(교통)와 지표 11.2.1의 국내 유사 지표

세부목표 11.2와 지표 11.2.1의 경우 전문가의 61%가 ‘대중교통 접근수단 및 대중교통 접근 시간’을 적당한 지표로 선정하였다. 반면에 26%의 전문가는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을 적정 지표로 선정하였으며, 13%의 전문가는 제시된 지표 중에는 적정 지표가 없으므로 새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수의 전문가가 적정한 지표로 선정한 ‘대중교통 접근수단 및 대중교통 접근 시간’을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중교통 접근 수단의 경우 지속적으로 도보가 93% 이상을 유지하였다. 반면에 대중교통 접근 시간의 경우 다양하게 분포하였으며, 5~10분 사이가 가장 많으며, 10~15분, 5분미만이 뒤따랐다.

대중교통 접근 시간의 추세를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년차별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였다. 5~10분의 접근 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에 5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10~15분은 31%에서 현상 유지, 5분미만은 7%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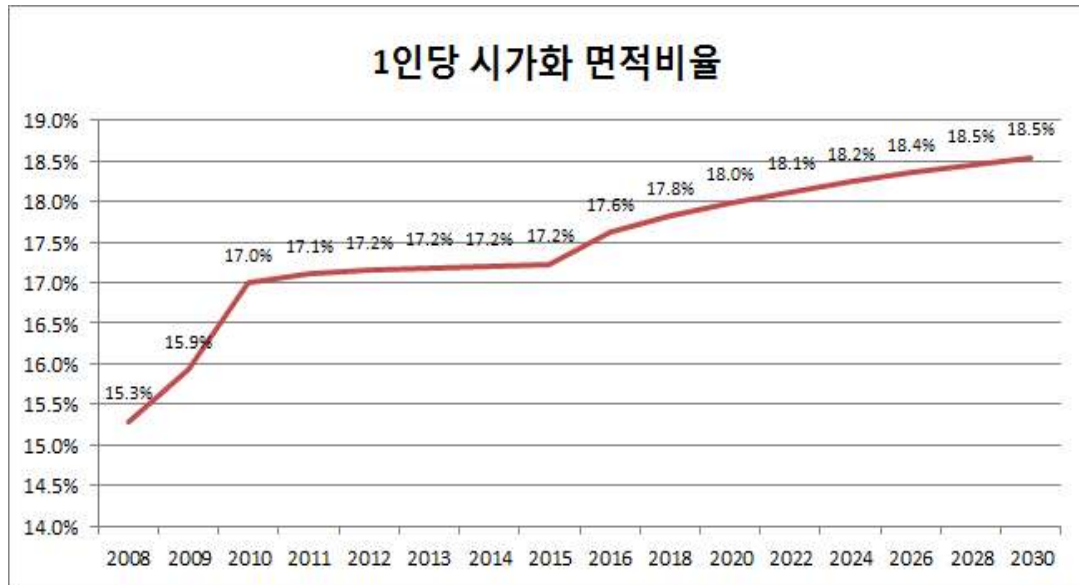
[그림 4-3] 대중교통 접근 시간 예측

\* 출처: 통계청 대중교통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세부목표 11.3(도시개발)과 지표 11.3.1의 국내 유사 지표

인구대비 시가화 면적비율의 추세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였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증가세가 둔화되어 17%선을 유지하였다.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국토의 18.5%가 시가화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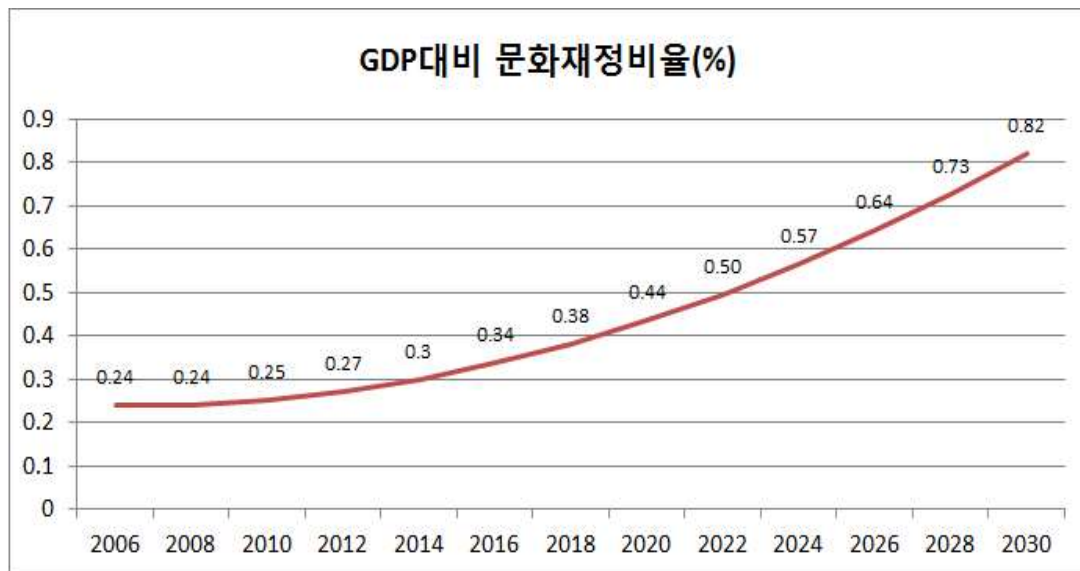
[그림 4-4] 1인당 시가화 면적 비율 예측

\* 출처: 통계청 도시계획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세부목표 11.4(문화와 자연유산)와 지표 11.4.1의 국내 유사 지표

세부목표 11.4와 지표 11.4.1의 경우 전문가의 74%가 ‘GDP 대비 문화 재정 비율’을 적당한 지표로 선정하였다. 반면에 4%의 전문가(1명)는 ‘문화재정 총액’을 적정 지표로 선정하였으며, 22%의 전문가는 제시된 지표 중에는 적정 지표가 없으므로 새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GDP 대비 문화재정 비율의 추세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격년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였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30년에는 약 GDP 대비 문화재정 비율이 0.82%로 예측되었다.



[그림 4-5] GDP 대비 문화재정비율 예측

\* 출처: 국가주요지표의 사회부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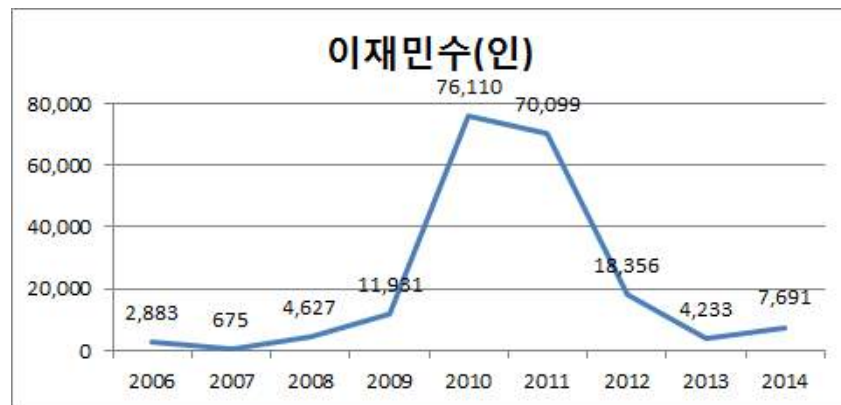
□ 세부목표 11.5(자연재해)와 지표 11.5.1의 국내 유사 지표

세부목표 11.5와 지표 11.5.1의 경우 전문가의 70%가 ‘사망 실종자수 및 이재민 수’를 적당한 지표로 선정하였다. 반면에 22%의 전문가는 ‘자연재해 발생 건수와 피해액’을 적정 지표로 선정하였으며, 8%의 전문가는 제시된 지표 중에는 적정 지표가 없으므로 새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사망 실종자 수 및 이재민 수의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년차별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과 2012년에 피해가 컸다. 그러나 자료의 특성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곤란하였으며, 이에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만을 전문가에게 제시하여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림 4-6]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 및 실종자 수 예측  
\* 출처: 국가주요지표의 사회부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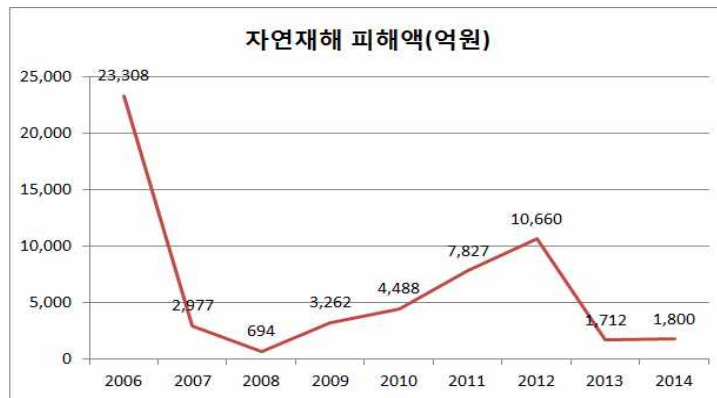


[그림 4-7]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 및 실종자 수 예측  
\* 출처: 국가주요지표의 사회부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세부목표 11.5(자연재해)와 지표 11.5.2의 국내 유사 지표

세부목표 11.5와 지표 11.5.2의 경우 전문가에게 직접 지표를 제안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수의 지표가 제시되었으며 이중 전문가의 35%가 ‘GDP 대비 자연재해 피해액’을 적당한 지표로 선정하였다. 그 외 복구비용, 재난 유형별 물적손실비용, 산업생산 차질액 및 부가가치의 감소액 등 다양한 제안이 있었으나, 지표자료 취득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GDP 대비 자연재해 피해액을 선정하였다.

GDP 대비 자연재해 피해액의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년차별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전체 GDP에 비해 피해액의 비율 자체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표 11.5.1과 동일하게 자료의 특성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곤란하였으며, 이에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만을 전문가에게 제시하여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림 4-8] 과거 자연재해 피해액

\* 출처: 국가주요지표의 사회부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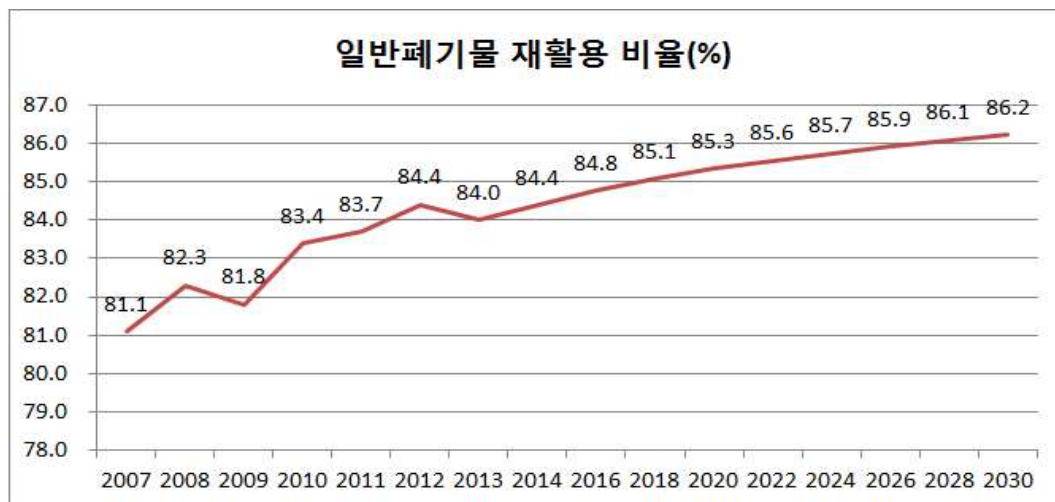
[그림 4-9] 과거 GDP 대비 자연재해 피해액 비율

\* 출처: 국가주요지표의 사회부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세부목표 11.6(도시환경)과 지표 11.6.1의 국내 유사 지표

세부목표 11.6과 지표 11.6.1의 경우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일반폐기물 재활용 비율’이 유사하게 지지를 받았다(각각 47.8%, 43.5%). 따라서 두 지표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일반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지표를 선정하였다.

일반폐기물 재활용 비율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년차별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였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81%에서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30년까지 재활용 비율은 86.2%에 도달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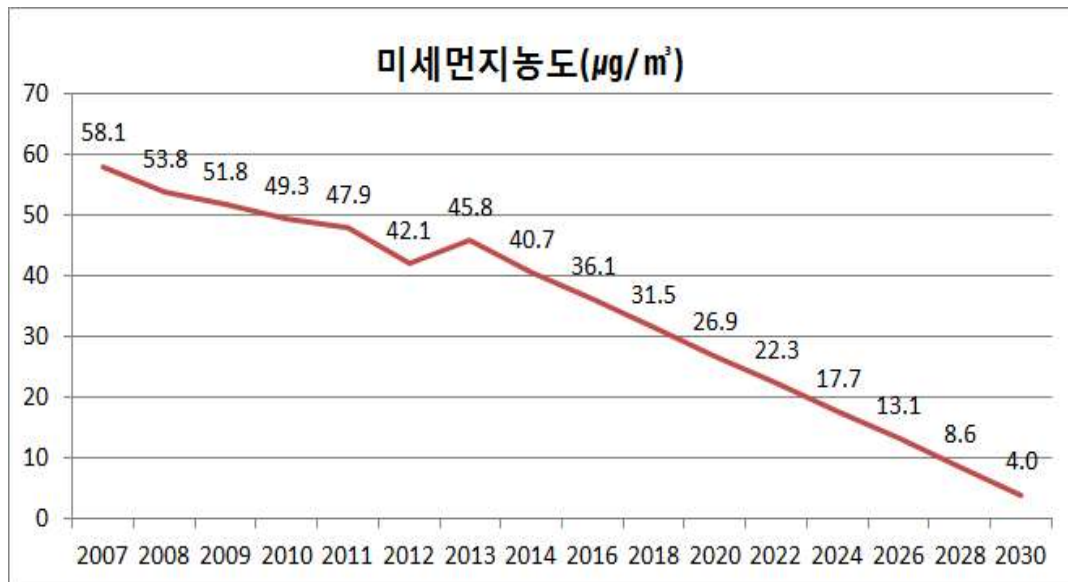
[그림 4-10] 일반폐기물 재활용 비율 예측

\* 출처: 국민 삶의 질 지표의 환경부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세부목표 11.6(도시환경)과 지표 11.6.2의 국내 유사 지표

세부목표 11.6과 지표 11.6.2의 경우 전문가의 74%가 ‘미세먼지(PM10)농도’를 적당한 지표로 선정하였다. 반면에 35%의 전문가는 ‘대기오염도’를 적정 지표로 선택하든지 미세먼지 농도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미세먼지(PM10)농도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년차별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였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3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는  $4.0 \mu\text{g}/\text{m}^3$ 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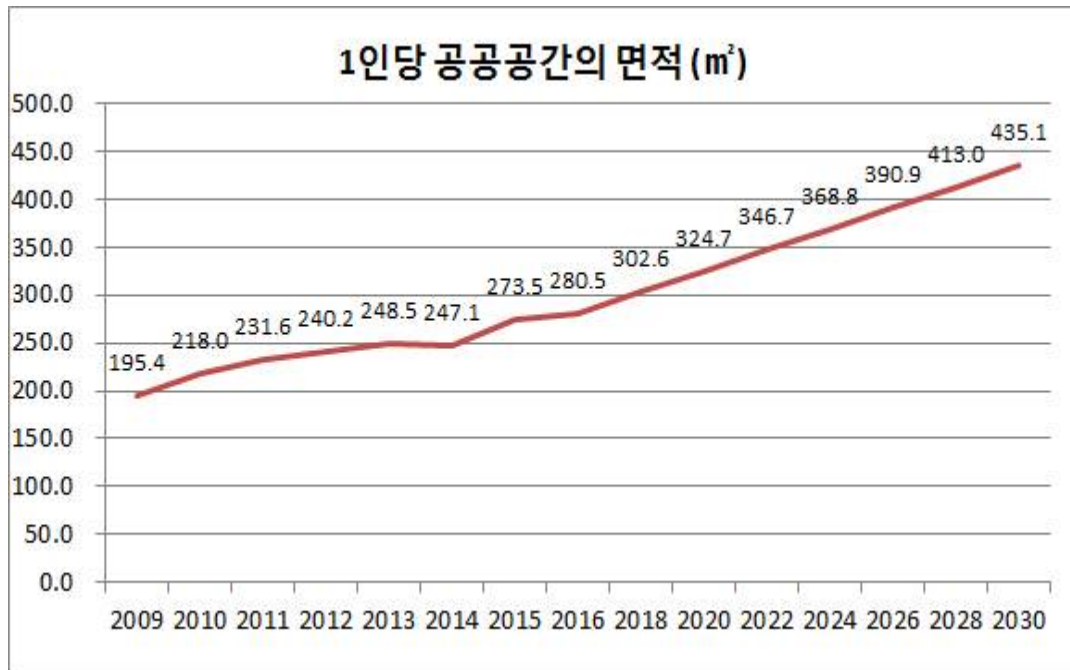
[그림 4-11] 미세먼지 농도 예측

\* 출처: 국민 삶의 질 지표의 환경부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세부목표 11.7(공공공간과 녹지)과 지표 11.7.1의 국내 유사 지표

세부목표 11.7을 평가하고 지표 11.7.1을 대표하기에 적절한 지표는 제시된 두 지표 중 근사하게 “공공공간의 접근성 및 비율”이 다수의 의견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현재 공공공간의 접근성 및 비율은 통계 자료로 알 수가 없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계산이 쉬운 “도시인구 1인당 공공공간의 면적”을 선택하여 추세연장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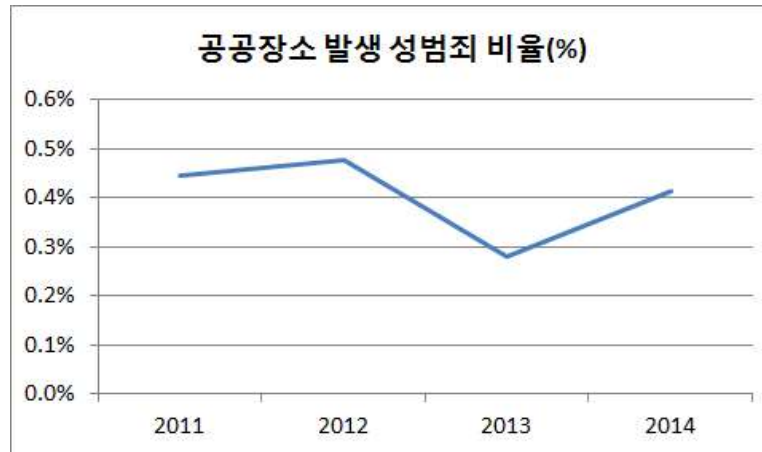
도시인구 1인당 공공공간의 면적의 추세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였다.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기준 1인당 435.1m<sup>2</sup>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림 4-12] 1인당 공공공간의 면적 예측  
\* 통계청 도시계획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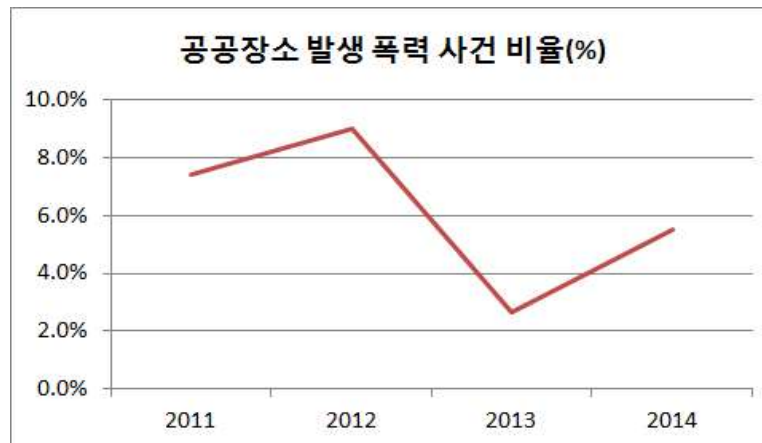
□ 세부목표 11.7(공공공간과 녹지)과 지표 11.7.2의 국내 유사 지표

공공공간에서의 발생한 성범죄 및 물리적 폭력 사건 비율은 2014년 기준으로 각각 0.4%, 5.5%였다. 통계상으로 공공장소에서는 성범죄와 폭력 사건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총 발생건수도 줄어들고 있음). 기존 자료가 적고 변화가 불규칙한 자료의 특성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곤란하였으며, 이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만을 전문가에게 제시하여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림 4-13] 공공장소 발생 성범죄 비율 예측

\* 출처: 통계청 보건·사회·복지 - 범죄 부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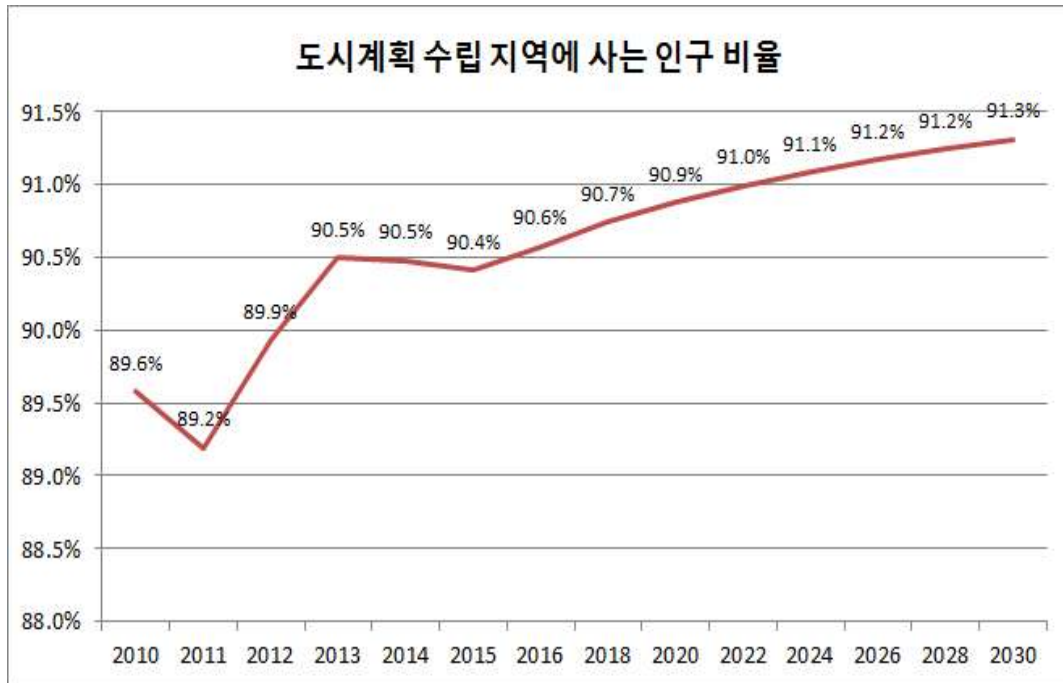
[그림 4-14] 공공장소 발생 폭력 사건 비율 예측

\* 출처: 통계청 보건·사회·복지 - 범죄 부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세부목표 11.a(통합적 개발계획)와 지표 11.a.1의 국내 유사 지표

도시 및 지역계획을 수립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의 추세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였다. 2010년 이후 전반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미 90%에 달하는 인구가 도시계획을 수립한 도시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30년까지 완만히 증가하여 2030년 기준 91.3%의 인구가 도시계획을 수립한 도시에서 거주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림 4-15] 도시계획 수립 지역에 사는 인구 비율 예측  
\* 출처: 통계청 도시계획현황 자료와 인구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3) 국내 유사 지표의 미래 변화 예측

#### □ SDGs 세부목표 11.1(주택)과 지표 11.1.1 관련 유사 지표의 변화

세부목표 11.1과 지표 11.1.1의 국내 유사지표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가 선정되고, 향후 추세를 예측한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에는 151,116가구가 기준 미달 가구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예측의 결과가 만족스럽지도 나쁘지도 않은 보통(M=3.00)으로 평가하였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문가 패널은 현재의 97만 가구보다는 현저히 줄어들지만 여전히 약 32만 가구는 기준 미달 상태로 존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2차조사 기준). 1차 조사에 비해 2차 조사에서는 최대 예측값, 평균 예측값, 최소예측값 모두 가구수가 줄어들었다. 1차조사에서는 일부 응답자는 현재(2014년기준)의 97만 가구에서 소폭 상승하여 100만 가구가 기준 미달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차에서는 응답자 전원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4-3]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의 추세 예측의 적합성 평가

지표	샘플수	1차 조사(N=23)		2차 조사(N=23)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 (인)	23	3.09	0.90	3.00	1.00

[표 4-4]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에 대한 전문가 예측값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인)	추세연장 결과값	전문가 예측값			
		1차 조사(N=15)		2차 조사(N=20)	
		예측값	표준편차	예측값	표준편차
최소값	—	50,000.00	—	30,000.00	—
평균값	151,116.00	363,482.13	297775.46	322,000.00	154803.78
최대값	—	1,000,000.00	—	600,000.00	—

전문가 패널의 의견은 기준 미달 가구수의 감소에는 동의하였으나, 1인가구의 증가와 최저주거기준의 상향으로 인해 감소의 추세가 완화되어 예측된 값보다는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일부는 사회적 관심과 SDGs의 도입으로 보다 급격하게 감

소할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와 동일한 추세로 전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노령 1인 가구나 1인 청년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구 구성의 속성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있고, 향후에는 그러한 변화의 영향이 다른 추세를 만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절한 신규 주거의 공급보다 가구 구성 변동 영향이 더 커서 추세연장선의 예측값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설문 응답자 ID 4, 지표 11.1.1)

“최저주거기준은 시대상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되어야 함. 미국 등 선진국 빈곤선 이하 가구비율 등의 사례로 비추어 볼 때 규범적이고 상대적 판단이 가미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일정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예상.” (설문 응답자 ID 13, 지표 11.1.1)

“현재 추세와습법으로 크게 문제는 없으나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 지속 제시되면서 더 빠르게 감소할 수도 있으며, 경제성장과 SDGs의 도입으로 추가적인 감소도 기대할 수 있음.” (설문 응답자 ID 10, 지표 11.1.1)

#### □ SDGs 세부목표 11.2(교통)와 지표 11.2.1 관련 유사 지표의 변화

세부목표 11.2와 지표 11.2.1을 위한 국내 유사 지표로 대중교통 접근 수단 및 대중교통 접근시간을 선택하였다. 대중교통 접근을 위한 수단으로는 도보가 93%로 절대적이었다([표 4-5]). 반면에 접근 시간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5~10분이 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15분이 29.9%였다.

[표 4-5] 대중교통 접근 수단 비율

접근 수단	2012	2013	2014	2015
도보	93.30%	95.30%	93.50%	93.50%
승용차	3.00%	3.00%	4.10%	4.60%
자전거	1.70%	1.40%	1.50%	1.30%
택시	—	1.30%	0.80%	0.60%

추세연장을 통해 시간대별 비율을 접근시간 비율을 예측한 결과 2030년 기준으로 5~10분은 58.1%로 증가, 10~15분은 30.8%로 정체, 5분미만은 14%에서 6.9%로 감소, 기타 시간대 역시 소폭 감소로 나타났다.

전문가 패널은 대체로 이 예측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차조사에서는 1차조사 때보다 더 예측이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하였다([표 4-6]).

[표 4-6] 대중교통 접근 시간 비율의 추세 예측의 적합성 평가

지표	샘플수	1차 조사(N=23)		2차 조사(N=23)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대중교통 접근 시간 비율(%)	23	2.70	0.82	2.35	0.57

[표 4-7] 대중교통 접근 시간 비율 대한 전문가 예측값

대중교통 접근 시간 비율 (%)		추세연장 결과값	전문가 예측값			
			1차 조사(N=16)		2차 조사(N=20)	
			예측값	표준편차	예측값	표준편차
5분미만	최소값	—	5.00	—	7.00	—
	평균값	6.9	12.74	4.92	12.98	3.08
	최대값	—	20.00	—	20.00	—
5~10분	최소값	—	30.00	—	40.00	—
	평균값	58.1	51.64	10.30	49.43	5.00
	최대값	—	70.00	—	60.00	—
10~15분	최소값	—	13.00	—	20.00	—
	평균값	30.8	27.34	7.24	27.89	5.51
	최대값	—	45.00	—	45.00	—
15~20분	최소값	—	2.80	—	3.00	—
	평균값	4.3	5.37	2.44	5.32	1.62
	최대값	—	10.00	—	10.00	—
20분 이상	최소값	—	1.00	—	2.00	—
	평균값	3.1	4.56	3.55	4.51	1.81
	최대값	—	15.00	—	10.00	—

전문가 패널의 예측을 분석하면 전문가들은 5~10분의 비율의 증가가 예측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예측값이 58.1%가 아닌 약 49.4%로 2015년의 비율 44.4%보다 증가는 하지만 아주 큰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았다. 반면에 다른 접근시간 대는 2015년 기준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5~10분의 급격한 증가와 5분 미만의 급격한 감소에 동의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접근 시간은 예측하기 힘든 문제이지만, 급격하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며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대중교통접근시간은 대중교통시설의 증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됨. 향후, 과거 4년과 같은 추세로 대중교통 시설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추세연장법을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해당 계획에 대한 근거가 제한되어 있어 그 적절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 됨.” (설문 응답자 ID 9, 지표 11.2.1)

“입체적 주거문화로 전체적인 접근시간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간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어 수렴할 것으로 판단함. 5분미만 접근성이 감소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함. 현 상태 유지될 것.” (설문 응답자 ID 10, 지표 11.2.1)

“승용차 공유제도, 자전거 공유제도, 대중교통중심 도시 개발 등으로 대중교통접근 시간은 예상대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5~10분도 늘어나지만, 5분 이하도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설문 응답자 ID 23, 지표 11.2.1)

#### □ SDGs 세부목표 11.3(도시개발)과 지표 11.3.1 관련 유사 지표의 변화

세부목표 11.3과 지표 11.3.1의 국내 유사지표로 선정된 1인당 시가화 면적 비율을 추세연장법으로 예측한 결과 1인당 시가화 면적 비율은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8.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전문가 패널 역시 증가하는데 동의하였으나, 18.5%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1차와 2차 예측치 모두 18.5%가 넘지 않는 17.6%와 17.9%로 1차와 2차의 예측값보다 적었다. 그러나 최소예측값의 경우 1차에서는 10%였으며 일부 패널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2차에서는 최소예측값이 17.5%(2015년 기준 17.2%)로 감소하겠다는 의견이 없었다.

[표 4-8] 1인당 시가화 면적 비율의 추세 예측의 적합성 평가

지표	샘플수	1차 조사(N=23)		2차 조사(N=23)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인당 시가화 면적 비율(%)	23	3.35	0.71	3.61	0.52

[표 4-9] 1인당 시가화 면적 비율에 대한 전문가 예측값

1인당 시가화 면적 비율 (%)	추세연장 결과값	전문가 예측값			
		1차 조사(N=19)		2차 조사(N=21)	
		예측값	표준편차	예측값	표준편차
최소값	—	10.00	—	17.50	—
평균값	18.5	17.62	1.93	17.93	0.52
최대값	—	20.00	—	20.00	—

전문가 패널들은 1인당 소비되는 시가화 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지만, 인구 감소와 도시개발속도의 둔화로 과거에 비해서는 점차 증가 속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하였

다. 즉 과거에 비해 지속적인 도시개발은 힘들 것이나 삶의 여건 향상이나 사회적 요구에 의해 소폭의 상승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가구분화 및 가구소득 증대 요인, 사회적 수요 증대 등에 의해 공간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공간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도시지역의 개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임. 이에 인구 1인당 시가화 면적비율은 조금 상승할 것으로 판단.” (설문 응답자 ID 15, 지표 11.3.1)

“최근 둔화된 도시개발속도가 장래에도 대폭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임. 특히 주택의 수급 측면에서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는데 한계에 왔음. 다만 수도권과 세종시 등 일부 개발 여력이 남은 지역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 (설문 응답자 ID 18, 지표 11.3.1)

□ SDGs 세부목표 11.4(문화와 자연유산)와 지표 11.4.1 관련 유사 지표의 변화

세부목표 11.3과 지표 11.3.1의 국내 유사지표로 선정된 GDP 대비 문화재정 비율의 경우 추세연장법에 의한 예측결과 203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GDP 대비 0.82%로 예측되었다. 전문가 패널 역시 지속적인 증가에는 동의하였으나, 추세연장법에 의한 비율정도는 못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전문가 패널은 1차, 2차 조사에서 각각 0.65%와 0.6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예측 최대값 역시 1.0%(1차 조사)를 넘지 않았다.

[표 4-10] GDP 대비 문화재정 비율의 추세 예측의 적합성 평가

지표	샘플수	1차 조사(N=23)		2차 조사(N=23)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GDP 대비 문화재정 비율(%)	23	3.04	0.83	3.17	0.65

[표 4-11] GDP 대비 문화재정 비율에 대한 전문가 예측값

GDP 대비 문화재정 비율 (%)	추세연장 결과값	전문가 예측값			
		1차 조사(N=18)		2차 조사(N=21)	
		예측값	표준편차	예측값	표준편차
최소값	—	0.40	—	0.40	—
평균값	0.82	0.65	0.19	0.69	0.13
최대값	—	1.00	—	0.90	—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분석하면 정부의 문화예산 비율의 증가는 문화와 도시 경쟁력을 연결하는 움직임 속에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이지만, 다른 분야의 지출에 대한 고려 때

문에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일부는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이 문화산업육성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실제 문화유산보호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창조산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재생/도시경쟁력과 문화를 연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인지할 때 앞으로 문화재정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 GDP 대비 문화재정 비율만큼이나 중요한 지표는 문화재정이 배분되는 분야에 대한 파악임.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는 달리 문화재정의 예산배분이 문화산업육성에 치우친 경향이 있어 실질적으로 문화유산보전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음.” (설문 응답자 ID 7, 지표 11.4.1).

“문화 재정 비율이 높아진다는데 예는 동의하지만, 다른 부문의 지출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완만한 증가 추세가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문 응답자 ID 3, 지표 11.4.1).

#### □ SDGs 세부목표 11.5(자연재해)와 지표 11.5.1 관련 유사 지표의 변화

재난과 관련된 항목인 세부목표 11.5와 지표 11.5.1을 위한 국내 유사지표로 선정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실종자수 및 이재민 수에 대해서는 과거 추세의 변동이 심하여 추세예측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전문가 패널에 직접 변화를 예측할 것을 요청하였다.

일부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전문가 패널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일정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응답자가 재난과 관련한 예측은 변수가 너무 많아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피력하였다. 사망자수의 경우 약 32명 정도를 예상하였으며, 이재민수는 3만 명 정도였다. 그러나 비록 반복 조사에 의해 차이가 좁혀지기는 했으나, 예측 최소값 및 최대값과 평균값의 차이가 대단히 컸다.

[표 4-12]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 실종사 및 이재민 수에 대한 전문가 증감 예측

지표	샘플수	1차 조사(N=20)		2차 조사(N=23)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망, 실종자수, 이재민 수 (인)	23	3.10	1.07	3.22	0.95

[표 4-13]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 실종사 및 이재민 수에 대한 전문가 예측값

지표		1차 조사(N=15)		2차 조사(N=20)	
		예측값	표준편차	예측값	표준편차
사망 및 실종자수 (인)	최소값	2.00	—	3.00	—
	평균값	36.88	46.95	31.95	16.45
	최대값	150.00	—	80.00	—
이재민 수 (인)	최소값	500.00	—	3,000.00	—
	평균값	36800.00	49176.00	30,500.00	19071.88
	최대값	150000.00	—	80,000.00	—

전문가 패널의 의견은 크게 2가지로 수렴되었다.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한 전망의 불확실성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와 피해확산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재해에 대한 지출이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비록 재해가 다수 발생하더라도 사망자와 이재민의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재해의 발생을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평년을 기준으로 추세를 전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오히려 목표치 설정의 개념으로 보는 것도 좋을 듯함. 특히 사망자수와 이재민수의 증감 양상이 서로 상이한 점도 전망을 어렵게 함. 낙관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과거 최소치까지 근접하도록 설정할 수 있음.” (설문 응답자 ID 18, 지표 11.5.1)

“자연재해에 따른 사망 실종자 및 이재민 수는, 발생하는 재난의 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국가별 방재계획 등의 수준에 따라 일정 정도까지의 수준은 감당이 가능 하나, 감당 가능한 수준(threshold)을 넘는 경우 급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자연재난의 빈도와 규모가 예측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 시, 그 피해자의 수는 향후에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재정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그 피해자의 수가 급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일본 동해안의 쓰나미 등의 경험을 미루어 볼 때, 그 수준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설문 응답자 ID 9, 지표 11.5.1)



□ SDGs 세부목표 11.5(자연재해)와 지표 11.5.2 관련 유사 지표의 변화

세부목표 11.5와 지표 11.5.2와 관련된 국내 유사지표로 선정된 GDP 대비 자연재해 피해액 비율 역시 과거 지표값의 변동이 심하여 전문가 패널에 직접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예측값을 살펴보면 1차 평균 0.07%, 2차 조사 0.20%로 2014년의 비율인 0.012%보다 높았다. 이는 일부 응답자의 경우 0.5%와 같이 높은 예측값을 제시했기 때문에 평균값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였다. 2차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면 전문가 패널은 대체로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2차 조사 응답자 52%).

[표 4-14] GDP 대비 자연재해 피해액 비율에 대한 전문가 증감 예측

지표	샘플수	1차 조사(N=20)		2차 조사(N=23)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GDP 대비 자연재해 피해액 비율(%)	23	3.00	1.17	2.96	0.88

[표 4-15] GDP 대비 자연재해 피해액 비율에 대한 전문가 예측값

GDP 대비 자연재해 피해액 비율(%)	1차 조사(N=17)		2차 조사(N=20)	
	예측값	표준편차	예측값	표준편차
최소값	0.005	—	0.01	—
평균값	0.074	0.12	0.20	0.16
최대값	0.500	—	0.50	—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면 피해액의 증가와 더불어 GDP도 증가할 것이므로 비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피해액은 약간 늘어날 것이나 GDP 증가를 감안할 경우 비율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 (설문 응답자 ID 13, 지표 11.5.2)

“향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재해의 빈도 및 강도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므로 심화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지금보다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해에 대한 대비는 단기적으로는 높은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므로, 향후 20년 이내인 2030년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문 응답자 ID 19, 지표 11.5.2)

□ SDGs 세부목표 11.6(도시환경)과 지표 11.6.1 관련 유사 지표의 변화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과 관련된 세부목표 11.6과 지표 11.6.1의 경우 국내 유사지표로 일반폐기물 재활용 비율이 선정되었으며, 추세연장결과 2030년에는 86.2%의 일반폐기물이 재활용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현재(2013년 기준)의 84%에서 소폭 상승한 정도이다.

전문가 패널 역시 소폭 상승에 다수가 동의하였다. 70%의 응답자가 추세연장법에 의한 예측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실제 전문가 패널의 평균 예측값 역시 1차 86.55%, 2차 86.26%로 추세 예측값과 비슷하였다.

[표 4-16] 일반폐기물 재활용 비율의 추세 예측의 적합성 평가

지표	샘플수	1차 조사(N=22)		2차 조사(N=23)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일반폐기물 재활용 비율(%)	23	3.77	0.69	3.74	.45

[표 4-17] 일반폐기물 재활용 비율에 대한 전문가 예측값

일반폐기물 재활용 비율(%)	추세연장 결과값	전문가 예측값			
		1차 조사(N=15)		2차 조사(N=21)	
		예측값	표준편차	예측값	표준편차
최소값	—	85.00	—	85.00	—
평균값	86.20	86.55	1.56	86.26	0.85
최대값	—	90.00	—	88.00	—

응답자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이 안정적이고, 재활용 수준이 높아 증가추세가 완만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각 국가 및 지자체별로 재활용 활성화정책 및 자원회수시설의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일반폐기물 재활용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재활용비율이 일정정도 높아진 수준에 도달해 있어 증가추세는 완만할 것으로 보임.” (설문 응답자 ID 5, 지표 11.6.1).

□ SDGs 세부목표 11.6(도시환경)과 지표 11.6.2 관련 유사 지표의 변화

미세먼지와 관련 세부목표 11.6과 지표 11.6.2의 국내 유사지표인 미세먼지(PM10) 농도의 경우 추세연장법에 의한 2030년에는  $4.0\mu\text{g}/\text{m}^3$ 로 현재의(2013년 기준)  $45.8\mu\text{g}/\text{m}^3$ 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의 다수가 이러한 급격한 감소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예측값보다 훨씬 높으며 현 수준의 3분의 2 수준인  $28.77\mu\text{g}/\text{m}^3$ 으로 예측하였다.

[표 4-18] 미세먼지농도의 추세 예측의 적합성 평가

지표	샘플수	1차 조사(N=23)		2차 조사(N=23)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미세먼지농도 ( $\mu\text{g}/\text{m}^3$ )	23	2.04	0.83	2.04	0.71

[표 4-19] 미세먼지농도에 대한 전문가 예측값

미세먼지농도 ( $\mu\text{g}/\text{m}^3$ )	추세연장 예측값	전문가 예측값			
		1차 조사(N=17)		2차 조사(N=21)	
		예측값	표준편차	예측값	표준편차
최소값	—	4.00	—	4.00	—
평균값	4.0	25.29	15.08	28.77	9.26
최대값	—	55.00	—	50.00	—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분석하면 단순히 과거의 추세에 의존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 적절하지 않으며, 특히 외부요인(중국)등에 의한 변동이 커 예측이 쉽지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실상 대응책 마련을 통해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근거로 추정해야 할 것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석탄화력발전소, 디젤 자동차 증가 및 고령화 등)과 중국의 미세먼지 유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다만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방지 대책 등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설문 응답자 ID 22, 지표 11.6.2)

□ SDGs 세부목표 11.7(공공공간과 녹지)과 지표 11.7.1 관련 유사 지표의 변화

세부목표 11.7의 지표 11.7.1을 위해 사용된 국내 유사지표 도시인구 1인당 공공공간의 면적의 경우 추세연장 결과 2015년의 273.5m<sup>2</sup>에서 435.1m<sup>2</sup>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전문가 패널 역시 증가하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추세예측값 만큼 늘어나는 것에는 다소 부정적이었다. 전문가 패널의 평균 예측값은 352.09m<sup>2</sup>(2차 기준)로 추세예측 증가량의 절반정도였다.

[표 4-20] 1인당 공공공간의 면적의 추세 예측의 적합성 평가

지표	샘플수	1차 조사(N=23)		2차 조사(N=23)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인당 공공공간의 면적(m <sup>2</sup> )	23	3.87	0.69	4.00	0.00

[표 4-21] 1인당 공공공간의 면적에 대한 전문가 예측값

1인당 공공공간의 면적(m <sup>2</sup> )	추세연장 예측값	전문가 예측값			
		1차 조사(N=19)		2차 조사(N=22)	
		예측값	표준편차	예측값	표준편차
최소값	—	290.00	—	300.00	—
평균값	435.1	353.43	48.40	352.09	41.34
최대값	—	435.10	—	450.00	—

전문가 패널 도시 삶의 질에 대한 요구로 인해 도심의 대규모 이전적지 등의 공간이 공원 등의 공공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나, 일정 수요가 충족되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인구수가 정체되는 반면, 시민들의 공공공간에 대한 요구 증가로 공공공간 면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인당 공공공간 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다만, 공공공간에 대한 수요가 일정 수준에서 충족된다면 증가속도도 완만해질 것으로 보임” (설문 응답자 ID 5, 지표 11.7.1)

“대중의 생활수준 상승과 삶의 질에 대한 추구 추세가 강화되는 현실을 감안시, 1인당 공공공간 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 및 성장세가 선진국형 정체기 또는 하강 국면 까지도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증가세는 소폭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설문 응답자 ID 9, 지표 11.7.1)

□ SDGs 세부목표 11.7(공공공간과 녹지)과 지표 11.7.2 관련 유사 지표의 변화

범죄관련 지표인 세부목표 11.7의 지표 11.7.2의 국내 유사지표인 공공장소 발생 성범죄 비율과 폭력사건 발생 비율에 대해 전문가 패널에 직접 예측할 것을 요청하였다. 전문가 패널은 약간 감소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전문가 패널은 성범죄 발생 비율은 0.30%, 폭력사건 발생 비율 4.15%로 예측하였다. 성범죄 비율의 경우 1차 조사와 2차 조사 예측값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폭력사건 비율의 경우 2차 조사의 예측값이 1차 조사보다 약간 높아졌다.

[표 4-22] 공공장소 성범죄 및 폭력사건 발생 비율의 증감에 대한 전문가 예측

지표	샘플수	1차 조사(N=22)		2차 조사(N=23)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공공장소 성범죄 및 폭력사건 발생 비율(%)	23	2.68	0.89	2.39	0.66

[표 4-23] 공공장소 성범죄 및 폭력사건 발생 비율에 대한 전문가 예측값

지표		1차 조사(N=19)		2차 조사(N=22)	
		예측값	표준편차	예측값	표준편차
공공장소 성범죄 발생 비율(%)	최소값	0.10	—	0.10	—
	평균값	0.31	0.14	0.30	0.12
	최대값	0.55	—	0.50	—
공공장소 폭력사건 발생 비율(%)	최소값	1.00	—	1.00	—
	평균값	3.89	2.07	4.15	1.66
	최대값	8.50	—	8.00	—

전문가 패널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CCTV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공공공간에서의 관련 범죄 발생비율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일부 의견으로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등의 사회현상으로 폭력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성범죄 및 물리적 폭력을 경계하는 사회적 인식, 그에 대한 비판 여론과 예방 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동일한 사회적 조건이라고 봤을 때 범죄 발생의 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설문 응답자 ID 4, 지표 11.7.2)

“CCTV, 첨단기술 보급,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사회적 요구 증대 등으로 인해 성범죄 및 폭력사건 발생률이 다소 감소할 것” (설문 응답자 ID 2, 지표 11.7.2)

“양극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문화적, 사회적 소외현상 등은 분배의 균형이나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한 계속 강화될 수 있고 이는 사회적 폭력현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큼.” (설문 응답자 ID 23, 지표 11.7.2)

#### □ SDGs 세부목표 11.a(통합적 개발계획)와 지표 11.a.1 관련 유사 지표의 변화

세부목표 11.a의 지표 11.a.1의 국내 유사지표인 도시계획 수립 지역에 사는 인구 비율의 추세연장 결과 2015년의 90.4%에서 2030년의 91.3%로 소폭 증가하였다. 전문가 패널 역시 소폭 증가에 동의하였으며, 예측값 역시 92.2%(2차 조사 기준)로 조사되었다.

[표 4-24]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사는 인구 비율의 추세 예측의 적합성 평가

지표	샘플수	1차 조사(N=22)		2차 조사(N=23)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사는 인구 비율 (%)	23	3.59	0.59	3.52	0.59

[표 4-25]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사는 인구 비율에 대한 전문가 예측값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사는 인구 비율 (%)	추세연장 예측값	전문가 예측값			
		1차 조사(N=19)		2차 조사(N=22)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	90.00	—	90.00	—
평균값	91.3	92.02	2.26	92.20	2.08
최대값	—	100.00	—	100.00	—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이미 정점에 도달하여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이나, 농촌지역에서의 추가적인 인구이동에 의해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인구감소와 다양한 거주욕구의 분출 등의 이유로 도시 인근에 지역의 거주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도시와 인근지역간 협력관계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개발계획 비율이 90%가 넘는 상태에서 증가 비율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설문 응답자 ID 22, 지표 11.a.1)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도시 자체가 증가하거나 그 지역의 자연적인 인구성장 때문이기 보다는 주로 농촌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인구이동에 의한 증가가 예상됨 따라서 그 증가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며, 현 예측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설문 응답자 ID 3, 지표 11.a.1)

#### 4)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를 위한 국내 정책 방향의 적정성

전문가 패널에게 SDGs 목표 11의 각 세부목표와 지표에 관련된 국내 정책을 열거하고 이런 정책이 SDGs의 세부목표와 지표가 추구하는 바에 적합한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자들은 제시된 국내 정책이 모든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와 지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4-26]의 평균값을 보면 세부목표 11.2와 지표 11.2.1을 제외하고는 모두 3.0 미만이었다. 즉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여러 세부목표 중에서도 세부목표 11.c와 11.a, 세부목표 11.7의 지표 11.7.1이 가장 낮은 3가지 항목이었다.

[표 4-26]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를 위한 국내 정책의 적절성 평가

정책 분야	샘플수	평균	표준 편차
목표11.1과 지표11.1.1	23	2.87	0.869
목표11.2와 지표11.2.1	23	3.00	0.739
목표11.3과 지표11.3.1	23	2.61	1.196
목표11.4와 지표11.4.1	22	2.73	0.883
목표11.5와 지표11.5.1	23	2.61	0.988
목표11.6과 지표11.6.1과 11.6.2	22	2.73	0.935
목표11.7과 지표11.7.1	23	2.57	0.843
목표11.7과 지표11.7.2	23	2.83	0.937
목표11.a와 지표11.a.1	23	2.48	0.994
목표11.c와 지표11.c.1	22	2.36	0.902

##### □ SDGs 세부목표 11.1(주택)

세부목표 11은 도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이 주목적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국내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다소 부정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주거환경정비계획 등은 물리적인 환경개선에 치우친 정책으로 고시원과 같은 비공식적 주거지에 대한 개선 계획과 집행수단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또한 단순히 물리적 개선에 집중한 정책은 실제 거주민이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가 없어, 모든 계층, 즉 보편성이 결여되어있다. 주거급여제도의 경우 필요한 계층에 적절히 제공되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주거급여 지원만으로는 주택의 질 자체를 향상 시킬 수 없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상기 정책은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을 중심으로 한 주거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오늘날 급변하는 경제구조와 사회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거문제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는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우리의 경우, 물리적으로 취약한 주거환경 밀집지역 보다는 도시 상업시설 내 고시원, 쪽방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주거취약시설로 흡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는 상기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예상됨.” (설문 응답자 ID 9, 세부목표 11.1)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주거지 환경과 시설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지표가 제시하는 ‘모두에게’ 라는 보편적 개인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제도가 인적 차원의 정책이라는 것에서 보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필요한 대상에게 전달이 되는지의 효과면에서는 적절히 실행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설문 응답자 ID 4, 세부목표 11.1)

#### □ SDGs 세부목표 11.2(교통)

취약계층을 모두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제공이 목표인 세부목표 11.2의 경우 전문가들은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정책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역시 적절성에 대한 평균값은 3.0에 불과하였다.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한 이유는 정책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의 지적처럼 계획과 달리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통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속도 역시 대단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수준은 이미 선진국에 비해서도 대단히 높지만,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통문화와 관련이 있는데, 버스의 경우 여유가 없는 운행시간으로 인해 최대한 승하차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 등 승하차가 오래 걸리는 약자를 위해 배려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매우 낮은 수준임.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가 보호자의 도움 없이 탑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교통약자가 자기 힘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적절한 대책임” (설문 응답자 ID 5, 세부목표 11.2)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은 많은 부분 타 국가의 것에 비해 양호한 수준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이용행태에 있어서 아직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더딘 속도로 제한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문 응답자 ID 4, 세부목표 11.2)



#### □ SDGs 세부목표 11.3(도시개발)

세부목표 11.3은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주민참여의 강화에 대한 방향이다. 전문가 패널을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이 세부목표 11.3과 부합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요약하면 현재의 도시기본계획은 개발납용이나 억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구 성장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계획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주민 참여의 경우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체계 안에서 가치와 비전,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기존의 취지도 현재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렇다고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지도 못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많은 제도임. 주민참여제도는 실효성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며 수동적으로 의견수렴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설문 응답자 ID 7, 세부목표 11.3)

“도시계획에 대한 제도나 정책은 충분히 시행하고 있으나, 주민참여는 제도는 있으나 그 활용이 아직은 형식적인 수준임.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를 조정, 이끌어나가는 facilitator의 전문적 양성 및 이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 (설문 응답자 ID 1, 세부목표 11.3)

#### □ SDGs 세부목표 11.4(문화와 자연유산)

각국의 문화와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세부목표 11.4의 경우 전문가 패널은 실행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전략과 세부과제의 설정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제 실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느냐에 의구심을 표하였다. 이는 관련 계획을 위한 재정이 얼마만큼 확보되느냐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 또한 문화재를 관광의 대상으로만 보는 관점과 제시된 국가계획에는 자연유산 보호에 대한 내용의 부족 등 한계가 있었다.

“목표에서 제시된 효과를 거양하고 지표에서 제시되고 있는 1인당 비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상기 언급된 전략 및 세부과제의 실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세부과제의 성과 및 효과에 대한 재정당국의 평가에 대응한 설득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즉, 전략과 계획이 성과를 담보하는 것이 아닌 만큼, 달성해야 할 성과를 구체화 하고 이를 집중력 있게 추진하기 위한 구체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관찰됨.” (설문 응답자 ID 9, 세부목표 11.4)

“세부목표는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인데, 앞장의 정책은 문화유산의 보호,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 (설문 응답자 ID 1, 세부목표 11.4)

#### □ SDGs 세부목표 11.5(자연재해)

자연 재난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표인 세부목표 11.5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의 관련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 패널은 계획이 아닌 실현을 위한 수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다. 즉 마스터플랜으로는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하기 힘들며 실질적인 실행계획과 수단 없이는 시민들은 여전히 재난에 대한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있다. 또한 재난재해의 특성상 중앙정부의 역할보다 현지의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지방정부의 조직, 인력,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과 마스터플랜의 마련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정책과 마스터플랜이 있음에도 재난발생시 대응의 수준에 있어서는 큰 진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즉, 역량강화라는 정책 대안 보다는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목적과 목표 중심의 정책 및 실천계획이 필요하며, 여기에 있어서는 대응 활동의 종류에 대한 정량적 접근이 아닌,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설문 응답자 ID 7, 세부목표 11.5)

우리나라의 재난재해 대응 계획의 문제점은 약자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계획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 재난 발생 시 장애인 등의 약자가 더 취약하다. 따라서 약자를 위한 재난재해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세부목표는 자연재해에 대한 빈곤층과 취약층의 보호인데, 앞에 열거된 정책들은 재난에 대한 일반적인 대처임. 빈곤층과 취약층을 타겟으로 한 정책의 보충이 필요함.” (설문 응답자 ID 9, 세부목표 11.5)

#### □ SDGs 세부목표 11.6(도시환경)

대기질과 폐기물관리에 초점을 맞춘 세부목표 11.6의 경우 전문가 패널은 폐기물처리와 분리수거의 문제보다 대기질관리의 문제에 집중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는 우리나라는 이미 자원 재활용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지만, 대기질은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 역시 많기 때문이었다.

전문가 패널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저감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오염물질 배출량 규모 분포, 이에 따른 규모별 대응방안이 필요함. 예로 가정용과 산업용,

산업용 중에서도 세부 분야별로 유발물질 및 메카니즘이 다른데 이를 하나로 파악할 수 없음.” (설문 응답자 ID 6, 세부목표 11.6)

“미세먼지 등의 주요 원인인 발전소, 공장, 자동차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미봉책에 그치고 있음. 화력발전을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 도입, 석유를 대체하는 자동차연료 정책 등에서 후진성을 나타내고 있음.” (설문 응답자 ID 5, 세부목표 11.6)

#### □ SDGs 세부목표 11.7(공공공간과 녹지)의 지표 11.7.1

지표 11.7.1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상대적 약자의 공공공간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둔 지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책은 대체로 공공공간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조사된 정책이 공원계획에 국한되어 있어 다소 한계가 있었다.

전문가 패널의 의견 역시 현재의 정책은 약자에 대한 고려와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공원이 아닌 도서관 등의 보다 다양한 공공시설의 부족 역시 지적하였다.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접근성 개념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또한 모든 대상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공간의 디자인의 질을 향상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음.” (설문 응답자 ID 7, 지표 11.7.1)

“우리나라는 시민들의 공원 선호도가 높아 공원은 잘 공급되고 있다고 판단함. 그러나 도서관 등 공공공간은 더욱 확충이 필요함. 특히 현재 도서관 공급은 부족하여 주말에는 빈자리가 없고 평일 낮에도 여유가 없음. ...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는 곳이 아닌, 책을 근본으로 하여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종합공공공간의 시발점임.” (설문 응답자 ID 10, 지표 11.7.1)

#### □ SDGs 세부목표 11.7(공공공간과 녹지)의 지표 11.7.2

세부목표 11.7의 지표 11.7.2는 공공장소에서의 범죄 특히 성범죄에 대한 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CPTED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실제 효과의 검증과 실효성 확대를 위한 실험/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고 사회문화적 인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CPTED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실험/평가 및 모범사례 확대가 필요함.” (설문

응답자 ID 13, 세부지표 11.7.2)

“성폭력에 대한 제도적인 관심과 대응은 최근 강화되고 있거나 장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장애인, 연령별 취약 계층, 특정 장소에서의 범죄 등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설문 응답자 ID 4, 세부지표 11.7.2)

#### □ SDGs 세부목표 11.a(통합적 개발계획)

세부목표 11.a 는 도시계획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목표이다. 특히 자원수요를 고려한 적절한 도시 및 지역계획의 수립을 통해 적절한 도시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현 정책 방향이 이러한 SDGs의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의 주요 이유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만으로는 도시주변부 및 주변도시와 연계된 계획을 수립하기 힘들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는 잘 갖추어져 있으나 연계보다는 지역 내 계획에 치우쳐 있어 현재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하며 개발이 환경, 생태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고려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난개발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로는 현 목표의 정신을 달성하기 불충분. 주요 도시별로 인근지역과 통합된 인구추계에 기반한 성장관리 계획이 필요.” (설문 응답자 ID 21, 세부목표 11.a)

“ ‘성장관리’ 방안이기는 하지만 특히 생태적 자원의 보전에는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관리가 적용이 되더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환경, 생태 자원에 대한 영향은 개발의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발이 진행되는 주변에 대하여 개발이 가져올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영향은 내용적으로도 전혀 고려 대상으로 개념화조차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설문 응답자 ID 4, 세부목표 11.a)

#### □ SDGs 세부목표 11.b(건축물 ODA)

세부목표 11.c는 ODA와 관련된 항목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분석하면 국내에는 최빈국 현지의 자재를 활용하여 적절한 건축을 수행할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는 것이 정책이 불충분한 주요 이유였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없는 이유로 우리정부의 ODA 지원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힘들고, 더욱이 건축분야에 대한 지원액은 더욱 적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질문에서의 설명대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건축물 구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문 응답자 ID 4, 세부목표 11.c).

“국제개발협력 정책에서 도시/건축 분야 과제와 관련 사업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설문 응답자 ID 14, 세부목표 11.c)

“국가경제규모 대비 대외지원 재원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자원효율적인 건축물을 특정하여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설문 응답자 ID 5, 세부목표 11.c)

## 5)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별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

각 세부목표별로 현재 정부에서 시행중인 정책과 전문가가 제안한 정책을 종합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정책의 우선순위는 SDGs 목표 11의 각 세부목표의 달성에 초점을 맞춘 순위이다.

우선순위 선정은 각 우선순위에 가중치를 주어 점수를 계산하고, 받은 점수를 종합한 후 평균을 구하여 높은 평균을 얻은 순으로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세부목표 11.1의 경우 총 11개 정책 항목이 제시되었으며, 1순위는 11점, 2순위는 10점, 11순위는 1점 등으로 각각의 순위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후 각 항목이 개별 응답자에게 받은 점수를 종합하여 평균을 얻었다 ([표 4-27] 참조).

□ SDGs 세부목표 11.1(주택) 관련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

전문가 패널은 도시의 불량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사회주택 (social housing)을 선택하였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주택정책, 저소득층 주택개량 사업이나 지자체의 집수리 지원 사업이 뒤따랐다. 반면에 직장인 공동주택이나 대학연합 기숙사, 비주택자의 공공주택 우선입주권 제공 등 은 후순위에 위치했는데, 이는 이런 사업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위한 정책은 아니 기 때문이었다. 사회주택의 확대가 가장 우선순위에 놓인 것은 불량 주거환경 개선을 위 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으로 주거비를 보조하는 주거바우처의 경우 주거환경 자체를 향 상시키는 제도는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 놓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들은 이 제도가 적극 지원되어야한다고 생각하였다.

[표 4-27] SDGs 세부목표 11.1을 위한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

관련 정책	N	평균	우선순위
사회주거(social housing) 확대정책	22	8.77	1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택정책	22	8.27	2
저소득층 주택 개량사업/지자체 집수리 지원 사업	21	8.24	3
주거급여(주택바우처)제도	22	7.77	4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2	6.32	5
도시재생사업	22	6.14	6
공공의 개별 불량 주택 매입, 수리 후 재판매 및 임대	22	5.32	7
자치구별 공공임대주택 할당제도 도입	22	5.00	8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입주권 제공	22	4.59	9
직장인 공동주택제도 및 대학연합 기숙사 제도	22	3.09	10
기 정비된 주거지역에 대한 사후 점검	21	2.90	11

□ SDGs 세부목표 11.2(교통) 관련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

총 13개 항목이 제시된 세부목표 11.2의 경우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정책이 가장 최우선으로 추진해야하는 정책으로 선정되었으며, 교통소외지역 및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모니터링이 뒤따랐다.

우선순위가 나타내는 의미를 분석하면 취약계층을 위한 전반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면서, 특정 대상, 즉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별도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역시 일종의 맞춤형 교통서비스이므로 2위에서 5위까지 모두 대상별 별도의 교통서비스향상 계획이다.

반면에 환승서비스 건설, 무료 대중교통서비스, 공유 서비스, 버스 준공영제 등은 후순위에 놓였는데, 이는 이들 서비스와 시설의 확충이 대중교통 정책 전반에 걸쳐서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 아니므로 SDGs에 요구하는 내용과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표 4-28] SDGs 세부목표 11.2를 위한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

관련 정책	N	평균	우선순위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22	10.55	1
교통소외지역 및 사각지대 해소	22	9.73	2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22	8.27	3
취약계층 대중교통 접근성 모니터링 및 개선 계획	22	7.86	4
수요응답형(DRT) 대중교통체계	22	7.50	5
도시유형별 대중교통시설 및 수단 확충	22	7.27	6
도시계획단계에서의 효과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마련을 위한 협력	22	6.82	7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2	6.77	8
따복택시 등 교통소외지역에 택시를 활용한 정책	22	6.55	9
환승시설(환승터미널) 건설 및 개선	22	6.41	10
취약계층(노인) 대중교통 무료 정책	22	5.68	11
카풀서비스, 공유버스, 공유택시 등 서비스 확대	22	4.55	12
버스 준공영제 확대	22	3.41	13

□ SDGs 세부목표 11.3(도시개발) 관련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주민의 참여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전문가 패널은 주민참여 제도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요구하였다. 1순위로 참여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는데 현재의 단발성 이벤트에 가까운 참여 방식이 아닌 장기적으로 과정자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또한 예산권한의 주민이양 확대가 2순위였는데, 이는 도시 및 공간계획에 주민의 역할을 관찰자에서 의결권자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반면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9위,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평가의 매년시행은 10위로 하위권에 놓였다. 이는 도시기본계획 자체는 주요도시는 대부분 수행하고 있어서 특별히 강조해야할 정책은 아니기 때문이며, SDGs의 요구사항도 참여역량 강화이기 때문이다.

[표 4-29] SDGs 세부목표 11.3을 위한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

관련 정책	N	평균	우선순위
일회성 참여가 아닌 장기적인 숙의 과정을 가질 수 있는 참여제도로의 개선	22	6.77	1
공간계획과 참여예산사업의 연계를 통한 예산권한 주민이양 확대	22	6.27	2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	22	6.05	3
주민참여 제도	22	5.68	4
시민참여를 위한 소통 체계 구축	22	5.55	5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22	5.41	6
동 단위 등 보다 소규모 단위의 주민 참여 정책	22	5.23	7
주민협의체 조직	22	4.91	8
도시기본계획 수립	22	4.45	9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평가의 매년 시행	22	4.27	10



□ SDGs 세부목표 11.4(문화와 자연유산) 관련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

문화와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전문가 패널은 근대 문화재 복원 및 관련 인재 양성을 최우선 사항으로 선정하였다. 2순위 역시 자연유산의 발굴 및 보존과 이를 위한 교육이었다. 즉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해서 전문성과 국민의 관심 확대가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평균값을 살펴보면 항목별 값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정책 항목이 대체로 모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전문가들 역시 의견이 다양함을 의미한다.

[표 4-30] SDGs 세부목표 11.4를 위한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

관련 정책	N	평균	우선순위
근대 문화재 복원 및 관련 인재 양성	22	4.91	1
자연유산의 발굴 및 보존, 보호와 이를 위한 교육	22	4.55	2
문화재별 스토리텔링 강화와 홍보	22	4.36	3
문화재 5개년 기본계획 수립	22	4.23	4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공원법,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22	3.95	5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관점 적용	22	3.59	6
개인소유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	22	3.36	7

□ SDGs 세부목표 11.5(자연재해) 관련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

재난재해로 인한 인명 및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인 세부목표 11.5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은 재난별 시나리오와 영향력 분석과 단계별 지역단위 대응체계 구성을 최우선 정책으로 선정하였다. 즉 지역단위의 건축 및 도시분야에서 다양한 대응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방재를 위한 오픈스페이스 계획, 내진설계 등 다양한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순위로 방재의 관점에서 빈곤층의 거주환경실태 조사 및 대책마련을 선정하였다. 반면에 안전관리계획이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같은 계획은 후순위에 놓였다. 이는 재난재해의 경우 현장에서의 대응능력이 다른 사항보다 중요한 문제이므로 지역별로 적절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재난재해의 유형이 다양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방식과 대응방식이 각각 달라야 하므로 하나의 매뉴얼이 아닌 유형별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2순위로 언급된 사항은 세부목표 11.5에서 요구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조사나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SDGs의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면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표 4-31] SDGs 세부목표 11.5를 위한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

관련 정책	N	평균	우선순위
재난별 시나리오와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단계별 지역단위의 대응체계 구성	22	7.23	1
방재의 관점에서 빈곤층과 취약층의 거주환경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	22	7.18	2
주요시설 (댐, 제방 등)의 안전기준 강화 및 보강공사 실시	22	6.41	3
도시방재계획	22	6.18	4
지역별 거점 안전센터 설치	22	5.91	5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22	4.82	6
부처별 책임 명확화	22	4.50	7
국민안전관리 계획 수립	22	4.27	8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22	4.23	9
민자개발사업의 자연재해 안전 기준 강화	22	4.14	10

□ SDGs 세부목표 11.6(도시환경) 관련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

세부목표 11.6을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광범위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오히려 2순위와 3순위로 선정된 정책항목이 구체적이다.

전문가 패널을 미세먼지 발생 현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자료가 필요하며, 석탄에 기반을 둔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거나 대체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4위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장려 및 비용 보조 역시 3위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세부목표 11.6 역시 기본계획 등의 계획 자체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는 이미 기본계획 등 각종 계획은 충실히 만들어지고 있지만, 실제 실행 분야에서 취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상당수준의 폐기물 재활용 수준에 도달한 국가이므로 추가적으로 도시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덜 하였다.

[표 4-32] SDGs 세부목표 11.6을 위한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

관련 정책	N	평균	우선순위
미세먼지 저감 정책	22	5.27	1
미세먼지 발생 현황자료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	22	5.18	2
석탄 기반 화력발전소 폐쇄 및 대체 계획(원자력 제외)	22	5.14	3
신재생에너지 활용 장려 및 비용 보조	22	5.09	4
자원순환경제 고도화 정책	22	4.55	5
전기차 보조금 제도/ 승용 경유 차량의 출고 감소 정책	22	3.82	6
수도권/지자체 대기 환경관리 기본계획	22	3.64	7
도시의 고도화 및 재생 시 자원 활용 증진을 위한 계획	22	3.36	8

□ SDGs 세부목표 11.7(공공공간과 녹지)과 지표 11.7.1 관련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공간과 녹지환경 제공을 위한 세부목표 11.7의 지표 11.7.1을 위한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근린단위의 소규모 공원 및 녹지의 확보 정책이다. 이 정책은 다소 원론적인 경향이 있지만, 근린 단위라는 의미에서 생활환경 주변에 녹지를 확보함으로써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2순위는 공공공간의 적정 배치를 위한 설치가이드라인 강화였으며, 3순위는 보행자 중심도시 건설 지원이었다. 2순위와 3순위가 함께 취약계층, 특히 장애인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 특히 구도심의 보행환경은 극히 열악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도시, 중소도시 할 것 없이 공통적인 문제이다. 이는 대체로 우리나라의 도시발전이 차량의 이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중요한 이유는 취약계층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과 환경은 일반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공공간과 녹지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시설에 대해 보편적 디자인(universal-design)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실제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2순위의 설치가이드라인 강화는 이런 접근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표 4-33] SDGs 세부목표 11.7의 지표 11.7.1을 위한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

관련 정책	N	평균	우선순위
근린 단위의 소규모 공원 및 녹지의 확보 정책	22	5.14	1
공공공간의 적정 배치를 위한 설치가이드라인 강화	22	4.59	2
보행자 중심도시 건설 지원	22	4.00	3
기존 공공공간의 복합적 재활용 방안	22	3.91	4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사업	22	3.55	5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22	2.77	6
도시기본계획의 오픈스페이스 계획	22	2.73	7
민간 공원 제도	22	1.32	8

□ SDGs 세부목표 11.7(공공공간과 녹지)과 지표 11.7.2 관련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

세부목표 11.7의 지표 11.7.2는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문제, 특히 취약계층 중 여성과 아동에 대한 물리적 성희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전문가 패널은 야간의 안전방법체계 구축을 최우선 정책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성범죄가 야간에 발생하기 쉽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또한 CPTED 사업의 확대를 2순위에 선정함으로써 도시 내에서 범죄를 줄이기 위한 환경적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전문가 패널은 또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적극 지지하였는데, 이와 더불어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표 4-34] SDGs 세부목표 11.7의 지표 11.7.2를 위한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

관련 정책	N	평균	우선순위
야간에 도심 공원, 운동장 등에 대한 안전방법체계 구축	22	5.32	1
장소, 범죄, 범죄 유형에 따른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사업의 다양화	22	5.18	2
성폭력 범죄자 신상 공개 및 주민 알람 서비스/ 사후 관리 강화	22	4.14	3
아동 성범죄자의 아동시설 주변 거주 제한 제도	22	3.82	4
철저한 성범죄 예방차원의 교육	22	3.36	5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22	3.14	6
학교 보안관 제도	22	3.05	7

□ SDGs 세부목표 11.a(통합적 개발계획) 관련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

지역개발에 있어 도시와 주변부 및 주변도시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최우선 순위의 정책으로 광역계획 수립의 의무화가 선정되었다. 2순위로 광역도시계획, 광역교통망 계획 등 광역권 계획의 수립이 선정되었다. 1, 2순위 모두 광역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단순히 개별 도시에 대한 계획으로는 점점 커져가는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35] SDGs 세부목표 11.a를 위한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

관련 정책	N	평균	우선순위
인근 지자체의 통합된 광역계획 수립 의무화	22	5.45	1
광역도시계획, 광역교통망 계획 등 광역권 계획 수립	22	5.45	2
성장관리방안	22	4.95	3
도시기본계획에 자원수요를 고려한 성장관리방안이 담기도록 개선	22	4.55	4
대도시와 주변 도시 간 상생발전계획	22	4.55	5
주변지역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	22	4.27	6
성장관리방안 적용지역 확대	22	3.64	7
개발억제를 위한 상향된 환경영향평가	22	3.09	8

□ SDGs 세부목표 11.c(건축물 ODA) 관련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

최빈국에 대한 적절한 ODA를 다루는 세부목표 11.c의 경우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적용 가능한 적정기술 및 현지에서의 기술 이전이 선정되었다. 2순위와 3순위는 현지 자재 활용을 위한 원조자금의 건설 인프라 사업 비율확대와 최빈국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공법 연구 지원이었다. 1,2,3순위 모두 연관성이 깊은데, 최빈국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결국 자체적으로 현지 여건에 맞춰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기술과 자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선정한 정책은 1순위는 기술의 전수, 2순위는 자본의 제공을 각각 의미한다. 3순위는 최빈국에 적용 가능한 공법의 연구인데, 이는 1순위의 기술이전이나 현재 우리가 국내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므로 현지의 여건에 적합한 기술에 대한 연구가 절실했다. 즉 1,2,3순위의 정책은 함께 가야 성공할 수 있는 내용이다.

반면에 한국형 신도시 수출이나 PPP사업의 경우 우선순위에서 아주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최빈국에서는 사실상 필요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형 신도시의 경우 일정규모의 경제성장이 보장되는 환경에서는 유용하지만, 자본과 기술이 거의 없는 최빈국에서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빈국을 위한 지속가능한 건축물 지원 ODA는 적정기술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함께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표 4-36] SDGs 세부목표 11.c를 위한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

관련 정책	N	평균	우선순위
적용 가능한 적정기술 및 현지에서의 기술 이전	22	7.32	1
현지 자재 활용을 위한 원조자금의 건설 인프라 사업 비율 확대	22	7.14	2
최빈국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공법 연구 지원	22	6.27	3
민간 HABITAT 운동과 연계한 정부정책의 효율화	22	5.95	4
소득그룹, 분야, 프로그램, 지원방식을 감안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22	5.86	5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2	5.23	6
개도국 대상 KSP 지식공유사업	22	5.18	7
유상원조 시 현지화폐 지급을 통한 현지자재 활용도 향상	22	4.86	8
PPP 사업 확대	21	4.05	9
한국형 신도시 수출	22	3.32	10

## 6)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별 국내 정책의 효과

세부목표에 대한 제시된 국내 개별 정책의 효과에 대해 질문하였다.

### □ SDGs 세부목표 11.1(주택) 관련 국내 개별 정책의 효과

개별 정책의 효과는 전문가 패널이 선정한 정책 우선순위와 다소 유사한 점이 있었다. 우선순위 1,2,3에 선정된 정책이 효과에서도 모두 3위권에 포함되었다. 전체적으로는 개별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크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으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지도 않았다. 효과가 일정정도 있겠으나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우선순위 반복 조사 결과 개별정책의 효과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의견에 변동이 조금 있었다. 사회주거 확대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효과가 높을 것이라 조사되었으나, 2차에서는 다소 평균값이 떨어졌다. 반면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택정책의 경우 1차 조사에 비해 2차 조사에서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주거환경기본계획과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정책 우선순위는 중간정도(각각 5위와 6위)였으나 전문가들의 판단으로는 효과는 보통 (각각 3.13, 3.22)이었다. 즉 기존의 도시재생사업과 환경개선사업으로는 SDGs에 요구하는 불량주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표 4-37] SDGs 세부목표 11.1을 위한 국내 정책의 효과 평가

세부목표 11.1과 지표 11.1.1을 위한 정책	샘플 수	1차 조사			2차 조사				정책 우선 순위
		평균	표준 편차	순위	평균	표준 편차	순위	순위 변동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택정책	23	4.04	0.976	3	4.35	0.775	1	↑	2
저소득층 주택 개량사업/ 지자체 집수리 지원 사업	23	4.09	0.596	1	3.91	0.417	2	↓	3
사회주거(social housing) 확대정책	23	4.09	0.848	1(2)	3.83	0.576	3	↓	1
주거급여(주택바우처)제도	23	3.78	0.518	4	3.74	0.619	4	—	4
공공의 개별 불량 주택 매입, 수리 후 재판매 및 임대	23	3.52	0.947	5	3.57	0.788	5	—	7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입주권 제공	23	3.39	0.941	7(8)	3.22	0.736	6	↑	9
도시재생사업	23	3.39	0.941	7(8)	3.22	0.795	6(7)	↑	6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3	3.43	0.507	6	3.13	0.548	8	↓	5
자치구별 공공임대주택 할당제도 도입	23	3.39	0.722	7	3.13	0.757	8(9)	↓	8
기 정비된 주거지역에 대한 사후 점검	23	3.00	0.905	10	3.09	0.733	10	—	11
직장인 공동주택제도 및 대학연합 기숙사 제도	23	3.00	1.128	10	2.87	0.694	11	↓	10



□ SDGs 세부목표 11.2(교통) 관련 국내 개별 정책의 효과

세부목표 11.2를 위한 국내 개별 정책의 효과는 개별 정책의 우선순위와 비슷하였다. 특히 우선순위 1~4위의 정책은 정책의 효과면에서도 상위 1~4위였다. 전문가 패널은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과 소외지역을 위한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가 실제 취약계층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유서비스, 취약계층 무료 정책, 버스 준공영제 등은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들 정책 역시 응답자의 평균값이 3.0을 넘었으며, 이는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전문가 역시 있다는 의미이다.

[표 4-38] SDGs 세부목표 11.2를 위한 국내 정책의 효과 평가

세부목표 11.2를 위한 정책	샘플 수	1차 조사			2차 조사				정책 우선순위
		평균	표준편차	순위	평균	표준편차	순위	순위변동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23	4.26	0.541	1	4.09	0.417	1	—	1
교통소외지역 및 사각지대 해소	23	4.17	0.576	2	4.09	0.417	1	↑	2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23	4.09	0.668	3	4.09	0.596	1(3)	↑	3
취약계층 대중교통 접근성 모니터링 및 개선 계획	23	4.00	0.603	4	3.91	0.417	4	—	4
따복택시 등 교통소외지역에 택시를 활용한 정책	23	3.78	0.795	5	3.78	0.518	5	—	9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3	3.70	0.559	6	3.78	0.518	5	↑	8
수요응답형(DRT) 대중교통체계	23	3.70	0.703	6(7)	3.78	0.518	5	↑	5
도시유형별 대중교통시설 및 수단 확충	22	3.59	0.854	9	3.78	0.518	5	↑	6
환승시설(환승터미널) 건설 및 개선	23	3.52	0.846	10	3.65	0.647	9	↑	10
도시계획단계에서의 효과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마련을 위한 협력	23	3.61	0.941	8	3.48	0.730	10	↓	7
카풀서비스, 공유버스, 공유택시 등 서비스 확대	23	3.04	0.928	12(13)	3.35	0.832	11	↑	12
취약계층(노인) 대중교통 무료 정책	23	3.52	0.846	10	3.13	0.815	12	↓	11
버스 준공영제 확대	23	3.04	0.767	12	3.09	0.417	13	↓	13

□ SDGs 세부목표 11.3(도시개발) 관련 국내 개별 정책의 효과

세부목표 11.3을 위한 개별 정책의 효과는 대부분의 정책이 평균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즉 대부분의 정책이 시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책 우선순위 1~2위의 정책은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주민참여제도의 개선과 예산권한 이양을 통해 도시계획의 내실화와 주민참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슷한 내용의 주민참여 제도 자체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의 경우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높은 위치에 포함되었으나,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것은 주민참여제도와 주민참여 예산제가 현재 시행되는 방식으로 는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즉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조사된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 시민참여를 위한 소통 체계 구축의 이런 점에서 주민참여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전제 되어야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표 4-39] SDGs 세부목표 11.3을 위한 국내 정책의 효과 평가

세부목표 11.3을 위한 정책	샘플 수	1차 조사			2차 조사				정책 우선 순위
		평균	표준 편차	순위	평균	표준 편차	순위	순위 변동	
공간계획과 참여예산사업의 연계를 통한 예산권한 주민이양 확대	23	3.96	0.976	2	4.43	0.843	1	↑	2
일회성 참여가 아닌 장기적인 숙의 과정을 가질 수 있는 참여제도로의 개선	23	4.17	0.778	1	4.00	0.426	2	↓	1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23	3.87	0.694	3	3.96	0.367	3	—	6
시민참여를 위한 소통 체계 구축	23	3.83	0.778	6	3.91	0.417	4	↑	5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	23	3.87	0.757	3(4)	3.83	0.491	5	↓	3
동 단위 등 보다 소규모 단위의 주민 참여 정책	23	3.83	1.029	6(7)	3.83	0.778	5(6)	↑	7
주민협의체 조직	23	3.87	0.757	3(4)	3.78	0.600	7	↓	8
주민참여 제도	23	3.78	0.600	8	3.74	0.619	8	—	4
도시기본계획 수립	23	3.22	0.998	10	3.09	0.596	9	↑	9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평가의 매년 시행	23	3.26	0.915	9	2.96	0.638	10	↓	10

□ SDGs 세부목표 11.4(문화와 자연유산) 관련 국내 개별 정책의 효과

문화와 자연유산의 보전을 위한 국내 개별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근대문화재 복원 및 인력 양성과 자연유산의 발굴 및 보존, 보호와 이를 위한 교육이 가장 효과가 좋은 정책으로 선정되었다. 특이한 점은 개인소유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 정책의 경우 우선순위에서는 7위로 제시되어 정책 중 가장 낮았으나 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개인소유 문화재의 경우 사유 재산이므로 정책적으로는 우선순위에 두고 집행하기 힘들지만, 정책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면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40] SDGs 세부목표 11.4를 위한 국내 정책의 효과 평가

세부목표 11.4를 위한 정책	샘플 수	1차 조사			2차 조사				정책 우선 순위
		평균	표준 편차	순위	평균	표준 편차	순위	순위 변동	
근대 문화재 복원 및 관련 인재 양성	23	3.87	0.626	1	3.96	0.475	1	—	1
자연유산의 발굴 및 보존, 보호와 이를 위한 교육	23	3.78	0.951	2	3.87	0.548	2	—	2
개인소유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	23	3.48	0.846	5	3.83	0.576	3	↑	7
문화재별 스토리텔링 강화와 홍보	23	3.61	0.839	4	3.70	0.635	4	—	3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공원법,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23	3.70	0.703	3	3.65	0.647	5	↓	5
문화재 5개년 기본계획 수립	23	3.43	0.843	6	3.61	0.499	6	—	4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관점 적용	23	3.35	0.885	7	3.39	0.656	7	—	6

□ SDGs 세부목표 11.5(자연재해) 관련 국내 개별 정책의 효과

재난재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내 정책 중 효과가 가장 좋은 정책으로 빈곤층과 취약층의 거주환경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이었으며, 재난별 시나리오와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단계별 지역단위 대응체계 구성과 주요 시설의 안전기준 강화 및 보강공사 실시가 뒤따랐다. 재난재해를 위한 정책의 경우 전반적으로 효과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었으며, 특히 전문가 패널이 평가한 취약층의 거주환경 실태조사의 효과는 타 분야의 개별정책에 비해 독보적으로 높았다. 즉 이 정책은 기존에 시행된 적이 없고, 실태조사를 통해 목표 타겟의 현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민자개발사업의 자연재해 안전기준 강화의 경우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최하위(10위)를 기록하였으나, 정책효과에서는 4위(2차 조사, M= 3.91)로 효과가 클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민자개발사업의 경우 안전 기준이 강화될 경우 위축될 우려가 있어 정부가 안전 기준을 쉽게 올리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점점 자연재해를 예측하기 힘든 환경에서 기준 강화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41] SDGs 세부목표 11.5를 위한 국내 정책의 효과 평가

세부목표 11.5를 위한 정책	샘플 수	1차 조사			2차 조사				정책 우선 순위
		평균	표준 편차	순위	평균	표준 편차	순위	순위 변동	
방재의 관점에서 빈곤층과 취약층의 거주환경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	23	4.30	0.765	1	4.70	0.559	1	—	2
재난별 시나리오와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단계별 지역단위의 대응체계 구성	23	4.13	0.757	2	4.30	0.470	2	—	1
주요시설 (댐, 제방 등)의 안전기준 강화 및 보강공사 실시	23	4.04	0.706	3	4.00	0.426	3	—	3
민자개발사업의 자연재해 안전 기준 강화	23	3.61	0.783	6	3.91	0.596	4	↑	10
부처별 책임 명확화	23	3.43	0.945	7	3.83	0.717	5	↑	7
지역별 거점 안전센터 설치	22	3.86	0.774	4	3.78	0.600	6	↓	5
도시방재계획	23	3.65	0.647	5	3.74	0.541	7	↓	4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23	3.35	0.832	8	3.30	0.470	8	—	6
국민안전관리 계획 수립	23	3.17	0.778	10	3.04	0.562	9	↑	8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23	3.22	0.795	9	3.00	0.603	10	↓	9

□ SDGs 세부목표 11.6(도시환경) 관련 국내 개별 정책의 효과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경우 타 분야의 응답과 차이가 있었다. 정책 우선순위에서 1위였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경우 효과에서는 5위로 타 정책보다 낮았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라는 말 자체가 다소 광범위하여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미세먼지 발생 현황자료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이 가장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조사된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정책의 계획과 집행이 정확한 자료 없이 실행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은 정책이전에 자료의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효과가 좋은 항목으로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장려 및 비용보조와 화력발전소 쇄 및 대체 계획 수립이 2위와 3위로 선정되었다. 이는 정책적으로 오염의 주원인 중 하나인 기존 시설의 교체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효과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이미 폐기물 재활용이 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자원순환경제 고도화와 자원 활용 증진 계획 등은 상대적인 효과가 낮았다. 그러나 세부목표 11.6을 위한 정책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42] SDGs 세부목표 11.6을 위한 국내 정책의 효과 평가

세부목표 11.6을 위한 정책	샘플 수	1차 조사			2차 조사				정책 우선 순위
		평균	표준 편차	순위	평균	표준 편차	순위	순위 변동	
미세먼지 발생 현황자료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	23	4.00	0.739	2	4.17	0.576	1	↑	2
신재생에너지 활용 장려 및 비용 보조	23	3.96	0.878	3	4.13	0.458	2	↑	4
석탄 기반 화력발전소 폐쇄 및 대체 계획(원자력 제외)	23	4.13	0.869	1	4.09	0.733	3	↓	3
전기차 보조금 제도/ 승용 경유 차량의 출고 감소 정책	23	3.78	0.902	5(6)	4.04	0.562	4	↑	6
미세먼지 저감 정책	23	3.83	0.576	4	3.96	0.475	5	↓	1
자원순환경제 고도화 정책	23	3.78	0.736	5	3.65	0.573	6	↓	5
도시의 고도화 및 재생 시 자원 활용 증진을 위한 계획	23	3.57	0.728	7	3.35	0.573	7	—	8
수도권/지자체 대기 환경관리 기본계획	23	3.35	0.573	8	3.13	0.458	8	—	7

□ SDGs 세부목표 11.7(공공공간과 녹지)과 지표 11.7.1 관련 국내 개별 정책의 효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공간 확대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 경우 근린 단위의 소규모 공원 및 녹지의 확보 정책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조사되었으며 이 정책은 정책우선순위에서도 1위였다. 이는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 공원을 확보함으로써 취약 계층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행자 중심도시 건설지원 역시 효과가 좋은 정책으로 선정되었다(2위). 보행자 중심 정책은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다. 따라서 현재의 자동차 중심 도시 구조에서 보행자 중심 도시구조로의 변환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단기간에 할 수 없고 장기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한데, 인간 행동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도시 건설을 위한 가이드 마련이 필수적이며, 이 가이드의 한 부분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공간의 배치 가이드가 필요하다.

[표 4-43] SDGs 세부목표 11.7의 지표 11.7.1을 위한 국내 정책의 효과 평가

세부목표 11.7과 지표 11.7.1을 위한 정책	샘플 수	1차 조사			2차 조사				정책 우선 순위
		평균	표준 편차	순위	평균	표준 편차	순위	순위 변동	
근린 단위의 소규모 공원 및 녹지의 확보 정책	23	4.13	0.694	1	4.04	0.562	1	—	1
보행자 중심도시 건설 지원	23	3.78	0.795	2	3.96	0.562	2	—	3
공공공간의 적정 배치를 위한 설치가이드라인 강화	22	3.68	0.646	4	3.91	0.417	3	↑	2
기존 공공공간의 복합적 재활용 방안	23	3.74	0.752	3	3.91	0.596	3(4)	—	4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사업	23	3.57	0.662	5	3.70	0.635	5	—	5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23	3.30	0.822	6	3.17	0.491	6	—	6
도시기본계획의 오픈스페이스 계획	23	3.17	0.717	7	3.13	0.458	7	—	7
민간 공원 제도	23	2.87	1.140	8	2.91	0.668	8	—	8

□ SDGs 세부목표 11.7(공공공간과 녹지)과 지표 11.7.2 관련 국내 개별 정책의 효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공간에서의 안전 향상을 위한 정책은 정책 우선순위와 효과성의 순위가 거의 일치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효과가 좋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의 경우 큰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효과가 좋은 정책으로 야간 도심 공원, 운동장 등에 대한 안전방범체계 구축이 선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CPTED 사업의 범죄 유형별, 장소별 특성을 고려한 확대가 효과가 좋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효과 분석의 결과로 판단하면 아직 범죄예방을 위한 물리적 기법과 방범체계 구축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하는 단계이다. CPTED 사업의 경우 단순히 물리적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서 점차 탈피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CPTED 계획이 방범체계 구축과 예방교육을 포함하도록 변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

[표 4-44] SDGs 세부목표 11.7의 지표 11.7.2를 위한 국내 정책의 효과 평가

세부목표 11.7과 지표 11.7.2를 위한 정책	샘플 수	1차 조사			2차 조사				정책 우선 순위
		평균	표준 편차	순위	평균	표준 편차	순위	순위 변동	
야간에 도심 공원, 운동장 등에 대한 안전방범체계 구축	23	4.17	0.778	1	4.48	0.593	1	-	1
장소, 범죄, 범죄 유형에 따른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사업의 다양화	23	4.13	0.548	2	4.13	0.344	2	-	2
성폭력 범죄자 신상 공개 및 주민 알람 서비스/ 사후 관리 강화	23	3.87	0.757	3	3.91	0.668	3	-	3
철저한 성범죄 예방차원의 교육	23	3.65	0.775	5	3.87	0.458	4	↑	5
아동 성범죄자의 아동시설 주변 거주 제한 제도	23	3.78	1.043	4	3.87	0.757	4(5)	-	4
학교 보안관 제도	23	3.43	0.788	6	3.43	0.662	6	-	7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23	3.30	0.822	7	3.17	0.576	7	-	6

□ SDGs 세부목표 11.a(통합적 개발계획) 관련 국내 개별 정책의 효과

도시와 주변부 및 지방과의 연계를 강화한 도시 및 지역계획을 위한 우리나라의 개별 정책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은 다소 복잡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정책 우선순위에서 1위였던 인근 지자체의 통합된 광역계획 수립 의무화는 타 정책에 비해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2차 조사, 4위, M=3.61) 평가되었다. 더욱이 1차 조사에서는 조금 더 높게(M=3.70) 나타났고 전체 항목 중에서 2위였으나, 2차 조사에서는 낮아졌다. 이는 인근 지자체와의 통합적인 광역계획이 필요하지만, 실제 시행에서 이해관계가 얹혀 쉽게 수행하기 힘들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반면에 우선순위에서 5위였던 대도시와 주변 도시 간 상생발전계획은 오히려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1차 조사보다 2차 조사에서 응답자의 평균값이 증가하였다. 이는 이미 대도시 주변부의 도시는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경유가 많아 보다 쉽게 연계된 계획을 수립하기 쉽고 효과도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중인 성장관리방안의 경우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3위로 높았으나 효과면에서 다소 낮았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정책은 이미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나 있어 문제점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 4-45] SDGs 세부목표 11.a를 위한 국내 정책의 효과 평가

세부목표 11.a를 위한 정책	샘플 수	1차 조사			2차 조사				정책 우선순위
		평균	표준 편차	순위	평균	표준 편차	순위	순위 변동	
광역도시계획, 광역교통망 계획 등 광역권 계획 수립	23	3.78	0.736	1	3.91	0.515	1	—	2
대도시와 주변도시 간 상생발전계획	23	3.57	0.843	3	3.78	0.600	2	↑	5
도시기본계획에 자원수요를 고려한 성장관리방안이 담기도록 개선	23	3.52	0.790	4	3.70	0.635	3	↑	4
인근 지자체의 통합된 광역계획 수립 의무화	23	3.70	0.822	2	3.61	0.583	4	↓	1
성장관리방안	23	3.39	0.891	6	3.61	0.656	4(5)	↑	3
성장관리방안 적용지역 확대	23	3.30	0.765	7	3.61	0.656	4(5)	↑	7
주변지역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	23	3.43	0.728	5	3.35	0.714	7	↓	6
개발억제를 위한 상향된 환경영향평가	23	3.17	1.029	8	3.26	0.752	8	—	8



#### □ SDGs 세부목표 11.c(건축물 ODA) 관련 국내 개별 정책의 효과

최빈국에 대한 지속가능한 건축분야 ODA를 위한 정책의 효과는 정책 우선순위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정책들이 큰 효과를 보기에는 개별 정책별로 다소 측정값이 낮았다.

효과측면에서 현지 자재 활용을 위한 원조자금의 건설인프라 사업 비율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빈국에 대한 지원 자체가 원조국의 지원할 수 있는 자금규모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원조액의 절대적인 증액 없이는 다양한 사업, 특히 지속가능한 ODA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명백하다.

효과측면에서 2위와 3위를 기록한 최빈국에 적용 가능한 공법 연구 지원과 현지에 적용 가능한 적정 기술 및 현지 이전 역시 우리나라의 현재의 ODA체계에서는 수행하기 쉽지 않다. 이는 SDGs 세부목표 자체가 전략적 차원의 접근이 아닌 세부분야(지속가능하고 복원 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접근이므로 전문성의 확보 없이는 시행하기 힘들다. 따라서 지원 기구의 조직과 사업 방식을 SDGs 체계에 맞추어 조정해야 달성 가능한 사항이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동일하게 한국형 신도시 수출과 PPP 사업 확대의 효과는 낮게 나왔다. 이는 이 두 정책이 최빈국의 지속가능한 건축물 지원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를 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 패널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효과에 대해서도 낮게 평가했는데, 이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주로 ODA의 양적인 면에 치중한 계획으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건축물 지원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부목표 11.c의 달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세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표 4-46] SDGs 세부목표 11.c를 위한 국내 정책의 효과 평가

세부목표 11.c를 위한 정책	샘플 수	1차 조사			2차 조사				정책 우선 순위
		평균	표준 편차	순위	평균	표준 편차	순위	순위 변동	
현지 자재 활용을 위한 원조자금의 건설인프라 사업 비율 확대	23	3.83	0.937	2	4.09	0.515	1	↑	2
최빈국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공법 연구 지원	23	3.78	0.795	3	4.00	0.522	2	↑	3
적용 가능한 적정기술 및 현지에서의 기술 이전	23	3.96	0.928	1	3.96	0.706	3	↓	1
소득그룹, 분야, 프로그램, 지원방식을 감안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23	3.48	0.846	4	3.91	0.515	4	—	5
민간 HABITAT 운동과 연계한 정부정책의 효율화	23	3.48	0.846	4	3.65	0.714	5	↓	4
개도국 대상 KSP 지식공유사업	23	3.26	0.864	6	3.43	0.843	6	—	7
PPP 사업 확대	22	3.18	0.853	8	3.09	0.610	7	↑	9
유상원조 시 현지화폐 지급을 통한 현지자재 활용도 향상	23	3.13	0.920	9	3.04	0.562	8	↑	8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3	3.22	0.671	7	3.00	0.674	9	↓	6
한국형 신도시 수출	23	2.83	1.114	10	2.48	0.947	10	—	10

### 3. 소결

본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SDGs 목표 11이 건축도시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와 지표에 부합하는 국내의 유사지표 값을 추세연장법을 이용하여 2030년의 지표값을 계산하고, 전문가 패널에게 예측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과 세부목표를 위한 국내의 관련 정책이 적합한지, 어떤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 정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분석결과 설문에 참가한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가 국내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 시기는 즉각적으로 영향이 나타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아직 우리나라의 여건이 SDGs를 받아들이기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과 SDGs의 세부목표가 최빈국부터 선진국까지 모든 국가를 포괄적으로 그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일부 세부목표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유용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부목표 11.3의 경우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도시계획의 수립과 주민 참여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지표만으로 달성여부를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세부목표 11.3이 실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보다는 실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본 소결에서는 이러한 세부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3가지 부문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보다 상세한 분야별 정책은 5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 □ 예측 지표로 본 SDGs 세부목표의 중요도

국내 유사지표는 전반적으로 2030년 까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였다. 일부항목 세부지표 11.2.1의 국내 유사지표 중 ‘5분이내 대중교통접근시간’의 비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다소 부정적 예측과 재해관련 지표값이 모두 현재보다 증가하는 부정적 변화가 예측되었다. 재해관련 지표값의 경우 비록 전문가들이 예측값을 제안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예측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으므로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다소 조심스럽다.

국내 유사 지표값의 변화로 판단하면 SDGs 지표 11.1.1의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11.4.1의 자연 및 문화자원 관련 사업, 11.6.2의 미세먼지 농도 저감, 11.7.1의 공공공간의 확대, 11.7.2의 공공장소에서의 범죄 예방 분야가 가장 큰 변화가 기대되는 분야이다.

[표 4-47] 국내 SDGs관련 지표의 현재 및 미래 예측 비교

관련 SDGs 지표	국내 지표		현재	2030년 예측값	변화정도*
11.1.1.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		97.8만 명 (2014년)	32.2만 명	▼
11.2.1	대중교통 접근시간 비율	5분 이내	14.0% (2015년)	13.0%	▼
		5~10분	44.0% (2015년)	49.4%	▲
		10~15분	29.9% (2015년)	27.9%	▼
		15~20분	6.8% (2015년)	5.3%	▼
		20분 이상	5.3% (2015년)	4.5%	▼
11.3.1	1인당 시가화 면적비율		17.2% (2015년)	17.9%	▲
11.4.1	GDP 대비 문화재정 비율		0.3% (2014년)	0.7%	▲
11.5.1	사망 및 실종자 수		2명 (2014년)	32명	▲
	이재민 수		7,691명 (2014년)	30,500명	▲
11.5.2	GDP 대비 자연재해 피해액 비율		0.012% (2014년)	0.020%	▲
11.6.1	일반폐기물 재활용 비율		84.0% (2013년)	86.3%	▲
11.6.2	미세먼지 농도		45.8 $\mu\text{g}/\text{m}^3$ (2013년)	28.8 $\mu\text{g}/\text{m}^3$	▼
11.7.1	1인당 공공공간의 면적		273.5 $\text{m}^2$ (2015년)	352.1 $\text{m}^2$	▲
11.7.2	공공장소 발생 성범죄 비율		0.4% (2014년)	0.3%	▼
	공공장소 발생 폭력사건 비율		5.5% (2014년)	4.2%	▼
11.a.1	도시계획 수립 지역에 사는 인구 비율		90.4% (2015년)	92.2%	▲

\* 변화정도 : 세모 한 개는 완만한 변화, 두 개는 급격한 변화, 녹색은 긍정적, 빨간색은 부정적 변화를 의미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 중 건축도시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야는 지표 11.1.1의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분야와 지표 11.7.1의 공공공간의 확대이며, 간접적으로 밀접한 분야는 11.7.2의 공공장소에서의 범죄예방이다. 또한 지표 11.5.1과 11.5.2 자연재해 예방의 경우 예측이 곤란한 면이 있는데,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의 빈도 상승과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연재해 예방은 예방을 위한 조직과 인력, 장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도시설계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도시설계의 단계에서 자연 재해에 대한 예방적 차원과 재해 발생 후 회복(resilience)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건축도시분야는 이 4 분야에서의 미래 역할을 우선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 □ 건축도시분야를 위한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 우선순위

전문가들이 예측한 SDGs의 국내 정책에 미칠 영향력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앞에서 도출된 건축도시분야가 집중해야 하는 4분야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분야는 자연재해 예방 분야이다. 그러나 이 분야는 건축도시분야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큰 역할을 수행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자연재해 예방과 회복을 고려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정책적 변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반면에 공공장소 범죄예방과 불량주거지 개선의 경우 현재 이슈화되고 일정정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범죄예방의 경우 공공장소에 국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국적으로 CPTED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정정도 성과도 보이고 있다. 다만 아직 기존의 CPTED 사업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부족하며, 다양한 기법의 적용과 효과, 사업 지역의 인구, 지리, 사회, 문화적 차이에 의한 공통점과 차이점 검증 등의 분야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은 사회적 형평성 문제와 함께 현재 큰 사회적 화두이다. 또한 왜 SDGs 목표 11의 1번 세부목표가 불량 주거지 개선인가에 주목해야한다. 이는 주거환경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SDGs가 강조하는 것은 불량주거지도 문제이지만, 비계획적 정착지(informal settlements) 역시 개선의 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비계획적 정착지는 다양하겠지만, 대표적으로 고시원을 예로 들 수 있다. 고시원의 열악한 거주환경과 화재 등의 재난에 대한 부족한 대비

등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다. 눈에 직접 보이는 주거환경 불량지역 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같은 비공식적 주거지에 대한 개선에 대한 관심과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표 4-48]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와 지표의 국내 정책에 대한 영향력

변수	빈도	평균	표준 편차	SDGs 내용
목표11.6과 지표11.6.2 지표의 영향력	23	4.74	0.54	미세먼지
목표11.2와 지표11.2.1 지표의 영향력	23	4.17	0.65	편리한 대중교통
목표11.5와 지표11.5.1 지표의 영향력	23	4.09	1.13	자연재해 사망 및 실종자
목표11.3과 지표11.3.2 지표의 영향력	23	4.09	0.67	도시계획과 관리에 시민참여
목표11.7과 지표11.7.2 지표의 영향력	22	4.00	0.76	물리적 성적 희롱
목표11.1과 지표11.1.1 지표의 영향력	23	3.91	1.13	불량주거지 개선
목표11.b와 지표11.b.1 지표의 영향력	21	3.81	0.93	센다이 체제를 준수하는 지방 재난관리 전략
목표11.5와 지표11.5.2 지표의 영향력	21	3.81	1.33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목표11.7과 지표11.7.1 지표의 영향력	23	3.70	0.64	공공공간
목표11.b와 지표11.b.2 지표의 영향력	19	3.63	0.90	국가 및 지방 재난관리 계획
목표11.6과 지표11.6.1 지표의 영향력	23	3.52	1.20	고형 폐기물 처리
목표11.4와 지표11.4.1 지표의 영향력	23	3.52	0.90	문화와 자연유산 보호
목표11.c와 지표11.c.1 지표의 영향력	22	3.36	0.95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최빈국 지원
목표11.3과 지표11.3.1 지표의 영향력	23	3.09	1.16	인구성장과 토지 소요 비율
목표11.a와 지표11.a.1 지표의 영향력	22	2.82	1.40	지역개발계획

CPTED 사업은 일정 부분 불량주거지 개선과 연관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CPTED 사업이 낙후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량주거지 개선 사업과 CPTED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공공공간의 확대의 경우 단순히 공원 등의 공간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SDGs가 강조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공공공간의 제공에 있어 일정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즉 문제는 공급이 아니라 공공공간의 질의 문제이다. 질의 문제는 접근성이 포함되며, 특히 SDGs에서 강조하는 취약계층의 접근성의 문제이다. 따라서 노인, 어린이,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이 차

별 없이 공공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긴 했지만, 세부목표 11.c의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속가능한 건축물 건설 지원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 건축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야하는 세부목표이다. 현재는 그 중요성이 낮고, 제도적인 뒷받침도 되어 있지 않지만, 투자와 기술 개발 여하에 따라 ODA사업을 통해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과 충분한 인적지원, 그리고 정부의 ODA 정책에서의 배려가 전제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 □ 건축도시분야를 위한 SDGs 목표 11 달성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와 효과를 물어보았다. 비록 세부목표의 분야가 각각 다른 관계로 세부목표의 우선 정책을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도시계획 등 각 분야의 기본 계획의 수립보다는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세한 집행정책을 우선순위에 두었으며, 효과도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다([표4-49]).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계획의 부재로 인해 정책 목표 달성이나 수행이 힘든 단계는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관련 분야를 위한 기본계획은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그 계획의 집행은 별개의 문제였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기본계획 등의 계획 수립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후 순위에 두었고, 실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실행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따라서 전문가 조사의 결과에 따른 SDGs 달성을 위한 건축도시분야의 정책적 방향은 기존 기본계획 등의 계획을 보완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행 계획을 충실히 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정책의 실현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다음 장의 분야별 정책 제안 역시 이러한 정책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하였다.

[표 4-49] SDGs 목표 11의 분야별 우선 국내 정책 요약

SDG 분야	우선 국내 정책	효과 순위
세부목표 11.1	1. 사회주거(social housing) 확대정책 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택정책 3. 저소득층 주택 개량사업/지자체 집수리 지원 사업	3 1 2
세부목표 11.2	1.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2. 교통소외지역 및 사각지대 해소 3.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1 1 1
세부목표 11.3	1. 일회성 참여가 아닌 장기적인 숙의 과정을 가질 수 있는 참여제도로의 개선 2. 공간계획과 참여예산사업의 연계를 통한 예산권한 주민이양 확대 3.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	2 1 5
세부목표 11.4	1. 근대 문화재 복원 및 관련 인재 양성 2. 자연유산의 발굴 및 보존, 보호와 이를 위한 교육 3. 문화재별 스토리텔링 강화와 홍보	1 2 4
세부목표 11.5	1. 재난별 시나리오와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단계별 지역단위의 대응체계 구성 2. 방재의 관점에서 빈곤층과 취약층의 거주환경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 3. 주요시설 (댐, 제방 등)의 안전기준 강화 및 보강공사 실시	2 1 3
세부목표 11.6	1. 미세먼지 저감 정책 2. 미세먼지 발생 현황자료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 3. 석탄 기반 화력발전소 폐쇄 및 대체 계획(원자력 제외)	5 1 3
세부목표 11.7 (지표 11.7.1)	1. 근린 단위의 소규모 공원 및 녹지의 확보 정책 2. 공공공간의 적정 배치를 위한 설치가이드라인 강화 3. 보행자 중심도시 건설 지원	1 3 2
세부목표 11.7 (지표 11.7.2)	1. 야간에 도심 공원, 운동장 등에 대한 안전방범체계 구축 2. 장소, 범죄, 범죄 유형에 따른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사업의 다양화 3. 성폭력 범죄자 신상 공개 및 주민 알람 서비스/사후 관리 강화	1 2 3
세부목표 11.a	1. 인근 지자체의 통합된 광역계획 수립 의무화 2. 광역도시계획, 광역교통망 계획 등 광역권 계획 수립 3. 성장관리방안	4 1 4
세부목표 11.c	1. 적용 가능한 적정기술 및 현지에서의 기술 이전 2. 현지 자재 활용을 위한 원조자금의 건설 인프라 사업 비율 확대 3. 최빈국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공법 연구 지원	3 1 2



## 제5장 부문별 대응정책

1. 정책 기본방향 설정
2. 부문별 정책
3. 소결

### 1. 정책 기본방향 설정

제4장에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가 우리나라의 미래 정책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았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2030년의 분야별 상황이 현재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그 개선의 정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차이가 컸다. 또한 전문가들이 평가한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의 국내 정책에 대한 영향력 평가에서 역시 분야별로 그 차이를 뚜렷하게 보였다.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목표 11.6의 환경부문과 11.2의 대중교통 부문, 11.5의 자연재해, 11.7의 공공공간, 11.1의 불량주거개선이 영향력도 크고 변화도 클 분야였다.

SDGs 목표 11의 각 분야는 범위가 넓어 한 번에 일괄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힘든 사안들이다. 따라서 단계를 정하여 차분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건축·도시분야의 측면에서는 세부목표 11.1과 11.7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목표로 선정할 수 있었다. 이 두 분야는 지금 즉시 시행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단기 및 중기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11.5의 자연재해 예방 분야, 11.3과 11.a의 도시계획 및 주민참여와 광역도시계획은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이다. 다른 분야 역시 건축·도시분야와 직접적 연관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사안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단계별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 과제에서 제안하는 분야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전 작업이 있다. SDGs는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별로 각

각의 조직이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동력의 측면에서 SDGs 목표의 적용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관련 사안은 환경부가 주로 전담하고 있으나, 과거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관련 협의가 진행될 때는 주로 환경관련 이슈가 주제였기에 환경부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올해부터 출범하는 SDGs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단어는 동일하지만 그 속에 포함하는 사안은 환경, 경제, 정치, 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SDGs 그 자체의 국가 경영과 미래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므로 환경부 주도의 추진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상위의 기관이 총괄하는 것이 장기적인 면에서 적절하다.

SDGs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유기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에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SDGs 이행을 위해 범부처 차원 의견 및 정책 조율을 위한 기관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최고위급 정부 관료가 주관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도 기본방향에 대한 범부처 조율과 모니터링, 평가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타워로서 SDGs 정책 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관 또는 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그 밑에 각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부처별 업무 조율과 정책을 수행할 것을 전제로 분야별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였다.

다음 절에 제시될 부문별 정책은 설문조사 결과와 설문에 응한 전문가의 주관식 의견, 종합적인 자문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방향을 도출하였다. 분야별 제안 정책을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우선 제시하였다. 각 분야별 사업은 단기/중기/장기 사업 또는 정책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표현한 단기/중기/장기 사업은 관심정도에 따른 시기적 구분이다.

## 2. 부문별 정책

SDGs 목표 11이 다루는 여러 분야 중 세부목표 11.1과 11.5, 11.7, 11.c에 건축도시 분야의 측면에서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부목표 11.1의 주거환경 개선과 11.7의 안전한 공공장소 접근은 당면한 문제이며, 11.5의 자연재난 위험 감소는 도시계획의 측면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11.c의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속 가능한 건축물 건설을 위한 지원은 건축분야의 장래 먹거리가 될 분야이므로 장기적으로 ODA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 □ SDGs 세부목표 11.1(주택)을 위한 정책

#### 정책의 방향

1. 비공식주거시설에 대한 점검과 최저기준 제시 등을 통한 최저주거기준 대상 범위 확대
2. 임대주택 공급, 주거환경개선, 주택제량 사업 등을 통한 개선이 실제 저소득층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3. 주거급여제도 대상자의 실제 주거 수준 점검을 통한 주거비부담 경감과 최소한의 주택품질 보장제도 도입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 11.1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다. 이 문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의 정책으로 전문가들은 사회주거(social housing)의 확대를 강조하였다. 사회주거란 정부에서 주거취약계층에게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 또는 임차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주택으로 주거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이다. 사회주거의 시행은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요구한 우선 시행 정책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주거의 확대가 단순히 정부에서 집을 제공하는 수준의 정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주거의 확대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먼저 현재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불량주택 및 비공식 주거시설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이 필요한 주택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런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거 취약계층 역시 다양한 부류가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집을 개선할 수 있는 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량 주거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불량주거지를 임대해

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집 주인이 취약계층이라고 보기는 힘들며, 단순히 불량 주거지라는 이유로 주택을 개선해 주는 것은 정책의 목적에 맞지 않다. 단순히 불량주거지를 개선해주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불량 주택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량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을 골라 주택을 개선하는 사업은 지양되어야 한다.

사회주택물량의 확보 외에도 공공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최저 주거품질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민들의 주거환경 기준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달라지는 사항이다. 따라서 최저 주거품질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최저 주거품질의 기준은 기존의 최저 주거기준에서 제안하는 내용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SDGs는 주거지의 기본적인 서비스에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적인 서비스인 전기, 가스, 수도 및 하수도 시설 등에 대한 기준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이 기준을 적용한 적절한 주거지 모델을 제시할 필요해야 한다. 또한 이 기준을 적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임대료 지불 여력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적정 계층별 적정 임대료 역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 적정 임대료의 산정은 사회주거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 품질의 주택이라도 취약계층의 재정 여력에 따라 차별화된 임대료를 부과하고 2년마다 임대료를 다시 산정하여 형평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2트랙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부나 정부 산하 기관이 적정 물량의 임대주택(사회주택)을 확보하고 주거지의 기준과 임대료를 제시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임대하는 방안과 거주자와 주인이 별도인 불량주택에 대한 개선 지원을 해주되 주인에게서 일정 정도의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주거품질이 미달되는 주거지는 임대를 할 수 없거나 임대료를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 역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보유한 임대주택물량이 충분히 있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표 5-1] SDGs 세부목표 11.1을 위한 정책 또는 사업 제안

사업	개선 및 도출 내용	구분
불량 주택 및 비공식 주거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단위 개선 사업 물량 산정</li> <li>• 사업 대상 순위 선정</li> </ul>	단기
최저 주거품질 기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 주거품질 기준 제시</li> <li>• 최저 주거품질 기준에 따른 주택 모델 제시</li> </ul>	단기
사회주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층별 적정 주택 임대 가격 선정</li> <li>• 적정한 가격의 주택 제공</li> </ul>	중기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계량 사업 등 주거개선 사업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환경 개선</li> </ul>	중기

## □ SDGs 세부목표 11.2(교통)를 위한 정책

### 정책의 방향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강제성 확보 및 실질적인 재정 투입
2. 중소도시와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교통시설뿐만 아니라 시설까지의 접근성을 고려한 건축 및 도시 차원의 접근성 개선

세부목표 11.2의 핵심 요구 사항은 취약계층, 우리나라의 용어로 표현하면 교통약자에게 충분히 편리한 대중교통수단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과 더불어 교통소외 및 사각지대 해소와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맞춤형 교통서비스의 제공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꼽았다.

우리나라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2008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10년 가까운 계획 기간이 지나갔음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이용 편의가 큰 개선이 없는 현실은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는데 있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강제성이 없어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는 계획의 태생적 한계에 기인한다. 더불어 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자체가 정부의 사업 우선순위에 놓여 있지 않다.

지방 자치단체 사이에서도 도시 간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의 차이가 크다. 단적인 예로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이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저상버스의 경우 2014년 기준 서울의 경우 33.1%의 도입률을 보이지만, 타 지자체는 대체로 15~16%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적절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의 보다 큰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과 대상에 따라서는 대중교통 전체에 대한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보다는 특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 현재도 장애인 콜택시, 경기도의 파복버스 등 이용자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통수단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지 않아 요구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기 힘들다. 따라서 수요 맞춤형 교통

수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접근성의 측면에서 저상버스 등의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류소까지 이동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런 시설까지 이동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위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환경개선은 도시의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증진될 수 있다. 즉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건축설계 및 도시계획을 통해 전반적인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보행환경 개선은 세부목표 11.7의 공공공간의 접근성 향상과도 일맥상통하는 문제이다.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은 접근 시설 (보도, 경사로 등)의 설계 매뉴얼을 실제 교통약자들의 이동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개선되어야 가능하다.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 대도시나 도심 지역의 경우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적절한 대중교통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의 특성상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더 좋은 시설이 제공되는 경향이 있어 자연스럽게 교통소외지역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맞춤형 교통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맞춤형 교통수단은 단지 장애인 등 교통약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표 5-2] SDGs 세부목표 11.2를 위한 정책 또는 사업 제안

사업	개선 및 도출 내용	구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실효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강제성 부여</li> <li>• 적정 투자 자금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li> </ul>	중기
수요 맞춤형 교통수단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 교통수단 활성화 계획 수립</li> </ul>	단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개선을 위한 연구 및 매뉴얼 개선</li> </ul>	단기

□ SDGs 세부목표 11.3(도시개발)을 위한 정책

**정책의 방향**

1.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상시적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 보완
2. 정책적 방향성과 더불어 토지이용규제와 도시개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와 법적 구속력 제공

세부목표 11.3은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주민 참여 역량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도시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도시계획 수립 자체는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가는 의문인 상태이다.

도시계획이 실제 도시개발과 토지이용에 대한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본계획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계획이 계획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 신규토지공급을 제한할 정도의 내용적 구체성을 갖추기 힘들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장기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도시계획의 보완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도시계획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역시 현재의 주민참여제도는 형식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도시계획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에게 예산권한을 이양하는 방안과 도시계획의 사전 의견 취합 단계만이 아닌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민들에게 예산권한을 이양하는 문제는 지자체별로 여건이 다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 주민역량강화 제도의 점진적 개선, 예산권한 이양의 단계로 진행해야 한다.



[표 5-3] SDGs 세부목표 11.3을 위한 정책 또는 사업 제안

사업		구분
주민 참여 역량 강화 사업	• 주민의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단기
주민 참여 제도 개선	• 도시계획 단계별 주민 참여 방안 마련	중기
예산권한 이양	• 주민의 예산 의결권 부여	장기
기본계획의 구속력 강화 및 SDGs를 반영한 수립 지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계획 수립 지원</li> <li>• 개발남용을 막기 위한 법적 강제성 강화</li> </ul>	장기

□ SDGs 세부목표 11.4(문화와 자연유산)를 위한 정책

**정책의 방향**

1. 문화재 보호를 위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갈등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2. 문화재와 자연유산을 동시에 관리하기 위한 재정확보
3. 주변 환경과 문화재를 동시에 보존하기 위한 도시계획 및 관리정책과, 지역공동체와의 연계된 계획 수립 및 시행

세부목표 11.4는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 즉 예산투입을 강조하고 있다. 예산이 중앙정부의 예산뿐만 아니라 민간의 예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민간의 보존 노력은 민간의 자율적인 면이 있어 정부차원에서 간섭할 수는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과정에서 많은 충돌이 발생한다. 문화재는 공공의 자원이지만, 문화재가 있는 곳은 민간 소유인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민간 소유주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게 된다. 이런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에서 개인 소유주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반대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은 상호 존중받아야 하는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런 갈등해소를 위한 기준 설정과 비용 마련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비용은 문화재 관리를 위한 제정확보의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과 공동의 문화재와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Trust Fund의 구성도 가능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사람들의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사람들의 의식은 한 번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는 우리 모두의 자산’이라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사람들의 의식을 점진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문화재 보호를 위한 계획과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지만,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과 예산은 없었다. SDGs는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자연유산 역시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SDGs의 취지에 맞도록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동시에 포함하는 계획의 수립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건축도시분야의 관점에서는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종합적인 도시계

획 및 관리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 정책이 지역사회에 이익과 충돌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표 5-4] SDGs 세부목표 11.4를 위한 정책 또는 사업 제안

정책 또는 사업	개선 및 도출 내용	구분
자연 및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갈등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갈등 조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li> <li>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또는 기금 조성</li> </ul>	중기
자연문화유산 보호 정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문화재청과 비슷한 기구 구성</li> </ul>	중기
도시계획의 자연 및 문화유산 보호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 및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계획 항목 강화</li> </ul>	중기

□ SDGs 세부목표 11.5/11.b(자연재해)를 위한 정책

**정책의 방향**

1. 기존 인프라에 대한 실태조사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한 시설 보강
2. 사회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재해 방안과 대응 매뉴얼 개발
3. 재난재해 대응의 현장인 지방정부의 조직, 인력, 자원, 예산 확보
4. 방재와 안전의 경우 도시계획의 큰 틀에서 다루기 위한 부서 간 정책적 연계

세부목표 11.5와 11.b는 자연재난의 위험 감소라는 공통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단지 11.5는 피해 감소, 11.b는 피해감소를 위한 계획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결국 세부목표 11.b는 11.5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두 세부목표를 함께 다루었다.

세부목표 11.5의 경우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경주 지진 사태와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강도의 증가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의 규모가 커질 확률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체계적이지 못한 재난대응에 대한 국민적 불만 역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계획의 미비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못하는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계획으로 그치고 있으며, 재난별 대응을 위한 상세한 매뉴얼의 부재가 큰 문제이다.

단기적으로 먼저 수행해야하는 것은 기존 인프라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강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SDGs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한 재난대피 매뉴얼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자연재해별 대응 매뉴얼과 함께 사회취약계층별, 장애인, 학생,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상세한 계획과 대피 및 보호를 위한 매뉴얼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수행하기에는 지리적, 시간적으로 불합리하다.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응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의 재난 대응 체계 강화와 예산 증액, 지자체별 매뉴얼 작성 등 내실화가 필요하다. 초기대응은 해

당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해당 지자체의 요구나 예상되는 재해 규모에 따라 필요한 추가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방재와 안전의 문제는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방식은 항상 큰 피해를 수반한다. 따라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예방은 단순히 시설물을 추가하는 것으로는 달성하기 힘든 과제이다. 도시계획의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방재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따라서 자연재해 예방과 도시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계획 가이드를 도시계획 전문가와 방재 및 안전 전문가가 함께 연구하고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도적 보완은 관련 연구를 통해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재난과 안전에 대한 각종 가능성과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대응방법을 도시계획의 측면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SDGs의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5-5] SDGs 세부목표 11.5를 위한 정책 또는 사업 제안

정책 또는 사업	개선 및 도출 내용	구분
기존 인프라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 보강 및 사고 예방</li> </ul>	단기
재난 대응 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정부 및 지자체 업무 분담 매뉴얼 수립</li> <li>지자체별 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li> <li>재난 유형별, 취약계층별 대응 매뉴얼 수립</li> </ul>	단기
재난 대응 종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와 지자체의 업무 및 역할 규정</li> <li>재난 대응체계 구성</li> <li>지방정부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 증액</li> </ul>	단기
방재 및 안전을 위한 도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 방재를 위한 도시계획 요소 연구</li> <li>관련 시나리오 및 대응방법 연구</li> <li>도시 방재 및 안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의무화</li> </ul>	중기

□ SDGs 세부목표 11.6(도시환경)을 위한 정책

**정책의 방향**

1. 종합적인 상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
2.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유형별 관리방안 마련 및 지소적인 모니터링
3. 청정에너지와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지원 정책

세부목표 11.6은 환경보호를 위한 폐기물 감소와 자원 재활용,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자원재활용 측면에서는 대단히 앞서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OECD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독일 다음으로 자원의 재활용 비율이 높은 국가이다(독일 65%, 우리나라: 59%)<sup>41)</sup>. 그러나 문제라면 독일, 일본, 스위스 등의 국가에 비해 매립하는 쓰레기의 비중이 여전히 16%로 다소 높은 편이다. 따라서 현재 매립하고 있는 쓰레기의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쓰레기 배출 감소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현재의 매립 쓰레기를 재활용이나 다른 친환경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신기술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폐기물처리보다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는 더 우선되어야 하는 정책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폐기물 재활용은 타국가보다 앞서 있는 현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기물보다 대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SDGs의 지표가 제시하는 지표 항목은 미세먼지이지만, 미세먼지는 PM10과 PM2.5로 구분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PM10에 한해 특별광역시에 한정하여 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PM2.5의 경우 근래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면서 측정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완전하지 못한 상태이다.

실태파악의 측면에서 더욱 주요한 문제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실태 파악이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감소정책을 개발해야한다.

감소정책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별 관리방안과 모니터링을 수반해야 한다. 일회성

41) OECD (2015), *Environment at a Glance 2015 : OECD INDICATORS*, OECD, p.50.

모니터링이나 단속은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힘들다. 중국 베이징의 예를 들더라도 필요에 의해 중국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있으면 맑은 하늘을 유지하지만, 단속 기간이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다. 따라서 실재 미세먼지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의 수행이 중요하다.

미세먼지는 일반적으로 차량, 화력발전소가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즉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의 제거가 필요하며 이는 곧 신에너지 개발이 필연적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전기자동차나 청정에너지 기술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표 5-6] SDGs 세부목표 11.6을 위한 정책 또는 사업 제안

정책 또는 사업	개선 및 도출 내용	구분
미세먼지 발생 현황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태조사</li> </ul>	단기
미세먼지 저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별 대응 계획 수립</li> </ul>	단기
미세먼지 발생 유형 및 대응방안 연구 및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생 유형 분류</li> <li>유형별 대응 방안 마련</li> <li>미세먼지 감소 모니터링</li> </ul>	단기
신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정에너지 기술 R&amp;D</li> <li>신 자동차 연료 기술 R&amp;D</li> <li>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건설</li> <li>매립 폐기물 처리를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li> </ul>	중기

## □ SDGs 세부목표 11.7(공공공간과 녹지)을 위한 정책

### 정책의 방향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한 공공공간 계획 및 디자인 질 향상
2. 범죄 발생의 원인 분석 및 원인별 대책 마련
3. CPTED 사업의 사례 검증과 사업 확대 및 범죄 예방을 도시설계로 확대

세부목표 11.7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공간 확대와 접근성 향상 및 안전에 대한 문제이다. 접근성의 문제는 세부목표 11.2에서 언급한 보행환경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취약계층의 경우 공공공간의 부족도 문제일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접근성이 나쁘다는 문제가 더 클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공공시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편의시설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77.5%의 공공시설물에 접근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42)</sup>. 그러나 문제는 이용자의 체감 편의는 54.8%에 불과하였다. 이런 취약계층이 느끼는 체감 편의와 설치율의 차이는 설치기준이 적합하지 않던지, 설치시설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시설 디자인의 품질 향상이 필요하다.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은 건축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보행환경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불완전하면 실제 사용자 측면에서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정책적으로는 공공공간의 추가확보와 더불어 기존 시설물의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공간에서의 안전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문제이다. 최근에 발생한 여성대상 범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취약계층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다수의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 자체 사업도 있으나 대부분 중앙부처의 지원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부처가 비슷한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중복 수행의 문제와 적은 예산으로 수행함으로서 범죄예방사업이 실제 일정부분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전에는 사업의 확장이었다면 이제는 사업의 내실화가 필요한 단계이다.

사업의 내실화는 기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바탕으로 체계화가 동반되어야 한

42) 대한민국 정부관계부처 합동(2010),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계획 (‘10~’14)」.



다. 지역별, 범죄 유형별 분류와 관련 기법의 연구, 한정된 지역에 국한된 사업 범위에서 벗어나 도시계획과의 연계 등 지속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범죄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에 수행했던 사업의 효과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5-7] SDGs 세부목표 11.7을 위한 정책 또는 사업 제안

정책 또는 사업	개선 및 도출 내용	구분
공공시설 디자인 가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을 위한 유형별 시설 설계 연구 및 설치 가이드 매뉴얼 작성</li> <li>• 보행 중심 도시계획과 취약계층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li> </ul>	단기
범죄예방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 범죄예방사업 통폐합을 통한 사업 일원화</li> <li>• 지역별, 범죄 유형별 사업 매뉴얼 작성</li> <li>• 지역별, 범죄 유형별 예방 기법 연구</li> <li>• 도시계획에서는 범죄예방 관련 컨설팅 의무화</li> </ul>	단기

□ SDGs 세부목표 11.a(통합적 개발계획)를 위한 정책

**정책의 방향**

1. 개발에 의한 사회, 경제, 환경적 영향을 실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2. 주변 지역 및 주변 도시와 협력을 통해 상호 연계한 계획 수립

세부목표 11.a는 세부목표 11.3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목표로 처음에 제안되었으나, 수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변형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두 세부목표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단일 도시의 계획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계획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주변 간의 협력된 계획의 수립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난개발을 막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적용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주변지역과의 연계된 계획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성장관리방안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환경적 영향을 고려되고 반영된다고 보기 힘든 실정이다. SDGs는 기존에 자주 언급되던 환경영향을 확대하여 사회, 경제적 영향도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 사회, 경제적 영향 평가를 시행하여 실제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생활권의 광역화는 이미 보편적인 추세이므로 광역도시계획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도시계획의 위치를 어디에 놓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기존의 광역도시계획처럼 개발제한구역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지역별 도시계획에 맞춰 범위를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주변지자체가 협력하는 형태의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

[표 5-8] SDGs 세부목표 11.a를 위한 정책 또는 사업 제안

정책 또는 사업	개선 및 도출 내용	구분
환경, 사회, 경제 영향 평가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계획에 환경, 사회, 경제 영향 평가를 도입하여 반영</li> </ul>	장기
광역도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역도시계획의 의무화 추진</li> <li>광역도시계획의 위상 정립</li> </ul>	장기

## □ SDGs 세부목표 11.c(건축물 ODA)를 위한 정책

### 정책의 방향

1. ODA 지원 기구의 조직과 사업 실행 방식을 SDGs 체계에 맞추어 조정
2. 수원국 공동체와 지식공유체계 구축을 통해 현지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건축 방식 연구 및 개발
3.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지속가능한 ODA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재원 명시

세부목표 11.c의 경우 SDGs는 목표의 대상을 최빈개발도상국과 지속가능한 건축물로 정확히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ODA 정책상 현재는 실현하기 다소 힘든 항목이다.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예산도 문제이지만, 지속가능하며 복원이 가능한 건축물의 경우 전문성확보와 성과평가 체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원기구 조직과 사업실행 방식의 조정, 전문 인력 보강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KOICA 조직이 SDGs에 부합하도록 조정되었다는 가정 하에 지속가능한 건축방식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와 개발은 수원국 현지에 적합해야하며 현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수원국과의 협력관계 구축도 필수적이다. 또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등을 만들어 ODA 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sup>43)</sup>. 그러나 우리나라나 선진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는 최빈개발도상국에 적용하기 힘들므로 현지와 개별 국가의 여건에 맞도록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ODA를 위한 건축물 연구 개발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다.

지속가능한 건축물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KOICA의 ODA사업의 방향에 구체적인 내용과 재원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실현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재원이 없으면 실제 적용되기 힘든 사업이다. 따라서 향후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정계획의 수립이나 제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43) 방설아 외(2015), “Goal 11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김지현 외(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KOICA, pp. 234-235.

[표 5-9] SDGs 세부목표 11.c를 위한 정책 또는 사업 제안

정책 또는 사업	개선 및 도출 내용	구분
KOICA 조직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DGs체제 대응을 위한 조직 개편</li> <li>• 지속가능한 건축물 ODA 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 보강</li> </ul>	중기
친환경 ODA 건축물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DA사업을 위한 지역별 지속가능한 건축 방식 연구</li> <li>• 수원국과의 연구 네트워크 형성</li> <li>• ODA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도입</li> </ul>	장기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ODA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예산 반영</li> </ul>	중기

### 3. 소결

앞에서 부문별 정책을 살펴보았다. 부문별 정책은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정책의 우선 순위로 선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그 범위는 SDGs 목표 11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세부목표 11.6의 경우 도시의 환경문제 중 대기질과 폐기물에 대한 내용이다. 도시의 환경 문제는 대기와 폐기물 외에 수질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 될 수 있지만, 본 연구는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목표 11의 내용에만 집중하였다.

목표 11의 세부목표가 제시하고자하는 방향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부목표 11.1의 경우 주택에 대한 문제이지만, 세부목표가 언급하고 있는 주요 사항은 경제적으로 적정하면서, 안전하고, 기본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주택이며, 불량 주택을 이런 적정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지표는 단순히 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을 살펴볼 뿐이다. 세부목표가 실제 추구하고자하는 내용을 지표로 모두 측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본 연구 역시 각 세부목표의 지표를 대신할 만한 국내 지표에 관심을 두었으며, 선정된 국내 지표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

전문가 조사 역시 이러한 지표의 변화와 세부목표가 추구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킬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고 의견을 구하였다. 따라서 제안된 정책이 각 세부목표의 모든 요구 사항에 대응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대한 전문가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에게서 제안된 모든 정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우선순위에 맞추어 분야별 정책을 제안하였다. [표 5-10]은 SDGs 목표 11의 각 세부목표의 주요 내용과 본 연구에 사용된 국내 지표, 제안된 정책을 정리하였다.

[표 5-10] SDGs 세부목표별 내용과 제안 정책 일람

분야	세부목표의 주요 내용	SDGs 지표	선택된 한국 지표	제안 정책	비고
11.1 주택	경제적으로 적정한 수준	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사회주거 확대	-
	적절하고 안전			실태조사 최저 주거품질 기준 제정 및 모델 제시 주거환경개선, 주택계량사업	-
	기본서비스 접근			최저 주거품질 기준 제정	기존의 최저주거기준을 확대
11.2 교통	적절한 비용과 안전한 대중교통 확대	성별, 나이 장애에 따라 구분한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 가능한 인구 비율	대중교통 접근시간 비율	수요맞춤형 교통수단 활성화	교통약자 및 교통소외 지역에 대한 맞춤형 교통수단 확대
	도로안전 개선			보행환경 개선	교통사고는 타분야(3.6)에 서 취급
	교통약자 배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 시행의 강제성 부여 및 사업 예산 확보	-
	적절한 비용수준			-	-
11.3 도시 개발	지속가능한 도시화	인구성장 비율 대비 토지 소요 비율	1인당 시기화 면적 비율	SDGs를 반영한 계획 지침 마련 법적 강제성 부여	11.b의 영향평가 도입과 연관 됨
	참여역량 강화	정기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도시계획과 관리에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진 도시의 비율		주민참여 역량 강화 주민 참여 제도 개선 예산권한 이행	-
	계획과 관리	-		-	11.b의 영향평가 도입과 연관 됨

[표 5-10] SDGs 세부목표별 내용과 제안 정책 일람 (계속)

분야	세부목표의 주요 내용	SDGs 지표	선택된 한국 지표	제안 정책	비고
11.4 문화와 자연 유산	보호를 위한 노력	유산의 종류별, 정부의 단계별, 지출의 종류별, 민간 자금의 종류별로 구분된 모든 종류의 문화 및 자연 유산을 보호 및 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1인당 종합 비용	GDP 대비 문화재정 비율	자연 및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갈등 조정을 위한 위원회와 예산/기금 마련 자연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기구 강화 도시계획과 자연 및 문화유산 보호 연계	-
11.5/11.b 자연재해	사망자 및 피해자수 감소	10만 명당 사망자, 실종자, 영향을 받는 사람 수	사망실종자 수 이재민 수  GDP 대비 자연재해 피해액 비율	실태조사 및 위험시설 보강과 사고 예방 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	-
	경제적 손실 감소	GDP 대비 직접적인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실태조사 및 위험시설 보강과 사고 예방 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	-
	빈곤층 및 취약계층 보호			취약계층별 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	-
	통합 정책 및 계획	위험감소 및 복원력 전략을 이행중인 도시의 비율		방재 및 안전을 위한 도시계획	-
	관리 체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난위험 감소를 위한 전략이 있는 국가의 수		재난대응 종합 계획	-
11.6 도시환경	폐기물 관리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되는 도시의 고형폐기물 비율	일반폐기물 재활용 비율	매립폐기물 감소를 위한 신기술 개발	우리나라의 재활용 비율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므로 대기질 개선에 우선순위를 부여
	대기질	연평균 대기 미세먼지 수준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실태조사, 지자체별 대응 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신기술 개발	수질은 타분야(3.9)에 서 취급

[표 5-10] SDGs 세부목표별 내용과 제안 정책 일람 (계속)

분야	세부목표의 주요 내용	SDGs 지표	선택된 한국 지표	제안 정책	비고
11.7 공공공간 및 녹지	접근성 향상	모두에게 개방된 도시의 개발된 지역 평균 비율	1인당 공공공간의 면적  공공장소 발생 성범죄 및 폭력 사건 비율	공공시설 디자인 가이드	-
	안전 향상	과거 1년 동안의 물리적 성적 희롱의 피해자		범죄예방 사업	-
	취약계층 고려	-		취약계층을 고려한 공공시설 디자인 및 보행환경 개선	-
11.a 통합적 개발계획	도시와 주변부 연계성 강화	인구증가와 자원수요를 융합한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을 도입한 도시에 사는 인구비율	도시계획 수립지역에 사는 인구 비율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계획에 환경/사회/경제 영향 평가 도입	도시계획에 환경/사회/경 제 영향 평가 도입은 11.3의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연관 됨
11.c 건축물 ODA	재정보조	지속가능 건축물 지원을 위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 비율	-	KOICA 조직 개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사업과 예산 반영	사업을 위해 KOICA의 조직과 전문인력 보강이 우선되어야 함
	기술보조			KOICA 조직 개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사업과 예산 반영 친환경 ODA 건축물 R&D	
	최빈 개발도상국			KOICA 조직 개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사업과 예산 반영	



## 제6장 결론

1. 연구의 결과 요약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 1. 연구의 결과 요약

#### 1) 전문가들이 평가한 SDGs 세부목표의 중요성과 정책우선 순위

##### □ 건축도시분야를 위한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 우선순위

전문가들은 국내 유사지표가 전반적으로 2030년까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국내 지표값의 변화로 판단하면 SDGs 지표 11.1.1의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11.4.1의 자연 및 문화자원 관련 사업, 11.6.2의 미세먼지 농도 저감, 11.7.1의 공공공간의 확대, 11.7.2의 공공장소에서의 범죄 예방에서 큰 변화가 기대되었다.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 중 건축도시분야와의 연관성 측면에서 세부목표 11.1의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분야와 세부목표 11.7의 공공공간의 확대(지표 11.7.1)와 공공장소에서의 범죄예방(지표 11.7.2)이 중요하며, 세부목표 11.5의 자연재해 예방의 경우 장기적으로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이룩해야 하는 과제이므로 미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대 지표와 전문가 의견을 통한 판단으로는 건축도시분야가 집중해야 하는 4분야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분야는 세부목표 11.5의 자연재해 예방 분야이다. 그러나 이 분야는 건축도시분야의 입장에서 지금 당장 큰 역할을 수행하기에 곤란하다.

반면에 세부목표 11.7의 공공장소 범죄예방(지표 11.7.2)과 세부목표 11.1의 불량주거지 개선의 경우 현재 이슈화되고 일정정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범죄예방의 경우 공공장소에 국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국적으로 CPTED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

며, 일정정도 성과도 보이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은 사회적 형평성 문제와 함께 현재 큰 사회적 화두이다. 또한 왜 SDGs 목표 11의 1번 세부목표가 불량 주거지 개선인가에 주목해야한다. CPTED 사업의 위치적 특성상 불량주거지 개선과 연관되어 있어 불량주거지 개선 사업과 CPTED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공공공간의 확대의 경우 단순히 공원 등의 공간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으며, SDGs에서 강조하는 취약계층의 접근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 어린이,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공공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긴 했지만, 세부목표 11.c의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속가능한 건축물 건설 지원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 건축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야하는 세부목표이다.

#### □ 건축도시분야를 위한 SDGs 목표 11 달성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전문가들이 판단한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은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등 각 분야의 기본 계획의 수립보다는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세한 집행정책을 우선순위에 두었으며, 효과도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경우 관련 분야를 위한 기본계획은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그 계획의 집행은 별개의 문제였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기본계획 등의 계획 수립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후 순위에 두었고, 실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실행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따라서 전문가 조사의 결과에 따른 SDGs 달성을 위한 건축도시분야의 정책적 방향은 기존 기본계획 등의 계획을 보완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행 계획을 충실히 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정책의 실현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2) SDGs 목표 11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안

SDGs 목표 11의 각 분야는 범위가 넓어 개별 사안별로 각각의 조직이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SDGs 이행을 위해 범부처 차원 의견 및 정책 조율을 위한 기관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최고위급 정부 관료가 주관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도 기본방향에 대한 범부처 조율과 모니터링, 평가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타워로서 SDGs 정책 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관 또는 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그 밑에 각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부처별 업무 조율과 정책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SDGs 목표 11이 도시의 다양한 면을 포함하고 있지만, 건축도시분야의 측면에서는 4가지 부문에 조금 더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였다. 이 4가지 분야를 위한 추진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6-1]).

#### □ SDGs 세부목표 11.1(주택)

불량주거지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전국단위에 불량 주택 및 비공식 주거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전체 물량을 파악하고, 그 정도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한다. 중기적으로 주거지의 최저품질 기준을 정하여 적절한 개선 모델을 제시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최저주거품질의 기준 마련과 더불어 취약계층의 임대료 지불 여력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적정 계층별 적정 임대료 역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 품질의 주택이라도 취약계층의 재정 여력에 따라 차별화된 임대료를 부과하고 일정 기간마다 임대료의 재산정을 통해 형평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사업을 2트랙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부나 정부 산하 기관이 적정 물량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주거지의 기준과 임대료를 제시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임대하는 방안과 거주자와 주인이 별도인 불량주택에 대한 개선 지원을 해주되 주인에게서 일정 정도의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주거품질이 미달되는 주거지는 임대를 할 수 없거나 임대료를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 역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보유한 임대주택물량이 충분히 있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표 6-1] SDGs 세부목표 중 주요 추진분야의 정책 또는 사업 제안

관련SDG 세부목표	정책 또는 사업	개선 및 도출 내용	구분
11.1 주택	불량 주택 및 비공식 주거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단위 개선 사업 물량 산정</li> <li>사업 대상 순위 선정</li> </ul>	단기
	최저 주거품질 기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저 주거품질 기준 제시</li> <li>최저 주거품질 기준에 따른 주택 모델 제시</li> </ul>	단기
	사회주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층별 적정 주택 임대 가격 선정</li> <li>적정한 가격의 주택 제공</li> </ul>	중기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계량 사업 등 주거개선 사업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환경 개선</li> </ul>	중기
11.5/11.b 자연재해	기존 인프라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 보강 및 사고 예방</li> </ul>	단기
	재난 대응 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정부 및 지자체 업무 분담 매뉴얼 수립</li> <li>지자체별 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li> <li>재난 유형별, 취약계층별 대응 매뉴얼 수립</li> </ul>	단기
	재난 대응 종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와 지자체의 업무 및 역할 규정</li> <li>재난 대응체계 구성</li> <li>지방정부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 증액</li> </ul>	단기
	방재 및 안전을 위한 도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 방재를 위한 도시계획 요소 연구</li> <li>관련 시나리오 및 대응방법 연구</li> <li>도시 방재 및 안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의무화</li> </ul>	중기
11.7 공공공간 및 녹지	공공시설 디자인 가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약계층을 위한 유형별 시설 설계 연구 및 설치 가이드 매뉴얼 작성</li> <li>보행 중심 도시계획과 취약계층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li> </ul>	단기
	범죄예방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사 범죄예방사업 통폐합을 통한 사업 일원화</li> <li>지역별, 범죄 유형별 사업 매뉴얼 작성</li> <li>지역별, 범죄 유형별 예방 기법 연구</li> <li>도시계획에서는 범죄예방 관련 컨설팅 의무화</li> </ul>	단기
11.c 건축물 ODA	KOICA 조직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DGs체제 대응을 위한 조직 개편</li> <li>지속가능한 건축물 ODA 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 보강</li> </ul>	중기
	친환경 ODA 건축물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DA사업을 위한 지역별 지속가능한 건축 방식 연구</li> <li>수원국과의 연구 네트워크 형성</li> <li>ODA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도입</li> </ul>	장기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한 ODA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예산 반영</li> </ul>	중기

#### □ SDGs 세부목표 11.5(자연재해)

자연재난 위험 감소를 위해 단기적으로 기존 인프라 시설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를 위한 사전 예방,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대응 매뉴얼과 중앙 및 지자체 업무 분담 및 대응 매뉴얼 작성,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성과 관련 예산 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재난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내실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중기적으로는 도시계획의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방재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따라서 자연재해 예방과 도시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계획 가이드를 도시계획 전문가와 방재 및 안전 전문가가 함께 연구하고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도적 보완은 관련 연구를 통해 검증이 필요하다.

#### □ SDGs 세부목표 11.7(공공공간과 녹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공간 확대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먼저 공공시설 디자인의 품질 향상이 필요하다.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은 건축물에 부착된 시설물과 보행환경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불완전하면 실제 사용자 측면에서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정책적으로는 공공공간의 추가확보와 더불어 기존 시설물의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공간에서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다수의 지자체에서 중복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 범죄예방환경개선(CPTED)사업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사업의 내실화는 기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바탕으로 체계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지역별, 범죄 유형별 분류와 관련 기법의 연구, 한정된 지역에 국한된 사업 범위에서 벗어나 도시계획과의 연계 등 지속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 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일관된 사업의 방향 설정과 체계적인 집행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 □ SDGs 세부목표 11.b(건축물 ODA)

지속가능한 건축물 지원을 위한 ODA사업은 현 여건상 단기간에 추진하기는 힘들다. 아직 최빈개발도상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적용할 만한 지속가능한 건축물 기법에 대한 연구도 불충분하며 인력 역시 불충분하다. 더욱이 현재 ODA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변화 역시 동반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추진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우선적으로 지원기구 조직과 사업실행 방식의 조정, 전문 인력 보강 등이 KOICA 조직을 SDGs에 부합하도록 조정한 후, 지속가능한 건축방식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더불어 ODA를 위한 지속가능한 건축물의 실제 적용을 위해서 향후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정계획의 수립이나 제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내용과 재원이 분명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

이전의 MDGs와 달리 SDGs는 그 대상 범위가 대단히 넓어졌다. 먼저 해당되는 국가가 저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MDGs에서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도시분야가 하나의 목표로 설정되었다. 도시분야에 대한 목표 설정으로 인해 SDGs는 필연적으로 국내의 건축 및 도시 정책에 큰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영향이 언제 얼마만큼 발휘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쉽게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예측의 불확실성은 SDGs 체제가 이미 출범하였지만, 아직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 공고히 자리 잡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SDGs의 세부지표 역시 이런 맥락에서 처음 SDGs가 출범할 때 발표되었던 것과 큰 변화를 겪었으며, 본 연구를 구상하던 당시와 과정에서도 변화하였다. 특히 목표 11의 경우 그 변화가 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관련 부분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SDGs의 출범으로 인해 시민단체의 활발한 논의와 달리 정부기관은 다소 대응이 미온적이었다. 이는 아직 UN내에서도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실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지표와 관련해서는 아직 국내에서 정확하게 활용가능한 지표가 발표되지도 않은 실정이며 UN-IAEG 역시 개별 국가별로 SDGs의 지표 중 수집 가능한 것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sup>44)</sup> 따라서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연구를 수행하면서 가장 큰 한계는 역시 지표의 불확실성과 국내 유사지표의 제한이

---

44) UN-IAEG의 SDGs indicator를 살펴보면, 열람할 수 있는 지표가 제한적임.  
<http://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었다. SDGs가 제시한 세부목표별 지표 중에서 국내에서 바로 취득이 가능한 지표는 사실상 전무하였으며, 이에 다양한 유사지표를 취하거나 변형하여야 했다. 이는 결국 SDGs의 세부목표가 의도하는 것과는 다소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이 각 유사지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부분적으로 SDGs가 추구하는 내용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지표의 불확실성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은 문제에 기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범죄 자료의 경우 단편적인 수치만을 통계로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더 세밀한 것들이다. 세밀한 자료를 재조합하거나 분석하면 SDGs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범죄 자료에 근접하게 도출할 수 있다.

두 번째 중요한 한계는 정책분야에서 기존 국내정책이 SDGs를 위해 수립된 정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을 조사하고 제시하였지만, 이 역시 SDGs와 부합된다고 보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전문가들의 입장도 기본적으로 제시된 현 정책이 SDGs 목표 달성에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중립적인 또는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제안한 각종 정책과 기존 정책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효과와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따라서 SDGs에 더 부합되는 정책 발굴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제시된 정책의 위계가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중요하였다. 각 분야별로 다른 항목을 포괄하는 정책이 상위에 위치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정교하게 설문을 구성해야 하겠다.

또한 UN이 목표나 지표를 제시하는 목적은 이 목표나 지표를 기반으로 각국의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길 바라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광범위한 정책조사 및 연구가 향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의 선정에도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의 전문가 pool은 SDGs에 대해 알고 있는 국내외 연구기관, 교수 등으로 구성하였지만, 이들 사이에서도 SDGs에 대한 지식의 차이, 또한 각 분야별 지식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연구의 근원적인 한계일수도 있겠지만, 향후연구에서는 좀 더 정확한 전문가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DGs의 각 목표와 목표의 세부목표는 상호간의 연관성이 깊다. 본 연구는 목표 11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으나, 타 목표의 세부목표 중 도시와 연관된 항목이 다수 존재

한다. 그러나 시간적 제약과 SDGs 세부목표별 지표의 변화로 인해 추가적인 연관성 분석과 연관된 세부목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연구를 수행의 기본 목표는 SDGs의 건축 및 도시분야에 대한 영향력 분석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목표 11에 제한을 두었으나, 향후 연관된 타 목표의 세부목표에 대한 영향력 분석 역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SDGs 세부목표 사이의 상호 연관성과 영향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UN은 SDGs와 관련하여 개별국가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각 국가는 자신들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거나 향후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 SDGs를 활용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의 방향을 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보유 자료와 정책을 공개하고, 시민사회의 충분한 공감대위에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SDGs 지표의 의미는, 단순히 현재 있는 자료를 재가공해서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자료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상인(2005), “UN SDGs의 한국화 방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요 국가계획의 보완 방향과 통합운영 방안”, 컨퍼런스 :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 한국 국가경영을 위한 활용방안과 국제개발협력 2.0의 모색」, 2015년 8월 24일.
- 강상인 외(2015), 「Post-2015 SDGs 대응 녹색경제 이행 전략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43-0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국가지표체계(2016), “사회부문”, 「국가주요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PotalMain.do>
- 국가지표체계(2016), “주거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PotalMain.do>
- 국가지표체계(2016), “환경”, 「국민 삶의 질 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PotalMain.do>
- 국가지표체계(2016),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 「녹색성장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PotalMain.do>
- 국가지표체계(2016), “대중교통수송분담률”,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PotalMain.do>
- 국가지표체계(2016), “환경”,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PotalMain.do>
- 국가지표체계(2016), “사회-주거”,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PotalMain.do>
- 국토교통부(2011),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
- 국토교통부(2015), 「2015년 주택종합계획」.
- 국토교통부(2015), 「2015 국토교통통계연보」.
- 국토교통부(2016), 「2016년 주거종합계획」.
- 국토교통부(2016), “도시계획현황”,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http://stat.molit.go.kr/portal/main/portalMain.do>
- 국토교통부, 「통계연보」, 각 연도(2007~2013).
- 국토해양부(2011),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1-490호」,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8285](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8285)

- 권영상 외(2015), 「건축산업 고도화를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 정책방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김용태(2016), “SDGs의 이행을 위한 주요 과제와 국회의 역할”, 세미나 : 「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 2016년 11월 8일.
- 김인(2015), 「KOICA 중장기전략에서의 SDGs 주류화 방안」, KOICA.
- 김지현(2014),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 1 : SDGs초안 분석”. 「개발과 이슈」, 제19호, KOICA.
- 김지현(2015), “Post-2015 개발의제 동향 연구 2: Post-2015 의제에 관한 UN 사무총장 종합보고서 분석”, 「개발과 이슈」, 제22호, KOICA.
- 김지현 외(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KOICA.
- 대한민국 정부관계부처 합동(2010), 「제3차 편익증진 국가종합5개년계획 (‘10~’14)」.
- 대한민국 정부관계부처 합동(2016),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p.30.
- 대한민국 정부관계부처 합동(2014),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 대한민국정부(20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 문도운(2015), 「알기 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 박경애(2016), “지속가능발전목표 모니터링을 위한 글로벌 지표 마련”, 「국가통계연구 소식」, 제9호.
- 방설아 외(2015), “Goal 11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김지현 외(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KOICA.
- 성장환 외(2015),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추진에 따른 LH사업 연계화방안 연구」, 연구지원 2015-56, 토지주택연구원.
- 손동필 외(2015),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 연구」, AURI-기본-2015-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양수길(2016),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한국SDSN)」, 발표자료, 2016년 6월 30일.
- 오정화 외(2015),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 대한 국가통계 대응방안 수립」, 통계개발원.
- 윤봉현(2016), “SDGs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세미나 : 「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 2016년 11월 8일.
- 이용우 외(2009), 「국토 대예측 연구(I)」, 국토연 2009-20-1, 국토연구원.
- 이용우 외(2010), 「국토 대예측 연구(II)」, 국토연 2010-59, 국토연구원.
- 이용우 외(2011), 「국토 대예측 연구(III)」, 국토연 2011-64, 국토연구원.
- 임원혁(2012), “새천년개발목표의 교훈과 2015년 이후 개발의제에의 함의”, 「KDI FOCUS」, 제25호, pp. 1~8.
- 통계청(2015), “도소매서비스업”,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tat.go.kr/>
- 통계청(2016), “대중교통현황조사”,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tat.go.kr/>

- 통계청(2016), “일반적 범죄분석”,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tat.go.kr/>
- 통계청(2016), “도시계획현황”,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tat.go.kr/>
- 통계청(2016), “인구가구”,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tat.go.kr/>
- 환경부(2014), “유엔 “지속가능발전종합목표(SDGs)” 채택 대비 한국형 체계 마련을 위한 포럼 개최”, 「정책브리핑 환경부」, 2014년 12월 4일 개최,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24679>
- 환경부(2015), 「대기환경연보 2014」.
-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3), “주요국 주택가격 비교와 시사점”, 「KB 경영정보리포트」, 2013-11호.
- KEI(2015),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KEI 포커스」, 3(1), p.3.
- MEDTL(2010),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2010 -> 2013: Towards a green and fair economy*, <http://www.developpement-durable.gouv.fr/IMG/pdf/NSDSp60.pdf>
- Defra(2005), *The UK Government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9412/pb10589-securing-the-future-050307.pdf](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9412/pb10589-securing-the-future-050307.pdf)
- Destatis(2016), *Sustainable Development in Germany - Indicator Report 2014*, [https://www.destatis.de/EN/Publications/Specialized/EnvironmentalEconomicAccounting/Indicators/2014.pdf?\\_\\_blob=publicationFile](https://www.destatis.de/EN/Publications/Specialized/EnvironmentalEconomicAccounting/Indicators/2014.pdf?__blob=publicationFile)
- EU(2006), *Review of the 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EU SDS)-Renewed Strategy*, <http://register.consilium.europa.eu/doc/srv?l=EN&f=ST%2010917%202006%20INIT>
- EU(2016), *EU Policy on the Urban Environment - Overview*, [http://ec.europa.eu/environment/urban/index\\_en.htm](http://ec.europa.eu/environment/urban/index_en.htm)
- OECD (2015), *Environment at a Glance 2015 : OECD INDICATORS*, OECD.
- Sachs et al.(2016), *Preliminary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DG) Index and Dashboard. Draft version*, SDSN working paper, p.17.
- Ford, L.(2014), “UN secretary general says no plans to reduc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Guardian*, 2014.12.4., <https://www.theguardian.com/>
- Larsson, N.(2016), “Seven ideas on how to finance the SDGs”, *The Guardian*, 2016.1.26, <https://www.theguardian.com/>
- UN(2014), *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 Synthesi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Post-2015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New York: The United Nations, p.27.
- UN(2014), *Urbaniz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owards a New United Nations Urban Agenda*, CEB/2014/HLCP-28/CRP.5, New York: The United Nations.
- UN(2016), *Final list of propos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New York: The

- United Nations, <http://unstats.un.org/sdgs/indicators/Official%20List%20of%20Proposed%20SDG%20Indicators.pdf>
- UN(2016), “SDG Indicators – Global databas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 UN(2016), *Executive Summary of the Report of the German Government to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in July 2016*, The Federal Government of Germany,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0374GER\\_Report\\_to\\_HLPF\\_2016\\_Exec\\_Summary.pdf](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0374GER_Report_to_HLPF_2016_Exec_Summary.pdf)
- UN(2016),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xecutive Summary*, The Government of France,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0620France%20SDG%20-%20Executive%20Summary.pdf>
- UN HABITAT(2015), *The City Prosperity Initiative*, New York: The United Nations.
- UN HABITAT(2016), *SDG Goal 11 Monitoring Framework*, New York: The United Nations.

## A study on Strategies for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Industry unde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Son, Dong Pil  
Oh, Sungho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having 17 goals and 169 targets have started from January, 2016 to replace MDG. The value of SDGs is to provide a new paradigm which shows the right direction for solving internal and external matters of individual countries and organizations for the next 15 years. SDGs include various global issues and one of the issues is related with sustainable cities. It is obvious that SDGs will make an influence to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industry in near future. So it is required to estimate the impact of SDGs to the industry and policies of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and seek a right direction of direction of the policies in accordance with SDGs.

In South Korea, SDGs related strategies and policies were led by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Prime Minister's Secretariat,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Statistics Korea. However, most of government policies and strategic plans had been made before starting of SDGs, so they are not exactly relevant to SDGs. By this reason, new policies and strategic plans will be produced or existing policies and plans will be amended to reflect SDGs.

Unlike the government, civil societies of South Korea are more active than the government to implement SDGs into various parts of Korea such as economy, environment, society, matters related with North Korea etc. Their activities now form the early stage of governance and it is believed that they set up their roles for implementing SDGs in a right direction.

In terms of foreign countries in preparing SDGs, several countries such as Germany, France, Japan established a high level committee for coordinating SDGs -matters among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monitoring and evaluating implementation of SDGs.

SDGs indicators are still unsettled and they are not reached to an agreement about which proposed indicators will be adoptable by the UN members. Furthermore, many indicators are methodologically not available. So, forecasting the impact of SDGs with the indicators is not possible in reality. However, there are several similar indicators which Statistics Korea collects. Therefore the study uses these similar indicators for forecasting the impact of SDGs for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industry. The study limits the scope of its context to SDGs Goal 11 which for sustainable and resilient cities.

Similar indicators available in Korea are summarized as follows:

A proportion of population living in slum for SDGs indicator 11.1.1 can be assumable using 'Rate of households under minimum housing standard'. The rate has decreased since 2006 and was 978,000 households in 2014.

For SDGs indicator 11.2.1, 'Time to access public transportation' can be used. in 2014, 44.3% of people still spent more than 10 minutes on foot to reach a facility for taking public transportation.

There are not enough indicators available for SDGs indicator 11.3.1 and 11.3.2. For the 11.3.1, 'rate of urbanization' might be usable with 91.7% in 2014. On the other side, there is no clear similar indicator for the 11.3.2 at the moment.

There is 'Budget for cultural heritage' as a similar indicator for SDGs indicator 11.4.1. The budget was around 0.3% of GDP and 1.24% of total government budget in 2014.

There are several statistical data regarding with natural disasters such as 'frequency of natural disasters', 'damage of human life by natural disasters' and

‘physical damage by natural disasters’. However, they can be used as similar indicators for SDGs indicator 11.5.1 and 11.5.2.

It is possible to assume how waste is well treated and re-used with ‘recycling rate of general waste’ for SDGs indicator 11.6.1. In total, 84% of general waste in Korea was recycled in 2013. For SDGs indicator 11.6.2, ‘annual mean level of PM10 for key cities’ is available. However, the 11.6.2. also requires the data of PM2.5 as well, but the data for PM2.5 is not available in Korea yet.

There is no statistical data for public spaces and the scope term of public space is still unclear. So it should be clearly defined before collecting data for SDGs indicator 11.7.1. Moreover, for a similar indicator, several possible data should be re-constructed for the study.

There are a few criminal data for SDGs indicator 11.7.2, although they are not well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f the 11.7.2. In terms of sexual crimes, the rate has increased since 2011.

The meaning of SDGs indicator 11.a.1 is unclear and there is no similar data available at the moment.

SDGs indicator 11.b.1 and 11.b.2 investigate how man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their own strategy for disaster risk reduction. However, these indicators are mainly for developing and low-developed countries. For Korea,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such strategies, but they may need to be modifi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Sendai Framework.

SDGs indicator 11.c.1 emphasizes financial support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for the construction projects using local materials. There is no data available as ODA statistics do not collect data by the origins of construction materials.

The study conducted questionnaire survey with experts by email from August 18, 2016 to September 27, 2016. The survey adopted forecasting trends and Delphi methods and carried out by five times. The questionnaires collected 7 topics including

Influence of the targets of SDGs goal 11, Selection of similar indicators for SDGs goal 11, Forecasting for the selected similar indicators by experts, Propriety of existing national policies for individual targets regarding SDGs, Policy suggestions for individual targets regarding SDGs,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for individual targets, Hierarchy of the policies for individual targets.

Among the collected data, forecasting for the selected similar indicators by experts and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for individual targets were repeatedly questioned using Delphi method.

Experts who participated the survey forecasted that most of the similar indicators will change to a positive direction. according to the predictions, specially the four SDGs indicators are expected to have greater changes by 2030 including Indicator 11.1.1: improvement of housing conditions, Indicator 11.4.1: culture and natural heritage related issues, Indicator 11.6.2: reduction of the levels of fine particulate matters, Indicator 11.7.1: expansion of public spaces and Indicator 11.7.2: Crime prevention at public spaces.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four sectors may be strategically more focused than the other sectors in the point of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including Target 11.1 (Indicator 11.1.1): improvement of housing conditions, Target 11.7 (Indicator 11.7.1): expansion of public space and Target 11.7 (Indicator 11.7.2): Crime prevention at public spaces and Target 11.5 (Indicators 11.5.1 and 11.5.2): risk reduction of natural disasters.

In terms of target 11.5: risk reduction of natural disasters, it is important integrate risk reduction strategy of natural disasters> However, the integration will be not easy and will take some time.

On the other hand, Crime prevention (Indicator 11.7.2 of Target 11.7) and improvement of slums (Target 11.1) are on-going issue at the moment. The two sectors are closely related as many crime prevention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relatively aged and poor areas in cities. Moreover, target 11.1 is an directly



involved issue for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In terms of Target 11.7 and Indicator 11.7.1: expansion of public spaces, the policies for it need to focus on building safe and accessible public spaces for relatively weak groups in our society such as the disabled, the elderly, children and women.

In addition, although it was relatively low in impact, Target 11.c: finance supports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for sustainable and resilient building is also an sector that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industry should pay attention. Depending on the increase of budget and change of strategy in ODA, this target may become a chance to expand the business to the least developed or low developed countries.

In terms of the hierarchy of policies for the individual targets of SDGs Goal 11, the experts put executive policies on higher ranks than planning. It is because that Korea has well organised countries and most related strategies or plans. However, execution of the plans are a different story from making plans.

SDGs has various topics in it and it is key to cooperate by the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However, at the moment there is not a single control tower to coordinate them for the purpose. So the study proposes to establish a new presidential organization. The study also suggests various policies and projects for architecture and urban planing industry for the next 15 years under SDGs.

Finally, SDGs is a kind of guidance for the setting up a direction and goals of each nation for transforming their society into more sustainable future. The Korean government also need to make proper strategies and plans to implement SDGs into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For this reason, open-discussions with all possible participants are necessary and it is also needed to open all possible data that the government has to the public.

**Key words : SDGs, Goal 11, Sustainable city, Future forecast, Policy, Slum, Housing, CPTED**



## 부록

1. SDGs 목표 11 원문
2. 설문조사지

### 1. SDGs 목표 11 원문

Goal 11.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Goals and targets (from the 2030 Agenda)	Indicators
11.1 By 2030, ensure access for all to adequate, safe and affordable housing and basic services and upgrade slums	11.1.1 Proportion of urban population living in slums, informal settlements or inadequate housing
11.2 By 2030, provide access to safe, affordable, accessible and sustainable transport systems for all, improving road safety, notably by expanding public transport,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needs of those in vulnerable situations, women, children,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lder persons	11.2.1 Proportion of population that has convenient access to public transport, by sex, age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11.3 By 2030, enhance inclusive and sustainable urbanization and capacity for participatory, integrated and sustainable human settlement planning and management in all countries	11.3.1 Ratio of land consumption rate to population growth rate 11.3.2 Proportion of cities with a direct participation structure of civil society in urban planning and management that operate regularly and democratically
11.4 Strengthen efforts to protect and safeguard the world's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1.4.1 Total expenditure (public and private) per capita spent on the preservation,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all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by type of heritage (cultural, natural, mixed and World Heritage Centre designation), level of government (national, regional and local/municipal), type of expenditure (operating expenditure/ investment) and type of private funding (donations in kind, private non-profit sector and sponsorship)

Goals and targets (from the 2030 Agenda)	Indicators
11.5 By 2030, significantly reduce the number of deaths and the number of people affected and substantially decrease the direct economic losses relative to global gross domestic product caused by disasters, including water-related disasters, with a focus on protecting the poor and people in vulnerable situations	11.5.1 Number of deaths, missing persons and persons affected by disaster per 100,000 people 11.5.2 Direct disaster economic loss in relation to global GDP, including disaster damage to critical infrastructure and disruption of basic services
11.6 By 2030, reduce the adverse per capita environmental impact of cities, including by paying special attention to air quality and municipal and other waste management	11.6.1 Proportion of urban solid waste regularly collected and with adequate final discharge out of total urban solid waste generated, by cities 11.6.2 Annual mean levels of fine particulate matter (e.g. PM2.5 and PM10) in cities (population weighted)
11.7 By 2030, provide universal access to safe, inclusive and accessible, green and public spaces, in particular for women and children, older perso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11.7.1 Average share of the built-up area of cities that is open space for public use for all, by sex, age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11.7.2 Proportion of persons victim of physical or sexual harassment, by sex, age, disability status and place of occurrence, in the previous 12 months
11.a Support positiv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links between urban, peri-urban and rural areas by strengthening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planning	11.a.1 Proportion of population living in cities that implement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plans integrating population projections and resource needs, by size of city
11.b By 2020, substantially increase the number of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adopting and implementing integrated policies and plans towards inclusion, resource efficiency, mitigation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resilience to disasters, and develop and implement, in line with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11.b.1 Proportion of local governments that adopt and implement local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ies in line with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11.b.2 Number of countries with national and local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ies
11.c Support least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rough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in building sustainable and resilient buildings utilizing local materials	11.c.1 Proportion of financial support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that is allocated to the construction and retrofitting of sustainable, resilient and resource-efficient buildings utilizing local materials

## 2. 설문조사지

### 1) 1차 설문조사 안내서

#### 1.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와 지표 현황 개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 9월 UN총회에서 향후 15년간 국제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세계 각국 정상회의 합의입니다. 17대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SDGs는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Leave No One Behind)발전’을 표방하며, 국제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당면 도전과제들을 인식하고,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SDGs와 관련하여 중앙 정부차원에서는 아직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총리실과 환경부, 외교부, 통계청이 SDGs와 관련하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실의 경우 현재 SDGs와 관련하여 별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표명하였으며, 환경부 역시 SDGs가 포함하는 다방면의 주제에 비해 환경관련 사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경우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하는 ODA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UN에서 SDGs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산하 통계개발원은 SDGs의 세부목표의 각 지표와 관련하여 UN 전문가 그룹 회의를 통해 지표 선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SDGs는 사람,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의 5가지 측면에 기반을 두고 17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7개 목표 각각은 세부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세부목표는 목표 달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SDGs 17개 목표는 개별적으로 독립된 것이 아닌,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지표 역시 일부는 여러 세부목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관심분야인 건축 및 도시분야의 경우 SDGs 목표 11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도시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표 11에 포함된 분야는 주택, 도시계획, 교통, 재난·재해 복구, 대기오염 및 재활용 등의 환경 문제, 자연

및 문화 유산 등의 문제 등 다양한 분야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록 표1-1]).

[표 부록1-1]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와 지표

SDGs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11.1	<u>2030년까지 모두에게 적절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립하고 도시 불량주거지 개선</u> 11.1.1 도시 불량주거지나 비계획적 정착지, 불충분한 주거지에 사는 도시 인구 비율
11.2	<u>2030년까지 도로안전개선과 대중교통 확대를 통해 모든 사람들, 특히 취약계층과 여성, 아동 그리고 장애인 및 노약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비용수준과 높은 접근성의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 제공</u> 11.2.1 성별, 나이, 장애에 따라 구분한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 가능한 인구 비율
11.3	<u>2030년까지 모든 국가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역량을 강화하고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간 정주계획과 관리 증진</u> 11.3.1 인구성장 비에 대한 토지 소요 비율 11.3.2 정기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도시계획과 관리에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진 도시의 비율
11.4	<u>전 세계 문화와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 강화</u> 11.4.1 유산의 종류별(문화, 자연, 혼합, 세계 유산 센터 지정), 정부의 단계별(국가, 지방, 자치단체), 지출의 종류별 (운영 비용/ 투자), 민간 자금의 종류별 (기부, 민간 비영리부문, 후원)로 구분된 모든 종류의 문화 및 자연 유산을 보호 및 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1인당 종합 비용 (공공 및 민간 포함)
11.5	<u>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물 관련 재난을 포함한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사망자 및 피해자 수를 현저히 줄이며 GDP 대비 경제적 손실 감소</u> 11.5.1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실종자, 재난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 수 11.5.2 핵심 인프라 시설과 기본적인 서비스 중단을 포함하는 GDP 대비 직접적인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11.6	<u>2030년까지 대기질과 지자체 또는 다른 주체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인구 1명 당 도시에 미치는 환경의 부정적인 효과 감소</u> 11.6.1 정기적으로 수거되고 적절한 방법으로 최종 처리 되는 도시에서 배출되는 고형폐기물 비율 11.6.2 연평균 대기 미세먼지 수준 (PM2.5 와 PM10 (인구에 의한 가중치))
11.7	<u>2030년까지 특히 여성, 아동, 노인과 장애인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접근가능한 공공공간과 녹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하고 보편적인 접근권 제공</u> 11.7.1 성별, 나이, 장애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공의 이용을 위해 개방된 도시의 개발된 지역의 평균 비율 11.7.2 과거 1년 동안 성별, 나이, 장애 정도, 발생장소 등에 의해 구분된 물리적 성적 희롱의 피해자 비율

- 11.a 국가개발계획 또는 지역개발계획 강화를 통해 도시와 도시주변부지역 및 지방과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연계성 강화 지원  
 11.a.1 도시의 크기에 따라 구분한 인구증가 및 이에 대한 자원수요를 융합한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을 도입한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
- 11.b 2020년까지 통합, 효율적인 자원 활용,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지향하는 통합 정책과 계획이 반영되고 적용된 도시 및 정주지의 수를 증가시키고 센다이체제의 후속논의에 발맞추어 모든 관리 수준에서 통합 재난위험관리 체제를 개발하고 실행  
 11.b.1 2015-2030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센다이체제의 후속 논의에 발맞추어 지역 재난 위험 감소 전략을 수립하고 적용한 지방정부의 비율  
 11.b.2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전략이 있는 국가의 수
- 11.c 지역 자재를 활용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건축물을 구축함에 있어 재정적, 기술적 보조를 통한 최빈개발도상국 지원  
 11.c.1 현지 자재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으며 자원 효율적인 건축물의 건설 및 개조에 할당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비율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와 지표가 UN에서 제시되었지만, 각 지표가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거나 관련 지표를 수집하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표 11.2의 첫 번째 지표는 ‘성별, 나이, 장애인에 따라 구분한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 가능한 인구 비율’ 인데 국내에서는 주로 대중교통 접근 시간을 통계자료로 수집하며, 성별, 나이, 장애인에 따른 상세한 비율은 제공하고 있지 않아 SDGs에서 제시하는 지표와 완벽히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SDGs의 지표의 경우 완전히 확정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수정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변경되거나 갱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표 11.b.2의 경우 기존에는 ‘도시발자국에 따른 인구밀도’를 지표로 제시하였으나 현재는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난 대응 계획을 수립한 국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표의 내용뿐만 아니라 세부목표 당 지표의 수 역시 2개에서 일부는 1개로 줄어 들었습니다. 2016년 8월 현재 SDGs 목표 11과 관련된 세부지표의 경우 UN의 통계 전문가 협의(IAEG-SDGs)에서 지표 11.1.1, 11.5.1, 11.5.2, 11.6.2, 11.b.2가 제공가능한 지표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11.6.2를 제외하고는 SDGs에서 제시한 지표가 아닌 유사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SDGs의 지표가 아직 완전하게 정립되지 못하였으며,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1.6.2의 대기 미세먼지 수준과 11.b.2에서 국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11b.2의 경우 단지 국가단위에서 기본계획이 있다는 의미이지, SDGs 11.b에서 요구하는 중앙과 지방 정부가 각각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SDGs 목표 11과 관련된 세부지표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2. 설문지의 목적과 작성 방법

본 설문은 기존에 제시된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와 지표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관련 지표를 제시하고 이들 지표가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적절한 지표인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들 세부목표와 지표가 향후 국내 건축·도시분야에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지 판단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크게 Part 1과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art1은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와 지표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art2는 SDGs의 전반적인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Part 1은 각 세부목표와 지표별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A)는 지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제시된 지표 중 SDGs의 세부목표와 지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선정하시고,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2개 이상의 지표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시면 모두 선택하여 주시고 각각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국내 관련 지표가 제시되지 않은 문항의 경우 제안하시고 싶은 지표가 적으시고, 역시 이유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Part 1의 두 번째 질문(B)는 A에서 사용된 SDGs 세부목표와 지표 (국내 지표가 아님)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지에 대해 표시하시고,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작성 예시가 있습니다.

Part 1 예시. 세부목표 11.2와 지표 11.2.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2. 2030년까지 도로안전개선과 대중교통 확대를 통해 모든 사람들, 특히 취약계층과 여성, 아동 그리고 장애인 및 노약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비용수준과 높은 접근성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제공

지표 11.2.1 성별, 나이, 장애에 따라 구분한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 가능한 인구 비율 (Proportion of population that has convenient access to public transport, by sex, age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A. 세부목표 11.2를 평가하고 지표 11.2.1을 대표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국내 관련 지표를 선택하시고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국내 관련 지표	선택
대중교통 접근 수단 및 대중교통 접근 시간	○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	
기타 제안을 적어주십시오 ( )	
<p>선택의 이유 :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교통 접근 수단으로 도보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보의 평균 속도와 대중교통 접근 시간을 이용하여 개략적인 거주 거리를 계산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도보로 7~10분 정도의 거리는 대략적으로 0.5km 정도이므로, 대중교통 접근 시간이 10분 이내의 비율을 0.5km 이내에 위치한 인구로 추정할 수 있음. 도보로 10분이내의 거리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일정부분 용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 그러나 성별, 나이, 장애에 대한 상세 조사는 보장될 필요가 있음</p>	

B. 세부목표 11.2와 지표 11.2.1의 영향력의 정도를 평가하시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영향력 평가 스케일	1: 단기, 장기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2: 장기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3: 정책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4: 현재는 정책적 관심이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5: 단기 및 장기 모두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영향력	1	2	3	40	5
선택의 이유 :	SDGs를 어떻게 적용할지 아직 정부차원에서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빈도 증가와 버스 노선 조정을 통해 보다 접근이 쉽도록 정책을 조정할 것으로 보임. 영향은 지하철 등의 대용량 대중교통 수단보다는 버스 서비스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또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장애인에 대한 고려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				

Part 2는 SDGs체제가 갖는 의미를 알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SDGs체제가 향후 건축도시분야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으로 Part 1과 마찬가지로 선택 후 이유 제시(질문 21~22)와 의견 제시(질문 23~2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art 2 예시. SDGs 체제의 출범이 건축·도시분야 정부 및 민간부문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회가 될 것이다. ② 위기가 될 것이다.

국제 수준에 맞추기 위해 정부가 SDGs를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며, 민간 차원에서 요구도 클 것으로 판단 됨. 특히 도시의 슬럼지역에 대한 관심과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건축 도시분야에서 향후 해야할 일이 증대 할 것으로 판단.

### 3. 설문 일정

1차	8월 18일~23일 (서류상 8월 23일로 되어 있음)
2차	8월 25일~30일 (서류상 8월 30일로 되어 있음)
3차	9월 01일~06일 (서류상 9월 6일로 되어 있음)
4차	9월 08일~20일 (서류상 9월 20일로 되어 있음)
5차	9월 22일~27일 (서류상 9월 27일로 되어 있음)

마지막으로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문참여에 따른 자문비 지급을 위한 서류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첨부한 문서인 ‘SDGs 설문조사\_자문료지급서류’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5차에 걸친 설문에 모두 해주실것이라 믿고 한 번에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2) SDGs 1차 설문지

### [SDGs 대비 건축·도시분야 대응방향 연구 델파이 1차 설문]

안녕하세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손동필입니다.

저는 2016년 기본과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대비 건축·도시분야 대응방향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전문가 조사는 최근 UN에서 제안한 SDGs 중 목표 11의 세부목표와 관련 지표가 향후 국내 건축 및 도시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델파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델파이 방법은 추정하려는 문제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익명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수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델파이 방법은 전문가의 반복적인 참여가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1차 설문은 개방형 설문을 통해 연구 주제에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2~4차 설문에서 세부 문제의 변화 가능성을 측정합니다.

본 설문은 총 5회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1차 설문은 UN에서 제시한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와 지표와 관련이 있는 국내 지표를 선정하는 것과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전제 조건 없이 수렴하기 위해서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설문은 주관식에 중점을 두고, 자문위원 의견을 듣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의 내용은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밝혀 드립니다.

세부목표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적절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립하고 도시 불량주거지 개선

(Proportion of urban population living in slums or informal settlements or inadequate housing)

국내 관련 지표	선택
주택보급률	
인구 천명당 주택수	
주거환경만족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비율	
주거유형, 소득 계층 및 지역별 주거만족도	
기타 제안을 적어주십시오 ( )	
<b>선택의 이유 :</b>	

B. 세부목표 11.1과 지표 11.1.1의 영향력의 정도를 평가하시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영향력 평가 스케일	1: 단기, 장기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2: 장기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3: 정책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4: 현재는 정책적 관심이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5: 단기 및 장기 모두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영향력	1	2	3	4	5
선택의 이유 :					

질문 2. 세부목표 11.2와 지표 11.2.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2. 2030년까지 도로안전개선과 대중교통 확대를 통해 모든 사람들, 특히 취약계층과 여성, 아동 그리고 장애인 및 노약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비용수준과 높은 접근성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제공

지표 11.2.1 성별, 나이, 장애에 따라 구분한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가능한 인구 비율  
(Proportion of population that has convenient access to public transport, by sex, age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A. 세부목표 11.2를 평가하고 지표 11.2.1을 대표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국내 관련 지표를 선택하시고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국내 관련 지표	선택
대중교통 접근 수단 및 대중교통 접근 시간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	
기타 제안을 적어주십시오 ( )	
선택의 이유 :	

B. 세부목표 11.2와 지표 11.2.1의 영향력의 정도를 평가하시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영향력 평가 스케일	1: 단기, 장기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2: 장기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3: 정책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4: 현재는 정책적 관심이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5: 단기 및 장기 모두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영향력	1	2	3	4	5
선택의 이유 :					



질문 3. 세부목표 11.3과 지표 11.3.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간 정주계획과 관  
리 증진

지표 11.3.1 인구성장 비에 대한 토지 소요 비율 (Ratio of land consumption  
rate to population growth rate)

A. 세부목표 11.3을 평가하고 지표 11.3.1을 대표할 수 있는 국내 지표는 현재  
없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지표 제안 :

제안의 이유 :

B. 세부목표 11.3과 지표 11.3.1의 영향력의 정도를 평가하시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영향력 평가 스케일	1: 단기, 장기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2: 장기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3: 정책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4: 현재는 정책적 관심이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5: 단기 및 장기 모두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영향력	1	2	3	4	5
선택의 이유 :					

질문 4. 세부목표 11.3과 지표 11.3.2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간 정주계획과 관  
리 증진

지표 11.3.2 정기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도시계획과 관리에 시민사회가 참여  
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진 도시의 비율 (Proportion of cities with a direct  
participation structure of civil society in urban planning and management that  
operate regularly and democratically)

A. 세부목표 11.3을 평가하고 지표 11.3.2를 대표할 수 있는 국내 지표는 현재  
없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지표 제안 :

제안의 이유 :

B. 세부목표 11.3과 지표 11.3.2의 영향력의 정도를 평가하시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영향력 평가 스케일	1: 단기, 장기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2: 장기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3: 정책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4: 현재는 정책적 관심이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5: 단기 및 장기 모두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영향력	1	2	3	4	5
선택의 이유 :					

질문 5. 세부목표 11.4와 지표 11.4.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4. 전 세계 문화와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 강화

지표 11.4.1 유산의 종류별(문화, 자연, 혼합, 세계 유산 센터 지정), 정부의 단계별(국가, 지방, 자치단체), 지출의 종류별 (운영 비용/ 투자), 민간 자금의 종류별 (기부, 민간 비영리부문, 후원)로 구분된 모든 종류의 문화 및 자연 유산을 보호 및 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1인당 종합 비용 (공공 및 민간 포함) (Total expenditure (public and private) per capita spent on the preservation,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all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by type of heritage(cultural, natural, mixed and World Heritage Centre designation), level of government (national, regional and local/ municipal), type of expenditure (operating expenditure/ investment) and type of private funding (donations in kind, private non-profit sector and sponsorship)

A. 세부목표 11.4를 평가하고 지표 11.4.1을 대표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국내 관련 지표를 선택하시고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국내 관련 지표	선택
문화 재정 총액	
GDP 대비 문화 재정 비율	
기타 제안을 적어주십시오( )	
선택의 이유 :	

B. 세부목표 11.4와 지표 11.4.1의 영향력의 정도를 평가하시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영향력 평가 스케일	1: 단기, 장기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2: 장기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3: 정책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4: 현재는 정책적 관심이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5: 단기 및 장기 모두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영향력	1	2	3	4	5
선택의 이유 :					

질문 6. 세부목표 11.5와 지표 11.5.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물 관련 재난을 포함한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사망자 및 피해자 수를 현저히 줄이며 GDP 대비 경제적 손실 감소

지표 11.5.1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실종자, 재난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 수 (Number of deaths, missing persons and persons affected by disaster per 100,000 people)

A. 세부목표 11.5를 평가하고 지표 11.5.1을 대표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국내 관련 지표를 선택하시고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국내 관련 지표	선택
자연재해 발생 건수와 피해액	
사망 실종자수 및 이재민 수	
기타 제안을 적어주십시오( )	
선택의 이유 :	

B. 세부목표 11.5와 지표 11.5.1의 영향력의 정도를 평가하시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영향력 평가 스케일	1: 단기, 장기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2: 장기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3: 정책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4: 현재는 정책적 관심이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5: 단기 및 장기 모두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영향력	1	2	3	4	5
선택의 이유 :					

질문 7. 세부목표 11.5와 지표 11.5.2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물 관련 재난을 포함한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사망자 및 피해자 수를 현저히 줄이며 GDP 대비 경제적 손실 감소

지표 11.5.2 핵심 인프라 시설과 기본적인 서비스 중단을 포함하는 GDP 대비 직접적인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Direct disaster economic loss in relation to global GDP, including disaster damage to critical infrastructure and disruption of basic services)

A. 세부목표 11.5를 평가하고 지표 11.5.2를 대표할 수 있는 국내 지표는 현재 없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지표 제안 :
제안의 이유 :

B. 세부목표 11.5와 지표 11.5.2의 영향력의 정도를 평가하시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영향력 평가 스케일	1: 단기, 장기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2: 장기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3: 정책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4: 현재는 정책적 관심이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5: 단기 및 장기 모두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영향력	1	2	3	4	5
선택의 이유 :					



질문 8. 세부목표 11.6과 지표 11.6.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6. 2030년까지 대기질과 지자체 또는 다른 주체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인구 1명 당 도시에 미치는 환경의 부정적인 효과 감소

지표 11.6.1 정기적으로 수거되고 적절한 방법으로 최종 처리 되는 도시에서 배출되는 고형폐기물 비율 (Proportion of urban solid waste regularly collected and with adequate final discharge out of total urban solid waste generated, by cities)

A. 세부목표 11.6을 평가하고 지표 11.6.1을 대표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국내 관련 지표를 선택하시고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국내 관련 지표	선택
폐기물 발생량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일반폐기물 재활용 비율	
기타 제안을 적어주십시오 ( )	
<b>선택의 이유 :</b> 	

B. 세부목표 11.6과 지표 11.6.1의 영향력의 정도를 평가하시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영향력 평가 스케일	1: 단기, 장기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2: 장기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3: 정책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4: 현재는 정책적 관심이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5: 단기 및 장기 모두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영향력	1	2	3	4	5
선택의 이유 :					

질문 9. 세부목표 11.6과 지표 11.6.2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6. 2030년까지 대기질과 지자체 또는 다른 주체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인구 1명 당 도시에 미치는 환경의 부정적인 효과 감소

지표 11.6.2 연평균 대기 미세먼지 수준 (PM2.5 와 PM10 (인구에 의한 가중치)) (Annual mean levels of fine particulate matter (e.g. PM2.5 and PM10) in cities (population weighted))

A. 세부목표 11.6을 평가하고 지표 11.6.2를 대표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국내 관련 지표를 선택하시고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국내 관련 지표	선택
미세먼지(PM10) 농도 (특별·광역시에 한정하여 자료 수집 )	
대기오염도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납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오염 정도; 특별광역시에 한정하여 수집)	
기타 제안을 적어주십시오 ( )	
선택의 이유 :	

B. 세부목표 11.6과 지표 11.6.2의 영향력의 정도를 평가하시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영향력 평가 스케일	1: 단기, 장기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2: 장기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3: 정책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4: 현재는 정책적 관심이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5: 단기 및 장기 모두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영향력	1	2	3	4	5
선택의 이유 :					

질문 10. 세부목표 11.7과 지표 11.7.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 아동, 노인과 장애인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접근가능한 공공공간과 녹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하고 보편적인 접근권 제공

지표 11.7.1 성별, 나이, 장애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공의 이용을 위해 개방된 도시의 개발된 지역의 평균 비율 (Average share of the built-up area of cities that is open space for public use for all, by sex, age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

A. 세부목표 11.7을 평가하고 지표 11.7.1을 대표할 수 있는 국내 지표는 현재 없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지표 제안 :
선택의 이유 :

B. 세부목표 11.7과 지표 11.7.1의 영향력의 정도를 평가하시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영향력 평가 스케일	1: 단기, 장기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2: 장기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3: 정책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4: 현재는 정책적 관심이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5: 단기 및 장기 모두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영향력	1	2	3	4	5
선택의 이유 :					

질문 11. 세부목표 11.7과 지표 11.7.2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 아동, 노인과 장애인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접근가능한 공공공간과 녹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하고 보편적인 접근권 제공

지표 11.7.2 과거 1년동안 성별, 나이, 장애 정도, 발생장소 등에 의해 구분된 물리적 성적 희롱의 피해자 비율 (Proportion of persons victim of physical or sexual harassment, by sex, age, disability status and place of occurrence, in the previous 12 months )

A. 세부목표 11.7을 평가하고 지표 11.7.2를 대표할 수 있는 국내 지표는 현재 없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지표 제안 :
제안의 이유 :

B. 세부목표 11.7과 지표 11.7.1의 영향력의 정도를 평가하시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영향력 평가 스케일	1: 단기, 장기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2: 장기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3: 정책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4: 현재는 정책적 관심이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5: 단기 및 장기 모두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영향력	1	2	3	4	5
선택의 이유 :					

질문 12. 세부목표 11.a와 지표 11.a.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a. 국가개발계획 또는 지역개발계획 강화를 통해 도시와 도시주변부 지역 및 지방과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연계성 강화 지원

지표 11.a.1. 도시의 크기에 따라 구분한 인구증가 및 이에 대한 자원수요를 융합한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을 도입한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 (Proportion of population living in cities that implement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plans integrating population projections and resource needs, by size of city)

A. 세부목표 11.a을 평가하고 지표 11.a.1을 대표할 수 있는 국내 지표는 현재 없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지표 제안 :
제안의 이유 :

B. 세부목표 11.a와 지표 11.a.1의 영향력의 정도를 평가하시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영향력 평가 스케일	1: 단기, 장기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2: 장기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3: 정책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4: 현재는 정책적 관심이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5: 단기 및 장기 모두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영향력	1	2	3	4	5
선택의 이유 :					

질문 13. 세부목표 11.b와 지표 11.b.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b. 2020년까지 통합, 효율적인 자원 활용,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지향하는 통합 정책과 계획이 반영되고 적용된 도시 및 정주지의 수를 증가시키고 센다이체제<sup>45)</sup>의 후속논의에 발맞추어 모든 관리 수준에서 통합 재난위험관리 체제를 개발하고 실행

지표 11.b.1. 2015-2030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센다이 체제의 후속 논의에 발맞추어 지역 재난 위험 감소 전략을 수립하고 적용한 지방정부의 비율 (Proportion of local governments that adopt and implement local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ies in line with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A. 세부목표 11.b를 평가하고 지표 11.b.1을 대표할 수 있는 국내 지표는 현재 없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지표 제안 :

제안의 이유 :

45)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B. 세부목표 11.b와 지표 11.b.1의 영향력의 정도를 평가하시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영향력 평가 스케일	1: 단기, 장기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2: 장기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3: 정책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4: 현재는 정책적 관심이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5: 단기 및 장기 모두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영향력	1	2	3	4	5
선택의 이유 :					



질문 14. 세부목표 11.b와 지표 11.b.2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b. 2020년까지 통합, 효율적인 자원 활용,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지향하는 통합 정책과 계획이 반영되고 적용된 도시 및 정주지의 수를 증가시키고 센다이 체제의 후속논의에 발맞추어 모든 관리 수준에서 통합 재난위험관리 체제를 개발하고 실행

지표 11.b.2.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전략이 있는 국가의 수  
(Number of countries with national and local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ies)

A. 세부목표 11.b를 평가하고 지표 11.b.2를 대표할 수 있는 국내 지표는 현재 없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지표 제안 :
제안의 이유 :

B. 세부목표 11.b와 지표 11.b.2의 영향력의 정도를 평가하시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영향력 평가 스케일	1: 단기, 장기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2: 장기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3: 정책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4: 현재는 정책적 관심이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5: 단기 및 장기 모두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영향력	1	2	3	4	5
선택의 이유 :					

질문 15. 세부목표 11.c와 지표 11.c.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c. 지역 자재를 활용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건축물을 구축함에 있어 재정적, 기술적 보조를 통한 최빈개발도상국 지원

지표 11.c.1. 현지 자재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으며 자원 효율적인 건축물의 건설 및 개조에 할당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비율 (Proportion of financial support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that is allocated to the construction and retrofitting of sustainable, resilient and resource-efficient buildings utilizing local materials )

A. 세부목표 11.c를 평가하고 지표 11.c.1을 대표할 수 있는 국내 지표는 현재 없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지표 제안 :
제안의 이유 :

B. 세부목표 11.c와 지표 11.c.1의 영향력의 정도를 평가하시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영향력 평가 스케일	1: 단기, 장기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2: 장기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3: 정책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4: 현재는 정책적 관심이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5: 단기 및 장기 모두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영향력	1	2	3	4	5
선택의 이유 :					

## Part 2 : SDGs의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질문

다음의 질문 21~24는 SDGs 체제가 전반적으로 건축도시분야와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객관식과 주관식 혼용 또는 주관식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질문 16.** SDGs 체제의 출범이 국내외 건축·도시분야에 대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①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②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질문 16의 답변의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질문 17.** SDGs 체제의 출범이 건축·도시분야 정부 및 민간부문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기회가 될 것이다. ② 위기가 될 것이다.

질문 17의 답변의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질문 18.** 기존의 MDGs가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에 초점을 맞춘 것에 반해 SDGs 체제는 선진국 역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SDGs가 선진국 사이 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저개발국) 사이에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SDGs체제에서 국가간 경쟁이 발생이 하다면 어떤 종류의 경쟁이 발생할 것이며 주요 경쟁 국가는 어떤 국가 일지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질문 19.** SDGs체제는 사회·경제·문화 및 거버넌스 분야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SDGs체제의 이행은 필연적으로 국내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의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도시분야에 한정하여 어떠한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3) SDGs 2차 설문지

#### [SDGs 대비 건축·도시분야 대응방향 연구 델파이 2차 설문]

안녕하세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손동필입니다.

저는 2016년 기본과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대비 건축·도시분야 대응방향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전문가 조사는 최근 UN에서 제안한 SDGs 중 목표 11의 세부목표와 관련 지표가 향후 국내 건축 및 도시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델파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델파이 방법은 추정하려는 문제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익명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수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델파이 방법은 전문가의 반복적인 참여가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1차 설문은 개방형 설문을 통해 연구 주제에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2~4차 설문에서 세부 문제의 변화 가능성을 측정합니다.

본 설문은 총 5회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2차 설문**은 1차 설문에서 선택된 국내지표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추세연장법을 활용하여 2030년까지 변화를 제시하고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과 1차 설문에서 응답자분들이 제시하신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적절한 지표를 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전제 조건 없이 수렴하기 위해서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설문은 주관식에 중점을 두고, 자문위원 의견을 듣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의 내용은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밝혀 드립니다.

## 설문 작성 방법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은 총 12개 대 문항과 세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번 문항은 1차 설문에서 질문된 지표를 중 다수의 응답자가 선택한 지표를 바탕으로 추세연장법을 실시하여 얻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응답자께서는 2030년까지의 추세를 확인하시고 질문 A와 B에 응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A는 2030년까지의 예측치가 적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B는 설문 참가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2030년의 각 항목별 예상 수치입니다. 예상되는 수치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8~12번 문항은 1차 설문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제시된 지표 중 SDGs의 세부 목표와 지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선정하시고,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2개 이상의 지표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시면 모두 선택하여 주시고 각각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질문 1. 세부목표 11.1과 지표 11.1.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적절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립하고 도시 불량주거지 개선

지표 11.1.1 도시 불량주거지나 적합하지 않는 주택에 사는 도시 인구 비율  
(Proportion of urban population living in slums or informal settlements or inadequate housing)

세부목표 11.1을 평가하고 지표 11.1.1을 대표하기에 적절한 지표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비율”이 다수의 의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래에 과거의 변화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의 추세가 예측되었습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추세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격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지수함수로 계산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추세연장법에 의해 판단하면 2030년에는 약 15 만 가구만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일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A. 추세연장법에 의해 도출한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값이 적절한지에 대해 판단해 주시고,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	적절	매우 적절
이유				

B. 응답자께서 생각하는 2030년의 적절한 값을 예측하여 주십시오.

응답자 예측하는 값 (2030년 기준)	
--------------------------	--



질문 2. 세부목표 11.2와 지표 11.2.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2. 2030년까지 도로안전개선과 대중교통 확대를 통해 모든 사람들, 특히 취약계층과 여성, 아동 그리고 장애인 및 노약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비용수준과 높은 접근성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제공

지표 11.2.1 성별, 나이, 장애에 따라 구분한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가능한 인구 비율  
(Proportion of population that has convenient access to public transport, by sex, age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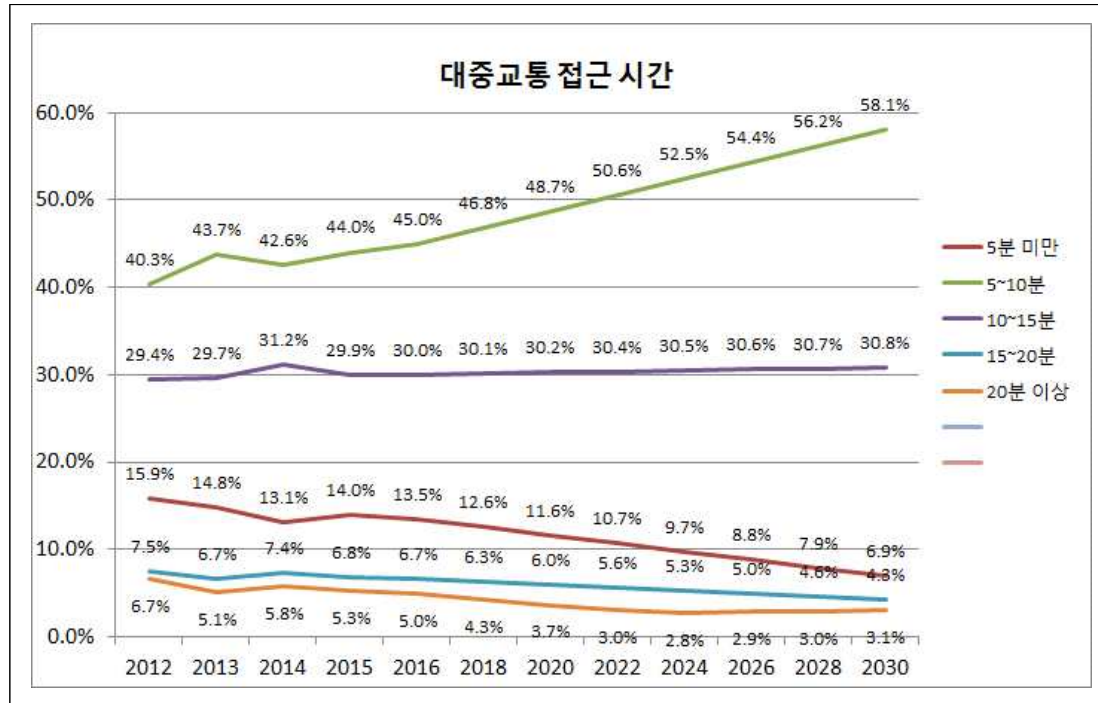
세부목표 11.2를 평가하고 지표 11.2.1을 대표하기에 적절한 지표로 “**대중교통 접근수단 및 대중교통 접근 시간**”이 다수의 의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래에 과거의 변화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의 추세가 예측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 수단의 경우 지속적으로 보도가 93%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참조). 반면에 대중교통 접근 시간의 경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5~10분 사이가 가장 많으며, 10~15분, 5분미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 시간의 추세를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년차별 자료를 바탕으로 선형함수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조). 5~10분의 접근 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에 5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10~15분은 31%에서 현상 유지, 5분미만은 7%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표 대중교통 접근 수단 비율				
접근 수단	2012	2013	2014	2015
도보	93.30%	95.30%	93.50%	93.50%
승용차	3.00%	3.00%	4.10%	4.60%
자전거	1.70%	1.40%	1.50%	1.30%
택시	—	1.30%	0.80%	0.60%

다음장에 그림 있음



A. 추세연장법에 의해 도출한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값이 적절한지에 대해 판단해 주시고,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	적절	매우 적절
<div>이유</div>				

B. 응답자께서 생각하는 2030년의 적절한 값을 예측하여 주십시오.

응답자 예측하는 5분 미만 시간의 추정값 (2030년 기준)	
응답자 예측하는 5~10분 시간의 추정값 (2030년 기준)	
응답자 예측하는 10~15분 시간의 추정값 (2030년 기준)	
응답자 예측하는 15~20분 미만 시간의 추정값 (2030년 기준)	
응답자 예측하는 20분 이상 시간의 추정값 (2030년 기준)	

질문 3. 세부목표 11.4와 지표 11.4.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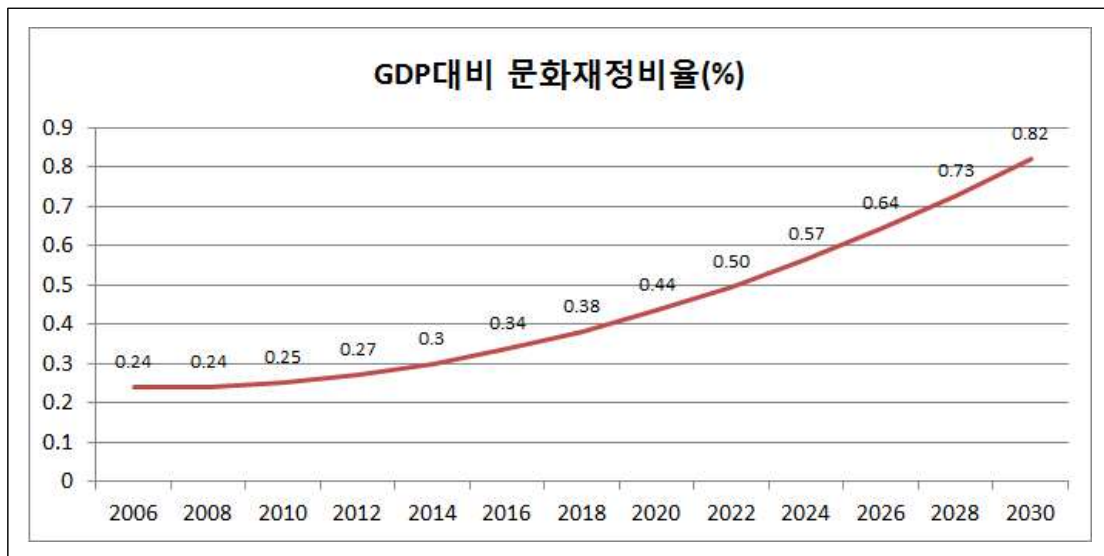
세부목표 11.4. 전 세계 문화와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 강화

지표 11.4.1 유산의 종류별(문화, 자연, 혼합, 세계 유산 센터 지정), 정부의 단계별(국가, 지방, 자치단체), 지출의 종류별(운영 비용/ 투자), 민간 자금의 종류별(기부, 민간 비영리부문, 후원)로 구분된 모든 종류의 문화 및 자연 유산을 보호 및 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1인당 종합 비용(공공 및 민간 포함) (Total expenditure (public and private) per capita spent on the preservation,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all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by type of heritage(cultural, natural, mixed and World Heritage Centre designation), level of government (national, regional and local/ municipal), type of expenditure (operating expenditure/ investment) and type of private funding (donations in kind, private non-profit sector and sponsorship)

세부목표 11.4를 평가하고 지표 11.4.1을 대표하기에 적절한 지표로 “GDP 대비 문화 재정 비율”이 다수의 의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래에 과거의 변화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의 추세가 예측되었습니다.

GDP 대비 문화재정 비율의 추세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격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2차방정식 함수로 계산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추세연장법에 의해 판단하면 2030년에는 약 GDP 대비 문화재정 비율이 0.82%로 예측되었습니다.



A. 추세연장법에 의해 도출한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값이 적절한지에 대해 판단해 주시고,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	적절	매우 적절
------------	---------	----	----	-------

이유	
----	--

B. 응답자께서 생각하는 2030년의 적절한 값을 예측하여 주십시오.

응답자 예측하는 값 (2030년 기준)	
-----------------------	--

질문 4. 세부목표 11.5와 지표 11.5.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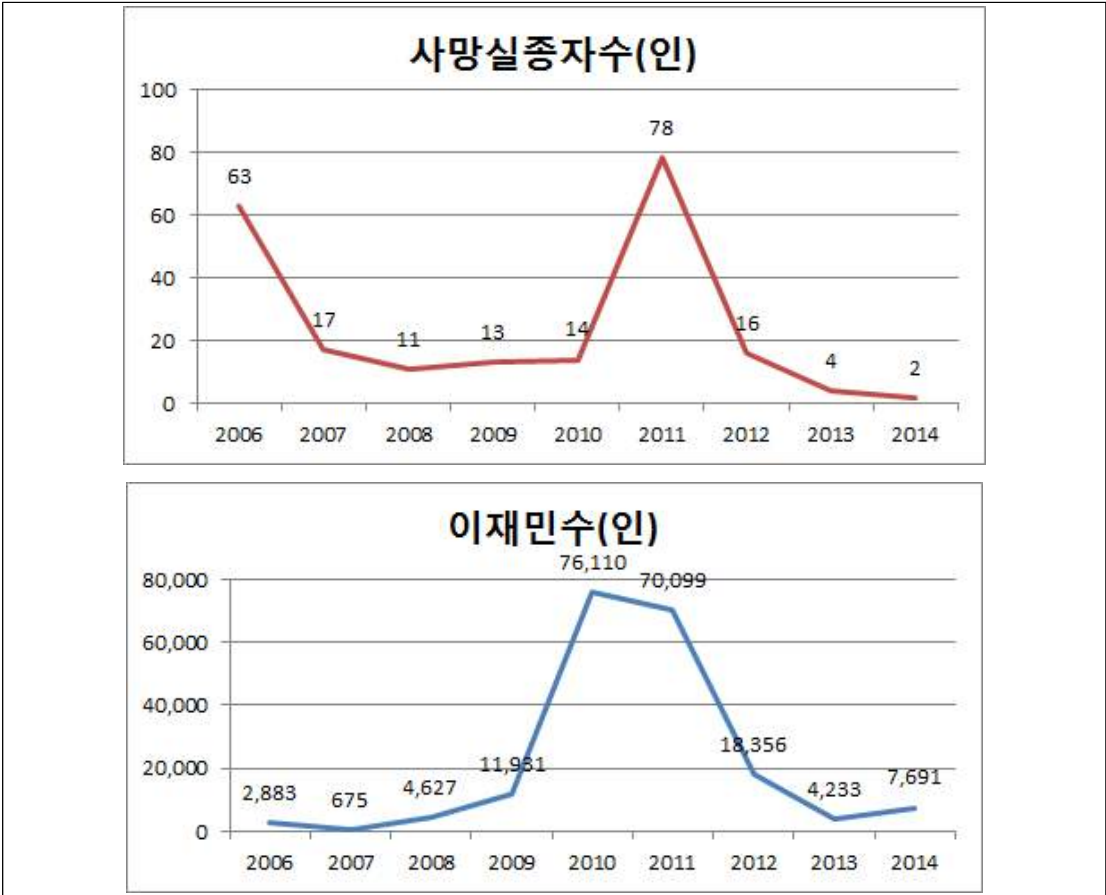
세부목표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물 관련 재난을 포함한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사망자 및 피해자 수를 현저히 줄이며 GDP 대비 경제적 손실 감소

**지표 11.5.1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실종자, 재난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 수**  
(Number of deaths, missing persons and persons affected by disaster per 100,000 people)

세부목표 11.5를 평가하고 지표 11.5.1을 대표하기에 적절한 지표로 “**사망 실종자수 및 이재민 수**”가 다수의 의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망실종자 수와 이재민 수의 경우 급격한 변동이 커 예측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사망 실종자 수 및 이재민 수의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년차별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과 2012년에 피해가 컸습니다.

과거 추세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사망 실종자수 및 이재민 수의 변화에 대해 평가하시고, 이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A. 사망실종자 수 및 이재민수가 2030년까지 어떻게 변할지 판단해 주시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매우 감소	약간 감소	현 상태 유지	약간 늘어남	매우 늘어남
이유				

B. 응답자께서 생각하는 2030년의 적절한 값을 예측하여 주십시오.

응답자 예측하는 사망실종자 수(2030년 기준)	
응답자 예측하는 이재민 수(2030년 기준)	

질문 5. 세부목표 11.5와 지표 11.5.2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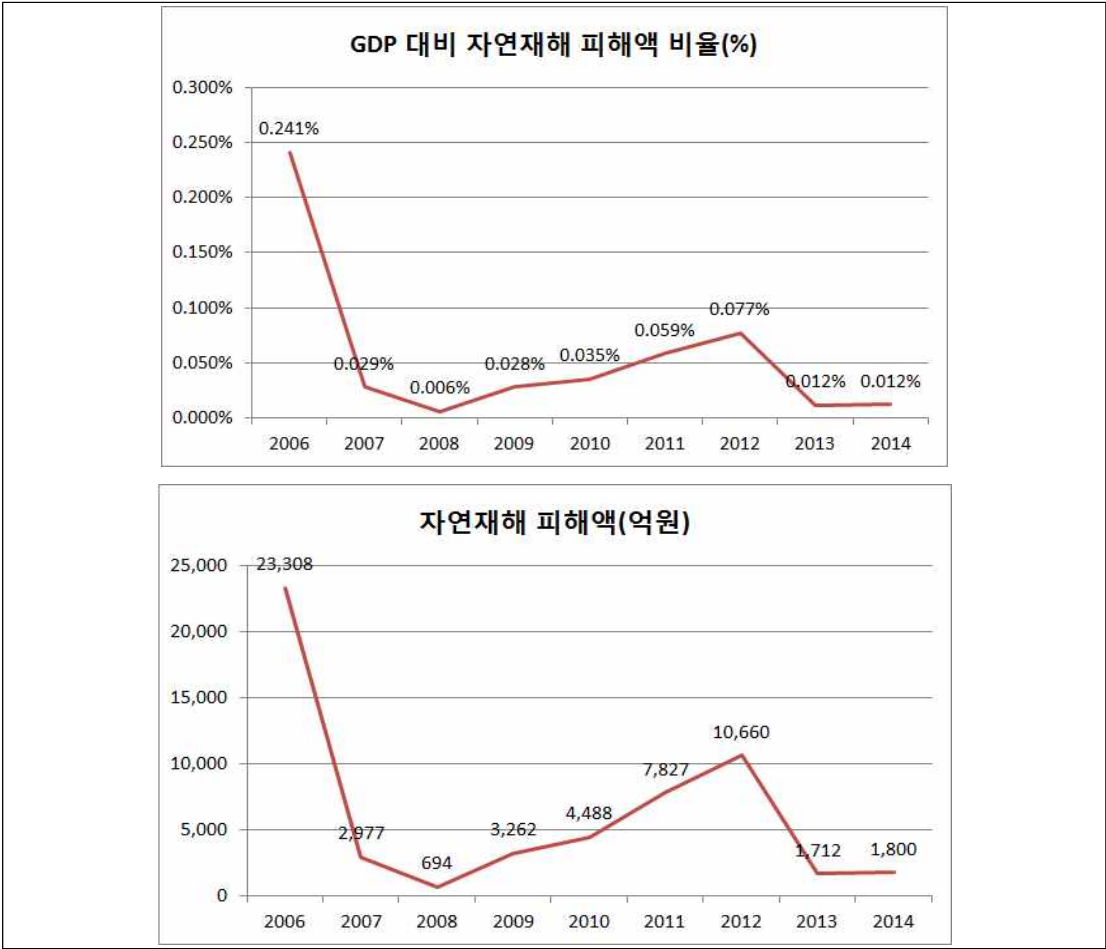
세부목표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물 관련 재난을 포함한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사망자 및 피해자 수를 현저히 줄이며 GDP 대비 경제적 손실 감소

지표 11.5.2 핵심 인프라 시설과 기본적인 서비스 중단을 포함하는 GDP 대비 직접적인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Direct disaster economic loss in relation to global GDP, including disaster damage to critical infrastructure and disruption of basic services)

세부목표 11.5를 평가하고 지표 11.5.2를 대표하기에 적절한 지표로 “GDP 대비 자연재해 피해액”이 다수의 의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GDP 대비 자연재해 피해액의 경우 변동이 커 예측이 불가능하였습니다.

GDP 대비 자연재해 피해액의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년차별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GDP에 비해 피해액의 비율 자체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과거 추세를 바탕으로 향후 GDP 대비 자연재해 피해액의 변화에 대해 평가하고, 이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A. GDP 대비 자연재해 피해액 비율이 2030년까지 어떻게 변할지 판단해 주시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매우 감소	약간 감소	현 상태 유지	약간 늘어남	매우 늘어남
이유				

B. 응답자께서 생각하는 2030년의 적절한 값을 예측하여 주십시오.

응답자 예측하는 비율(2030년 기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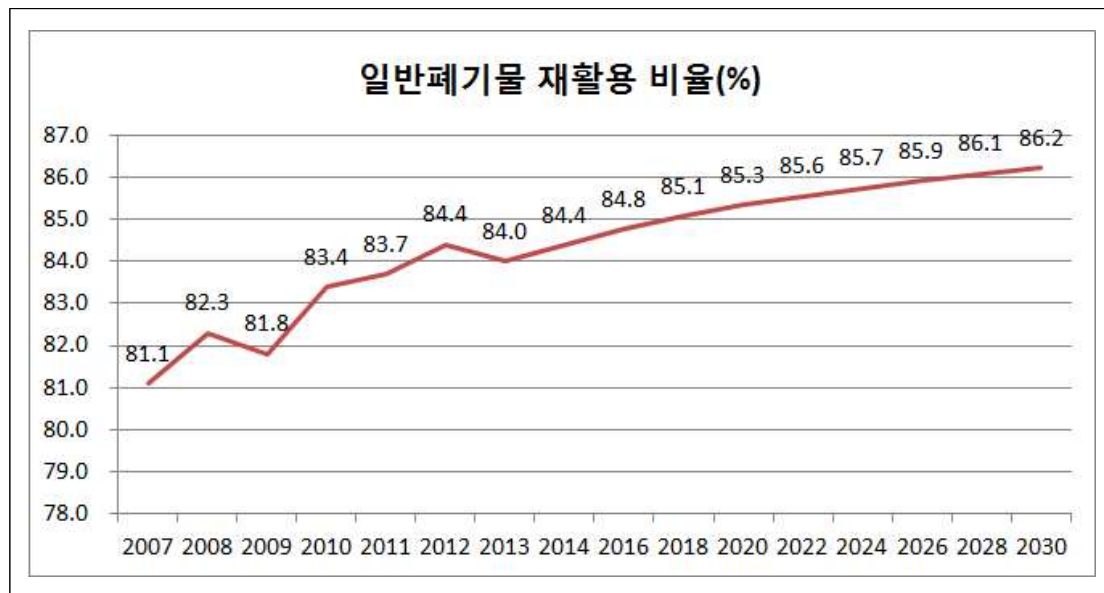
질문 6. 세부목표 11.6과 지표 11.6.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6. 2030년까지 대기질과 지자체 또는 다른 주체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인구 1명 당 도시에 미치는 환경의 부정적인 효과 감소

지표 11.6.1 정기적으로 수거되고 적절한 방법으로 최종 처리 되는 도시에서 배출되는 고형폐기물 비율 (Proportion of urban solid waste regularly collected and with adequate final discharge out of total urban solid waste generated, by cities

세부목표 11.6을 평가하고 지표 11.6.1을 대표하기에 적절한 지표로 “일반폐기물 재활용 비율”이 다수의 의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래에 과거의 변화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의 추세가 예측되었습니다.

일반폐기물 재활용 비율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년차별 자료를 바탕으로 로그 함수로 계산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81%에서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추세연장법에 의해 판단하면 2030년까지 재활용 비율은 86.2%에 도달 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A. 추세연장법에 의해 도출한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값이 적절한지에 대해 판단해 주시고,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	적절	매우 적절
------------	---------	----	----	-------

이유	
----	--

B. 응답자께서 생각하는 2030년의 적절한 값을 예측하여 주십시오.

응답자 예측하는 값 (2030년 기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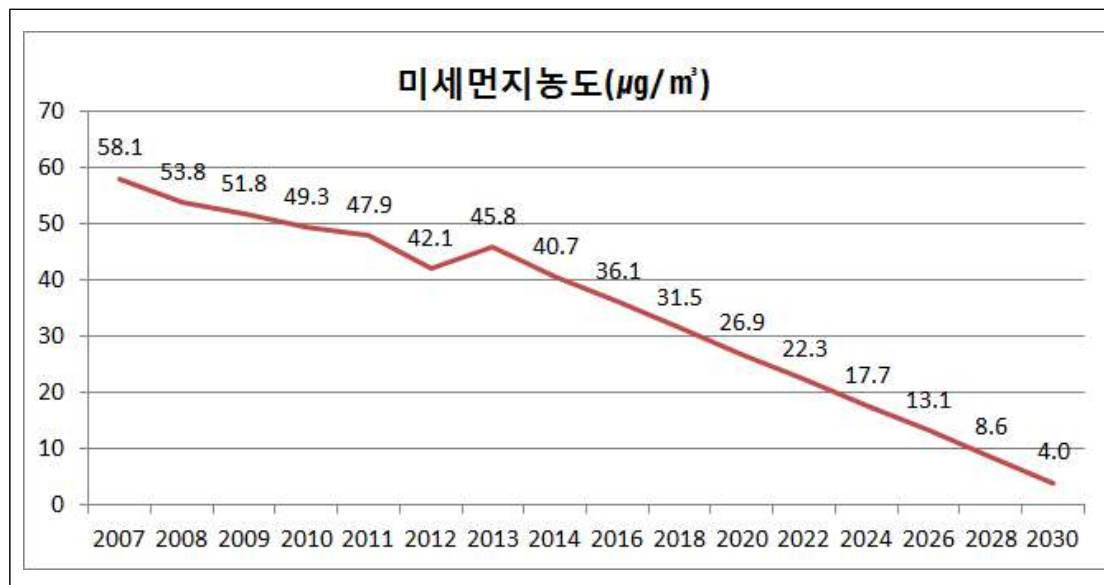
질문 7. 세부목표 11.6과 지표 11.6.2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6. 2030년까지 대기질과 지자체 또는 다른 주체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인구 1명 당 도시에 미치는 환경의 부정적인 효과 감소

지표 11.6.2 연평균 대기 미세먼지 수준 (PM2.5 와 PM10 (인구에 의한 가중치)) (Annual mean levels of fine particulate matter (e.g. PM2.5 and PM10) in cities (population weighted))

세부목표 11.6을 평가하고 지표 11.6.2를 대표하기에 적절한 지표로 “미세먼지 (PM10)농도”가 다수의 의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PM2.5에 대한 측정과 현재의 대도시 중심의 측정을 중소도시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설문에서는 통계자료로 취득이 가능한 PM10 자료만을 가지고 아래에 과거의 변화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의 추세를 예측하였습니다.

미세먼지(PM10)농도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년차별 자료를 바탕으로 선형 함수로 계산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추세연장법에 의해 판단하면 203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는  $4.0 \mu\text{g}/\text{m}^3$  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A. 추세연장법에 의해 도출한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값이 적절한지에 대해 판단해 주시고,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	적절	매우 적절
------------	---------	----	----	-------

이유	
----	--

B. 응답자께서 생각하는 2030년의 적절한 값을 예측하여 주십시오.

응답자 예측하는 값 (2030년 기준)	
-----------------------	--

질문 8. 세부목표 11.3과 지표 11.3.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간 정주계획과 관  
리 증진**

**지표 11.3.1 인구성장 비에 대한 토지 소요 비율** (Ratio of land consumption rate to population growth rate)

A. 세부목표 11.3을 평가하고 지표 11.3.1을 대표할 지표로 다수의 지표가 제안되었습니다. 아래의 지표를 살펴보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표를 선정하시고 이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된 지표	선택
인구대비 시가화 면적비율	
계획인구 대비 시가화 예정 면적비율	
인구성장비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면적	
인구당 토지개발면적 증가율	
개발유보지 설정현황	
도시 토지이용 변환율	
인구당 대지면적, 순인구밀도 변화율	
인구밀도	
도시용지 증감률/인구 증감율	
국토면적대비 자연녹지 감소율	
인구당 녹지 비율	
1인당 녹지변화량	
1인당 기반시설 이용량 변화율	
인구성장률 대비 신규 개발지 면적	
낙후(쇠퇴)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과 정부 투자 수준	
도시계획상 도시면적 증가율/ 10년간 인구증가율	
시가화 예정용지/10년간 인구 추계상 증가율	
인구성장에 따른 주거면적 및 주거환경 만족도	
인구밀도 대비 토지소요 비율	
<b>제안의 이유 :</b>	

질문 9. 세부목표 11.3과 지표 11.3.2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간 정주계획과 관  
리 증진

지표 11.3.2 정기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도시계획과 관리에 시민사회가 참  
여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진 도시의 비율 (Proportion of cities with  
a direct participation structure of civil society in urban planning  
and management that operate regularly and democratically)

A. 세부목표 11.3을 평가하고 지표 11.3.2를 대표할 지표로 다수의 지표가 제  
안되었습니다. 아래의 지표를 살펴보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표를 선정  
하시고 이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된 지표	선택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지자체 비율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수 및 참여 시민 수	
개발지역 주민 공청회 개최 수	
주민 공청회 참여 비율	
시민참여를 제도화한 도시의 비율	
도시부문 시민단체 수	
주민자치회 참여 인원 비율	
인구 1,000명당 비영리단체 수	
제안의 이유 :	

질문 10. 세부목표 11.7과 지표 11.7.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 아동, 노인과 장애인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접근가능한 공공공간과 녹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하고 보편적인 접근권 제공

지표 11.7.1 성별, 나이, 장애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공의 이용을 위해 개발된 도시의 개발된 지역의 평균 비율 (Average share of the built-up area of cities that is open space for public use for all, by sex, age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

A. 세부목표 11.7을 평가하고 지표 11.7.1을 대표할 지표로 다수의 지표가 제안되었습니다. 아래의 지표를 살펴보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표를 선정하시고 이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된 지표	선택
1인당 공원면적과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내 공원녹지 비율	
도시인구 1인당 공공공간의 면적	
공공공간의 접근성 및 비율	
접근 가능한 공공공간 및 녹지 비율	
인구수 대비 공원 및 광장 면적 비율	
도시개발면적 대비 공공공간의 비(그린벨트 및 자연녹지 제외)	
공원까지의 접근수단 및 접근시간 또는 거리	
공공공간의 접근성 및 비율	
도시 면적 대비 공원면적 비율	
토지이용계획상 공공공간 비율 및 녹지율	
제안의 이유 :	

질문 11. 세부목표 11.7과 지표 11.7.2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 아동, 노인과 장애인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접근가능한 공공공간과 녹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하고 보편적인 접근권 제공

지표 11.7.2 과거 1년동안 성별, 나이, 장애 정도, 발생장소 등에 의해 구분된 물리적 성적 희롱의 피해자 비율 (Proportion of persons victim of physical or sexual harassment, by sex, age, disability status and place of occurrence, in the previous 12 months )

A. 세부목표 11.7을 평가하고 지표 11.7.2를 대표할 지표로 다수의 지표가 제안되었습니다. 아래의 지표를 살펴보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표를 선정하시고 이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된 지표	선택
성폭력 및 미성년자 성적 학대 건수	
공공공간에서 발생한 성범죄 및 물리적 폭력 사건 비율	
인구 1000명당 강력 범죄 발생 건수	
단위면적(인구)당 성희롱 피해자 수	
공공시설에서 범죄발생 건수 및 비율	
도시공원 내 범죄 발생 건수	
사회적 약자 인신 범죄 비율	
통근통학 폭행 및 성희롱 피해자 수	
제안의 이유 :	



질문 12. 세부목표 11.a와 지표 11.a.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a. 국가개발계획 또는 지역개발계획 강화를 통해 도시와 도시주변부 지역 및 지방과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연계성 강화 지원

지표 11.a.1. 도시의 크기에 따라 구분한 인구증가 및 이에 대한 자원수요를 융합한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을 도입한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 (Proportion of population living in cities that implement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plans integrating population projections and resource needs, by size of city)

A. 세부목표 11.a를 평가하고 지표 11.a.1을 대표할 지표로 다수의 지표가 제안되었습니다. 아래의 지표를 살펴보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표를 선정하시고 이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된 지표	선택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인구 비율 또는 시군 비율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도시지속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표	
지역생활권 계획 수립 도시 비율	
인접 지역 간 협력사업 계획의 수	
광역도시개발 및 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 여부	
제안의 이유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4) SDGs 3차 설문지

### [SDGs 대비 건축·도시분야 대응방향 연구 델파이 3차 설문]

안녕하세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손동필입니다.

저는 2016년 기본과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대비 건축·도시분야 대응방향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전문가 조사는 최근 UN에서 제안한 SDGs 중 목표 11의 세부목표와 관련 지표가 향후 국내 건축 및 도시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델파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델파이 방법은 추정하려는 문제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익명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수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델파이 방법은 전문가의 반복적인 참여가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1차 설문은 개방형 설문을 통해 연구 주제에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2~4차 설문에서 세부 문제의 변화 가능성을 측정합니다.

본 설문은 총 5회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3차 설문은 Part 1과 Part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art 1은 2차 설문처럼**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지표에 대한 선택과 다수의 의견으로 수렴되는 지표에 대한 미래 예측입니다. **Part 2는** 각 세부목표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우리나라의 정책**을 제시하고 이 정책이 SDGs 목표 11의 달성을 위해 **충분한가에 대한 판단과 이유**를 얻기 위한 질문입니다. 더불어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의견**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전제 조건 없이 수렴하기 위해서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설문은 주관식에 중점을 두고, 자문위원 의견을 듣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의 내용은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밝혀 드립니다.

# Part 1

## SDGs 관련 주요 지표 선정과 추세변화 예측 관련 질문

### 설문 작성 방법

Part 1의 질문은 2차 설문과 유사한 질문입니다.

질문 1은 제시된 과거 추세를 살펴보고 변화와 2030년 기준으로 예측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2~5는 2차 설문처럼 응답자의 의견이 나뉘지는 사안으로 지표 중 가장 많은 분이 선택하신 2 지표 중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시는 지표를 선정하시고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질문 1. 세부목표 11.7과 지표 11.7.2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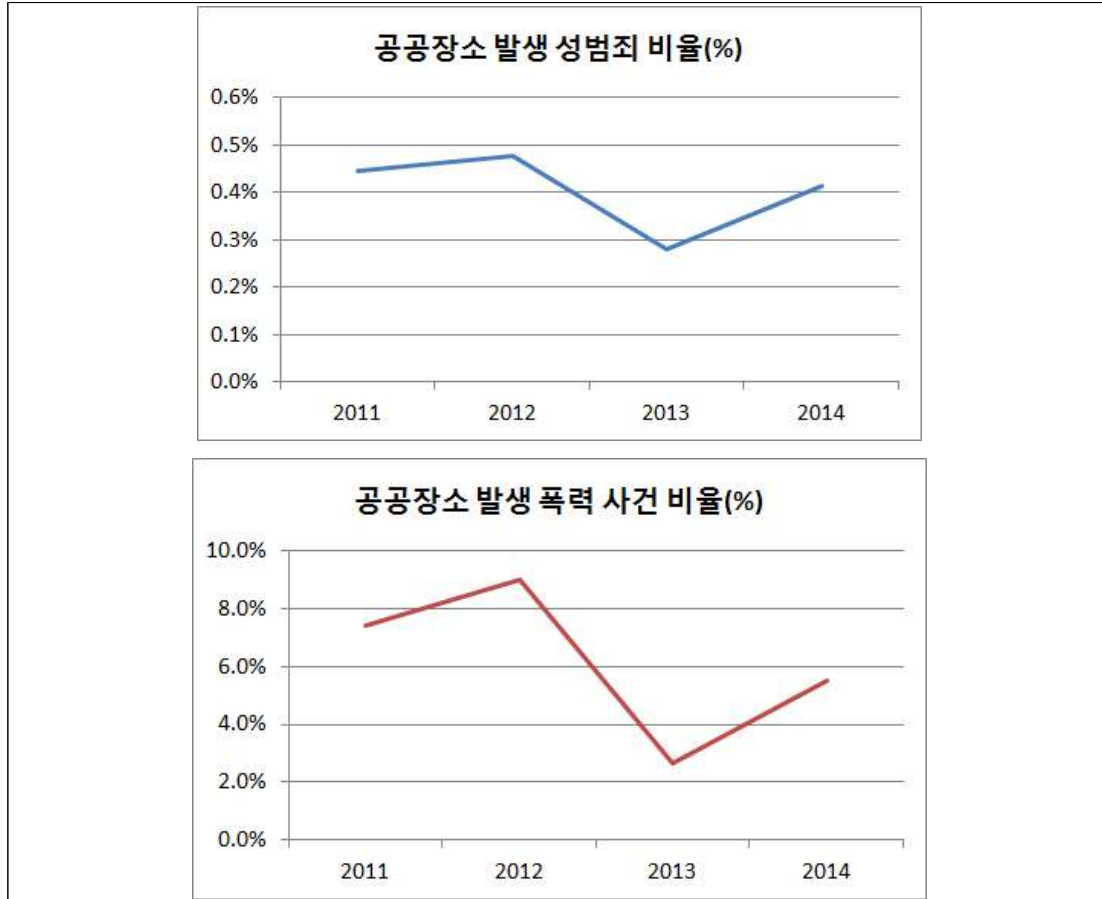
세부목표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 아동, 노인과 장애인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접근가능한 공공공간과 녹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하고 보편적인 접근권 제공

지표 11.7.2 과거 1년동안 성별, 나이, 장애 정도, 발생장소 등에 의해 구분된 물리적 성적 희롱의 피해자 비율 (Proportion of persons victim of physical or sexual harassment, by sex, age, disability status and place of occurrence, in the previous 12 months )

세부목표 11.7을 평가하고 지표 11.7.2를 대표하기에 적절한 지표로 “공공공간에서 발생한 성범죄 및 물리적 폭력 사건 비율”이 다수의 의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공공공간에서 발생한 성범죄 및 물리적 폭력 사건 비율의 경우 급격한 변동이 커 예측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공공공간에서의 발생한 성범죄 및 물리적 폭력 사건 비율은 2014년 기준으로 각각 0.4%, 5.5% 였습니다. 통계상으로 공공장소에서는 성범죄와 폭력 사건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총 발생건수도 줄어들고 있음). 과거 추세를 바탕으로 향후 공공공간에서의 발생한 성범죄 및 물리적 폭력 사건 비율의 변화에 대해 평가하시고, 이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A. 공공공간에서 발생한 성범죄 및 물리적 폭력 사건 비율이 어떻게 변할지 판단해 주시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매우 감소	약간 감소	현 상태 유지	약간 늘어남	매우 늘어남
이유				

B. 응답자께서 생각하는 2030년의 적절한 값을 예측하여 주십시오.

응답자 예측하는 성범죄 비율(2030년 기준)	
응답자 예측하는 폭력 사건 비율(2030년 기준)	

질문 2. 세부목표 11.3과 지표 11.3.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간 정주계획과 관  
리 증진

지표 11.3.1 인구성장 비에 대한 토지 소요 비율 (Ratio of land consumption  
rate to population growth rate)

A. 세부목표 11.3을 평가하고 지표 11.3.1을 대표할 지표로 제안된 지표 중 다  
음 두 지표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아래의 지표를 살펴보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표 하나**를 선정하시고,  
이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된 지표	선택
인구대비 시가화 면적비율	
인구성장률 대비 신규 개발지 면적	
제안의 이유 :	

질문 3. 세부목표 11.3과 지표 11.3.2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간 정주계획과 관  
리 증진

지표 11.3.2 정기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도시계획과 관리에 시민사회가 참  
여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진 도시의 비율 (Proportion of cities with  
a direct participation structure of civil society in urban planning  
and management that operate regularly and democratically)

A. 세부목표 11.3을 평가하고 지표 11.3.2를 대표할 지표로 제안된 지표 중 다  
음 두 지표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아래의 지표를 살펴보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표 하나를 선정**하시고,  
이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된 지표	선택
시민참여를 제도화한 도시의 비율	
주민 공청회 참여 비율	
제안의 이유 :	

질문 4. 세부목표 11.7과 지표 11.7.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 아동, 노인과 장애인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접근가능한 공공공간과 녹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하고 보편적인 접근권 제공

지표 11.7.1 성별, 나이, 장애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공의 이용을 위해 개방된 도시의 개발된 지역의 평균 비율 (Average share of the built-up area of cities that is open space for public use for all, by sex, age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

A. 세부목표 11.7을 평가하고 지표 11.7.1을 대표할 지표로 제안된 지표 중 다음 두 지표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아래의 지표를 살펴보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표 하나**를 선정하시고, 이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된 지표	선택
도시인구 1인당 공공공간의 면적	
공공공간의 접근성 및 비율	
제안의 이유 :	



질문 5. 세부목표 11.a와 지표 11.a.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a. 국가개발계획 또는 지역개발계획 강화를 통해 도시와 도시주변부 지역 및 지방과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연계성 강화 지원

지표 11.a.1. 도시의 크기에 따라 구분한 인구증가 및 이에 대한 자원수요를 융합한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을 도입한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 (Proportion of population living in cities that implement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plans integrating population projections and resource needs, by size of city)

A. 세부목표 11.a를 평가하고 지표 11.a.1을 대표할 지표로 제안된 지표 중 다음 두 지표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아래의 지표를 살펴보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표 하나**를 선정하시고, 이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된 지표	선택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인구 비율 또는 시군 비율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제안의 이유 :	

## Part 2

# 국내 정책 관련 질문

### 설문 작성 방법

Part 2의 질문은 SDGs 목표 11의 세부목표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우리나라의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정책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각 분야별 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서술 되었습니다.

질문 A는 제시된 정책이 SDGs 세부목표 달성에 충분한가에 대해 판단하시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질문 B는 제시된 정책 이외에 관련 정책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질문 6. 세부목표 11.1과 지표 11.1.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적절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립하고 도시 불량주거지 개선

지표 11.1.1 도시 불량주거지나 적합하지 않는 주택에 사는 도시 인구 비율  
(Proportion of urban population living in slums or informal settlements or inadequate housing)

세부목표 11.1과 관련하여 우리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정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장의 질문 A와 B를 답해주십시오.

## 국내 정책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단위에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유형별 정비구역 지정대상과 정비방향 설정.

구분	주요 내용
정비예정구역의 설정 및 계략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비구역의 지정요건을 검토하고 사업유형에 따라 개략적인 범위 표시</li> <li>사업 유형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li> </ul>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심 환경의 질적 향상과 다양한 도시수요 충족을 위한 계획</li> </ul>
주거지 관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지 활성화 및 불량화 방지를 위한 물리적·비물리적 활동과 관리 계획</li> </ul>
공공과 민간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과 민간의 역할 설정</li> </ul>
사업지구내 거주민의 주거안정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주택수 감소에 대한 대책</li> </ul>
정비예정구역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이후 사업 착수 전까지 지정구역의 불량화 방지 대책</li> </ul>
토지이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의 토지이용 상황과 효율성 및 주변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li> </ul>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li> </ul>
교통/환경/사회복지 및 주민문화 시설/건축물 밀도/역사 유물 및 전통건축물 보전 및 활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관련 부문별 계획</li> </ul>

**주거급여 제도** : 중위 소득의 약 43%인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 기준임대료 이내에서 임차료 전액지원.

A. 앞장에 열거한 정책이 충분한지 판단해 주시고,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매우 충분하지 않음	충분하지 않음	보통	충분	매우 충분
------------	---------	----	----	-------

이유	
----	--

B. 앞장에 열거된 정책 이외에 추가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정책이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적어주십시오.

현재 시행중인 정책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질문 7. 세부목표 11.2와 지표 11.2.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2. 2030년까지 도로안전개선과 대중교통 확대를 통해 모든 사람들, 특히 취약계층과 여성, 아동 그리고 장애인 및 노약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비용수준과 높은 접근성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제공

지표 11.2.1 성별, 나이, 장애에 따라 구분한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가능한 인구 비율  
(Proportion of population that has convenient access to public transport, by sex, age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세부목표 11.2과 관련하여 우리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정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장의 질문 A와 B를 답해주십시오.

## 국내 정책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 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영유아동반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접근성 향상과 무장애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과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지속적 확충, 저상버스의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교통소외지역 및 사각지대 해소 : 버스노선 및 운영체계 개선, 요금구조 개선  
통해 벽지 구역까지 운행 노선 구축

도시유형별 대중교통시설 및 수단 확충 : 도시 유형에 따라 BRT, 노면전차, 경전철, 지하철 등 건설

환승시설 건설 : 교통수단간 연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환승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

A. 앞장에 열거한 정책이 충분한지 판단해 주시고,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매우 충분하지 않음	충분하지 않음	보통	충분	매우 충분
------------	---------	----	----	-------

이유	
----	--

B. 앞장에 열거된 정책 이외에 추가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정책이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적어주십시오.

현재 시행중인 정책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질문 8. 세부목표 11.3과 지표 11.3.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간 정주계획과 관  
리 증진

지표 11.3.1 인구성장 비에 대한 토지 소요 비율 (Ratio of land consumption  
rate to population growth rate)

지표 11.3.2 정기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도시계획과 관리에 시민사회가 참  
여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진 도시의 비율 (Proportion of cities with  
a direct participation structure of civil society in urban planning  
and management that operate regularly and democratically)

세부목표 11.3과 관련하여 우리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정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장의 질문 A와 B를 답해주십시오.

## 국내 정책

**도시기본계획:** 특별시 광역시군을 대상으로 국토종합계획광역시계획 등 상위  
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

구분	주요 내용
공간구조의 설정	• 공간구조의 설정,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현황 분석, 용도별 수요량 산출, 용도구분 및 관리, 관리지역의 세분 기본방향,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기반시설	• 교통체계, 물류계획, 정보통신계획, 기타 기반시설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	• 도심 및 시가지 정비, 주거환경계획,
환경의 보전과 관리	• 기본계획, 환경친화적 개발의 유도, 대기환경 및 수환 경의 보전, 상하수도, 폐기물, 에너지
경관 및 미관	• 경관계획의 성격, 경관계획의 구성 및 수립기준, 경관 지침
공원 녹지	• 공원녹지체계 형성의 기본방향, 공원녹지시설의 설치
방재 및 안전	• 재해방지계획과 피해발생시에 대비한 방재 계획, 비상 시 피해 극소화 계획 등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 발 및 진흥	• 경제산업개발계획, 역사사회문화 개발계획

## 국내 정책 (계속)

**주민참여 제도** :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간담회와 토론회,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시민보다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시민의견의 경우 계획안이 완성된 후에 공청회, 의견 청취, 열람 등을 통해 시민의견 수렴.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 우리정부는 2011년부터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및 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

2015년 기준으로 242개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실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함. 현재의 주민참여는 다분히 형식적이라 인식이 있으며,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있음. 현재 다수의 지자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의 수준에 그치고 있음

A. 앞장에 열거한 정책이 충분한지 판단해 주시고,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매우 충분하지 않음	충분하지 않음	보통	충분	매우 충분
이유				

B. 앞장에 열거된 정책 이외에 추가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정책이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적어주십시오.

현재 시행중인 정책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질문 9. 세부목표 11.4와 지표 11.4.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4. 전 세계 문화와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 강화**

**지표 11.4.1 유산의 종류별(문화, 자연, 혼합, 세계 유산 센터 지정), 정부의 단계별(국가, 지방, 자치단체), 지출의 종류별 (운영 비용/ 투자), 민간 자금의 종류별 (기부, 민간 비영리부문, 후원)로 구분된 모든 종류의 문화 및 자연 유산을 보호 및 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1인당 종합 비용 (공공 및 민간 포함)** (Total expenditure (public and private) per capita spent on the preservation,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all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by type of heritage(cultural, natural, mixed and World Heritage Centre designation), level of government (national, regional and local/municipal), type of expenditure (operating expenditure/ investment) and type of private funding (donations in kind, private non-profit sector and sponsorship)

세부목표 11.4와 관련하여 우리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정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장의 질문 A와 B를 답해주십시오.

## 국내 정책

**문화재 5개년 기본계획** :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8대 전략 과제와 21개 단위과제, 85개 세부과제로 구성.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전략과제	단위과제
1. 문화재 향유 활성화:	1-1.맞춤형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 활성화 1-2.문화재 경영 기반 마련
2. 문화재 활용 활성화	2-1.문화재 콘텐츠 개발 및 자원화 2-2.문화재 관광 자원화
3. 문화재 정보화 기반 강화	3-1.문화재 디지털 아카이브 기반 마련 3-2.문화재 전자행정 고도화 3-3.문화재 정보화서비스 기반 강화
4. 문화재 교류협력 및 세계화	4-1.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4-2.국제교류활동 활성화 4-3.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4-4.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활성화
5. 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5-1.문화재 유형별 보존·관리체계 강화 5-2.역사문화환경의 보존·관리 5-3.고도 보존 및 육성 5-4.문화재 복원·정비 강화
6. 문화재 관리 역량 강화	6-1.문화재 안전관리 역량 강화 6-2.문화재 자원관리 역량 강화
7. 문화재 조사·연구·교육기능 강화	7-1.문화재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7-2.문화재 조사연구 활성화
8. 문화재 진흥 기반	8-1.문화재 수리분야 진흥 8-2.무형문화재 진흥

A. 앞장에 열거한 정책이 충분한지 판단해 주시고,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매우 충분하지 않음	충분하지 않음	보통	충분	매우 충분
<div>이유</div>				

B. 앞장에 열거된 정책 이외에 추가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정책이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적어주십시오.

현재 시행중인 정책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질문 10. 세부목표 11.5와 지표 11.5.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물 관련 재난을 포함한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사망자 및 피해자 수를 현저히 줄이며 GDP 대비 경제적 손실 감소

지표 11.5.1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실종자, 재난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 수 (Number of deaths, missing persons and persons affected by disaster per 100,000 people)

지표 11.5.2 핵심 인프라 시설과 기본적인 서비스 중단을 포함하는 GDP 대비 직접적인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Direct disaster economic loss in relation to global GDP, including disaster damage to critical infrastructure and disruption of basic services)

세부목표 11.5와 관련하여 우리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정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장의 질문 A와 B를 답해주십시오.

## 국내 정책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 우리정부는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2015년 중장기 계획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였으며, 5대 전략과 100개 과제를 선정하여 제시

전략	세부 과제
1.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1-1. 모든 재난과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재난 대응 표준체계 확립
	1-2. 현장을 통합적으로 지원·조정하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 확립
	1-3. 분야별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총괄 관리 및 개선체계 마련
	1-4. 목표기반 재난관리로 재난안전관리체계 고도화
2. 현장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2-1. 지자체의 재난대응역량 및 책임성 강화
	2-2. 빈틈없는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대비 교육·훈련 강화
	2-3. 육상(소방)의 구조구급 등 대응역량 강화
	2-4. 해상(해경)의 구조구급 및 오염·방제 역량 강화
3.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3-1. 생애주기별 맞춤형 국민안전교육 강화
	3-2. 범국민 안전문화 전방위적 확산
	3-3. 주민참여형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3-4. 안전복지 정책 강화
4. 재난안전 예방 인프라 확충	4-1. 재난조사 및 평가·환류 시스템 강화
	4-2. 예방활동을 통해 기능·업무의 연속성 유지
	4-3. 과학기술(ICT) 등을 활용한 실효적 재난예방 도모
	4-4. 재난안전분야의 산업 육성으로 전환
5. 분야별 창조적 안전관리	5-1. 학교 안전관리
	5-2. 에너지 안전관리
	5-3. 산업단지 안전관리
	5-4. 감염병 대책
	5-5. 응급의료서비스 강화
	5-6.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5-7. 산업현장 안전관리
	5-8. 시설물안전관리
	5-9. 교통시설 안전관리
	5-10. 해양안전 강화
	5-11. 원자력 안전관리
	5-12. 가축질병 대책
	5-13. 정보통신 재난대응
	5-14. 기타

## 국내 정책 (계속)

**국가안전관리계획** :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 지자체별(시·도, 시·군·구)로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내용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으로 자연재난 관리대책, 사회재난 관리 대책, 안전 관리 대책의 3분야에 대한 세부분야별 주요대책과 추진체계를 제시

지역안전관리계획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 근거하여 상호 연계성을 가지도록 수립

전략	세부 과제		
1. 자연재난 관리대책	1-1. 풍수해	1-5. 가뭄	1-9. 적조
	1-2. 해일	1-6. 지진	1-10. 조수
	1-3. 설해·한파	1-7. 황사	1-11. 폭염
	1-4. 낙뢰	1-8. 녹조	1-12. 기타
2. 사회재난 관리대책	2-1. 화재	2-5. 화생방	2-9. 가축전염병
	2-2. 산불	2-6. 환경오염	2-10. 해외재난
	2-3. 시설물	2-7. 국가기반체계보호	
	2-4. 교통	2-8. 감염병	
3. 안전관리대책	3-1. 생활안전	3-5. 범죄안전	
	3-2. 교통안전	3-6. 식품안전	
	3-3. 산업안전	3-7. 기타	
	3-4. 시설안전		

A. 앞장에 열거한 정책이 충분한지 판단해 주시고,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매우 충분하지 않음	충분하지 않음	보통	충분	매우 충분
이유					

B. 앞장에 열거된 정책 이외에 추가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정책이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적어주십시오.

현재 시행중인 정책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질문 11. 세부목표 11.6과 지표 11.6.1, 지표 11.6.2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6. 2030년까지 대기질과 지자체 또는 다른 주체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인구 1명 당 도시에 미치는 환경의 부정적인 효과 감소

지표 11.6.1 정기적으로 수거되고 적절한 방법으로 최종 처리 되는 도시에서 배출되는 고형폐기물 비율 (Proportion of urban solid waste regularly collected and with adequate final discharge out of total urban solid waste generated, by cities)

지표 11.6.2 연평균 대기 미세먼지 수준 (PM2.5 와 PM10 (인구에 의한 가중치)) (Annual mean levels of fine particulate matter (e.g. PM2.5 and PM10) in cities (population weighted))

세부목표 11.6과 관련하여 우리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정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장의 질문 A와 B를 답해주십시오.

## 국내 정책

**자원순환경제 고도화** : 자원소비형 경제에서 저탄소 및 자원순환경제로 이행 실현

전략	세부 과제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기물 다량배출업종에 대한 업종별 자원순환지표 설정 및 통합관리</li> </ul>
제품 자원순환성 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제고하고, 유해물질 사용을 저감하여 국내 자원 순환성 제고 및 국제 환경 규제 적극 대응</li> </ul>
네거티브형 재활용제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활용 용도와 방법을 열거하던 방식에서 재활용을 원천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활용 신기술 개발 촉진 및 고도화</li> </ul>
폐기물처분(매립소각) 부담금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활용비용보다 매립소각비용이 저렴한 가격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매립소각하는 자에게 부담금 부과</li> </ul>
빈용기보증금 현실화, 폐자원 수거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사용 등 고부가 자원순환 극대화</li> </ul>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기물로 버려져 자원을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제품화하는 산업 활성화</li> </ul>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기술개발 지원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금속 유용자원 재활용 기술 개발 강화</li> </ul>

## 국내 정책 (계속)

미세먼지 저감 : 환경부는 2025년까지 PM10과 PM2.5의 배출량이 2012년 대비 각각 3.5%,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PM10과 PM2.5의 2025년 예상배출량 대비 30%, 35% 감축을 목표로 제시

전략	세부 과제
대기환경기준 실효성 제고	• 대기환경기준 적절성 검토제도화 및 지역 대기환경 기준 달성여부 평가체계 구축
공간계획의 대기질 영향 저감	• 공간계획 수립 시 활용 가능한 지침을 개발·제공
기준초과 고농도지역 관리제도 혁신	• 고농도 환경기준 초과지역 관리를 위해 관리혁신 3 단계 대책(기존제도 활용 -> 인프라제도 구축 병행 -> 신제도 시행)
노후 경유차 저감 사업	• 노후 경유차에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확대하고, 노후 차량 보조율을 사향하여 조기폐차 유도
생물성연소 오염저감대책 추진	• 직화구이, 노천소각 등 생물성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PM2.5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 현황조사, 저감 장치 설치 및 모니터링
농업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	• 기준강화를 통해 PM10 90% 절감
미세먼지 통합대응 기술개발	• 대기분야 R&D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평가기술 개발, 생활속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



A. 앞장에 열거한 정책이 충분한지 판단해 주시고,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매우 충분하지 않음	충분하지 않음	보통	충분	매우 충분
------------	---------	----	----	-------

이유	
----	--

B. 앞장에 열거된 정책 이외에 추가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정책이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적어주십시오.

현재 시행중인 정책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질문 12. 세부목표 11.7과 지표 11.7.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 아동, 노인과 장애인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접근가능한 공공공간과 녹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하고 보편적인 접근권 제공

지표 11.7.1 성별, 나이, 장애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공의 이용을 위해 개방된 도시의 개발된 지역의 평균 비율 (Average share of the built-up area of cities that is open space for public use for all, by sex, age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

세부목표 11.7과 지표 11.7.1과 관련하여 우리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정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장의 질문 A와 B를 답해주십시오.

## 국내 정책

**공원녹지기본계획** :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는 상위계획을 수용하여 도시의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

수록 내용은 크게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부문별 기본계획(공원기본계획, 녹지기본계획, 도시녹화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기본계획)과 공원녹지의 관리·이용·주민참여계획, 추진 및 투자계획.

구분	주요 내용
공원기본계획	• 공원정비계획과 공원확충계획으로 구성
녹지기본계획	• 녹지보전계획, 녹지확충계획, 녹지복원계획, 가로수계획, 녹도(Green way) 계획, 경관도로 계획으로 구성
도시녹화계획	• 중점녹화지구 지정, 옥상공원화 사업, 학교 공원화 사업, 공공기관 담장개방 녹화사업,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자투리땅 녹화 및 골목길 가꾸기 사업, 인공구조물 녹화 사업 등으로 구성
도시자연공원기본계획	• 도시자연공원의 설치와 관리
관리이용주민참여계획	• 공원녹지의 관리 및 정비계획, 운영 체계, 재해방지 관리 체계, 공원녹지의 계획과 조성, 관리 이용에 대한 시민참여 유도 및 활성화방안

A. 앞장에 열거한 정책이 충분한지 판단해 주시고,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매우 충분하지 않음	충분하지 않음	보통	충분	매우 충분
<div>이유</div>				

B. 앞장에 열거된 정책 이외에 추가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정책이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적어주십시오.

현재 시행중인 정책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질문 13. 세부목표 11.7과 지표 11.7.2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 아동, 노인과 장애인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접근가능한 공공공간과 녹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하고 보편적인 접근권 제공

지표 11.7.2 과거 1년동안 성별, 나이, 장애 정도, 발생장소 등에 의해 구분된 물리적 성적 희롱의 피해자 비율 (Proportion of persons victim of physical or sexual harassment, by sex, age, disability status and place of occurrence, in the previous 12 months )

세부목표 11.7과 지표 11.7.2와 관련하여 우리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정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장의 질문 A와 B를 답해주십시오.

## 국내 정책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사업 :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다수의 범죄예방환경개선 사업 진행

66개 지자체가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조례 제정

2014년 이후 258개 사업에 예산 1,647.2억 투입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3년 6월 성폭력 근절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위해 주요 정책 제시

구분	주요 내용
1. 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 내실화	1-1.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 1-2. 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확보 1-3. 직장 내 성범죄 예방 강화
2. 신속한 대응 및 엄정한 처벌	2-1.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2-2. 신속한 대응 및 수사 체계 확립
3. 피해자 밀착 보호 및 회복 지원	3-1. 피해자 중심 지원체계 강화 3-2. 형사사법 절차상 피해자 보호 강화
4.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구현	4-1. 방과 후 돌봄 강화 4-2. 지역사회 안전인프라 확충 및 개선 4-3. 음란물 유통 차단 4-4. 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 전개

A. 앞장에 열거한 정책이 충분한지 판단해 주시고,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매우 충분하지 않음	충분하지 않음	보통	충분	매우 충분
<div>이유</div>				

B. 앞장에 열거된 정책 이외에 추가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정책이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적어주십시오.

현재 시행중인 정책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질문 14. 세부목표 11.a와 지표 11.a.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a. 국가개발계획 또는 지역개발계획 강화를 통해 도시와 도시주변부 지역 및 지방과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연계성 강화 지원

지표 11.a.1. 도시의 크기에 따라 구분한 인구증가 및 이에 대한 자원수요를 융합한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을 도입한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 (Proportion of population living in cities that implement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plans integrating population projections and resource needs, by size of city)

세부목표 11.a와 관련하여 우리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정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장의 질문 A와 B를 답해주십시오.

## 국내 정책

**성장관리방안** : 특별·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을 수립대상으로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하여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향을 제시

구분	주요 내용
기반시설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후 상주 및 상근, 이용인구를 고려하여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의 기반시설계획</li> </ul>
건축물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장관리지역의 설정목적,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건축물의 용도 설정</li> </ul>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장관리방안의 목적 달성을 위해 토지의의 기반시설 편입여부, 권장사항 이해여부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하는 등 건폐율 및 용적률을 허용 범위 설정</li> </ul>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관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주변경관 및 자연환경, 조망권, 건축물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권장사항으로 계획</li> </ul>
환경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한 계획 수립</li> </ul>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호하고, 역사·문화적 자산을 우선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계획</li> </ul>

A. 앞장에 열거한 정책이 충분한지 판단해 주시고,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매우 충분하지 않음	충분하지 않음	보통	충분	매우 충분
이유				

B. 앞장에 열거된 정책 이외에 추가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정책이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적어주십시오.

현재 시행중인 정책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질문 15. 세부목표 11.c와 지표 11.c.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c. 지역 자재를 활용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건축물을 구축함에 있어 재정적, 기술적 보조를 통한 최빈개발도상국 지원

지표 11.c.1. 현지 자재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으며 자원 효율적인 건축물의 건설 및 개조에 할당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비율 (Proportion of financial support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that is allocated to the construction and retrofitting of sustainable, resilient and resource-efficient buildings utilizing local materials )

세부목표 11.c와 관련하여 우리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정책을 읽어 보시고 다음 장의 질문 A와 B를 답해주십시오.

## 국내 정책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20년까지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을 제시 SDGs 세부목표 11.c와 연관이 깊은 방향은 다음과 같음. 그러나 현재는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건축물 구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음

구분	주요 내용
재원규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0년까지 GNI 대비 0.20%, 2030년까지 0.30% 달성(2014년 기준 0.13%)</li> </ul>
소득그룹별 재원 운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빈국을 대상으로 무상원조 위주의 원조 지원</li> </ul>
분야별 재원 운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DGs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경제인프라, 환경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li> </ul>



A. 앞장에 열거한 정책이 충분한지 판단해 주시고,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매우 충분하지 않음	충분하지 않음	보통	충분	매우 충분
이유				

B. 앞장에 열거된 정책 이외에 추가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정책이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적어주십시오.

현재 시행중인 정책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 SDGs 4차 설문지

### [SDGs 대비 건축·도시분야 대응방향 연구 델파이 4차 설문]

안녕하세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손동필입니다.

저는 2016년 기본과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대비 건축·도시분야 대응방향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전문가 조사는 최근 UN에서 제안한 SDGs 중 목표 11의 세부목표와 관련 지표가 향후 국내 건축 및 도시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델파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델파이 방법은 추정하려는 문제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익명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수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델파이 방법은 전문가의 반복적인 참여가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1차 설문은 개방형 설문을 통해 연구 주제에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2~4차 설문에서 세부 문제의 변화 가능성을 측정합니다.

본 설문은 총 5회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4차 설문은 Part 1과 Part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art 1은 2차 설문처럼 추세연장법에 의해 예측된 2030년까지의 지표변화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Part 2는 3차 설문에서 수렴된 다양한 정책과 제안된 정책 중 선별된 정책에 대해 효과와 우선순위를 매겨주시는 것입니다. Part 2 전부 객관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설문의 내용은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밝혀 드립니다.

# Part 1

## SDGs 관련 주요 지표의 추세변화 예측 관련 질문

### 설문 작성 방법

Part 1의 질문(질문 1~3)은 제시된 과거 추세와 추세연장법으로 예측된 변화를 살펴보고, 질문 A에서는 예측이 적정한지를 평가하신 후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질문B에서는 2030년 기준으로 지표를 예측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1. 세부목표 11.3과 지표 11.3.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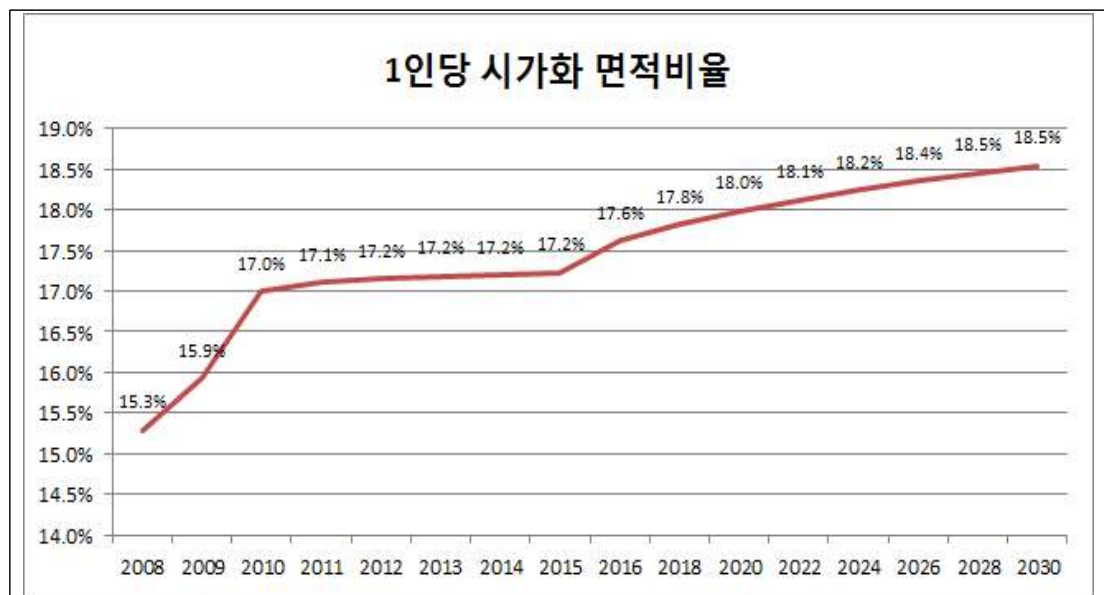
세부목표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간 정주계획과 관  
리 증진

지표 11.3.1 인구성장 비에 대한 토지 소요 비율 (Ratio of land consumption  
rate to population growth rate)

세부목표 11.3을 평가하고 지표 11.3.1을 대표하기에 적절한 지표로 “인구대비  
시가화 면적비율”이 다수의 의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과거의 변화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의 추세가 예측되었습니다.

인구대비 시가화 면적비율의 추세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  
로 로그함수로 계산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  
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증가세가 둔화되어 17%에 머물렀습니다. 추세연  
장법으로 판단하면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국토의  
18.5%가 시가화 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A. 인구대비 시가화 면적비율이 어떻게 변할지 판단해 주시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매우 감소	약간 감소	현 상태 유지	약간 늘어남	매우 늘어남
이유				

B. 응답자께서 생각하는 2030년의 적절한 값을 예측하여 주십시오.

응답자 예측하는 인구대비 시가화 면적비율(203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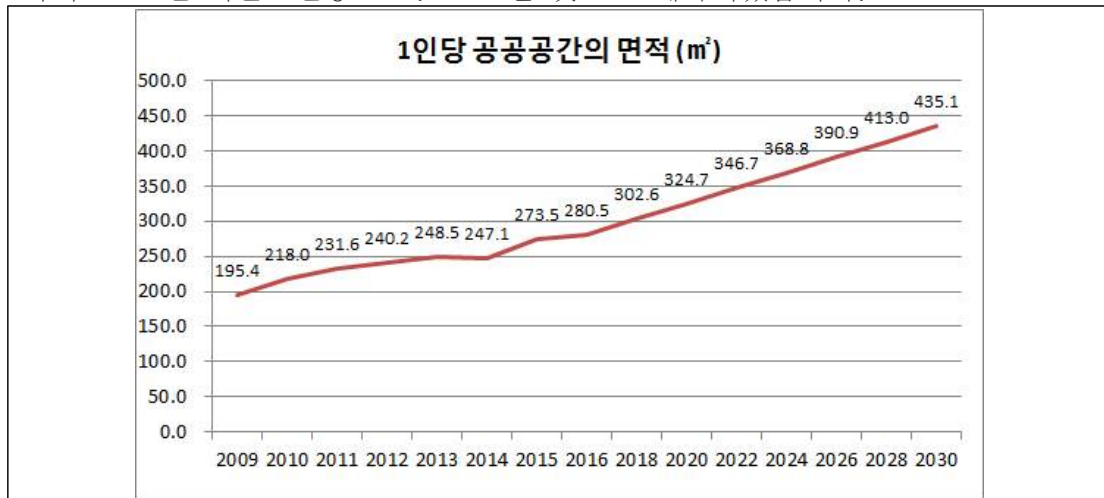
질문 2. 세부목표 11.7과 지표 11.7.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 아동, 노인과 장애인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접근가능한 공공공간과 녹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하고 보편적인 접근권 제공

지표 11.7.1 성별, 나이, 장애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공의 이용을 위해 개방된 도시의 개발된 지역의 평균 비율 (Average share of the built-up area of cities that is open space for public use for all, by sex, age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

세부목표 11.7을 평가하고 지표 11.7.1을 대표하기에 적절한 지표는 제시된 두 지표 중 근사하게 “**공공공간의 접근성 및 비율**”이 다수의 의견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공간의 접근성 및 비율은 통계 자료로 알 수가 없는 관계로 보다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계산이 쉬운 “**도시인구 1인당 공공공간의 면적**”을 선택하여 추세연장을 수행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과거의 변화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의 추세가 예측되었습니다.

도시인구 1인당 공공공간의 면적의 추세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형함수로 계산되었습니다.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추세연장법으로 판단하면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기준 1인당 435.1 m<sup>2</sup> 일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A. 도시인구 1인당 공공공간의 면적이 어떻게 변할지 판단해 주시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매우 감소	약간 감소	현 상태 유지	약간 늘어남	매우 늘어남
이유				

B. 응답자께서 생각하는 2030년의 적절한 값을 예측하여 주십시오.

응답자 예측하는 도시인구 1인당 공공공간의 면적 (2030년 기준)	
--	--

질문 3. 세부목표 11.a와 지표 11.a.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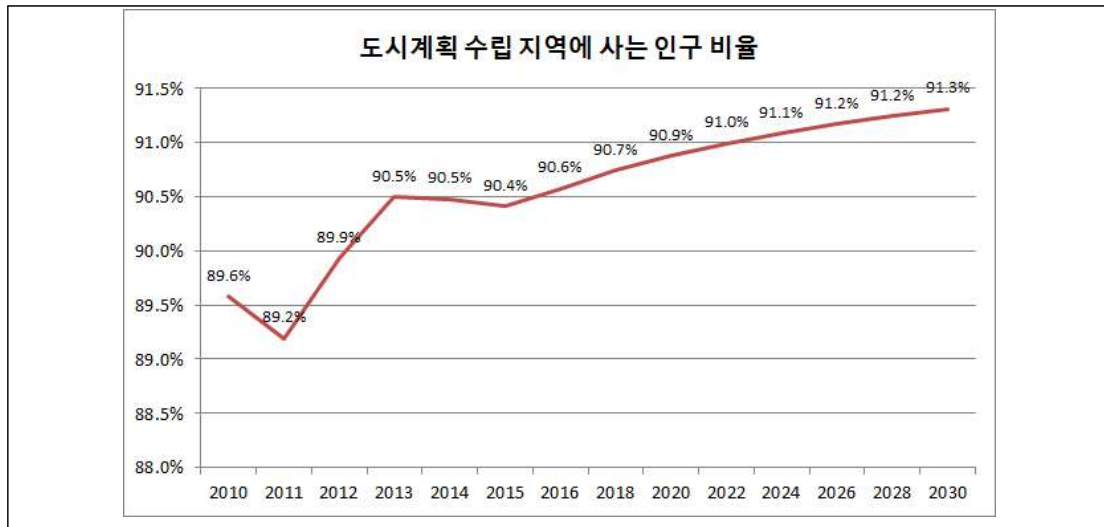
세부목표 11.a. 국가개발계획 또는 지역개발계획 강화를 통해 도시와 도시주변부 지역 및 지방과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연계성 강화 지원

지표 11.a.1. 도시의 크기에 따라 구분한 인구증가 및 이에 대한 자원수요를 융합한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을 도입한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 (Proportion of population living in cities that implement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plans integrating population projections and resource needs, by size of city)

세부목표 11.a를 평가하고 지표 11.a.1을 대표하기에 적절한 지표로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이 다수의 의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과거의 변화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의 추세가 예측되었습니다.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의 추세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2차함수로 계산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 전반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미 90%에 달하는 인구가 도시계획을 수립한 도시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추세연장법으로 판단하면 2030년까지 완만히 증가하여 2030년 기준 91.3%의 인구가 도시계획을 수립한 도시에서 거주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A.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이 어떻게 변할지 판단해 주시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매우 감소	약간 감소	현 상태 유지	약간 늘어남	매우 늘어남
<div>이유</div>				

B. 응답자께서 생각하는 2030년의 적절한 값을 예측하여 주십시오.

응답자 예측하는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2030년 기준)	
--	--

# Part 2

## 국내 정책 관련 질문

### 설문 작성 방법

Part 2의 질문(질문 4~13)은 3차 조사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정책과 정책 제안 중에 일부를 선별하였습니다.

질문 A에서는 선별된 각 정책에 대해 시행 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B에서는 각 정책의 우선순위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질문 4. 세부목표 11.1과 지표 11.1.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적절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립하고 도시 불량주거지 개선

지표 11.1.1 도시 불량주거지나 적합하지 않는 주택에 사는 도시 인구 비율  
(Proportion of urban population living in slums or informal settlements or inadequate housing)

세부목표 11.1과 관련하여 우리정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과 설문에서 제안된 정책을 아래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의 정책을 읽어 보시고 질문 A와 B를 답해주십시오.

A. 아래에 제시된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정책	효과				
	매우 효과가 없음	효과가 없음	보통	효과가 있음	매우 효과가 있음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급여(주택바우처)제도					
도시재생사업					
저소득층 주택 개량사업/지자체 집수리 지원 사업					
사회주거(social housing) 확대정책					
공공의 개별 불량 주택 매입, 수리 후 재판매 및 임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택정책					
자치구별 공공임대주택 할당제도 도입					
직장인 공동주택제도 및 대학연합 기숙사 제도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입주권 제공					
기 정비된 주거지역에 대한 사후 점검					

B. 아래에 제시된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선택해 주십시오.

정책	우선순위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급여(주택바우처)제도	
도시재생사업	
저소득층 주택 개량사업/지자체 집수리 지원 사업	
사회주거(social housing) 확대정책	
공공의 개별 불량 주택 매입, 수리 후 재판매 및 임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택정책	
자치구별 공공임대주택 할당제도 도입	
직장인 공동주택제도 및 대학연합 기숙사 제도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입주권 제공	
기 정비된 주거지역에 대한 사후 점검	

질문 5. 세부목표 11.2와 지표 11.2.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2. 2030년까지 도로안전개선과 대중교통 확대를 통해 모든 사람들, 특히 취약계층과 여성, 아동 그리고 장애인 및 노약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비용수준과 높은 접근성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제공

지표 11.2.1 성별, 나이, 장애에 따라 구분한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가능한 인구 비율  
(Proportion of population that has convenient access to public transport, by sex, age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세부목표 11.2와 관련하여 우리정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과 설문에서 제안된 정책을 아래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의 정책을 읽어 보시고 질문 A와 B를 답해주십시오.

A. 아래에 제시된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정책	효과				
	매우 효과가 없음	효과가 없음	보통	효과가 있음	매우 효과가 있음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교통소외지역 및 사각지대 해소					
도시유형별 대중교통시설 및 수단 확충					
환승시설(환승터미널) 건설 및 개선					
따복택시 등 교통소외지역에 택시를 활용한 정책					
취약계층(노인) 대중교통 무료 정책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수요응답형(DRT) 대중교통체계					
카풀서비스, 공유버스, 공유택시 등 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대중교통 접근성 모니터링 및 개선 계획					
버스 준공영제 확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도시계획단계에서의 효과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마련을 위한 협력					

B. 아래에 제시된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선택해 주십시오.

정책	우선순위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교통소외지역 및 사각지대 해소	
도시유형별 대중교통시설 및 수단 확충	
환승시설(환승터미널) 건설 및 개선	
따복택시 등 교통소외지역에 택시를 활용한 정책	
취약계층(노인) 대중교통 무료 정책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수요응답형(DRT) 대중교통체계	
카풀서비스, 공유버스, 공유택시 등 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대중교통 접근성 모니터링 및 개선 계획	
버스 준공영제 확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도시계획단계에서의 효과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마련을 위한 협력	

질문 6. 세부목표 11.3과 지표 11.3.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간 정주계획과 관  
리 증진

지표 11.3.1 인구성장 비에 대한 토지 소요 비율 (Ratio of land consumption  
rate to population growth rate)

지표 11.3.2 정기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도시계획과 관리에 시민사회가 참  
여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진 도시의 비율 (Proportion of cities with  
a direct participation structure of civil society in urban planning  
and management that operate regularly and democratically)

세부목표 11.3과 관련하여 우리정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과 설문에서 제안된 정  
책을 아래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의 정책을 읽어 보시고 질문 A와 B를 답해주십시오.

A. 아래에 제시된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정책	효과				
	매우 효과가 없음	효과가 없음	보통	효과가 있음	매우 효과가 있음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평가의 매년 시행					
주민참여 제도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					
주민협의체 조직					
공간계획과 참여예산사업의 연계를 통한 예산권한 주민이양 확대					
동 단위 등 보다 소규모 단위의 주민 참여 정책					
일회성 참여가 아닌 장기적인 숙의 과정을 가질 수 있는 참여제도로의 개선					
시민참여를 위한 소통 체계 구축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B. 아래에 제시된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선택해 주십시오.

정책	우선순위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평가의 매년 시행	
주민참여 제도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	
주민협의체 조직	
공간계획과 참여예산사업의 연계를 통한 예산권한 주민이양 확대	
동 단위 등 보다 소규모 단위의 주민 참여 정책	
일회성 참여가 아닌 장기적인 숙의 과정을 가질 수 있는 참여제도로의 개선	
시민참여를 위한 소통 체계 구축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질문 7. 세부목표 11.4와 지표 11.4.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4. 전 세계 문화와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 강화**

**지표 11.4.1 유산의 종류별(문화, 자연, 혼합, 세계 유산 센터 지정), 정부의 단계별(국가, 지방, 자치단체), 지출의 종류별 (운영 비용/ 투자), 민간 자금의 종류별 (기부, 민간 비영리부문, 후원)로 구분된 모든 종류의 문화 및 자연 유산을 보호 및 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1인당 종합 비용 (공공 및 민간 포함)** (Total expenditure (public and private) per capita spent on the preservation,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all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by type of heritage(cultural, natural, mixed and World Heritage Centre designation), level of government (national, regional and local/ municipal), type of expenditure (operating expenditure/ investment) and type of private funding (donations in kind, private non-profit sector and sponsorship)

세부목표 11.4와 관련하여 우리정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과 설문에서 제안된 정책을 아래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의 정책을 읽어 보시고 질문 A와 B를 답해주십시오.

A. 아래에 제시된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정책	효과				
	매우 효과가 없음	효과가 없음	보통	효과가 있음	매우 효과가 있음
문화재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관점 적용 예) 영국의 성소수자운동의 인물과 기록, 장소					
근대 문화재 복원 및 관련 인재 양성					
개인소유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					
문화재별 스토리텔링 강화와 홍보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공원법,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자연유산의 발굴 및 보존, 보호와 이를 위한 교육					

B. 아래에 제시된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선택해 주십시오.

정책	우선순위
문화재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관점 적용 예) 영국의 성소수자운동의 인물과 기록, 장소	
근대 문화재 복원 및 관련 인재 양성	
개인소유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	
문화재별 스토리텔링 강화와 홍보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공원법,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자연유산의 발굴 및 보존, 보호와 이를 위한 교육	

질문 8 세부목표 11.5와 지표 11.5.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물 관련 재난을 포함한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사망자 및 피해자 수를 현저히 줄이며 GDP 대비 경제적 손실 감소

지표 11.5.1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실종자, 재난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 수 (Number of deaths, missing persons and persons affected by disaster per 100,000 people)

지표 11.5.2 핵심 인프라 시설과 기본적인 서비스 중단을 포함하는 GDP 대비 직접적인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Direct disaster economic loss in relation to global GDP, including disaster damage to critical infrastructure and disruption of basic services)

세부목표 11.5와 관련하여 우리정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과 설문에서 제안된 정책을 아래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의 정책을 읽어 보시고 질문 A와 B를 답해주십시오.

A. 아래에 제시된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정책	효과				
	매우 효과가 없음	효과가 없음	보통	효과가 있음	매우 효과가 있음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국민안전관리 계획 수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주요시설 (댐, 제방 등)의 안전기준 강화 및 보강공사 실시					
재난별 시나리오와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단계별 지역단위의 대응체계 구성					
부처별 책임 명확화					
지역별 거점 안전센터 설치					
민자개발사업의 자연재해 안전 기준 강화					
도시방재계획					
방재의 관점에서 빈곤층과 취약층의 거주환경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					

B. 아래에 제시된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선택해 주십시오.

정책	우선순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국민안전관리 계획 수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주요시설 (댐, 제방 등)의 안전기준 강화 및 보강공사 실시	
재난별 시나리오와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단계별 지역단위의 대응체계 구성	
부처별 책임 명확화	
지역별 거점 안전센터 설치	
민자개발사업의 자연재해 안전 기준 강화	
도시방재계획	
방재의 관점에서 빈곤층과 취약층의 거주환경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	

질문 9. 세부목표 11.6과 지표 11.6.1, 지표 11.6.2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6. 2030년까지 대기질과 지자체 또는 다른 주체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인구 1명 당 도시에 미치는 환경의 부정적인 효과 감소

지표 11.6.1 정기적으로 수거되고 적절한 방법으로 최종 처리 되는 도시에서 배출되는 고형폐기물 비율 (Proportion of urban solid waste regularly collected and with adequate final discharge out of total urban solid waste generated, by cities)

지표 11.6.2 연평균 대기 미세먼지 수준 (PM2.5 와 PM10 (인구에 의한 가중치)) (Annual mean levels of fine particulate matter (e.g. PM2.5 and PM10) in cities (population weighted))

세부목표 11.6과 관련하여 우리정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과 설문에서 제안된 정책을 아래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의 정책을 읽어 보시고 질문 A와 B를 답해 주십시오.

A. 아래에 제시된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정책	효과				
	매우 효과가 없음	효과가 없음	보통	효과가 있음	매우 효과가 있음
자원순환경제 고도화 정책					
미세먼지 저감 정책					
신재생에너지 활용 장려 및 비용 보조					
수도권/지자체 대기 환경관리 기본계획					
미세먼지 발생 현황자료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					
석탄 기반 화력발전소 폐쇄 및 대체 계획(원자력 제외)					
도시의 고도화 및 재생 시 자원 활용 증진을 위한 계획					
전기차 보조금 제도/ 승용 경유 차량의 출고 감소 정책					

B. 아래에 제시된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선택해 주십시오.

정책	우선순위
자원순환경제 고도화 정책	
미세먼지 저감 정책	
신재생에너지 활용 장려 및 비용 보조	
수도권/지자체 대기 환경관리 기본계획	
미세먼지 발생 현황자료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	
석탄 기반 화력발전소 폐쇄 및 대체 계획(원자력 제외)	
도시의 고도화 및 재생 시 자원 활용 증진을 위한 계획	
전기차 보조금 제도/ 승용 경유 차량의 출고 감소 정책	



질문 10. 세부목표 11.7과 지표 11.7.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 아동, 노인과 장애인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공공공간과 녹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하고 보편적인 접근권 제공

지표 11.7.1 성별, 나이, 장애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공의 이용을 위해 개발된 도시의 개발된 지역의 평균 비율 (Average share of the built-up area of cities that is open space for public use for all, by sex, age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

세부목표 11.7과 지표 11.7.1과 관련하여 우리정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과 설문에서 제안된 정책을 아래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의 정책을 읽어 보시고 질문 A와 B를 답해주십시오.

A. 아래에 제시된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정책	효과				
	매우 효과가 없음	효과가 없음	보통	효과가 있음	매우 효과가 있음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도시기본계획의 오픈스페이스 계획					
보행자 중심도시 건설 지원					
민간 공원 제도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사업					
공공공간의 적정 배치를 위한 설치가이드라인 강화					
기존 공공공간의 복합적 재활용 방안					
근린 단위의 소규모 공원 및 녹지의 확보 정책					

B. 아래에 제시된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선택해 주십시오.

정책	우선순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도시기본계획의 오픈스페이스 계획	
보행자 중심도시 건설 지원	
민간 공원 제도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사업	
공공공간의 적정 배치를 위한 설치가이드라인 강화	
기존 공공공간의 복합적 재활용 방안	
근린 단위의 소규모 공원 및 녹지의 확보 정책	

질문 11. 세부목표 11.7과 지표 11.7.2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 아동, 노인과 장애인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공공공간과 녹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하고 보편적인 접근권 제공

지표 11.7.2 과거 1년동안 성별, 나이, 장애 정도, 발생장소 등에 의해 구분된 물리적 성적 희롱의 피해자 비율 (Proportion of persons victim of physical or sexual harassment, by sex, age, disability status and place of occurrence, in the previous 12 months )

세부목표 11.7과 지표 11.7.2와 관련하여 우리정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과 설문에서 제안된 정책을 아래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의 정책을 읽어 보시고 질문 A와 B를 답해주십시오.

A. 아래에 제시된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정책	효과				
	매우 효과가 없음	효과가 없음	보통	효과가 있음	매우 효과가 있음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성폭력 범죄자 신상 공개 및 주민 알람 서비스/ 사후 관리 강화					
학교 보안관 제도					
아동 성범죄자의 아동시설 주변 거주 제한 제도					
철저한 성범죄 예방차원의 교육					
장소, 범죄, 범죄 유형에 따른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사업의 다양화					
야간에 도심 공원, 운동장 등에 대한 안전방범체계 구축					

B. 아래에 제시된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선택해 주십시오.

정책	우선순위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성폭력 범죄자 신상 공개 및 주민 알람 서비스/ 사후 관리 강화	
학교 보안관 제도	
아동 성범죄자의 아동시설 주변 거주 제한 제도	
철저한 성범죄 예방차원의 교육	
장소, 범죄, 범죄 유형에 따른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사업의 다양화	
야간에 도심 공원, 운동장 등에 대한 안전방범체계 구축	

질문 12. 세부목표 11.a와 지표 11.a.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a. 국가개발계획 또는 지역개발계획 강화를 통해 도시와 도시주변부지역 및 지방과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연계성 강화 지원

지표 11.a.1. 도시의 크기에 따라 구분한 인구증가 및 이에 대한 자원수요를 융합한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을 도입한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 (Proportion of population living in cities that implement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plans integrating population projections and resource needs, by size of city)

세부목표 11.a.와 관련하여 우리정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과 설문에서 제안된 정책을 아래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의 정책을 읽어 보시고 질문 A와 B를 답해주시요.

A. 아래에 제시된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정책	효과				
	매우 효과가 없음	효과가 없음	보통	효과가 있음	매우 효과가 있음
성장관리방안					
성장관리방안 적용지역 확대					
도시기본계획에 자원수요를 고려한 성장관리방안이 담기도록 개선					
인근 지자체의 통합된 광역계획 수립 의무화					
광역도시계획, 광역교통망 계획 등 광역권 계획 수립					
대도시와 주변도시간 상생발전계획					
개발억제를 위한 상향된 환경영향평가					
주변지역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					

B. 아래에 제시된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선택해 주십시오.

정책	우선순위
성장관리방안	
성장관리방안 적용지역 확대	
도시기본계획에 자원수요를 고려한 성장관리방안이 담기도록 개선	
인근 지자체의 통합된 광역계획 수립 의무화	
광역도시계획, 광역교통망 계획 등 광역권 계획 수립	
대도시와 주변도시간 상생발전계획	
개발억제를 위한 상향된 환경영향평가	
주변지역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	

질문 13. 세부목표 11.c와 지표 11.c.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c. 지역 자재를 활용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건축물을 구축함에 있어 재정적, 기술적 보조를 통한 최빈개발도상국 지원

지표 11.c.1. 현지 자재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으며 자원 효율적인 건축물의 건설 및 개조에 할당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비율  
(Proportion of financial support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that is allocated to the construction and retrofitting of sustainable, resilient and resource-efficient buildings utilizing local materials )

세부목표 11.c와 관련하여 우리정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과 설문에서 제안된 정책을 아래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의 정책을 읽어 보시고 질문 A와 B를 답해 주십시오.

A. 아래에 제시된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정책	효과				
	매우 효과가 없음	효과가 없음	보통	효과가 있음	매우 효과가 있음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유상원조 시 현지화폐 지급을 통한 현지자재 활용도 향상					
개도국 대상 KSP <sup>46)</sup> 지식공유사업					
한국형 신도시 수출					
적용 가능한 적정기술 및 현지에서의 기술 이전					
소득그룹, 분야, 프로그램, 지원방식을 감안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현지 자재 활용을 위한 원조자금의 건설 인프라 사업 비율 확대					
PPP 사업 확대					
민간 HABITAT 운동과 연계한 정부정책의 효율화					
최빈국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공법 연구 지원					

B. 아래에 제시된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선택해 주십시오.

정책	우선순위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유상원조 시 현지화폐 지급을 통한 현지자재 활용도 향상	
개도국 대상 KSP 지식공유사업	
한국형 신도시 수출	
적용 가능한 적정기술 및 현지에서의 기술 이전	
소득그룹, 분야, 프로그램, 지원방식을 감안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현지 자재 활용을 위한 원조자금의 건설 인프라 사업 비율 확대	
PPP 사업 확대	
민간 HABITAT 운동과 연계한 정부정책의 효율화	
최빈국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공법 연구 지원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46) 한국개발연구원과 기획재정부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경제개발 노하우를 전수하는 지식공유프로그램



## 6) SDGs 5차 설문지

### [SDGs 대비 건축·도시분야 대응방향 연구 델파이 5차 설문]

안녕하세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손동필입니다.

저는 2016년 기본과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대비 건축·도시분야 대응방향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전문가 조사는 최근 UN에서 제안한 SDGs 중 목표 11의 세부목표와 관련 지표가 향후 국내 건축 및 도시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델파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델파이 방법은 추정하려는 문제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익명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수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델파이 방법은 전문가의 반복적인 참여가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1차 설문은 개방형 설문을 통해 연구 주제에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2~4차 설문에서 세부 문제의 변화 가능성을 측정합니다.

본 설문은 총 5회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5차 설문은 1~4차에서 수행했던 질문중 추세연장에 대한 질문과 정책의 효과에 대한 질문을 반복해서 질문합니다. 각 문항의 질문 A와 B는 추세연장에 대한 질문이며, 질문 C는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설문 작성 방법을 꼭 읽어보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의 내용은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밝혀 드립니다.

## 설문 작성 방법

각 항목의 질문 A와 B는 제시된 추세연장표를 살펴보신 후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의 작성을 위해 2~4차 설문에서 작성하신 응답의 최다 빈도 응답과 평균값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A의 경우 **밝은 자주색 괄호 ([ ])**로 표시된 값이 가장 많이 선택된 응답입니다. **밝은 파란색 괄호 (< >)**는 최다 빈도 응답은 아니지만 거의 근사하게 선택된 응답입니다.

예)

매우 감소	약간 감소	<현 상태 유지>	[약간 늘어남]	매우 늘어남
-------	-------	-----------	----------	--------

일부 질문의 경우 **밝은 자주색 괄호 ([ ])**가 두 개의 응답에 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두 값이 동일한 빈도수로 선택된 경우입니다.

예)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	[적절]	매우 적절
------------	---------	------	------	-------

질문 B의 경우 2~4차 설문의 평균값을 **밝은 자주색**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문 C는 최다 빈도의 선택 항목에 ★ 별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시)

정책	효과				
	매우 효과가 없음	효과가 없음	보통	효과가 있음	매우 효과가 있음
문화재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일부 질문의 경우 두 개의 선택항목에 ★ 별표 표시가 있습니다. 이 역시 두 개의 선택 항목이 동일한 빈도로 최다 선택된 경우입니다.

예시)

정책	효과				
	매우 효과가 없음	효과가 없음	보통	효과가 있음	매우 효과가 있음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관점 적용 예) 영국의 성소수자운동의 인물과 기록, 장소			★	★	

질문 1. 세부목표 11.1과 지표 11.1.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적절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립하고 도시 불량주거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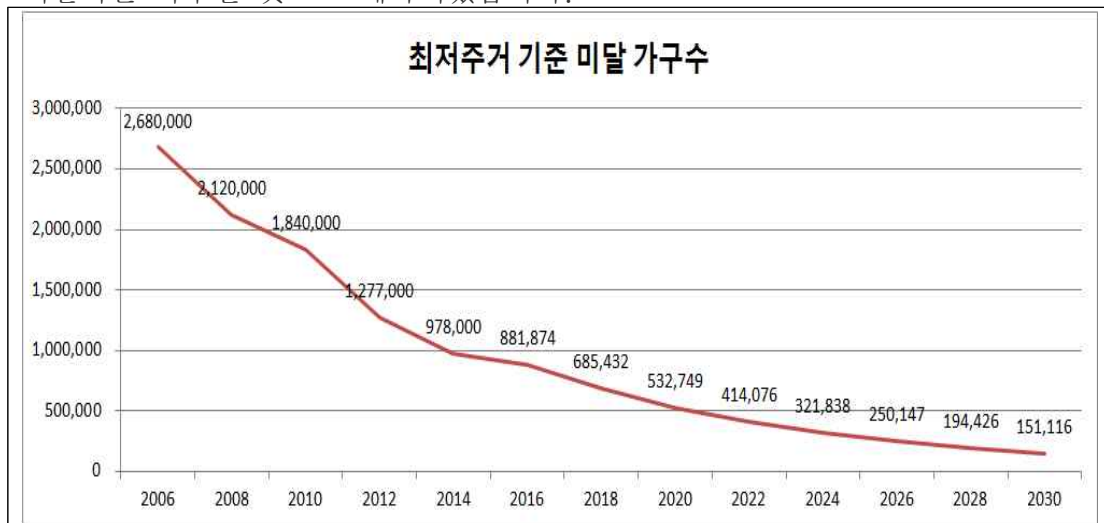
지표 11.1.1 도시 불량주거지나 적합하지 않는 주택에 사는 도시 인구 비율  
(Proportion of urban population living in slums or informal settlements or inadequate housing)

세부목표 11.1을 평가하고 지표 11.1.1을 대표하기에 적절한 지표로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 및 비율”이 다수의 의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래에 과거의 변화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의 추세가 예측되었습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추세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격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지수함수로 계산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추세연장법에 의해 판단하면 2030년에는 약 15 만 가구만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일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A. 추세연장법에 의해 도출한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값이 적절한지에 대해 판단해 주십시오.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	[적절]	매우 적절
------------	-----------	----	------	-------

B. 응답자께서 생각하는 2030년의 적절한 값을 예측하여 주십시오.

항목	이전 응답 평균값	5차 설문 응답
응답자 예측하는 값 (2030년 기준)	400,000 가구	

세부목표 11.1과 관련하여 우리정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과 설문에서 제안된 정책을 아래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의 정책을 읽어 보시고 질문 C에 답해주십시오.

C. 아래에 제시된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정책	효과				
	매우 효과가 없음	효과가 없음	보통	효과가 있음	매우 효과가 있음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주거급여(주택바우처)제도				★	
도시재생사업			★	★	
저소득층 주택 개량사업/지자체 집수리 지원 사업				★	
사회주거(social housing) 확대정책				★	
공공의 개별 불량 주택 매입, 수리 후 재판매 및 임대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택정책					★
자치구별 공공임대주택 할당제도 도입			★		
직장인 공동주택제도 및 대학연합 기숙사 제도			★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입주권 제공			★		
기 정비된 주거지역에 대한 사후 점검			★		

질문 2. 세부목표 11.2와 지표 11.2.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2. 2030년까지 도로안전개선과 대중교통 확대를 통해 모든 사람들, 특히 취약계층과 여성, 아동 그리고 장애인 및 노약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비용수준과 높은 접근성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제공**

**지표 11.2.1 성별, 나이, 장애에 따라 구분한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가능한 인구 비율**  
(Proportion of population that has convenient access to public transport, by sex, age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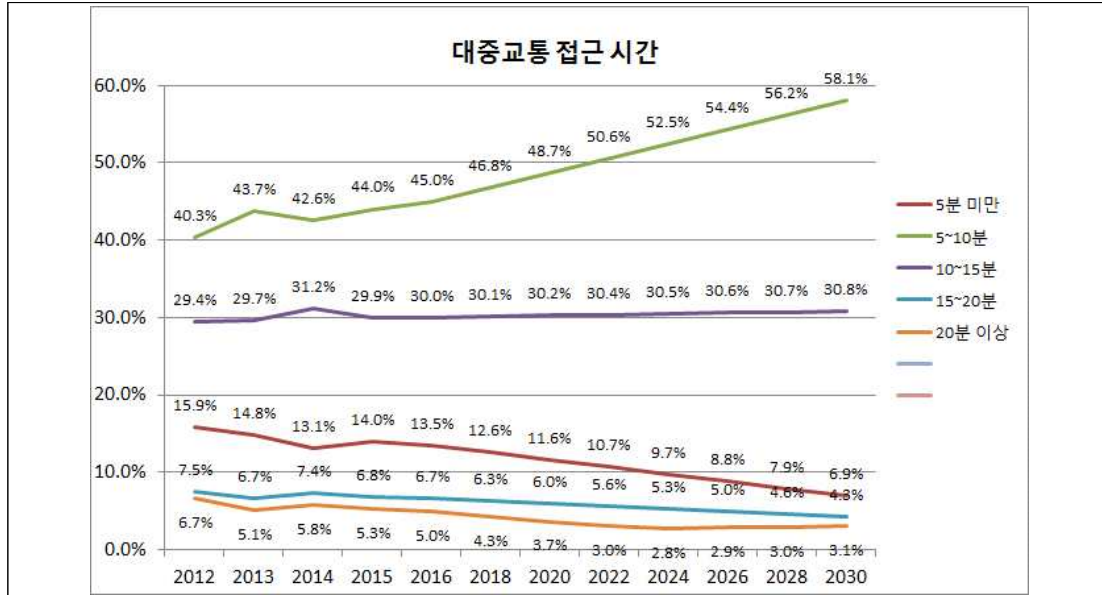
세부목표 11.2를 평가하고 지표 11.2.1을 대표하기에 적절한 지표로 “**대중교통 접근수단 및 대중교통 접근 시간**”이 다수의 의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래에 과거의 변화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의 추세가 예측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 수단의 경우 지속적으로 보도가 93%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참조). 반면에 대중교통 접근 시간의 경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5~10분 사이가 가장 많으며, 10~15분, 5분미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 시간의 추세를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년차별 자료를 바탕으로 선형함수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조). 5~10분의 접근 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에 5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10~15분은 31%에서 현상 유지, 5분미만은 7%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표 대중교통 접근 수단 비율				
접근 수단	2012	2013	2014	2015
도보	93.30%	95.30%	93.50%	93.50%
승용차	3.00%	3.00%	4.10%	4.60%
자전거	1.70%	1.40%	1.50%	1.30%
택시	-	1.30%	0.80%	0.60%



A. 추세연장법에 의해 도출한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값이 적절한지에 대해 판단해 주십시오.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	적절	매우 적절
---------------	-----------	------	----	-------

B. 응답자께서 생각하는 2030년의 적절한 값을 예측하여 주십시오.

항목	이전 응답 평균값	5차 설문 응답
응답자 예측하는 5분 미만 시간의 추정값 (2030년 기준)	13.1%	
응답자 예측하는 5~10분 시간의 추정값 (2030년 기준)	51.6%	
응답자 예측하는 10~15분 시간의 추정값 (2030년 기준)	27.1%	
응답자 예측하는 15~20분 미만 시간의 추정값 (2030년 기준)	5.4%	
응답자 예측하는 20분 이상 시간의 추정값 (2030년 기준)	4.6%	

세부목표 11.2와 관련하여 우리정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과 설문에서 제안된 정책을 아래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의 정책을 읽어 보시고 질문 C에 답해주십시오.



C. 아래에 제시된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정책	효과				
	매우 효과가 없음	효과가 없음	보통	효과가 있음	매우 효과가 있음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	
교통소외지역 및 사각지대 해소				★	
도시유형별 대중교통시설 및 수단 확충				★	
환승시설(환승터미널) 건설 및 개선				★	
따복택시 등 교통소외지역에 택시를 활용한 정책				★	
취약계층(노인) 대중교통 무료 정책			★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	
수요응답형(DRT) 대중교통체계				★	
카풀서비스, 공유버스, 공유택시 등 서비스 확대				★	
취약계층 대중교통 접근성 모니터링 및 개선 계획				★	
버스 준공영제 확대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도시계획단계에서의 효과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마련을 위한 협력			★		

질문 3. 세부목표 11.3과 지표 11.3.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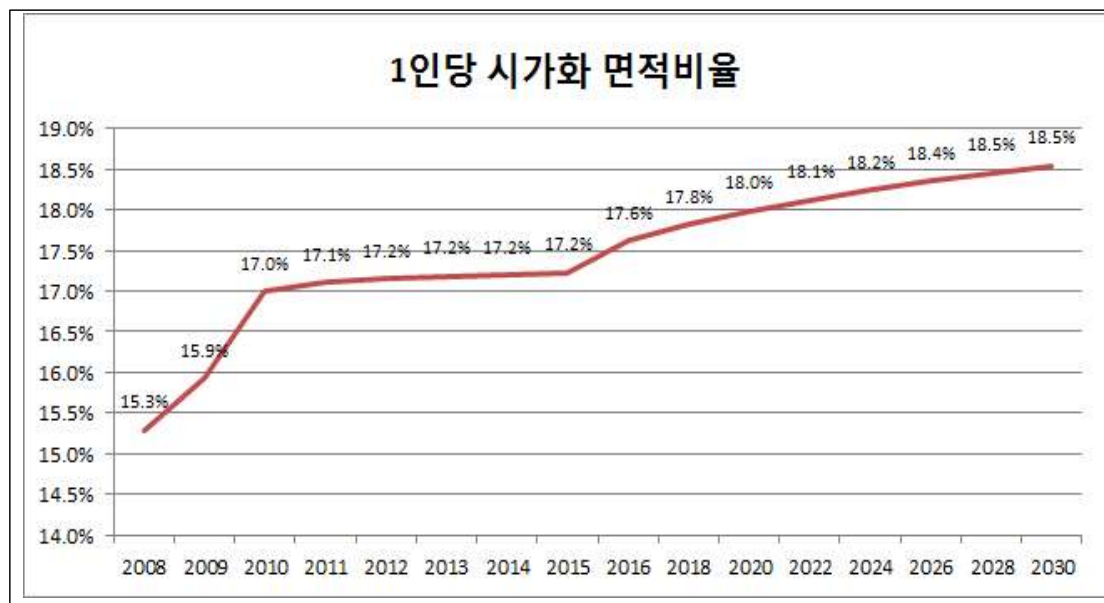
세부목표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간 정주계획과 관리 증진

지표 11.3.1 인구성장 비에 대한 토지 소요 비율 (Ratio of land consumption rate to population growth rate)

세부목표 11.3을 평가하고 지표 11.3.1을 대표하기에 적절한 지표로 “인구대비 시가화 면적비율”이 다수의 의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과거의 변화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의 추세가 예측되었습니다.

인구대비 시가화 면적비율의 추세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로그함수로 계산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증가세가 둔화되어 17%에 머물렀습니다. 추세연장법으로 판단하면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국토의 18.5%가 시가화 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A. 인구대비 시가화 면적비율이 어떻게 변할지 판단해 주십시오.

매우 감소	약간 감소	<현 상태 유지>	[약간 늘어남]	매우 늘어남
-------	-------	-----------	----------	--------

B. 응답자께서 생각하는 2030년의 적절한 값을 예측하여 주십시오.

	이전 응답 평균값	5차 설문 응답
응답자 예측하는 인구대비 시가화 면적비율(2030년 기준)	17.6%	

세부목표 11.3과 관련하여 우리정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과 설문에서 제안된 정책을 아래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의 정책을 읽어 보시고 질문 C에 답해주십시오.

C. 아래에 제시된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정책	효과				
	매우 효과가 없음	효과가 없음	보통	효과가 있음	매우 효과가 있음
도시기본계획 수립			★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평가의 매년 시행			★		
주민참여 제도				★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				★	
주민협의체 조직				★	
공간계획과 참여예산사업의 연계를 통한 예산권한 주민이양 확대					★
동 단위 등 보다 소규모 단위의 주민 참여 정책				★	
일회성 참여가 아닌 장기적인 속의 과정을 가질 수 있는 참여제도로의 개선				★	
시민참여를 위한 소통 체계 구축				★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	

질문 4. 세부목표 11.4와 지표 11.4.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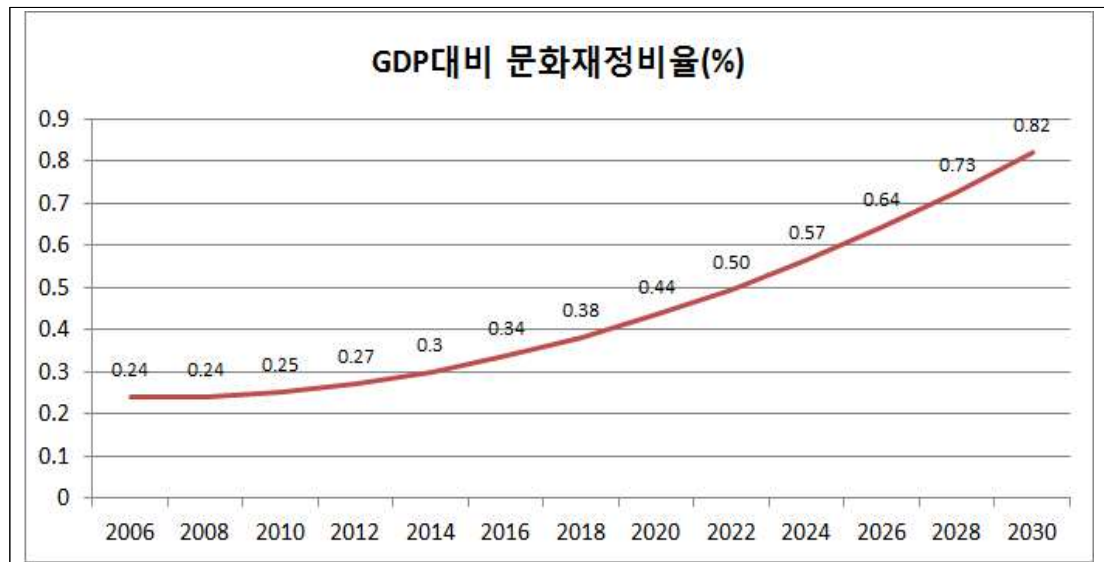
세부목표 11.4. 전 세계 문화와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 강화

지표 11.4.1 유산의 종류별(문화, 자연, 혼합, 세계 유산 센터 지정), 정부의 단계별(국가, 지방, 자치단체), 지출의 종류별 (운영 비용/ 투자), 민간 자금의 종류별 (기부, 민간 비영리부문, 후원)로 구분된 모든 종류의 문화 및 자연 유산을 보호 및 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1인당 종합 비용 (공공 및 민간 포함) (Total expenditure (public and private) per capita spent on the preservation,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all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by type of heritage(cultural, natural, mixed and World Heritage Centre designation), level of government (national, regional and local/municipal), type of expenditure (operating expenditure/investment) and type of private funding (donations in kind, private non-profit sector and sponsorship)

세부목표 11.4를 평가하고 지표 11.4.1을 대표하기에 적절한 지표로 “GDP 대비 문화 재정 비율”이 다수의 의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래에 과거의 변화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의 추세가 예측되었습니다.

GDP 대비 문화재정 비율의 추세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격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2차방정식 함수로 계산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추세연장법에 의해 판단하면 2030년에는 약 GDP 대비 문화재정 비율이 0.82%로 예측되었습니다.



A. 추세연장법에 의해 도출한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값이 적절한지에 대해 판단해 주십시오.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	[적절]	매우 적절
------------	---------	------	------	-------

B. 응답자께서 생각하는 2030년의 적절한 값을 예측하여 주십시오.

항목	이전 응답 평균값	5차 설문 응답
응답자 예측하는 값 (2030년 기준)	0.7%	

세부목표 11.4와 관련하여 우리정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과 설문에서 제안된 정책을 아래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의 정책을 읽어 보시고 질문 C에 답해주십시오.

C. 아래에 제시된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정책	효과				
	매우 효과가 없음	효과가 없음	보통	효과가 있음	매우 효과가 있음
문화재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관점 적용 예) 영국의 성소수자운동의 인물과 기록, 장소			★	★	
근대 문화재 복원 및 관련 인재 양성				★	
개인소유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				★	
문화재별 스토리텔링 강화와 홍보				★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공원법,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	
자연유산의 발굴 및 보존, 보호와 이를 위한 교육				★	

질문 5. 세부목표 11.5와 지표 11.5.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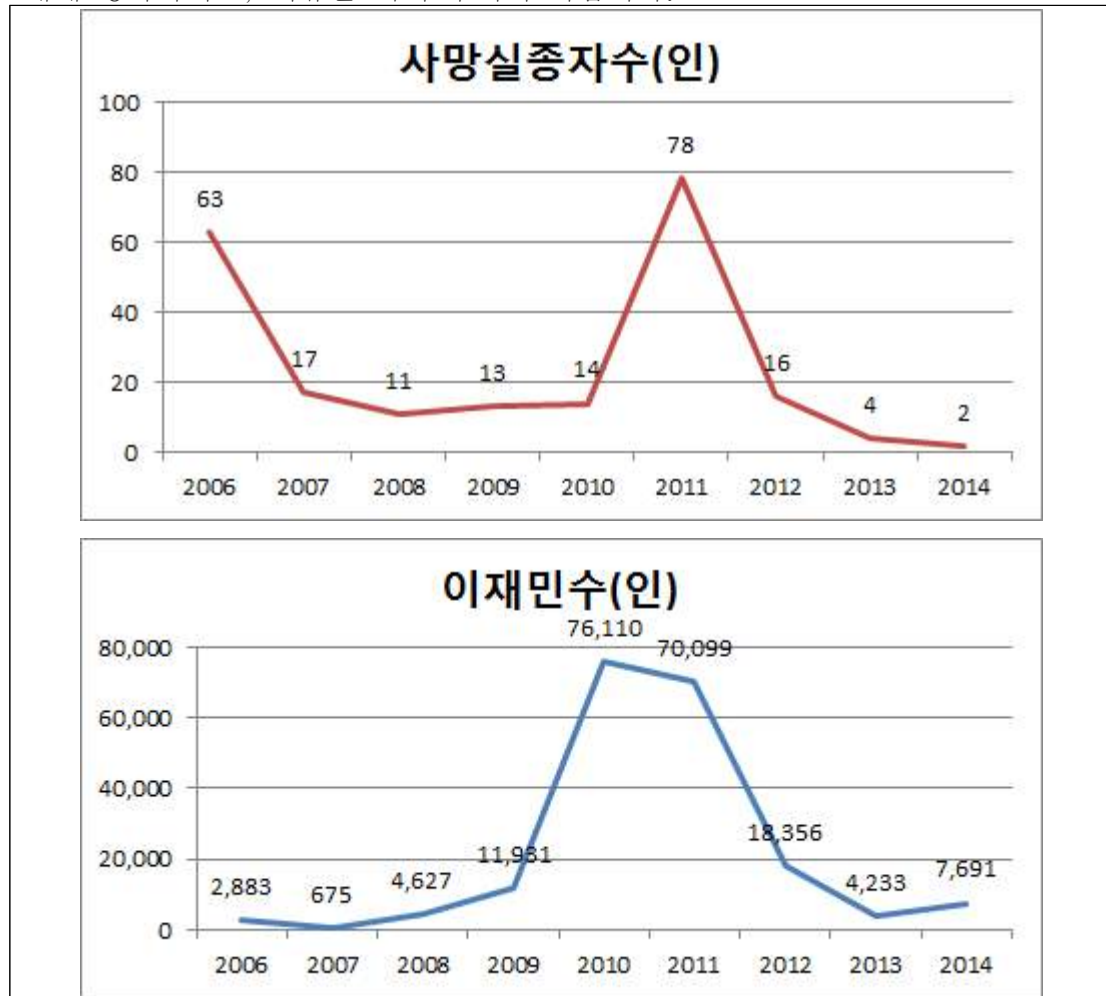
세부목표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물 관련 재난을 포함한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사망자 및 피해자 수를 현저히 줄이며 GDP 대비 경제적 손실 감소

지표 11.5.1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실종자, 재난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 수 (Number of deaths, missing persons and persons affected by disaster per 100,000 people)

세부목표 11.5를 평가하고 지표 11.5.1을 대표하기에 적절한 지표로 “**사망 실종자 수 및 이재민 수**”가 다수의 의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망실종자 수와 이재민 수의 경우 급격한 변동이 커 예측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사망 실종자 수 및 이재민 수의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년차별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과 2012년에 피해가 컸습니다.

과거 추세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사망 실종자수 및 이재민 수의 변화에 대해 평가하시고, 이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A. 사망실종자 수 및 이재민수가 2030년까지 어떻게 변할지 판단해 주십시오.

매우 감소	〈약간 감소〉	현 상태 유지	[약간 늘어남]	매우 늘어남
-------	---------	---------	----------	--------

B. 응답자께서 생각하는 2030년의 적절한 값을 예측하여 주십시오.

항목	이전 응답 평균값	5차 설문 응답
응답자 예측하는 사망실종자 수 (2030년 기준)	36명	
응답자 예측하는 이재민 수 (2030년 기준)	37,000명	

질문 6. 세부목표 11.5와 지표 11.5.2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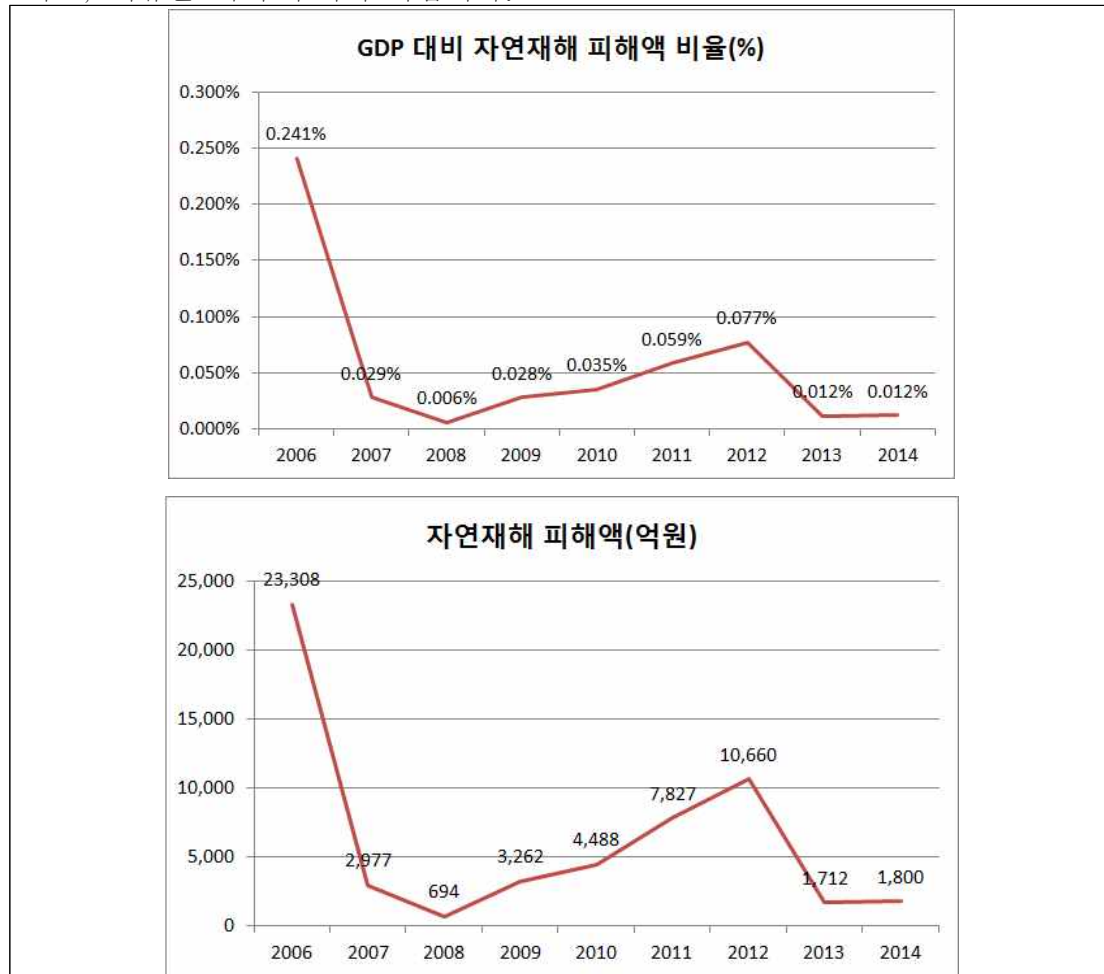
세부목표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물 관련 재난을 포함한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사망자 및 피해자 수를 현저히 줄이며 GDP 대비 경제적 손실 감소

지표 11.5.2 핵심 인프라 시설과 기본적인 서비스 중단을 포함하는 GDP 대비 직접적인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Direct disaster economic loss in relation to global GDP, including disaster damage to critical infrastructure and disruption of basic services)

세부목표 11.5를 평가하고 지표 11.5.2를 대표하기에 적절한 지표로 “GDP 대비 자연재해 피해액”이 다수의 의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GDP 대비 자연재해 피해액의 경우 변동이 커 예측이 불가능하였습니다.

GDP 대비 자연재해 피해액의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년차별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GDP에 비해 피해액의 비율 자체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과거 추세를 바탕으로 향후 GDP 대비 자연재해 피해액의 변화에 대해 평가하고, 이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A. GDP 대비 자연재해 피해액 비율이 2030년까지 어떻게 변할지 판단해 주십시오.

매우 감소	[약간 감소]	[현 상태 유지]	약간 늘어남	매우 늘어남
-------	---------	-----------	--------	--------

B. 응답자께서 생각하는 2030년의 적절한 값을 예측하여 주십시오.

항목	이전 응답 평균값	5차 설문 응답
응답자 예측하는 비율(2030년 기준)	0.4%	

세부목표 11.5와 관련하여 우리정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과 설문에서 제안된 정책을 아래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의 정책을 읽어 보시고 질문 C에 답해주십시오.

C. 아래에 제시된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정책	효과				
	매우 효과가 없음	효과가 없음	보통	효과가 있음	매우 효과가 있음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		
국민안전관리 계획 수립			★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		
주요시설 (댐, 제방 등)의 안전기준 강화 및 보강공사 실시				★	
재난별 시나리오와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단계별 지역단위의 대응체계 구성				★	
부처별 책임 명확화				★	
지역별 거점 안전센터 설치				★	
민자개발사업의 자연재해 안전 기준 강화				★	
도시방재계획				★	
방재의 관점에서 빈곤층과 취약층의 거주 환경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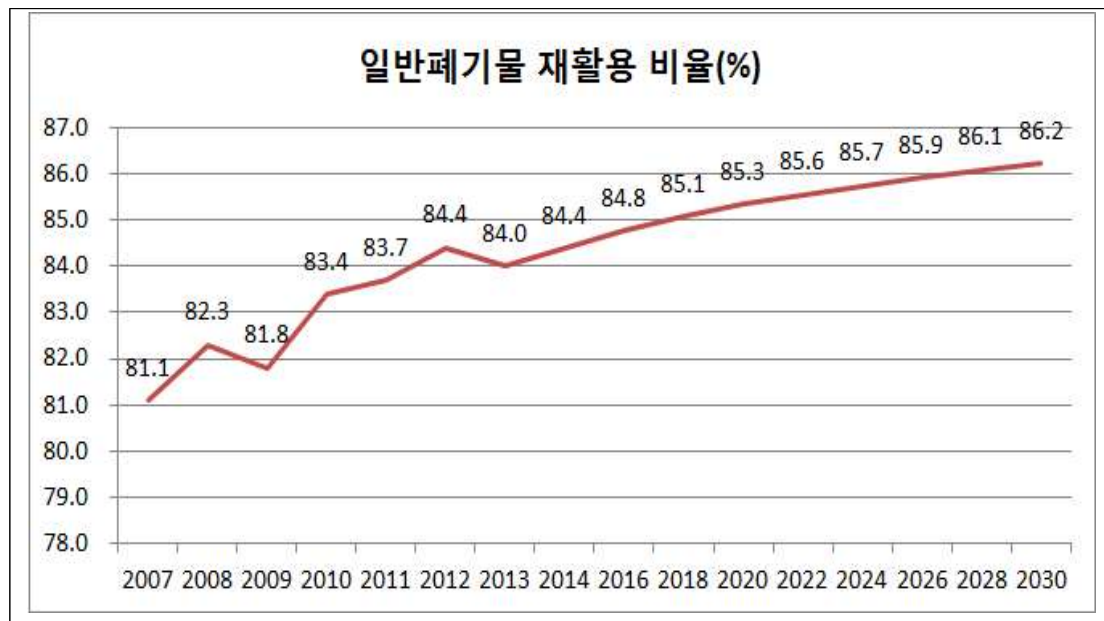
질문 7. 세부목표 11.6과 지표 11.6.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6. 2030년까지 대기질과 지자체 또는 다른 주체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인구 1명 당 도시에 미치는 환경의 부정적인 효과 감소

지표 11.6.1 정기적으로 수거되고 적절한 방법으로 최종 처리 되는 도시에서 배출되는 고형폐기물 비율 (Proportion of urban solid waste regularly collected and with adequate final discharge out of total urban solid waste generated, by cities

세부목표 11.6을 평가하고 지표 11.6.1을 대표하기에 적절한 지표로 “**일반폐기물 재활용 비율**”이 다수의 의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래에 과거의 변화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의 추세가 예측되었습니다.

일반폐기물 재활용 비율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년차별 자료**를 바탕으로 로그 함수로 계산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81%에서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추세연장법에 의해 판단하면 2030년까지 재활용 비율은 86.2%에 도달 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A. 추세연장법에 의해 도출한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값이 적절한지에 대해 판단해 주십시오.

매우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	[적절]	매우 적절
------------	---------	----	------	-------

B. 응답자께서 생각하는 2030년의 적절한 값을 예측하여 주십시오.

항목	이전 응답 평균값	5차 설문 응답
응답자 예측하는 값 (2030년 기준)	8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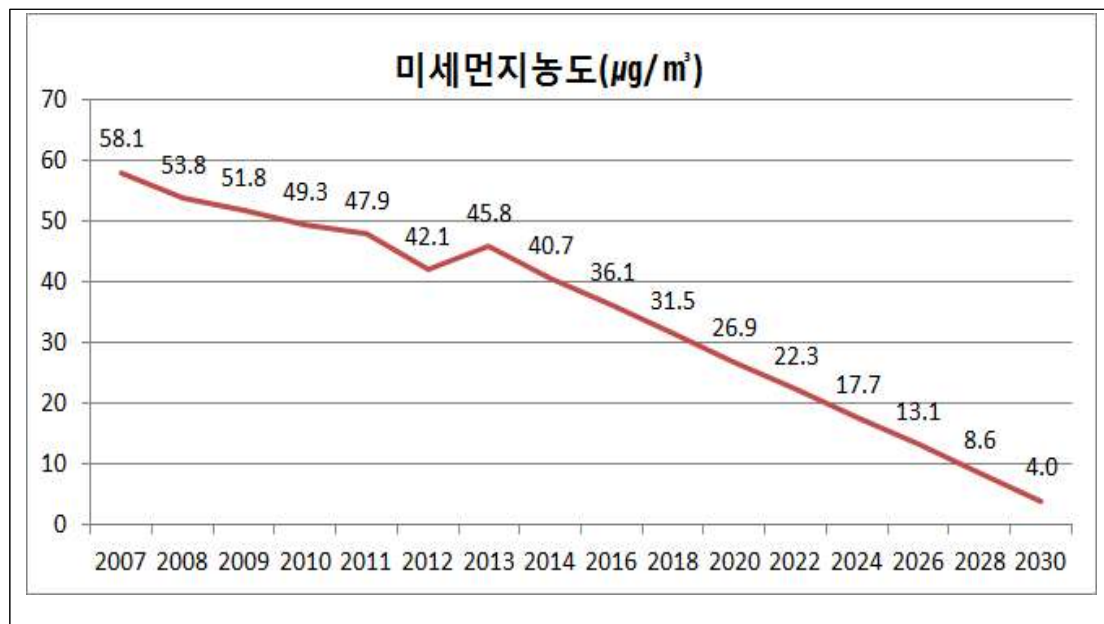
질문 8. 세부목표 11.6과 지표 11.6.2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6. 2030년까지 대기질과 지자체 또는 다른 주체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인구 1명 당 도시에 미치는 환경의 부정적인 효과 감소

지표 11.6.2 연평균 대기 미세먼지 수준 (PM2.5 와 PM10 (인구에 의한 가중치)) (Annual mean levels of fine particulate matter (e.g. PM2.5 and PM10) in cities (population weighted))

세부목표 11.6을 평가하고 지표 11.6.2를 대표하기에 적절한 지표로 “미세먼지 (PM10)농도”가 다수의 의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PM2.5에 대한 측정과 현재의 대도시 중심의 측정을 중소도시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설문에서는 통계자료로 취득이 가능한 PM10 자료만을 가지고 아래에 과거의 변화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의 추세를 예측하였습니다.

미세먼지(PM10)농도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년차별 자료를 바탕으로 선형 함수로 계산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추세연장법에 의해 판단하면 203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는  $4.0 \mu\text{g}/\text{m}^3$  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A. 추세연장법에 의해 도출한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값이 적절한지에 대해 판단해 주십시오.

매우 적절하지 않음	<b>[적절하지 않음]</b>	보통	적절	매우 적절
------------	------------------	----	----	-------

B. 응답자께서 생각하는 2030년의 적절한 값을 예측하여 주십시오.

항목	이전 응답 평균값	5차 설문 응답
응답자 예측하는 값 (2030년 기준)	<b>25.3 <math>\mu\text{g}/\text{m}^3</math></b>	

세부목표 11.6과 관련하여 우리정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과 설문에서 제안된 정책을 아래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의 정책을 읽어 보시고 질문 C에 답해주십시오.

C. 아래에 제시된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정책	효과				
	매우 효과가 없음	효과가 없음	보통	효과가 있음	매우 효과가 있음
자원순환경제 고도화 정책			★	★	
미세먼지 저감 정책				★	
신재생에너지 활용 장려 및 비용 보조				★	
수도권/지자체 대기 환경관리 기본계획			★		
미세먼지 발생 현황자료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				★	
석탄 기반 화력발전소 폐쇄 및 대체 계획(원자력 제외)				★	
도시의 고도화 및 재생 시 자원 활용 증진을 위한 계획			★		
전기차 보조금 제도/ 승용 경유 차량의 출고 감소 정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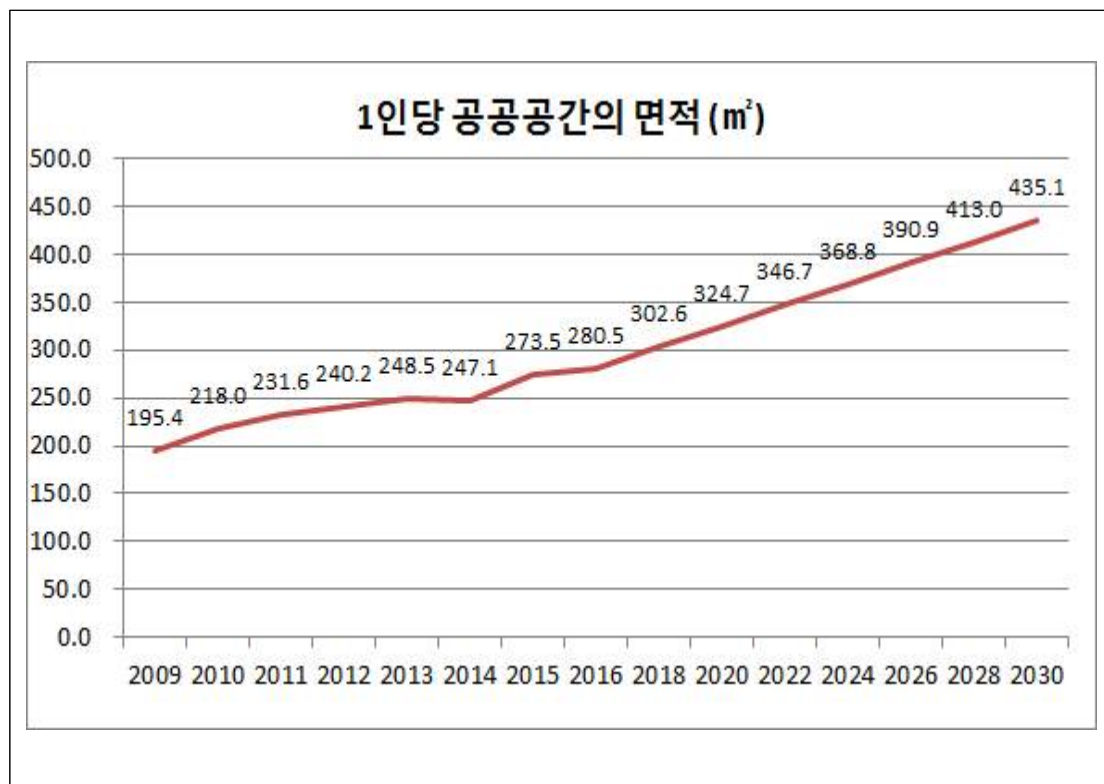
질문 9. 세부목표 11.7과 지표 11.7.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 아동, 노인과 장애인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접근가능한 공공공간과 녹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하고 보편적인 접근권 제공

지표 11.7.1 성별, 나이, 장애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공의 이용을 위해 개방된 도시의 개발된 지역의 평균 비율 (Average share of the built-up area of cities that is open space for public use for all, by sex, age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

세부목표 11.7을 평가하고 지표 11.7.1을 대표하기에 적절한 지표는 제시된 두 지표 중 근사하게 “**공공공간의 접근성 및 비율**”이 다수의 의견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공간의 접근성 및 비율은 통계 자료로 알 수가 없는 관계로 보다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계산이 쉬운 “**도시인구 1인당 공공공간의 면적**”을 선택하여 추세연장을 수행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과거의 변화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의 추세가 예측되었습니다.

도시인구 1인당 공공공간의 면적의 추세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형함수로 계산되었습니다.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추세연장법으로 판단하면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기준 1인당 435.1 m<sup>2</sup> 일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A. 도시인구 1인당 공공공간의 면적이 어떻게 변할지 판단해 주십시오.

매우 감소	약간 감소	현 상태 유지	[약간 늘어남]	매우 늘어남
-------	-------	---------	----------	--------

B. 응답자께서 생각하는 2030년의 적절한 값을 예측하여 주십시오.

항목	이전 응답 평균값	5차 설문 응답
응답자 예측하는 도시인구 1인당 공공공간의 면적 (2030년 기준)	353.4 m <sup>2</sup>	

세부목표 11.7과 지표 11.7.2와 관련하여 우리정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과 설문에서 제안된 정책을 아래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의 정책을 읽어 보시고 질문 C에 답해주십시오.

C. 아래에 제시된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정책	효과				
	매우 효과 가 없음	효과 가 없음	보통	효과 가 있음	매우 효과 가 있음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		
도시기본계획의 오픈스페이스 계획			★		
보행자 중심도시 건설 지원				★	
민간 공원 제도			★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사업				★	
공공공간의 적정 배치를 위한 설치가이드라인 강화				★	
기존 공공공간의 복합적 재활용 방안				★	
근린 단위의 소규모 공원 및 녹지의 확보 정책				★	

질문 10. 세부목표 11.7과 지표 11.7.2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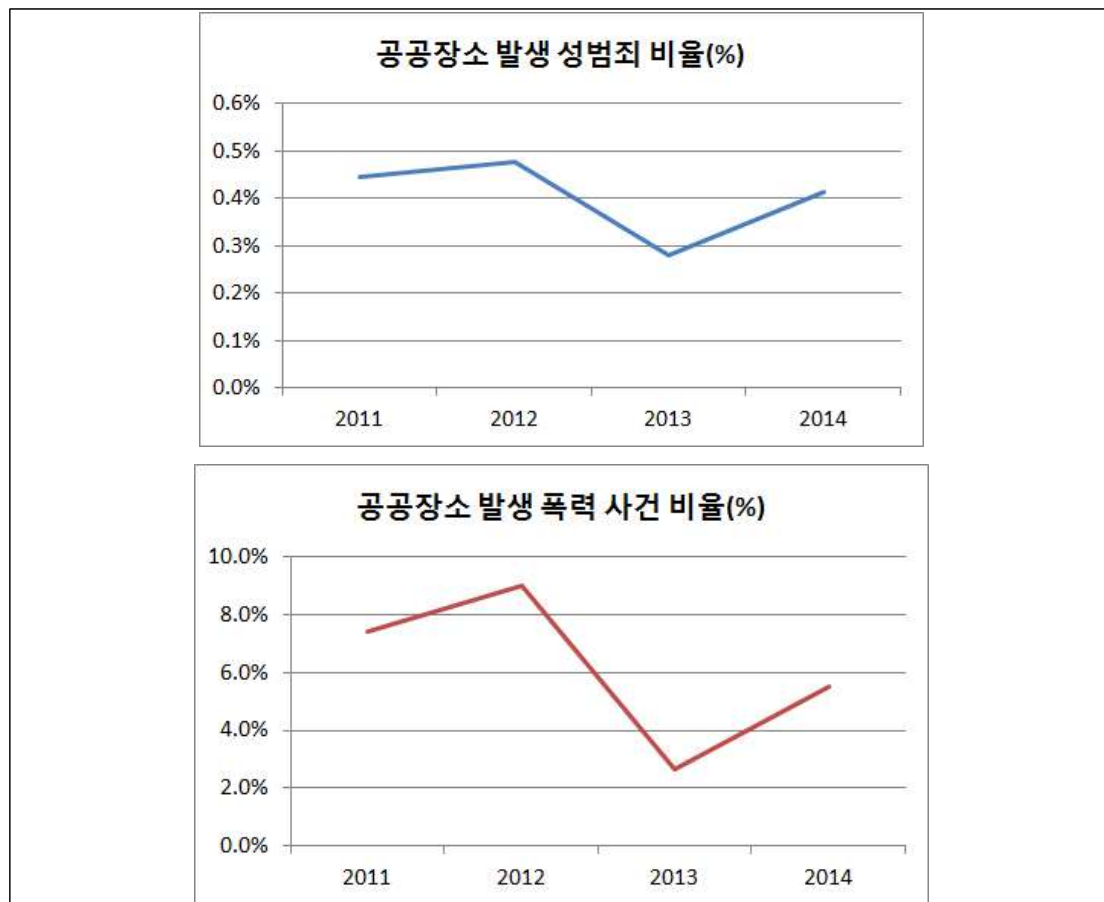
세부목표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 아동, 노인과 장애인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접근가능한 공공공간과 녹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하고 보편적인 접근권 제공

지표 11.7.2 과거 1년동안 성별, 나이, 장애 정도, 발생장소 등에 의해 구분된 물리적 성적 희롱의 피해자 비율 (Proportion of persons victim of physical or sexual harassment, by sex, age, disability status and place of occurrence, in the previous 12 months )

세부목표 11.7을 평가하고 지표 11.7.2를 대표하기에 적절한 지표로 “**공공공간에서 발생한 성범죄 및 물리적 폭력 사건 비율**”이 다수의 의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공공공간에서 발생한 성범죄 및 물리적 폭력 사건 비율의 경우 급격한 변동이 커 예측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공공공간에서의 발생한 성범죄 및 물리적 폭력 사건 비율은 2014년 기준으로 각각 0.4%, 5.5% 였습니다. 통계상으로 공공장소에서는 성범죄와 폭력 사건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총 발생건수도 줄어들고 있음). 과거 추세를 바탕으로 향후 공공공간에서의 발생한 성범죄 및 물리적 폭력 사건 비율의 변화에 대해 평가하시고, 이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A. 공공공간에서 발생한 성범죄 및 물리적 폭력 사건 비율이 어떻게 변할지 판단해 주십시오.

매우 감소	<b>[약간 감소]</b>	현 상태 유지	약간 늘어남	매우 늘어남
-------	----------------	---------	--------	--------

B. 응답자께서 생각하는 2030년의 적절한 값을 예측하여 주십시오.

항목	이전 응답 평균값	5차 설문 응답
응답자 예측하는 성범죄 비율 (2030년 기준)	0.3%	
응답자 예측하는 폭력 사건 비율 (2030년 기준)	3.9%	

세부목표 11.7과 지표 11.7.2와 관련하여 우리정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과 설문에서 제안된 정책을 아래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의 정책을 읽어 보시고 질문 C에 답해주십시오.

C. 아래에 제시된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정책	효과				
	매우 효과가 없음	효과 가 없음	보통	효과 가 있음	매우 효과가 있음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		
성폭력 범죄자 신상 공개 및 주민 알람 서비스/ 사후 관리 강화				★	
학교 보안관 제도			★	★	
아동 성범죄자의 아동시설 주변 거주 제한 제도				★	
철저한 성범죄 예방차원의 교육				★	
장소, 범죄, 범죄 유형에 따른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사업의 다양화				★	
야간에 도심 공원, 운동장 등에 대한 안전방범체계 구축					★

질문 11. 세부목표 11.a와 지표 11.a.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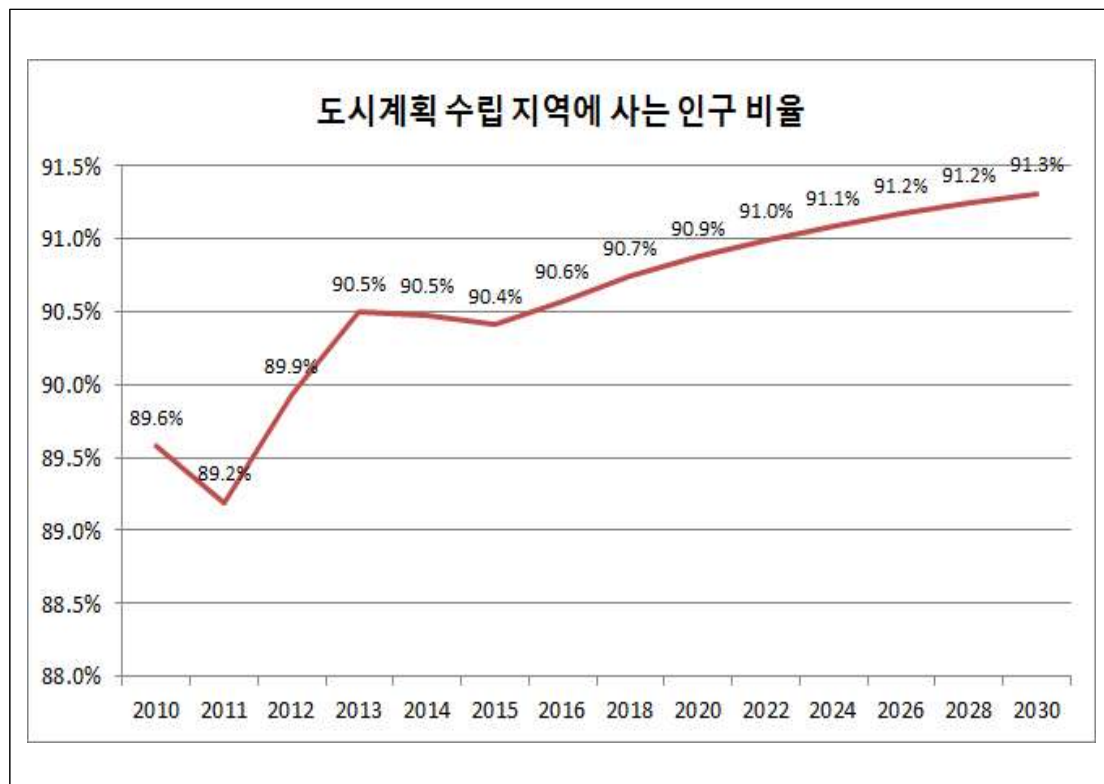
세부목표 11.a. 국가개발계획 또는 지역개발계획 강화를 통해 도시와 도시주변부 지역 및 지방과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연계성 강화 지원

지표 11.a.1. 도시의 크기에 따라 구분한 인구증가 및 이에 대한 자원수요를 융합한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을 도입한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  
(Proportion of population living in cities that implement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plans integrating population projections and resource needs, by size of city)

세부목표 11.a를 평가하고 지표 11.a.1을 대표하기에 적절한 지표로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이 다수의 의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과거의 변화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의 추세가 예측되었습니다.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의 추세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2차함수로 계산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 전반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미 90%에 달하는 인구가 도시계획을 수립한 도시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추세연장법으로 판단하면 2030년까지 완만히 증가하여 2030년 기준 91.3%의 인구가 도시계획을 수립한 도시에서 거주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A.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이 어떻게 변할지 판단해 주십시오.

매우 감소	약간 감소	[현 상태 유지]	[약간 늘어남]	매우 늘어남
-------	-------	-----------	----------	--------



B. 응답자께서 생각하는 2030년의 적절한 값을 예측하여 주십시오.

항목	이전 응답 평균값	5차 설문 응답
응답자 예측하는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2030년 기준)	92%	

세부목표 11.a와 관련하여 우리정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과 설문에서 제안된 정책을 아래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의 정책을 읽어 보시고 질문 C에 답해주십시오.

C. 아래에 제시된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정책	효과				
	매우 효과가 없음	효과가 없음	보통	효과가 있음	매우 효과가 있음
성장관리방안				★	
성장관리방안 적용지역 확대				★	
도시기본계획에 자원수요를 고려한 성장관리방안이 담기도록 개선				★	
인근 지자체의 통합된 광역계획 수립 의무화			★		
광역도시계획, 광역교통망 계획 등 광역권 계획 수립				★	
대도시와 주변도시간 상생발전계획				★	
개발억제를 위한 상향된 환경영향평가			★		
주변지역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			★		

질문 12. 세부목표 11.c와 지표 11.c.1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목표 11.c. 지역 자재를 활용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건축물을 구축함에 있어 재정적, 기술적 보조를 통한 최빈개발도상국 지원

지표 11.c.1. 현지 자재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으며 자원 효율적인 건축물의 건설 및 개조에 할당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비율  
(Proportion of financial support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that is allocated to the construction and retrofitting of sustainable, resilient and resource-efficient buildings utilizing local materials )

세부목표 11.c와 관련하여 우리정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과 설문에서 제안된 정책을 아래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의 정책을 읽어 보시고 질문 C에 답해주십시오.

C. 아래에 제시된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정책	효과				
	매우 효과가 없음	효과가 없음	보통	효과가 있음	매우 효과가 있음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		
유상원조 시 현지화폐 지급을 통한 현지자재 활용도 향상			★		
개도국 대상 KSP <sup>47)</sup> 지식공유사업				★	
한국형 신도시 수출		★	★		
적용 가능한 적정기술 및 현지에서의 기술 이전				★	
소득그룹, 분야, 프로그램, 지원방식을 감안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	
현지 자재 활용을 위한 원조자금의 건설 인프라 사업 비율 확대				★	
PPP 사업 확대			★		
민간 HABITAT 운동과 연계한 정부정책의 효율화				★	
최빈국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공법 연구 지원				★	

47) 한국개발연구원과 기획재정부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경제개발 노하우를 전수하는 지식공유프로그램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손동필 연구위원